

2006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Ⅱ)

2006. 10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 목 차

## (Ⅱ 권)

고 진 화 의원 .....	1
김 애 실 의원 .....	187
김 양 수 의원 .....	349
김 영 주 의원 .....	371
김 정 훈 의원 .....	495
김 혁 규 의원 .....	759
김 현 미 의원 .....	779
박 계 동 의원 .....	805

## (Ⅲ 권)

서 혜 석 의원 .....	1
신 학 용 의원 .....	45
안 택 수 의원 .....	107
유 선 호 의원 .....	203
이 계 경 의원 .....	337
이 승 희 의원 .....	531
이 원 영 의원 .....	557
이 재 오 의원 .....	571
이 종 구 의원 .....	657
진 수 회 의원 .....	723
차 명 진 의원 .....	855
천 정 배 의원 .....	869





## 요 구 자 료 목 차 (Ⅱ)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고진화 의원	1. 각 보험회사별, 연도별 배당 현황 - 1998년 이후 2006년 현재까지	3
	2.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자본의 점유율	5
	3.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 개별 금융지주회사별 연도별 주요 경영지표 (최근 7년간, 성장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생산성) - 성장성 별도 제출(총자산, 전년대비 총자산 증가율, 총여신, 전년대비 총여신 증가율)	14
	4. 대부업 감독업무 관련 1) 최근 5년간 일본계 대부업체 국내 진출 현황(회사별, 진입, 퇴출, 자산규모 현황) 2)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구분 선정 기준 자료 3) 전국 16개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 현황(최근 5년간 증감, 자산규모, 시도별 구분)	20
	5. 금융감독원 운영 관련 - 특수법인으로써의 설립근거 자료	25
	6. 생보사 상장관련 1) 상장자문위원회 공청회 기록(1999년, 2003년) 2)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 상장예정 생보사 자본계정 분석 자료(계약자 자금비율 반드시 명기) 3) 한국은행이 9월에 보고한 생보사 자산운용기능 검토 보고서 사본 4) 생보사 구분계리문제 개선방안 5) 생보사 상장 단계별 로드맵(삼성, 교보, 미래에셋, 동양생명등 상장순위, 시기)	26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김애실 의원	1. 상호저축은행 관련 - 부실채권 비율현황 - 1998년도 이후 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	189
	2. 상호저축은행 관련 -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지표(BIS비율, 부실채권 등) 산정방식 설명(은행권과 비교하여)	192
	3. 외부감사대상 관련 1) 1998년 이후 연도별('06년 상반기까지)/자산규모 별/상장·비상장별 외부감사 대상 법인수 현황 2) 2003~'06. 6월말 현재 연도별/회계법인별 지정회 사수 현황 3) 2003~'06. 6월말 현재 연도별/회계법인별 지정감 사보수 현황 4) 2003~'06. 6월말 현재 연도별/회계법인별 매출액 현황	204
	4. 적기시정조치 관련 4-1) 적기시정조치 발동 법적·규정 근거 4-2) 금융권역별·단계별 적기시정조치 기준 및 조치 (제재) 사항 4-3) 적기시정조치 관련 제도개선 및 보완방향	214
	5. 2000년 이후 연도별 현재까지, 보험사별 보험가입 신청 및 가입·거부 현황(거부사유별 구분요)	218
	6. 저축은행 관련 6-1) 1998년도 이후 연도별 저축은행 현황(개수/수 신규모/대출규모) 6-2) 1998년도 이후 연도별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현 황(연체율/부실채권비율) 6-3) 2003년도 이후 연도별 저축은행 M&A 내역	220
	7. 연도별 신탁의 주요 현황	221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김애실 의원	8.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분류 및 충당금 적립내역	222
	9. 2000년 이후 연도별 현재까지 보험사별 당기순이익 현황	223
	10. 2002년 이후 연도별/은행별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중기대출 별도 구분) 만기구조 현황	227
	11. 해외증시 상장 관련(국내기업의 해외증시 상장)	231
	- 현재까지 연도별 해외증시 상장/등록 회사리스트 (원주상장/DR상장/사채발행 구분)	
	- 1998년도 이후 금감원의 해외증시 상장 및 관련 제도 개선 실적	
	- 1998년도 이후 금감원의 해외증시 발굴실적 및 해당회사 상장결과	
	12.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발간 근거 및 내용에 대한 감독사항 여부	236
	13-1. 2003년도 이후 시기별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인가 기준 및 근거	242
	13-2. 2003년 이후 장외파생상품 인가 증권사 및 장외 파생상품 취급 규모	243
	13-3. 2003년 이후 연도별 금감원에 장외파생상품 인가 신청서 제출 증권사(없다면 인가여부 등에 공문으로 문의한 증권사)	244
	13-4. 2003년 이후 연도별 장외파생상품 인가 계량적 기준(자본금, 자기자본규제비율 등) 초과/미달 증권사 현황(회사수)	245
	14. 유사수신업체 관련	253
	1) '03~'06.6월말 현재 연도별·유형별(상품권 판매 가장 등) 유사수신업체 적발 실적	
	2) 상품권발행 요건 및 제재기준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김애실 의원	15. 외부감사 및 지정감사 관련	254
	15-1) 2002년 이후 연도별 기업규모별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회계처리비용현황(회계감사/비회계감 사 구분 작성)	254
	15-2) 1998년 이후 연도별 지정감사 해당기업 및 회 계법인 자격요건 변화 내역	255
	15-3) 2002년 이후 지정감사 사유별 지정감사 현황	259
	16. 공시관련	260
	16-1) 공시의무 범위와 불공정 공시에 대한 제재 내용	260
	16-2) 2002년 이후 연도별·행태별 불공정 공시 적 발현황 및 제재현황	266
	17. 증권사 일임매매 관련	269
	17-1) 1998년 이후 시기별 증권사 일임매매 관련 감 독규정 및 처벌(제재조치) 내용	269
	17-2) 일임매매 관련 감독 개정방향(계획) 및 미국/ 영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선진국의 일임매 매 운영 방식	269
	18. 각 은행별 BIS비율	276
	- 2005년말 현재 BIS비율	
	19. 소비자교육관련	277
	19-1) 2003년 이후 청소년 금융교실 개최실적	277
	19-2) 2005년도 및 2006년도 청소년 금융교실 교재 (사본) 일체	277
	20. 조치의뢰제도 도입 사유/근거/적용대상/향후 확대 계획	347
	21. 준법감시인관련	348
	- 준법감시인 역할(금감원보고 등 의무포함) 및 처 별조항(근거)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김양수 의원	1. 최근 3년간 금감원에 신고된 보험 신상품 건수중 부적격으로 판정된 상품, 부적격 판정 사유	351
	2. 최근 3년간 보험사별 휴면보험금 현황 및 잠익처리 현황	353
	3. 최근 5년간 금감원에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주가조작 등) 적발건수와 적발 사유, 적발된 임직원수 및 임직원 직급, 처분결과	355
	4. 최근 3년간 주가 조작 범죄 관련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상장회사 수와 건수, 혐의내용, 금감원의 조사결과 실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회사수(건수)	358
	5. 최근 3년간 적발된 증권거래법 위반건수와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내역	359
	6. 최근 3년간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상장사 수와 적발된 인원수, 그에 따른 조치내용	360
	7. 최근 3년간 동일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함께 받는 거래소 상장 결산 법인 수와 비율	361
	8. 2005년 이후 금감위 민원 접수 사항과 조치 결과	365
	9. 각 시중은행(국내은행, 해외은행의 국내 지점) 최근 5년간 자산, 본점조직, 임원수	386
김영주 의원	1. 신탁의 04년 이후 분기별 자산건전성 현황	373
	2. 펀드직판 관련	
	2-1. 펀드 직판관련 정부대책 내역 및 관련 보도자료	374
	2-2. 2006.8말 현재 직접판매 펀드 운용현황	382
	2-3. 판매사와 자산운용사간 자회사, 모회사 현황	385
	3. 1차, 2차, 3차 생보사 상장 추진에 대한 각각 경과, 상장무산 사유, 각 시기별 시민단체의견	391
	4. 제3차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배당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회계법인명, 선정사유, 해당법인의 최근 3년간 기업회계 및 컨설팅 현황	391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김영주 의원	5.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상장자문위원회별 상장에 대한 의견(의견서 또는 발언)	391
	6. 제1차, 제2차 상장위원회 상장방안(안)	391
	7. 1990년 8월 재무부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 가적립금 처리지침' 사본	391
김정훈 의원	1. 생명보험사 관련 ① 생명보험사 상장에 관한 위원회의 입장 ② 생명보험사 상장시 기대효과	497
	2. 생보사 상장 관련 1) 추진일지 2) 생보사 상장초안의 내용 3) 생보사 상장관련 자문위, 시민단체, 생보사간의 쟁점이 되는 내용 4) 생보사 상장에 대한 생명보험사의 입장 5)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원 이력사항(성명, 학력, 주요경력 등) 6)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 회의개최 일시, 회의내 용, 상장초안의 외국회계법인 검증의뢰 계획의 내용 7) 향후 추진계획	499
	3. 서민금융활성화 방안관련 (1) 서민의 개념 (2) 서민들의 금융기관 이용현황 (3) 부실 서민금융기관 현황 (4) 서민금융활성화 T/F 조직 구성 내역 (5)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방안 (6) 서민금융 119서비스 운영현황	540
	4. 선진 금융윤리 정착 유도 관련 가.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강화 지침 내역 나. 자체교육 유도를 통한 사고예방 및 준법의식 교육 사례	541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김정훈 의원	5. 선진 금융윤리 정착 유도관련 ○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제재 강화 내역(2003. 1.~ 2006. 7)	544
	6.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감독·제재 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권한 현황	545
	7. 금융사고 방지대책	557
	7-1. '06. 7말 현재 금융지주회사 설립현황(인가신청 포함)	560
	7-2. '06. 7말 현재 금융지주회사별 사업구조 현황	561
	7-3. '06. 7말 현재 각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기관별 해당 자회사의 사업비중	564
	7-4.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될 경우의 장단점	566
	8-1. 신BIS협약 도입 이유	568
	8-2. 신BIS협약 도입에 필요한 준비사항	569
	8-3. 신BIS협약 도입 후 예상효과 및 대응방안	573
	8-4. 신BIS협약에 의한 BIS비율(2006년 7월 현재)	574
	9. 은행권 대출 관련(2002년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작성) - 중소기업 대출 연도별 현황(은행권 전체, 각은행별)	575
	10. 각 은행별 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반기별 추이(2003. 1~2006. 6)	577
	11. 2002년 이후 2006년 7월 현재까지 각 은행별 총자산 대비 주식 및 회사채 보유 현황(금액 및 비율)	579
	12. 시중은행 해외점포수 증감 현황(점포수, 증감율, 신설 및 폐지된 점포의 지역 명시) - 2002년 이후 200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작성	585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김정훈 의원	13. BIS 관련	603
	(1) 개별은행별 자율적인 BIS비율 기준 및 준수현황	
	(2) 국내은행의 BIS 비율 추이	
	14. 2002년 이후 200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각 금융 기관의 휴면예금 현황(계좌수, 금액 등) 및 잠의 처리 등 금액처리 현황	607
	15. 신용카드 관련(2002년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연 도별 작성)	619
	16. 상호저축은행 여신 관련(2002년부터 2006년 7월 현 재까지 연도별 작성)	625
	1) 전국의 상호저축은행 현황(총자산, 임직원수, 거 래자 수, 동일인대출규모, 여신규모 등)	
	2) 총여신대비 소액신용대출 비율(회사명, 총여신금 액, 소액신용대출금액, 소액신용대출비율)	
	3) 총여신현황(회사명, 차주수, 금액, 대손충당금적립 액, 고정이하여신금액, 고정이하여신비율)	
	4) 소액신용대출현황(회사별, 차주수, 금액, 대손충당 금적립액, 고정이하여신금액, 고정이하여신비율)	
	5) 상호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분류기준 및 대손 충당금 적립기준에 대한 상세설명	
	6) 2006년 7월 현재 소액신용대출에 대해 대손충당 금을 기준 이하로 적립한 상호저축은행 현황(회 사명,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금액, 실제 대손충당 금 적립금액, 부족 적립액)	
	7) 현행 적기시정조치제도의 내용과 개선방안의 내 용 비교, 개선방안에 의할 경우의 개선 효과	
	17. 신탁 누적결손금 재정지원 투입 사유 및 신탁 부실 로 인한 리스크 확대 연구 용역 여부	659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김정훈 의원	18. 2002년 이후 2006년 7월 현재까지 사금융 피해 신고와 적발현황, 검찰 등 타 기관 통보 건수 현황	660
	19. 2002년 이후 200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대부업체 등록 및 취소 현황	660
	20. 자동차보험관련 자료	665
	21. 보험사기 관련(2002년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작성)	678
	(1) 보험사기 적발실적(적발건수, 관련금액, 건당금액)	
	(2) 사기유형별 현황(적발건수, 관련금액, 건당금액)	
	(3) 사법처리 현황	
	(4) 연령별, 성별, 직업별 현황	
	(5)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주요보험사기의 유형 및 사례	
	(6) 보험조사조직의 현황	
	(7) 보험사기 방지업무 모범규준의 내용, 모범규준 마련 전후 보험사기 적발 건수 비교	
	(8)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 시스템 개발전후 보험사기 적발 건수 비교	
	(9) 국민건강보험, 우체국보험, 검·경찰 등과 협력한 내용	
	(10) 진료비 심사 및 입원환자 관리 강화 내용	

- (11) 보험업법상 보험사기의 정의 및 구체적인 유형 명시관련 추진 현황
- (12) 보험회사별 보험사기조사 조직, 인력 운영 현황
- (13) 금감원내 보험사기 전담조사기구 설치 및 강제 조사 권한을 갖게 하는 방안의 추진 내용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김정훈 의원	22. 보험금지급 관련(2002년부터 2006년 7월까지 연도별) (1)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 내역 (2)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내역 (3) 소송제기로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중지된 생명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건수	692
	23. 대리운전전업 관련	693
	24. 재해보험 관련	694
	25.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 관련 1) 동의철회권 및 전화수신거부권 이용 현황 2)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내용	697
	26. CD관련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1) 제3자 명의 CD발행거래 금지 및 CD발급 업무관련 내부통제 강화 지도내역(문서수발대장)	699
	27. 자산운용산업 관련(2002년 이후)	704
	28. 최근 3년간 투자자문 및 투신운용사 인허가 현황 28-1. 각종 자문료 및 수수료 지급현황 28-2. 지역별 인허가 현황 28-3. 인허가 취소 현황	711 711 711 711
	29. 증권불공정거래 행위 관련(최근 3년간) 1)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2)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3) 증선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치현황	714
	30. 증권회사의 부당권유행위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2002년 이후 2006년 7월까지 연도별 작성)	716
	31. '02년 이후 외국인 주식 보유금액 및 보유비중 추이	717
	32. 국가별 외국인투자자 유가증권 보유현황	718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김정훈 의원	33. 외국계 자본의 5% 이상 지분공시 현황 관련 (1) 5%이상 지분공시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 외국 계회사(펀드 등)의 보고 건수 및 비율(2004년부 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작성 요망) (2) '06. 6월 현재 상장회사 지분 5%이상 취득 공시 한 외국인의 명단 및 지분을	720
	34. 2003.1~2006.7월 현재까지 각 연도별 회사채발행 증가 및 감소 현황 1) 각 연도별 채권발행 잔액 2) 각 연도별 순증감분 3) 회사채 순증감 요인분석 자료	732
	35. 국내기업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 관련(최근 3년간) 1) 국내 상장기업 2) 영업수익률	733
	36.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기능 강화와 관련(출범 이후 200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작성) (1) 회계전담인력 확충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 (2) 감리대상기업 및 감리기업 현황. 향후 확대계획 (3) 감리비율(표본추출 및 혐의기업에 대한 감리·위탁감 리·부분(기획)감리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작성) (4) 분식회계로 인해 기업에 부과한 조치유형별 건 수 추이	735
	37.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1) 도입취지, 내용, 지정절차, 지정효과, 관련 법령 등 2) 외부감사인 지정법인(지정 원인별 구분 작성) 및 증감원인에 대한 분석 3) 회계법인별 지정 현황 ○ '02~'06.7 연도별 자산규모 100대 상장기업에 대 한 외부감사인 현황	740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김혁규 의원	1. 민원현황 및 처리내역 - 유형별(은행·보험·증권·기타) - 세부내역별	761
	2. 2004년 이후 자산규모 상위 10개 상호저축은행 대출 현황 - 대출유형별(신용, 주택담보 등), 대출자별(개인, 기업), 대출금액	763
	3. 은행별 휴면예금 현황('04년 이후)	766
	4. 2003년이후 각 은행별 BIS비율	767
	5. 2004년 이후 대부업체 현황(등록, 제재, 취소현황)	769
	6. 2004년 05년, 06년(상반기) 증권사별 수익구조	770
	6-1. 전체수익 대비 수수료 수익 및 비수수료 수익 비율	770
	6-2. 미, 독, 일 업계 1위 증권사와 비교표	770
	7. 2003년 이후 신용불량자 현황 - 성별, 연령별, 금융기관별, 금액별	776
김현미 의원	1. 최근 3년간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현황	781
	2.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현황(감사의 주체, 제도적 근거)	791
	3. 은행 대출시 근저당설정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 는 바, 이에 관련하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현황 일체	796
	4.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규정	797
	5. 회계법인 품질감리관리 관련 - 제도의 도입취지 및 도입사유 - 제도시행 개요 및 경과 - 제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추진계획 -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사협회의 감리제도와 비교 - 제도시행의 기대효과	801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박계동 의원	1.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 관련	807
	- 2006년 2월 발표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 은행별 역모기지 가입자 수, 가입액	
	- 리스크가 클 것이라는 시각에 대한 금감위 입장 및 대책	
	2. 은행, 증권, 보험 관련 광고에 대한 심의 관련	821
	2-1. 심의 기관	821
	2-2. 관련 근거 규정	821
	2-3. 심의 실적(2005년~2006년 상반기)	821
	2-4. 1-3 중 광고 부적합 사례(심의 일시, 업체 심의 내용 및 부적합 사유)	821
	3. 비정형과생상품 관련(2005년~2006년 8월 현재)	828
	4. 증권회사의 수탁수수료의 회사별 현황 관련	832
	4-1. 현황	832
	4-2. 요율	832
	4-3. 수탁수수료 관련 관리 규정	832
	5. 상호저축은행 관련(2003년~2006년 8월 현재)	889
	5-1. 합병, 제3자 인수, 퇴출을 당한 저축은행 사례	889
	5-2. 2006년 개인대출한도를 확대한 이유, 확대금액, 대출한도 확대에 의한 파급효과, 2003년 이후 연도별 개인대출한도 조정내역	890
	5-3. 2006년 법인대출한도를 확대한 이유, 확대금액, 대출한도 확대에 따른 대출증가예상액, 2003년 이후 연도별 법인대출한도 조정내역	891
	5-4. 부실우려에도 불구하고 2006년 개인대출과 법인대출을 조정 한 사유	892
	6. 자산규모 50대 상호저축은행별 대출자산 구성내역과 구성비율	893



# 고 진 화 의 원





1. 각 보험회사별, 연도별 배당 현황  
- 1998년 이후 2006년 현재까지

- 붙임 참조 -

(붙임)

(단위 : 주, 억원)

보험회사명	구분	FY98	FY99	FY00	FY01	FY02	FY03	FY04	FY05
삼성생명	현금배당	94	100	200	200	300	300	300	400
	주식배당	0	0	0	0	0	0	0	0
흥국생명	현금배당	8	8	0	0	0	0	0	18
	주식배당	0	0	0	0	0	0	0	0
교보생명	현금배당	69	69	69	0	142	231	231	278
	주식배당	0	0	0	0	0	0	0	0
미래에셋생명	현금배당	53	29	64	2	0	0	0	0
	주식배당	0	0	0	0	0	0	0	0
ING생명	현금배당	0	0	0	0	0	100	350	0
	주식배당	0	0	0	0	0	0	0	0
푸르덴셜생명	현금배당	0	0	0	0	0	0	0	0
	주식배당	0	0	0	0	236	0	0	150
메리츠화재	현금배당	50	58	19	77	77	77	77	78
	주식배당	0	0	0	0	0	0	0	0
신동아화재	현금배당	0	0	0	0	0	0	0	0
	주식배당	0	0	0	0	0	0	0	0
대한화재	현금배당	22	0	0	0	40	0	9	9
	주식배당	0	0	0	0	0	0	0	0
그린화재	현금배당	8	0	0	0	0	0	0	0
	주식배당	0	0	0	0	0	0	0	0
흥국쌍용화재	현금배당	28	29	0	0	0	0	0	0
	주식배당	0	0	0	0	0	0	0	0
제일화재	현금배당	4	0	0	0	0	0	0	0
	주식배당	15	0	0	0	0	0	0	0
삼성화재	현금배당	98	25	242	485	485	477	718	719
	주식배당	0	2,946,837	0	0	0	0	0	0
현대해상	현금배당	67	60	0	122	140	160	200	180
	주식배당	0	0	0	0	0	0	0	0
LIG손보	현금배당	56	69	0	81	108	108	135	135
	주식배당	0	0	0	0	0	0	0	0
동부화재	현금배당	18	49	31	94	157	157	250	269
	주식배당	0	0	0	0	0	0	0	0
교보자보	현금배당	0	0	0	0	0	0	0	0
	주식배당	0	0	0	0	0	0	0	0
다음자보	현금배당	0	0	0	0	0	0	0	0
	주식배당	0	0	0	0	0	0	0	0
교원나라자보	현금배당	0	0	0	0	0	0	0	0
	주식배당	0	0	0	0	0	0	0	0
코리안리	현금배당	22	21	92	92	126	170	225	200
	주식배당	0	840,083	0	462,045	0	291,088	0	1,998,809
서울보증	현금배당	0	0	0	0	0	0	0	0
	주식배당	0	0	0	0	0	0	0	0

## 2.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자본의 점유율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 국내 은행에 대한 연도별 외국자본 지분율 현황

• '00년말 현재

(단위: %)

구 분	주요주주(1% 이상 대주주)	외국인 지분율
조 흥	예금보험공사(80.045), 현대그룹(2.767), 현대자동차(1.006)	0.221
한 빛	예금보험공사(100)	-
제 일	NEWBRIDGE(미국: 50.989), 예금보험공사(45.915), 정부(3.095)	50.989
서 울	예금보험공사(100)	-
외 환	COMMERZBANK AG(독일: 31.624), 수출입은행(16.244), 한국은행(15.916)	33.501
국 민	GOLDMANSACHS(미국 : 11.073), 정부(6.477), BANK OF NEWYORK (미 국: 6.208, ADR), 대한투신(3.047), 현대(2.464), 한국투신(1.990), THE GOVERNMENT OF SINGAPORE(싱가폴: 1.875), GIS-PRUDENTIAL ASSURANCE(영국: 1.600), 삼성(1.441), 국민연금관리공단(1.271)	58.145
주 택	BANK OF NEW YORK(미국 : 15.360, ADR) 정부(14.500), ING INSURANCE INTERNATIONAL(네덜란드 : 9.999), 현대투신(2.059), 한국투신(1.954), GIS-PRUDENTIAL ASSURANCE(영국 : 1.906), CMB-TEMP FDS /TEM WLD (미국 : 1.834), 국민연금기금(1.284), 대한투신(1.277), 삼성생명(1.107)	66.445
신 한	CITIBANK.N.A(미국 : 9.816, ADR), CMB-CAP RE EM GTH FD (미국 : 3.779), 삼성(1.791), 대교(1.463), CMB-EUROPAC GROWTH FD(미국 : 1.449), 현대(1.414), 한국투신(1.353), CMB-ADIA(미국 : 1.210), 증권시장안정 기금(1.073)	49.358 (재일교포 : 27.37)
한 미	JP Morgan & Co. Inc(KAI Limited, 미국 : 17.90, ADR), CITIBANK.N.A (미국 : 22.206, ADR), BOA(미국 : 10.082), 삼성(10.082), 대우(5.005), CMB-CAP RE EM GTH FD(미국: 3.119), 국민연금기금(1.962), 대한전선(1.818), 대한 투신(1.143), THE GREAT(싱가포르 : 1.055)	61.490
하 나*	Allianz AG(독일 : 12.458), 코오롱(6.143), 신도리코(5.436), 동원증권(5.162), 두산건설(3.891), 포항종합제철(3.570), 동부화재해상보험(3.221), IFC(2.786), 삼성생명보험(2.757), 국민연금기금(2.573), THE GREAT(싱가포르 : 2.003), CITIBANK N.A.(미국 : 1.739), 효성(1.561), MATHEWS INTL FUND(미국: 1.283), LG투자증권(1.148), 현대투신(1.055)	32.168
평 화	예금보험공사(100)	-
대 구	삼성생명(8.076), 교보투신(6.845), 국민연금기금(2.657), 증시안정기금(2.512), 동일산업(1.318)	0.786
부 산	롯데제과(14.146), 교보생명보험(6.990), 김진기(4.228), 이병걸(2.119), 증시안 정기금(2.030), 한국철강(2.008), 권홍사(1.051)	7.023
광 주	예금보험공사(100)	-
제 주	예금보험공사(100)	-
전 북	삼양사(10.913), 한아름종금(4.876), 증시안정기금(3.334), 호남식품 (2.756), 김광수(2.566), 이종덕(1.994), 세풍(1.058), 광주은행(1.019) <sup>1)</sup>	0.053
경 남	예금보험공사(100)	-

• '01년말 현재

(단위: %)

구 분	주요주주(1% 이상 대주주)	외국인 지분율
조 흥	예금보험공사(80.05), 현대그룹(2.40), 현대자동차(1.00)	0.32
한 빛	우리금융지주(100)	-
제 일	NEWBRIDGE(미국 : 50.99), 예금보험공사(45.92), 정부(3.09)	50.99
서 울	예금보험공사(100)	-
외 환	COMMERZBANK AG(독일 : 32.55), 수출입은행(32.50), 한국은행(10.67)	33.53
국 민	정부(9.64), Goldmansachs(미국 : 6.82), ING(네덜란드 : 4.00), MSCO-LONE Cypress(미국 : 2.09), 국민연금(1.91), Government of Singapore(싱가포르 : 1.82), 대한투신(1.45), BARON(버진아일랜드 : 1.42), JPMCB-TEMP FDS/TEM WLD(미국 : 1.13), 현대(1.02)	71.11
신 한	신한금융지주(100)	-
한 미	JP Morgan & Co. Inc(KAI Limited, 미국 : 17.90), 삼성(16.82), 국민연금(4.23), CHADWICK(말레이시아 : 3.96), FREEWAY(말레이시아 : 3.96), SCARLET(말레이시아 : 3.68), KAB INVEST(말레이시아 : 2.85), EAGLE(말레이시아 : 2.72), JPMCB-CAP RE EM GTH FD(미국 : 2.48), GABLE(말레이시아 : 2.03), 대한전선(1.82), MSCO-BLUE RIDGE(미국 : 1.43), MADDEN(말레이시아 : 1.29), JPMCB-SCHRO CMCT PEMF(미국 : 1.12), KORANDO(말레이시아 : 1.11)	53.22
하 나	Allianz AG(독일 : 11.82), IFC(6.64), 코오롱(5.83), 두산(4.74), 동원(4.03), 포항종합제철(3.93), 국민연금기금(3.66), 동부(2.74), The Government of Singapore(2.49), 삼성(2.45), MSIL-SR INV (L) LTD(말레이시아 : 1.47), 신도리코(1.16), 한국투신(1.06), 현대투자신탁(1.05), MATHEWS INTL FUND(미국 : 1.04),	52.14
대 구	삼성생명(8.08), Atlantis Korean Smaller(아일랜드 : 2.76), 증시안정기금(2.17), 동일산업(1.77), 교보투신(1.02)	3.77
부 산	롯데제과(14.15), 파크랜드(4.95), 김진기(4.23), Atlantis Korean Smaller(아일랜드 : 3.58), 한국철강(2.24), 박연구(2.02), 증시안정기금(1.75), 흥민철(1.75), 권흥사(1.05)	10.64
광 주	우리금융지주(99.99)	-
제 주	예금보험공사(95.74), 김태진(1.25)	-
전 북	삼양사(10.91), 호남식품(2.78), 대한교과서(2.72), 증시안정기금(2.67), 전대우(2.52), 서울상호신용금고(1.24), 박광영(1.21), 김정임(1.09), 세풍(1.06), 이종덕(1.05)	0.05
경 남	우리금융지주(99.99)	-

• '02년말 현재

(단위: %)

구 분	주요주주(1% 이상 대주주)	외국인 지분율
조 흥	예금보험공사(80.04), 현대중공업(1.78), 현대자동차(1.01)	3.08
우 리	우리금융지주(100)	-
제 일	NEWBRIDGE(미국 : 50.99), 예금보험공사(45.92), 정부(3.09)	50.99
하 나	예금보험공사(27.84), Allianz AG(독일 : 8.16), 동원(4.71), IFC(4.37), 코오롱(4.02), 포스코(3.29), 두산(3.15), 동부(2.76), MSCO-STANDPACCAP(2.14), MSIL-SRINV(L)LTD(1.09)	28.71
외 환	COMMERZBANK AG(독일 : 32.55), 수출입은행(32.50), 한국은행(10.67), SSB-SMALLCAP(미국 : 2.09)	33.53
국 민	정 부(9.33), Goldmansachs(미국 : 5.13), ING(네덜란드 : 3.87), 국민연금(2.29), DBLDN-Baron Securities L(미국 : 1.50), JPMCB-EUROPAC GROWTH FD(미국 : 1.46), MSCO-LONE Cyprss(미국 : 1.20), 대한투신(1.19)	70.23
신 한	신한금융지주(100)	-
한 미	JP Morgan & Co. Inc(KAI Limited, 미국 : 15.94), 삼성(13.89), CHADWICK(말레이시아 : 3.52), FREEWAY(말레이시아 : 3.52), SCARLET(말레이시아 : 3.28), 국민연금(3.21), MSIL-TOSCA(미국 : 2.78), KAB INVEST(말레이시아 : 2.54), EAGLE(말레이시아 : 2.42), JPMCB-SCHRO CMCT PEMF(미국 : 1.87), GABLE(말레이시아 : 1.81), 대한전선(1.56), MSCO-VIKING GL EQT(미국 : 1.35), MSCO-BLUE RIDGE(미국 : 1.28), MADDEN(말레이시아 : 1.15), MSCO-VGE III PTFLIO(미국 : 1.11), JPMCB-VANGUARD WF INTL G(미국 : 1.07)	66.39
대 구	삼성생명(7.38), 프랭클린템플턴 투신(4.96), SSB-SMALL CAP(미국 : 3.92), JPMLU-JPM FLM FD(중국 : 3.08), 국민연금(1.64), 동일산업(1.54), 이병걸(1.44), HKIT-JF KOREA TST(뉴질랜드 : 1.44), 박연구(1.27)	20.13
부 산	롯데제과(14.11), Small Capital World Fund Inc.(미국 : 3.20), 파크랜드(2.98), 한국철강(2.14), 박연구(1.64), 플랭클린템플턴 투신(1.37), 풍원제화공업(1.27), Templeton Growth Equity(1.24), 삼성투신(1.17), Atlantis Korean Smaller(아일랜드 : 1.16), 국민연금(1.08), 대한투신(1.01)	12.04
광 주	우리금융지주(99.99)	-
제 주	신한금융지주(62.42), 예금보험공사(31.96)	-
전 북	삼양사(10.91), 김광수(3.25), 호남식품(2.81), 전대우(2.47), 김장식(2.12), 진흥상호저축은행(1.16), 서울상호저축은행(1.15), 이종덕(1.09), 한국상호저축은행(1.07), 세풍(1.06)	0.10
경 남	우리금융지주(99.99)	-

• '03년말 현재

(단위: %)

구 분	주요주주(1% 이상 주주)	외국인 지분율
조 흥	신한지주(81.158), 현대중공업(1.68), 국민연금(1.03)	2.27
우 리	우리금융지주(100)	-
제 일	NEWBRIDGE(미국 : 48.56), 예금보험공사(48.49), 정부(2.95)	48.56
하 나	예금보험공사(21.66), Allianz AG(독일 : 8.16), 동원(4.98), 포스코(3.29), 코오롱(3.21), 동부화재(3.17), MSIL-TOSCA(미국 : 2.74), IFC(중국 : 2.73), 국민연금기금출납원(1.76), Templetonn Foreign Fund(미국 : 1.61), MSIL-SRINV(L)LTD(말레이시아 : 1.48)	43.16
외 환	Lone Star(미국 : 51.00), COMMERZBANK AG(독일 : 14.75), 수출입은행(14.00), 한국은행(6.18)	71.04
국 민	ING Bank N.V(네덜란드 : 3.78), Euro Pacific Growth(미국 : 3.18), Emerging Markets Growth(3.01), 국민연금기금출납원(2.23), Government of Singapore(1.81),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1.39), 한국투자신탁운용(1.29), Templeton Growth Fund INC(1.25), Templeton Foreign Fund(1.25), ABU Dhabi Investment AUT(1.19), GIS-Prudential Assurance LTD(1.17), Goldman Sachs Capital SH(1.14)	73.56
신 한	신한금융지주(100)	-
한 미	JP Morgan & Co. Inc(KAI Limited, 미국 : 16.31), Standard Chartered Bank(영국 : 9.76), SIMIL(7.54), MSIL-TOSCA(미국 : 3.955), CHADWICK(말레이시아 : 3.61), FREEWAY(말레이시아 : 3.61), SCARLET(말레이시아 : 3.36), KAB INVEST(말레이시아 : 2.60), EAGLE(말레이시아 : 2.48), CITADEL HORIZON SARL(룩셈부르크:2.37), MSCO-Lone Cyprss(미국 : 1.86), Gable(말레이시아 : 1.85), 국민연금기금출납원(1.42), Norges Bank(1.41), Goldman Sachs Int'l LTD(영국 : 1.27), Msc- Viking GL EQT(미국 : 1.25), Vanguard World Fund(미국 1.22), Madden(말레이시아 : 1.17), Msc- VGE III Ptflio(미국 : 1.08), Korando(말레이시아 : 1.01)	89.59
대 구	삼성생명(7.36), SSB-SMALL CAP(미국 : 5.00), 템플턴 투신운용(2.80), Templeton Global Smaller(캐나다 : 1.63), 동일산업(1.62), 현대투신운용(1.51), 박연구(1.42), 국민연금관리공단(1.14), BBHK-ARISAIG KOR FD(말레이시아 : 1.14), BONYL/BONYE-MERLLNCHIN(룩셈부르크 : 1.02)	31.31
부 산	롯데제과(14.11), CRMC(미국 : 10.40), 파크랜드(4.11), 플랜크린템플턴 투신(2.76), 한국철강(2.14), MSIL-SR INV(L)LTD (말레이시아 : 2.13), MSCO-OCM EMG MKT FD(2.01), 박연구(1.65), The Capital Guardian EMP(1.59), BONYL/BONYE-MERL LNCH IN((룩셈부르크 : 1.32), Templeton Global Smalle(캐나다 : 1.32)	38.46
광 주	우리금융지주(99.99)	-
제 주	신한금융지주(62.42), 예금보험공사(31.96)	-
전 북	삼양사(11.82), 한국상호저축은행(4.89), 김광수(4.70), 호남식품(4.37), 전대우(2.47), 서울상호저축은행(1.78), 김장식(1.57), 유훈중(1.31), 이종덕(1.06)	0.25
경 남	우리금융지주(99.99)	-

• '04년말 현재

(단위: %)

은행	주요주주(1% 이상 주주)	외국인 지분율
조흥	신한지주(100, 6.22 주식교환, 7.2일자로 상장폐지)	62.9
우리	우리금융지주(100)	11.6
제일	스탠다드차타드(100)	100.0
하나	Temasek(Angelica Investment, 싱가포르 : 9.89), Franklin Advisors Inc(미국 : 5.43), Allianz Fiance B.V(독일 : 5.17%), 동원(4.96), 포스코(3.38), 국민연금 기금출납원(2.49), 동부화재(2.35), MSIL-TOSCA(2.09), NTC-GOVSPORE(2.00), MSIL-MSCOINTLLTD(1.88), MSCO-LONECYPRSS (1.88), Merrillynnch International(1.42), MSIL-SPINV(L) LTD(1.19), 한국투자신탁(1.19), Credit Suisse Financial(1.15), Internatinal Finance Corporation(1.10)	68.3
외환	Lone Star(미국 : 50.53), COMMERZBANK AG(독일 : 14.61), 수출입은행(13.87), 한국은행(6.13), 국민연금관리공단(2.16)	72
국민	Euro Pacific Growth(미국 : 4.26), ING Bank N.V(네덜란드 : 4.06), 국민연금기금출납원(2.23), NTC-GOV SPORE(중국 : 2.00) Emerging Markets Growth(미국 : 1.88), Templeton Growth Fund INC(1.25), Templeton Foreign Fund(1.25), NTC/BONY/SSB-MONETR SG(중국 : 1.10), GIS-Prudential Assurance LTD(1.17)	76.1
신한	신한금융지주(100)	62.9
한국 씨티	씨티그룹(99.86)	99.9
대구	삼성생명(7.36), SMALL CAP(미국 : 6.43),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 Corp(미국: 5.31), MSIL-SR INV(L)LTV(말레이시아 : 3.04), 템플턴 투신운용(2.26), 국민연금관리공단(1.58)	55.8
부산	롯데제과(14.13), CRMC(미국 : 10.4), 파크랜드(4.11), Templeton Global Smaller(3.00), MSIL-SR INV(L)LTD (말레이시아 : 2.13), UBS Custody Singapore(싱가포르 : 1.99), 한국철강(1.99), The Capital Guardian EMP(미국 : 1.92), BONYL/BONYE-MERL LNCH IN(룩셈부르트 : 1.22)	59.2
광주	우리금융지주(99.99)	11.6
제주	신한금융지주(62.42), 예금보험공사(31.96), 한국상호저축은행(1.00)	39.2
전북	삼양사(11.82), 코리아펀드(8.19), 한국상호저축은행(6.93), 대한교과서(4.78), 호남식품(4.76), 연금-신영(1.84), 전대우(1.51), MSIL-MS CO INTL LTD(영국 : 1.21), 서울상호저축은행(1.20), 엄경숙(1.15), 국민은행(신영투신)(1.14), 에프디테크(1.00)	12.1
경남	우리금융지주(99.99)	11.6



• '05년말 현재

(단위: %)

은행	주요주주(1% 이상 주주)	외국인 지분율
조흥	신한지주(100)	57.06
우리	우리금융지주(100)	11.44
제일	스탠다드차타드(100)	100.00
하나	하나금융지주(100)	78.15
외환	Lone Star(미국 : 50.53), COMMERZBANK AG(독일 : 14.61), 수출입은행(13.87), 한국은행(6.12)	73.24
국민	EURO PACIFIC GROWTH FUND(미국 : 4.95), ING BANK N.V(네덜란드 : 4.06), 국민연금관리공단(3.28), NTC-GOV SPORE(1.94), CAPITAL WORLD GROWTH AND(미국 : 1.52), TEMPLETON GROWTH FUND INC(미국 : 1.19), ABU DHABI INVESTMENT AUT(미국 : 1.12), SSB-ARTISAN(미국 : 1.07)	85.68
신한	신한지주(100)	57.06
한국씨티	씨티그룹(99.91)	99.95
대구	SMALL CAP(미국 : 7.87), 삼성생명(7.36), MSCOP-PLEDGE(말레이시아 : 2.81), BBH-GMO EMGMKT FD(미국 : 2.63%), 미래에셋(2.51), 국민연금관리공단(2.38), TEMPLETON GLOBAL SMALLER CO(캐나다 : 1.82), PL-ABDN GL(싱가포르 : 1.26), OPPENHEIMER DEVELOP(미국 : 1.26), SSB-NEW ECNM(미국 : 1.22), 템플턴투신(1.22), 동일산업(1.16), KB자산운용(1.11), SAUDIARABIAN MONETA(사우디아라비아 : 1.10), NTC-GOV SPORE(캐나다 : 1.06), SCHRODER INTERNATIONAL(룩셈부르크 : 1.05), 에스엘(주)(1.05)	57.76
부산	롯데재과(14.11), CRMC(미국 : 10.98), 파크랜드(4.11), 한국철강(주)(1.90), PL-ABDN GL(1.63), TEMPLETON GLOBAL SMALLER(1.62), 플랜클린 템플턴투신(1.51), 국민연금(1.48), THE CAPITAL GUARDIAN EMP(미국 : 1.37), SCHRODER INTERNATIONAL(룩셈부르크 : 1.37), MSIL-SRINV(L)LTD(말레이시아 : 1.29), NTC-SAUDI ARAB MON(사우디아라비아 : 1.07), ROYAL MAIL PENSIONS TRUS(영국 : 1.01)	60.21
광주	우리금융지주(99.99)	11.44
제주	신한금융지주(62.42), 예금보험공사(31.96), 정영화(2.11)	36.89
전북	삼양사(11.80), OPPENHEIMER DEVELOPING(미국 : 6.01), THE KOREA FUND INC(미국 : 5.53), 호남식품(4.95), 대한교과서(4.83), 신영투신(3.68), SSB-SMALLCAP(미국 : 3.66), SSB-AM FD INS(미국 : 3.44), 국민연금(2.98), BPSS-ABER INTL FD ASCF(아일랜드 : 2.05), 템플턴투신(1.93), NTC-ATL KOR SM COM(1.73), 메트라이프(1.36), SSB-ABD AS SM(영국 : 1.17), SSB-PAC SLT(미국 : 1.14), PRINCIPAL MUTUAL LIFE IN(미국 : 1.01), 이의주(1.00)	29.08
경남	우리금융지주(99.99)	11.44

□ 증권회사 연도별 외국자본 지분율 현황

금융회사명	외국자본명	지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도이치증권	DB Investment (GB) Ltd	-	99.90	00.00	100.00	100.00	100.00
비엔피파리바 증권중개	BNP Paribas S.A.	-	-	-	100.00	100.00	100.00
씨티그룹글로벌 마켓증권	Salomon Smith Barney Inc	-	-	-	-	-	-
	Citigroup Financial Products Inc. (구 Salomon Brothers Holding Company)	8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CLSA 코리아증권	Credit Lyonnais Securities Asia B.V.	-	-	-	100.00	100.00	100.00
메리츠증권	Trader Investment(PAPE II)	25.33	25.33	25.33	25.33	25.33	-
	Atlantis Korean Smaller	-	-	5.76	-	-	-
브릿지증권 (구 리젠트증권)	리젠트퍼시픽그룹	42.68	37.76	20.71	23.56	26.19	-
	WICARR	-	-	-	-	-	-
	Korea Online(Labuan) Ltd	-	15.04	9.96	11.33	12.60	-
	HKIT-REGENT KR(Labuan)	22.32	-	-	-	-	-
	SWKOL Ltd(Labuan)	-	14.26	19.29	21.95	25.14	-
	SWIB	-	-	5.34	6.08	6.76	-
(구 일은증권)	SWKOL Ltd	-	29.15	-	-	-	-
	SWIB	-	6.03	-	-	-	-
서울증권	MSCO-QE International (L) Limited	22.58	27.10	25.68	25.68	25.68	-
	MSIL-SR Investment (L) LTD	5.22	5.89	6.48	6.47	5.72	-
이트레이드증권	소프트뱅크	40.00	40.00	40.00	40.00	40.00	-
	E*TRADE GROUP	10.00	10.00	10.00	10.00	10.00	13.00
	E*TRADE JAPAN	-	-	-	-	-	87.00
푸르덴셜 투자증권	PKHC#1,LLC	-	-	-	-	40.00	40.00
	PKHC#2,LLC	-	-	-	-	40.00	40.00

금융회사명	외국자본명	지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한누리 투자증권	살로먼브라더스 인코퍼레이티드	25.00	25.00	25.00	-	-	-
	살로먼브라더스 홀딩컴퍼니	24.00	24.00	24.00	-	-	-
	에이케이아이링크	10.40	10.40	16.80	-	-	-
	J.D.K Investment CO., Inc	-	-	-	29.00	29.00	33.50
	LS Holdings Inc.	-	-	-	25.70	25.70	25.70
	SCP Private Equity Partners II, L.P.	-	-	-	19.80	19.80	19.80
	Panichello Enterprises, Inc	-	-	-	14.00	14.00	14.00
KGI증권	KGI Korea Ltd	51.00	51.00	51.00	51.00	51.00	51.00

주 1) 최대주주가 외국계인 증권회사만 표시, 보유주식 5%이상 외국인 기준, 회계연도 기준  
(회계연도 4월-익년 3월말)

2) 리젠트증권과 일은증권은 2002. 1. 23 기준으로 브릿지증권으로 합병

### 3.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 개별 금융지주회사별 연도별 주요 경영지표  
(최근 7년간, 성장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생산성)
- 성장성 별도 제출(총자산, 전년대비 총자산 증가율, 총여신,  
전년대비 총여신 증가율)

"붙임 참조"

(불입)

## 1. 성장성(연결기준)

### a. 총자산 및 증가율(전년대비)

(단위 : 조원, %)

	FY 2001	FY2002	증감	증감율	FY2003	증감	증감율	FY2004	증감	증감율	FY2005	증감	증감율
우리지주	98.8	114.8	16.1	16.3	128.8	13.9	12.1	136.6	7.9	6.1	164.5	27.9	20.4
신한지주	56.3	66.8	10.4	18.5	139.2	72.4	108.5	146.9	7.7	5.5	160.9	14.1	9.6
하나지주	-	-	-	-	-	-	-	-	-	-	95.9	-	-
한국지주	-	-	-	-	3.3	-	-	4.8	1.5	46.4	5.5	0.7	13.7

\* 우리, 신한, 하나지주는 12월결산법인, 한국지주(구 동원지주)는 '04.4.1 이후 결산월을 12월에서 3월로 변경

\*\* 하나지주 '05.12월 신설, 한국지주(구 동원지주) '03. 5월 신설

### b. 총여신 및 증가율(전년대비)

(단위 : 조원, %)

	FY 2001	FY2002	증감	증감율	FY2003	증감	증감율	FY2004	증감	증감율	FY2005	증감	증감율
우리지주	63.4	77.9	14.5	22.8	88.5	10.6	13.7	93.2	4.7	5.3	109.9	16.6	17.9
신한지주	37.0	48.2	11.1	30.0	98.2	50.0	103.9	100.7	2.5	2.6	112.5	11.8	11.7
하나지주	-	-	-	-	-	-	-	-	-	-	65.3	-	-
한국지주	-	-	-	-	0.7	-	-	0.6	-0.1	-19.4	1.0	0.4	69.8

\* 총여신은 무수익산정대상 여신 기준임(대출채권, 확정지급보증 등)

## 2. 수익성(연결기준)

### a.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FY 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우리지주	6,863	5,916	563	12,925	16,882
신한지주	2,208	6,022	3,630	10,503	17,321
하나지주	-	-	-	-	2,160
한국지주	-	-	459	995	4,758

### b. 총자산순이익률(ROA)

(단위 : %)

	FY 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우리지주	0.71	0.55	0.05	0.97	1.11
신한지주	0.79	0.95	0.34	0.71	1.11
하나지주	-	-	-	-	0.90
한국지주	-	-	1.50	2.80	8.06

### c.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단위 : %)

	FY 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우리지주	18.44	12.83	1.00	19.92	19.59
신한지주	14.31	17.36	8.03	15.17	20.04
하나지주	-	-	-	-	13.80
한국지주	-	-	4.73	9.26	33.09

### 3. 자산건전성(연결기준)

(단위 : 조원)

	FY 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우리지주	63.4	4.3	77.9	2.6	88.5	2.5	93.2	2.4	109.9	1.6
신한지주	37.0	1.1	48.2	0.9	98.2	3.5	100.7	1.7	112.5	1.2
하나지주	-	-	-	-	-	-	-	-	65.3	0.6
한국지주	-	-	-	-	0.7	0.1	0.6	0.1	1.0	0.1

#### 4. 자본적정성(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단위 : %)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우리지주	136.2	113.6	107.4	136.0	138.2
신한지주	134.4	130.9	118.4	129.4	132.8
하나지주	-	-	-	-	165.0
한국지주	-	-	307.4	162.0	392.7

\*금융지주회사그룹의 필요자본(금융기관이 금융관련법령에 규정된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로 100%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5. 생산성(연결기준)

### a.1인당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우리지주	0.44	0.41	0.04	0.78	1.08
신한지주	0.86	0.82	0.39	0.72	1.14
하나지주	-	-	-	-	0.97
한국지주	-	-	0.31	0.39	2.03

### b.1인당 총자산

(단위 : 억원)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우리지주	61.4	74.5	85.1	80.6	96.9
신한지주	108.7	86.2	114.3	100.1	103.0
하나지주	-	-	-	-	108.1
한국지주	-	-	20.8	13.8	25.2

#### 4. 대부업 감독업무 관련

- 1) 최근 5년간 일본계 대부업체 국내 진출 현황(회사별, 진입, 퇴출, 자산규모 현황)
- 2)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구분 선정 기준 자료
- 3) 전국 16개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 현황(최근 5년간 증감, 자산규모, 시도별 구분)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은 관할 시·도에, 법령 개정관련 권한은 재정경제부에 있음

\*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는 관할 시·도가, 형사처벌은 사법기관이 담당

- 금융감독원은 직접적인 감독권한은 없으나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설치('01.4월)·운영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반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1) 최근 5년간 일본계 대부업체 국내 진출 현황(회사별, 진입, 퇴출, 자산규모 현황)

□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원은 일본계 대부업체의 국내 진출 현황 파악 곤란

□ 다만 외부감사 대상\* 등록 대부업체의 외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05.12월말 현재 15개 대부업체의 최대주주가 일본계로 파악됨

\* 자산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붙임1> 외부감사보고서를 통해 파악한 일본계 대부업체 현황

## 2)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구분 선정 기준 자료

□ 대부업법 제2조는 여신금융기관을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정의

\*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 동법 제3조는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여신금융기관을 제외

## 3) 전국 16개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 현황(최근 5년간 증감, 자산 규모, 시도별 구분)

□ 대부업 등록 및 등록취소 현황(붙임 2)은 서민금융이용자 보호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별 시·도로부터 수집한 현황을 단순 취합한 것임

(붙임1)

## 외부감사보고서를 통해 파악한 일본계 대부업체 현황

('05년말 기준)

구 분	설립	최대주주	자 산	자본금
(주)유아이크레디트	'02.6월	(주)유아즈 44%	236억원	45억원
(주)스타크레디트	'02.9월	(유)호프 33%	277억원	30억원
(주)하트캐싱	'02.11월	나카무라 분쿄 100%	159억원	10억원
엠원크레디트(주)	'02.3월	시노다 호세 65%	81억원	43억원
(주)미래크레디트	'02.10월	나카무라 마사키100%	168억원	18억원
(주)센츄리서울	'99.12월	(주)센츄리 100%	307억원	2억원
산외(주)	'02.8월	유나이티드(주) 85%	2,462억원	200억원
퍼스트머니(주)	'02.4월	J&K캐피탈 100%	586억원	2억원
에스캐피탈(주)	'01.9월	"	140억원	1억원
(주)여자크레디트	'01.5월	"	394억원	1억원
(주)파트너스크레디트	'01.3월	"	208억원	11억원
해피레이디(주)	'00.11월	"	287억원	1억원
프로그래스(주)	'99.10월	"	818억원	111억원
아프로소비자금융(주)	'98.7월	"	719억원	184억원
원캐싱(주)	'02.2월	CCDREAM 44%	291억원	26억원
계(15)	-	-	7,134억원	685억원

\* 상기 업체 외에도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대부업체가 존재할 수 있음

(붙임2)

## 대부업 등록 및 취소현황

(단위: 개)

기간	등록(누적)	등록취소 (누적)	자진취소 (누적)		등록업체
			자진취소 (누적)	작권취소 (누적)	
03.12월	13,931	2,377(17.1%)	2,376	1	11,554
04.12월	18,395	6,855(37.3%)	5,731	1,124	11,540
05.12월	25,947	11,391(43.9%)	8,690	2,701	14,556
06.6월	29,696	13,329(44.7%)	10,417	2,912	16,367

## 지역별 대부업 등록 및 취소현황

('06.6월말 현재, 단위 : 개)

지역	등록(누적)	등록취소 (누적)	등록취소(누적)		등록업체
			자진취소(누적)	직권취소(누적)	
서울	9,774	4,113	2,839	1,274	5,661
경기	5,079	2,032	1,915	117	3,047
부산	2,453	1,333	886	447	1,120
대구	1,571	912	604	308	659
인천	1,443	777	582	195	666
광주	1,054	527	359	168	527
대전	997	425	404	21	572
울산	723	333	333	-	390
강원	794	396	325	71	398
충남	794	381	267	114	413
충북	891	493	484	9	398
전남	688	236	217	19	452
전북	984	308	308	-	676
경남	1,380	684	549	135	696
경북	826	242	240	2	584
제주	245	137	105	32	108
합계	29,696	13,329	10,417	2,912	16,367

## 5. 금융감독원 운영 관련

### - 특수법인으로써의 설립근거 자료

#### □ 설립근거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4조에 근거하여 종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하여 '99. 1. 2.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금융감독원 설립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①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금융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 한편, 금융감독원의 설립목적은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데 있음(동 법 제1조)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6. 생보사 상장관련

- 1) 상장자문위원회 공청회 기록(1999년, 2003년)
- 2)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 상장에정 생보사 자본계정 분석 자료(계약자 자금비율 반드시 명기)
- 3) 한국은행이 9월에 보고한 생보사 자산운용기능 검토 보고서 사본
- 4) 생보사 구분계리문제 개선방안
- 5) 생보사 상장 단계별 로드맵(삼성, 교보, 미래에셋, 동양생명 등 상장순위, 시기)

### 1) 상장자문위원회 공청회 기록(1999년, 2003년)

- ☐ 1999년, 2003년에 상장자문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음
- ☐ 다만, 1999년중 금융연구원 및 보험학회는 각각 2차례에 걸쳐 공청회 등을 개최한 바 있음

< 첨부1 > 1999년 금융연구원 제1차 및 제2차 공청회 자료

< 첨부2 > 1999년 보험학회 제1차 및 제2차 세미나 자료



2)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 상장예정 생보사 자본계정 분석 자료  
(계약자 자금비율 반드시 명기)

< 첨부4 > 자본계정 분석자료

3) 한국은행이 9월에 보고한 생보사 자산운용기능 검토 보고서 사본

☐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상기 검토보고자료를 금감위에 보고한  
바 없음

4) 생보사 구분계리문제 개선방안

☐ 현재 구분계리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구분계리 T/F는 현행  
법체제,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5) 생보사 상장 단계별 로드맵(삼성, 교보, 미래에셋, 동양생명  
등 상장순위, 시기)

☐ 삼성, 교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의 상장여부 및 시기 등은  
최종 생보사 상장방안이 마련된 후 개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1차 공청회 자료

#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 이익배분을 중심으로 -

1999. 8. 20



韓國金融研究院  
Korea Institute of Finance

##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방안 공청회

일 시 : 1999. 8. 20(金) 14:00~17:00

장 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

주 제 :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 이익배분을 중심으로 -

사 회 : 국찬표 (서강대 교수, 한국재무학회 회장(차기))

발표자 : 최홍식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토론자 : 권영준 (경희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김재우 (교보생명 대표이사)

김주영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 변호사)

나동민 (KDI 연구위원)

신장섭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이근창 (영남대 교수)

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 소장)

(가나다 순)

## — 목 차 —

### I. 논의의 배경

1. 생보사 기업공개 문제 대두
2. 현황

### II. 국내 생보업계 현황

1. 생보업계 구조
2. 국내 생보사 경영행태

### III. 생보사 기업공개 효과

1. 기업공개 요건 및 상장 가능 생보사
2. 생보사 기업공개 효과

### ④ 생보사 기업공개상의 과제

1. 생보사 기업공개시 쟁점사항
2.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3. 계약자간 이익배분

### V. 향후 과제

1. 이익배분기준 개선
2. 분리계정의 도입
3. 생보사 지배구조 개선
4. 기타 검토사항

### <별첨> 생보사 순자산가치평가

- <표 IV-1> 배당 · 무배당상품 판매비중
- <표 IV-2> 현행 계약자 · 주주간 이익배분비율
- <표 IV-3> 계약자 · 주주간 이익배분시 검토사항
- <표 IV-4>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에 관한 Belth학설
- <표 IV-5> 계약자 · 주주간 적정 이익배분율
- <표 IV-6> 과거 주주 · 계약자간 이익배분 기준
- <표 IV-7> 삼성 · 교보생명 자기자본 현황
- <표 IV-8> 삼성 · 교보생명 자본금 추이
- <표 IV-9> 삼성 · 교보생명 자본금 조정
- <표 IV-10> 삼성 · 교보생명의 자본금 및 주주지분을 변동

#### <별 첨>

- <표 1> 삼성생명 자산재평가 내역
- <표 2> 교보생명 자산재평가 내역
- <표 3> 삼성 · 교보생명의 주당 순자산가치

## I. 논의의 배경

▣ 지난 6월 30일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 처리와 관련해 삼성생명 상장문제를 공론화시킴으로써 국내생보사 기업공개 문제가 생보 업계내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였음.

▣ 더욱이 '89년과 '90년에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법인세 납부 유예기한이 각각 2000. 3. 31과 2001. 1. 31로 다가옴에 따라 생보사 기업공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임.

### 1. 생보사 기업공개 문제 대두

— 생보사 기업공개는 지난 '87년 생보사 경영수지가 개선되면서 일부 생보사가 상장요건을 충족하게 됨에 따라 거론되기 시작함.

○ '86년에 이르러 생보사는 주식 및 부동산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투자영업이익을 실현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88년 4월부터는 이익금 범위내에서 계약자 이익배당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등 경영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하였음.

<표 I -1>

1980년대 생보업계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82	83	84	85	86	87	88	89
업계 전체	△480	△496	△573	△692	16	1,102	1,733	466
삼성생명	△211	△211	△243	△215	△85	△203	△256	310
교보생명	△255	△285	△330	△477	16	899	1,477	156

주: 사업년도 기준

출처: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lt;표 I-3&gt;

## 자산재평가적립금 처분내역

(단위: 억 원, %)

구 분	재평가 적립금	계약자지분				주주지분 <sup>1)</sup>	대부유보 <sup>2)</sup>
		공익기금 <sup>3)</sup>	특별배당 <sup>4)</sup>	장래배당 <sup>5)</sup>	소계		
교보생명	금액	2,197	300	289.5	289.5	879	656
	비율	(100.0)	(13.6)	(13.2)	(13.2)	(40.0)	(29.9)
삼성생명	금액	2,927	391	391	391	1,173	876
	비율	(100.0)	(13.4)	(13.3)	(13.3)	(40.0)	(29.9)

주: 1) 공익사업 출연기금으로 3개년 자산운용수익률로 산출한 이자출연

2) 재평가특별배당으로 개별계약자에게 할당

3)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감독원장 승인하에 계약자배당재원 및 결손보전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

4) 자본으로 전입

5) 자본잉여금으로 처리(감독원장 승인하에 계약자배당재원 및 결손보전으로 사용 가능)

출처: 재경부

— 그러나 '90년 동 사안에 대한 당국의 견해 변경으로 생보사 기업공개 시도는 무산되었음.

○ 당시 재무부는 생보사 기업공개시 전체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과 기존주주에 대한 특혜시비 등 생보사 기업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여론을 감안해 동 사안을 유보시켰음.

— 이후 당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4차례 개정하면서 생보사 기업공개를 연기시켜 왔음.

○ 동 법은 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해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재평가에 관한 법인세 유예기간내에 기업을 상장할 경우 해당 법인세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에는 법인세 면제기간을 1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같은 움직임은 그 동안 꾸준히 기업공개 의지를 보여왔던 양대 생보사가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증권시장이 활황세에 접어든 현 시기를 생보사 기업공개를 성사시킬 수 있는 적기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양대 생보사는 기업공개를 통한 풍부한 자금조달로 기업 구조조정과 더불어 생보업계 구조조정도 촉진할 수 있다는 명분 등을 내세워 기업공개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음.
  - 삼성그룹은 삼성자동차 처리에 있어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이라는 방법으로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내 놓음으로써 삼성자동차 정리와 삼성생명 상장을 연계시키고 있음.
  - 교보생명 지분 11%를 소유하고 있는 김우중 회장이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교보생명 주식 150만주를 출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임.
- 한편 생보사 내부적으로는 생보업의 대내외 개방에 따른 국내 보험시장의 판도 변화에 대응해 독자적인 생존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경영전략 차원도 고려해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생보사는 기업공개를 통해 자사에 대한 계약자들의 인지도와 공신력을 제고시켜 영업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불특정다수의 주주를 새로운 계약자로 유인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시장 확대가 용이함.
- 또한 [은행=관치금융], [보험사=재벌금융]이라는 사회적 비판 여론을 희석시켜야 한다는 공감대 조성도 생보사 기업공개를 촉진한 배경으로 분석됨.
  - 생보사의 주주는 소수 개인 대주주와 이들 소유의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생보사는 모기업 및 계열사들의 자금조달 창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 II. 국내 생보업계 현황

▣ 국내 생보사는 그 동안 무분별한 외형적 성장위주의 경영행태와 폐쇄적 지배구조에 따른 소수 대주주의 전횡 등으로 인해 경영부실화가 초래되는 등 질적성장 노력을 게을리해 왔음.

▣ 출혈경쟁에 따른 경영부실화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생보사는 자체적 경영개선을 소홀히 하였고 당국도 이를 방치해 온 결과 경영손실이 계약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 1. 생보업계 구조

#### 1) 생보사 현황

— '98년 8월 11일 4개 생보사(국제, BYC, 태양, 고려생명)가 퇴출되어 현재 29개 생보사가 영업중이며, 설립기준에 따라 기존사(6개사), 전국사(6개사), 지방사(6개사), 합작사(6개사), 외국사(5개사)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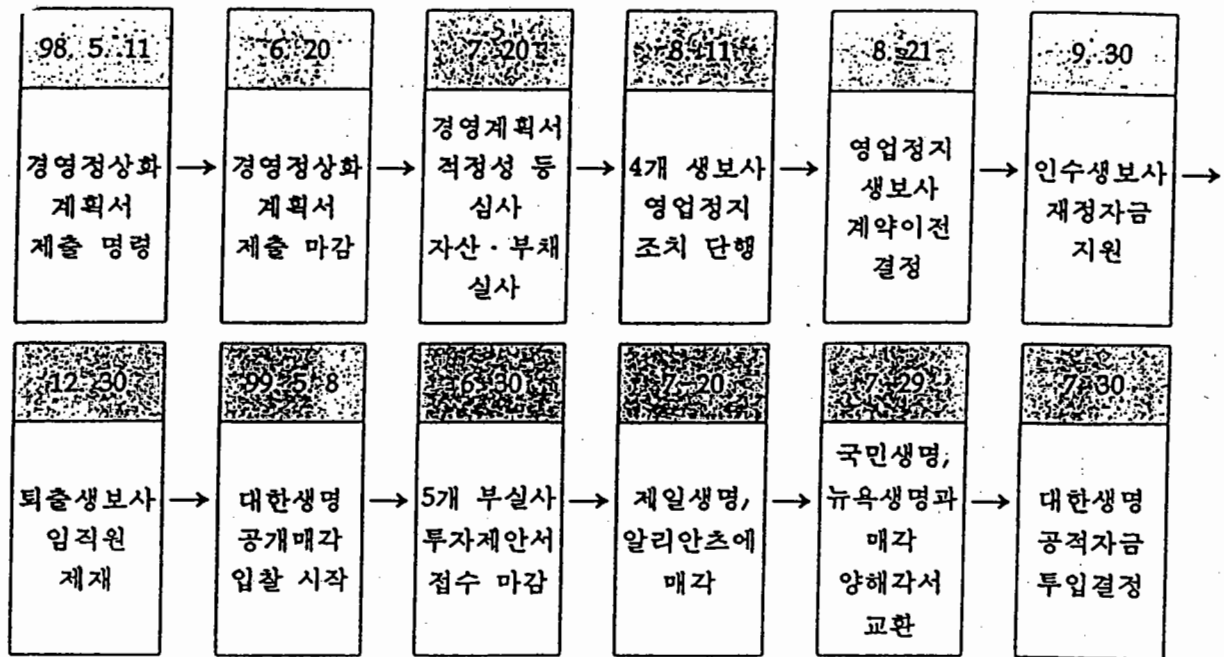
○ 그 동안 국내 생보사는 보험모집인의 집착적인 연고판매로 계약고가 증가하고 정부의 생보업 보호 육성정책에 힘입어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음.

○ '87년 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으로 신설 생보사와 외국 생보사가 대거 생보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시장경쟁이 격화되었음.

— 생보사 경쟁구도는 대형생보사에 의한 과점으로 인해 중소생보사의 영업력이 위축되는 등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표 II-2>

생보사 구조조정 추이



<표 II-3>

생보사 1차 구조조정 현황('98년 8월 11일)

구 분	해 당 사	지급여력 부족비율
영업정지 및 퇴출	국제, BYC, 태양, 고려 (4개사)	20% 초과
경영개선 이행계획서 제출	조선, 동아, 국민, 한국, 한덕, 태평양, 두원 (7개사)	10~20% 미만
경영개선 이행각서 제출	한일, 신한, 한성, 대신, 동양, SK, 금호 (7개사)	0~10% 미만

금융권별 자기자본비율

(단위: 10억원, %)

구 분	총 자 산	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
은 행	487,688	28,147	5.77
중 권	33,691	7,675	22.78
생 보 사	1,922,298	1,919,533	5.33
삼성생명	36,376	589	1.62
교보생명	20,677	530	2.56
중 금	50,079	3,005	6.00
투 신	257,725	△979	△0.38
미국 10대 생보사	1,190,491	48,675	4.09

주: 1) '99년 3월말 기준

- 2) 생보업계의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인 것은 주로 대한생명과 신설생보사 등의 자본잠식에 따른 것임.
- 3) '99년 3월말 현재 자기자본이 잠식되지 않은 생보사는 삼성, 교보, 흥국생명 등 기존사 3개사와 메트라이프, 삼신, 영풍생명 등 합작사 3개사, 푸르덴셜, ING, 프랑스, 아메리카생명 등 외국사 4개사임.

2) 폐쇄적 지배구조

— 국내 생보사는 소수 대주주에 의한 지배구조가 고착되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

- 국내 생보사는 대개 소수 개인 대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주주라 하더라도 대주주 소유의 계열사로서 소수 대주주가 경영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임.

— 개인 대주주의 독단적 지배와 경영권 행사는 생보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여 경영부실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계약자의 이익보다는 사주의 영리를 우선한 경영행태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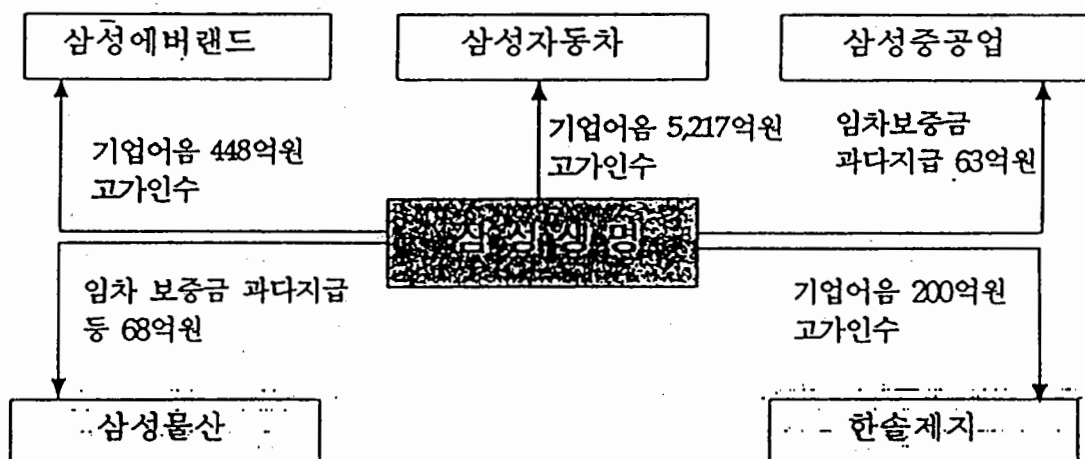
- 대한생명의 부실화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 및 회사 자산 불법 해외유출 등 대주주인 최순영씨의 독단적 경영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단지 대한생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타 생보사에도 해당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생보사의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계약자 피해는 삼성생명의 몇가지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삼성생명은 '97년말부터 '98년초에 걸쳐 시중은행에 총 2,000억원을 후순위대출해 준 뒤 동 은행으로 하여금 삼성계열사가 발행한 저리의 사모사채를 인수토록 하여 계열사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음.
- 또한 삼성생명은 지난 4월 계열사인 삼성자동차가 대우자동차와 빅딜협상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자동차에 대해 1,5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5,400억원을 대출해 주는 등 계약자의 자산을 아무런 제재없이 부실계열사 지원에 유용한바 있음.
- 삼성자동차의 대출금 상환능력을 의심한 여타 금융기관은 삼성자동차 대출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 비해 삼성생명은 오히려 동 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림으로써 자산운용을 위탁하고 있는 계약자에게 손실을 입혔음.
- 또한 '98년 7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삼성에버랜드, 삼성중공업 등 그룹계열사의 기업어음을 고가로 인수하거나 임차보증금 등을 과다지급하는 등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으로 70억 8,700만원을 부과한바 있음.

<표 II-7>

삼성생명 부당내부거래 사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한편 비전문적인 보험모집인과 연고판매에 의존한 국내 생보사의 영업방식은 중도해약을 만연시켜 경영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한 데다 생명보험 가입에 대한 소비자 인식까지 흐려 놓는 결과를 낳았음.

— 생보사의 무차별적인 보험모집인 선발과 위촉으로 인한 모집인의 대량모집·대량탈락의 악순환은 보험계약 유지율의 하락과 사업비의 증가를 야기시켰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이어져 결국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쳤음.

<표 II-8>

보험계약 실효·해약율 추이

(단위: %)

구 분	88	90	92	94	96	97	평균
한 국	28.6	27.8	30.5	26.1	26.6	28.1	27.5
미국방식	23.1	18.7	22.1	21.5	21.4	20.3	20.8
일본방식	38.9	47.2	51.6	43.3	38.8	41.1	44.1
미 국	9.3	8.7	8.3	7.1	6.8	6.1	7.9
일 본	7.6	7.0	8.0	8.3	8.9	10.8	8.1

주: 1) 각국의 실효·해약율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음.

한국:  $[\text{실효해약액} \div (\text{연초보유계약액} + \text{신계약액})] \times 100$

미국:  $\text{실효해약건수} \div \text{평균보유계약건수} \times 100$

일본:  $[\text{실효해약액} + \text{보험금액의 중감분} - \text{부활액}] \div \text{연초보유계약액} \times 100$

2) 개인보험의 실효·해약율임. 단체보험의 경우 거의 1%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임.

출처: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 *Life Fact Book*, 1997

日本 保険研究所, 「生命保険統計號」

— 또한 그 동안 국내 생보사는 회사 소속의 대표보험계리인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경영진의 의한 자의적 분식결산 등의 부당행위가 대표계리인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자행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음.

현재 국내 생보사가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는 계열사 부당내부거래와 생보사 상호간 출혈경쟁 등으로 인해 과거부터 내재해 왔던 문제가 현실화된 것으로 이는 단지 IMF사태 발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 그 동안 국내 생보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체 구조조정 등을 통한 해결을 외면한 결과 막대한 재정자금 투입과 이에 따른 계약자 손해를 초래함.

○ 지난해 퇴출된 4개 퇴출보험사(국제, 고려, BYC, 태양)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총 1조 1,535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되었고, 앞으로도 대한생명과 5개 부실생보사(동아, 한덕, 태평양, 조선, 두원) 처리에 4조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으로 있음.

이상과 같이 국내 생보사는 그 동안 소수대주주의 독단적 전횡, 계열사 부당내부거래, 무모한 외형경쟁 등 경영과실에 따른 모든 손실을 계약자에게 전가하는 비도덕적인 경영행태를 견지해 왔음.

— 결론적으로 생보사의 불법적인 영업관행과 독단적인 경영행태는 계약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빚었음.

○ 생보사의 전략적인 영업팽창 정책은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 등을 외형성장을 위한 자금으로 전용하는 사태를 초래했음.

— 또한 그 동안 계약자보다는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수립된 보험정책과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계약자의 이익은 정책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했음.

○ 그간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진 반면 국내 생보사는 종전 경험생명표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사차익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차배당률의 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음.

### Ⅲ. 생보사 기업공개 효과

■ 현재 유가증권상장규정(제15조 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상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뿐임.

■ 생보사의 기업공개는 소수과점 주주형태를 탈피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주주와 계약자간 이해상충에 따라 선의의 계약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음.

#### 1. 기업공개 요건 및 상장 가능 생보사

— 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유가증권상장규정(제15조 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과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제20조 인수대상 주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단,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기업공개가 불가능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년 4월 정부는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라도 증권거래소의 실질상장 심사를 거쳐 기업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상장심사제도를 도입하였음.

— 현재 유가증권상장규정(제15조 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상의 상장요건을 충족해 기업공개가 가능한 생보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뿐인 것으로 파악됨.

## &lt;표Ⅲ-2&gt;

## 5대 생보사 상장요건 분석

(단위: 억원, %)

구 분		삼 성	교 보	대 한	흥 국	제 일
회 사 개 요		· 1957년 설립 · 수권자본금: 960억원 · 발행주식수: 1,872만주 · 대표이사: 이수빈	· 1958년 설립 · 수권자본금: 1,000억원 · 발행주식수: 1,372만주 · 대표이사: 신창재	· 1946년 설립 · 수권자본금: 800억원 · 발행주식수: 600만주 · 대표이사: 최순영	· 1958년 설립 · 수권자본금: 320억원 · 발행주식수: 600만주 · 대표이사: 심성우	· 1954년 설립 · 수권자본금: 70억원 · 발행주식수: 76만5,600주 · 대표이사: 이태식
자 본 금		936	686	300	80	38
자 기 자 본		5,894	5,300	△26,569	228	△281
매출액	98	164,415	89,426	80,919	13,837	16,610
	97	159,597	91,615	77,782	14,730	16,066
	96	113,422	67,081	63,374	13,355	15,867
영업이익	98	3,529	3,059	△26,149	△1,402	△28
	97	858	1,119	△693	△2,187	△1,692
	96	393	391	234	37	42
경상이익	98	1,489	2,382	△27,331	△1,565	△1,802
	97	720	1,083	85	20	55
	96	258	516	53	33	30
당기순이익	98	956	512	△27,237	26	22
	97	626	1,031	109	20	76
	96	420	302	329	10	21
납입자본금 이익률('98)		102.1	74.6	△9,079	32.5	57.8

주: 1) '98사업년도 기준임.

2) 매출액은 수입보험료 기준임.

3) 삼성생명은 '99년 5월 28일 수권자본금을 3,000억원, 납입자본금을 1000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제일생명은 '99년 7월 20일 독일 알리안츠에 매각되었음.

출처: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 생보사는 여타 기업들보다 회사 이미지가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사 홍보에 절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바, 기업공개를 통해 자연스럽게 회사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물론 공신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음.

— 기업공개 생보사는 종전 소수 대주주, 경영자, 종업원 등으로 구성된 생보사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s)를 대폭 확대할 수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으로 보험수요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음.

— 이밖에 기업공개에 부수적인 혜택으로 생보사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음.

## 2) 부정적 효과

— 생보사 자산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계약자 자산으로 생보사 기업공개 거론 자체가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소수 대주주를 위한 생보사 기업공개가 강행될 경우 계약자의 피해가 우려됨.

—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배분 자체가 합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생보사 기업공개시 다방면에서 선의의 계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큼.

○ 특히, 기업공개 후 경제적으로 강자인 주주들의 주주배당압력으로 계약자배당이 감소할 경우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소지가 있음.

— 일부 대형생보사의 기업공개는 보험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국내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3) 종합 의견 ㄱ

- 생보사 기업공개를 통해 신규 자금조달과 국내외 대외경쟁력 제고 등을 꾀할 수 있다는 점과 현 시대적 금융환경 변화에 생보사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생보사의 기업공개는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현재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생보사 기업공개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바, 생보사 기업공개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러한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해갈등의 발생근원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내 생보사가 그 동안 상호회사에 적합한 배당부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해 온 데서 출발함.

- '92년 국내에 무배당상품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국내 생보사의 취급상품은 100% 배당부상품이었고, 무배당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현재에도 배당부상품의 판매비중이 '98사업년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86.4%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표Ⅳ-1>

배당·무배당상품 판매비중(FY'98)

(단위: 억원, %)

구 분	수입보험료	구성비	FY'97 구성비
배당부상품:			
생보전체	400,813	86.4	89.8
삼 성	146,355	89.0	95.4
교 보	77,961	87.2	94.7
무배당상품:			
생보전체	63,091	13.6	10.2
삼 성	18,060	11.0	4.6
교 보	11,465	12.8	5.3

출처: 금융감독원

- 국내 생보사가 배당부보험을 취급하게 된 것은 생명보험의 국내 도입 과정에서 상호회사가 대부분인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한 결과의 산물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예정요율(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의 산정능력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생보사가 사전 보험료를 보수적으로 높게 책정한 후 계약자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보험가 격을 사후 재조정하여 재무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배당부상품을 선호한 데 기인함.

- 한편 기타 미처분이익인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이익배분 기준은 현행 이익잉여금배분 기준에 따름.

### 3) 이익배분시 검토과제

#### 가. 신규 자산재평가차익에 관한 배분

- 기업공개를 위한 생보사의 순자산가치(총자산 - 총부채) 산정시 고정자산의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재평가차익은 새로운 이익배분율에 따라 주주와 계약자에게 배분함. (별첨 참조)
  - 계약자 이익배분 방법은 현행규정에 따라 현금배당,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계약자이익지분을 부채계정에 계상하여 일정기간내에 계약자에게 배분함.

#### 나. 유가증권평가익의 배분

- 유가증권평가익은 기업공개를 위한 자산재평가 시점에서 평가해 새로운 배분율에 따라 주주와 계약자에게 이익을 배분함. (별첨 참조)
  - 현행 규정상 유가증권평가익은 사업년도말 계약자지분조정계정과 자본조정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상토록 되어 있음.

#### 다. 부채초과적립이익 배분

-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이 혼합비례방식(K율)에서 순보험료식으로 통일된 반면 신계약비를 이연상각 처리토록 허용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약환급금식에 따라 준비금을 산출하게 되었음.

- 따라서 동 금액은 실질적으로 전액 계약자 몫이며 생보사 기업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자에게 환원되어야 할 부분임.

<표 IV-3>

계약자·주주간 이익배분시 검토사항 ⅴ

검 토 사 항	의 건
고정자산 재평가차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차익금은 새로운 배분율에 따라 주주와 계약자에게 배분</li> <li>○ 단, 계약자지분은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부채계정에 계상하여 일정기간내에 계약자에게 배분</li> </ul>
유가증권평가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재평가시 보유 유가증권도 함께 평가해 새로운 배분율에 따라 배분</li> <li>○ 계약자지분은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부채계정에 계상하여 일정기간내에 계약자에게 배분</li> </ul>
부채초과적립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준비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책임준비금 차액은 <u>부채계정으로 유지</u></li> </ul>
기존 재평가적립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자산재평가시 발생한 재평가차익중 처리유보금으로 자본계정에 산입된 이익금은 전액 계약자 몫으로 환원</li> </ul>

## 2.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 1) 이론적 고찰

- 주식회사 형태의 생보사가 배당부보험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문제와 관련해 주주의 이익지분에 대한 대표적인 학설로 Belth가 주창한 이론을 들 수 있음.

— 경영대가설은 주주가 생보업 형위에 따른 경영위험을 부담한 만큼 대가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주주의 몫에 대한 성격을 가장 유용하게 설명하고 있음.

○ 동 이론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해 발생한 이익중의 일부를 주주에게 경영의 대가로서 배분하고 나머지는 계약자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음.

✓ ○ 뉴욕주의 경우 생보사 주주는 보험계약액 \$1,000당 50센트를 경영대가로서 인정하는 규정(50cents per year per \$1,000 of participating business)은 동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음.

○ 동 이론은 주식회사 형태의 생보사가 배당부상품만을 취급하거나 주주의 추가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배당부상품과 함께 무배당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 주주의 이익참여 형태를 설명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이론을 적용해 주주의 이익참여의 성격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임.

— 이자보상설은 생보사가 계약자를 대상으로 배당부상품 영업을 하기 위해 주주가 투자한 자금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론임.

○ 동 이론은 배당부보험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가 주로 부담한 경우에 주주에게는 오히려 보유지분에 대한 적절한 이자취득권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상기의 경영대가설과 함께 주주의 이익지분 참여 근거를 설명하는 데 유용함.

— 한편 이익공유설은 생보사 주주와 배당부상품을 구입한 계약자는 일종의 Joint Venture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해 배당부상품의 경영성과를 양자가 함께 공유하는 동시에 경영위험 역시 공동 부담하고 있다는 논리임.

- 결론적으로 주주의 이익지분은 생보사 경영에 대한 대가와 생보업 영위를 위해 주주가 투입한 자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음.

## 2) 적정 이익배분을

- 앞의 논의에 입각하여 주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경영에 대한 대가와 자본금에 대한 보상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주주의 회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몫을 계산하기 위한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음.

### ① 자본금에 대한 적정 대가

- 이는 주주가 순수하게 투입한 금액과 재평가적립금으로부터 자본전입된 금액(삼성 936억원, 교보 878억원)에 대한 적정보상을 의미함.
  - 이론적으로는 주주가 순수하게 투입한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삼성 39억 7,500만원, 교보 2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과거 이익배분기준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한 금액은 자본금의 일부로 인정하여 보상금액을 계산하였음.
  - 자본금에 대한 적정 대가는 회사 창립 이후 투하된 자본금을 회사 채 유통수익률 등으로 복리 계산하였음.

### ② 경영에 대한 적정 대가

- 주주에 대한 적절한 경영 대가를 산출하는 정형화된 방식은 없으나, 현재 미국 뉴욕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상기준을 준거하였음.

### 3) 기존 재평가적립금 처리 방안

—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89년과 '90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발생한 재평가차익중 주주에게는 최대 이익지분(30%)를, 계약자에게는 최저 지분(40%)만을 배분한 후 나머지 30%(교보 662억원, 삼성 878억원)는 처리유보시켜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음.

○ 보험감독규정상 동 처리유보액은 손실보전이나 계약자배당재원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사는 자산재평가 실시 이후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음.

○ 따라서 양사는 동 처리유보액을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했어야 하나, 이 또한 실시하지 않았음.

— 과거 자산재평가적립금에 대한 주주·계약자간 이익배분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Ⅳ-6>                      과거 주주·계약자간 이익배분 기준

K율	주주지분	계약자지분
100% 이상	30% 이하	40%~70%
50%~100% 미만	20% 이하	40%~80%
50% 미만	10% 이하	40%~90%

— 한편 '99년 3월말 현재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기자본 내역과 자본금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음.

○ 자본잉여금은 삼성생명의 경우 전액 재평가적립금이며, 교보생명은 재평가적립금 664억원과 자본준비금 16억원을 포함하고 있음.



— 동 처리유보액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p>1안</p>	<p>① 기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② 보통주(또는 우선주)를 발행한 후          √ ③ 계약자에게 전액 무상증여</p>
-----------	---

— 기존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배분 방안으로 우선 과거 자산재평가시 처리유보되어 자본잉여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후 이를 주주가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자산재평가법 제28조(재평가적립금)에 따르면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세 납부, 자본전입, 이월결손금 보전에 한하여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적립금의 자본전입은 하등의 법적인 하자가 없음.

○ 또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그 처리를 둘러싼 번거로운 법적 절차도 요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조정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본금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Ⅳ-9>

삼성·교보생명 자본금 조정

(단위: 억원)

구 분	조정전 자본금	자본전입		조정후 자본금
		주주	계약자	
삼성생명	936	61	878	1,875
교보생명	686	18	662	1,366

주: '99년 3월말 기준

- 그러나 1안은 계약자에 대한 무상증여시 반드시 주주들의 개별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의 2안을 고려할 수 있음.

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존 재평가적립금을 계약자에게 현금배당한 후</li> <li>②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되,</li> <li>③ 낮은 가격으로 신주발행</li> </ul>
----	--

- 2안은 기존 재평가적립금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배당한 후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낮은 가격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안임.
  - 동 방안은 1안과는 달리 계약자가 신주를 현금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신주참여에 따른 기존 주주와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데다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한편 2안의 경우 생보사 기업공개상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계약자에 한하여 청약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신주발행 가격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바, 양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발행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3. 계약자간 이익배분

- 생보사 상장시 발생하는 계약자 몫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과거계약자와 현재계약자에게만 귀속되어야 하며, 자산형성 과정에서 현재계약자보다 공헌도가 큰 과거계약자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할당되어야 할 것임. √

## V. 향후 과제

- 현행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기준은 논리적 검증력이 결여되어 있는 데다 이익창출 기여도 등과도 무관한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책정되어 있어 향후 합리적인 이익배분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주주와 계약자간 이해 상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분리계정 제도의 도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생보사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1 이익배분기준 개선

- 현행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기준은 논리적 검증이나 이익창출 기여도 등과 무관한 방식으로 책정되어 있는바, 앞서 제시한 적정 이익배분율을 토대로 하여 향후 합리적인 이익배분기준이 새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주주와 계약자간 적정 이익배분기준은 그간 국내 생보사의 영업행태와 생보업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새롭게 책정되어야 함.
  - 배당부보험을 주력해서 판매해 온 국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영업행태를 감안할 때 회사에 대한 주주의 공헌도와 계약자의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한 이익배분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2. 생보사 지배구조 개선

— 현재 국내 생보사는 소수 대주주에 의한 지배구조가 고착되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소수 대주주에 의한 경영권 장악이 보편화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지배구조의 형성은 보험사가 그간 정부의 강력한 보호 아래 육성된 데다 소수 대주주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보전을 당국이 묵인해 온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국내 보험사 지배구조상의 최대 난점은 소유주가 통상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면서 이사추천을 좌우하여 이사회를 장악하는 동시에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감사 역시 실권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내부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보험사의 폐쇄적 지배구조는 그 동안 보험사가 소유주의 사금고로서의 역할 수행을 가능케 하고 소유주의 독단적 경영권 행사에 따른 경영 부실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따라서 향후 국내 보험사의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 대주주와 임직원, 소액주주와 보험가입자 등 보험산업 이해관계자간의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국내 생보사의 질적 성장을 위해 현행 보험계리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리인제도의 개선은 보험계리인의 자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정예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와 더불어 시험제도 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험계리인 양성과 이를 통한 보험경영의 건전성 확립을 목적으로 함.

— 동 산정내역을 기초로 하여 삼성생명의 순자산가치(총자산 - 총부채)를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 ○ 총자산증가분(고정자산평가익: 6,910억원, 유가증권평가익: 20,453억원)중 새로운 이익배분기준(95.2% : 4.8%)에 따라 계약자의 몫을 제외하고 나면 순자산가치 증가분은 1,313억원임.

○ 따라서 자산재평가후 삼성생명의 순자산가치는 현재 장부상의 자산가치액 5,894억원과 순자산가치 증가분 1,313억원의 합계액인 총 7,20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삼성생명의 총발행주식수는 18,720,000주로 기업공개시 주당 순자산가치액은 약 38,499원으로 추정됨. (삼성생명 자체 평가액: 280,960원)

○ 삼성생명의 경우 자산재평가차익(고정자산 및 유가증권) 전부를 주주의 몫으로 간주하였으나, 이는 현행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기준 조차 무시한 것임.

○ 또한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초과적립이익(사업비 이연상각 부분)도 모두 주주의 몫으로 간주하였음.

○ 삼성생명은 종전 순보험료식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 평가시 순보험료식보다 훨씬 적은 해약환급금식을 사용했다는 것은 부채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무리한 처사임.

○ 사업비 이연상각 인정은 그간 해약환급금식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 온 신설생보사의 재무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

<표 3>

삼성·교보생명의 주당 순자산가치

구 분	장부상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 증가분	기업공개시 순자산가치	기업공개시 주당 순자산가치
삼성생명	5,894억원	1,313억원	7,207억원	38,499원
교보생명	5,300억원	536억원	5,836억원	42,536원

주: 1) 장부상 순자산가치는 '99년 3월말 기준임.

2) 주당순자산가치는 기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이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1999. 12

한국금융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 목 차

### I. 생보사 공개 추진배경 및 경과

1. 생보사 공개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기업공개의 효과

### II. 국내 생보사의 성격

### III.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1. 기존 재평가차액중 내부유보액의 처리
2. 상장전 재평가차액 등의 처리
3. 해약식 초과적립금의 처리
4. 이익배분기준 및 분리계정제도

### IV. 결론

### < 참고자료 >

## 2. 추진경과

- ☐ 정부는 '87.11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 공개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생보사중 삼성과 교보는 '84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시현으로 '87년에 기업공개요건을 갖추자 기업공개 검토를 시작함
- ☐ '89~'90 교보생명, 삼성생명은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0.8월 제정된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 따라 '90.9월 재평가적립금 등을 처리함
- ☐ '99.6.30에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 처리와 관련하여 삼성생명 상장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생보사의 기업공개문제가 부각되어
  - '99.8.4에 한국보험학회 주관으로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와 이익배분에 관한 대토론회”, '99.8.20에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이익배분을 중심으로-” 제목의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 '99.9월에는 금융감독원내에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음

### < 생보사 기업공개 추진 경과 >

추진시기	추진내용
'87.11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
'89. 4월	교보생명,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90. 2월	삼성생명,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90. 3월	보험학회 주최의 “생보사 기업공개 심포지엄” 개최
'90. 8월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제정
'90. 9월	재무부, 재평가적립금 처분 및 자본금 증액 승인
'90년말	재무부, 기업공개 보류 결정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면제기간 연장 2년→ 5년('90.12.31)→ 8년('93.12.31)→ 10년('96.12.31) → 11년('98.12.31)
'99. 6월	생보사의 상장문제 공론화
'99. 8월	보험학회 주최 세미나, 금융연구원 주최 공청회 개최
'99. 9월	상장자문위원회 설치

### 3. 기업공개의 효과

☐ 생보사 기업공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시장 감시기능의 강화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공시의 확대로 공공기업으로서의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필요한

☐ 기업공개에 기대효과로는

- 현행 소수 대주주 위주의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시장에서의 감시기능이 강화되어 경영의 투명성 제고
- 회사의 인지도가 제고되어 결과적으로 생보사의 공신력과 생보산업의 인지도 향상
-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조달능력 확대로 담보력 증대
- 외자유치, M&A 등이 용이해져 장기적으로 생보산업의 구조조정 도움 등을 들 수 있음

☐ 한편 “기업공개=우량생보사”로 소비자가 인식하게 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의한 과점체제의 심화 및 미공개 생보사의 경영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 생보사 기업공개를 통해 신규 자금조달, 생보산업 인지도 향상 및 국내외 대외경쟁력 제고 등을 꾀할 수 있다는 점과 국제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생보사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 등 중장기적으로 생보산업을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생명보험업은 동질의 위험을 다수 계약자가 분담하는 상호부조적 성격이 강하고, 생보사 자산의 대부분이 장래보험금 지급을 위한 부채이므로 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생보사의 기업공개가 검토되어야 함

□ 국내 생보사는 “법률적 설립형태”와 “배당보험의 계약자가 일반적으로 상호회사의 계약자가 지니는 의결권(voting right)과 잔여 재산청구권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 등 형식상 주식회사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호회사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

- ① 회사설립후 30년이상 배당보험만 판매되었으며, '92. 8월 무배당보험의 판매가 허용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무배당보험의 점유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

⇒ 즉, 생보사 자산과 내재가치의 대부분은 그동안 배당보험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형성되었음

### < 무배당보험의 점유비중 추이 >

(단위 : %)

구 분		FY'92	FY'93	FY'94	FY'95	FY'96	FY'97	FY'98	'99.4~9
책 임 준비금 기 준	삼 성	0.1	0.7	1.6	2.4	3.1	4.8	7.9	10.0
	교 보	0.1	0.5	1.4	2.0	2.4	4.5	6.7	9.0
	업계평균	0.1	0.4	1.0	1.8	2.5	6.4	8.5	9.3
수 입 보험료 기 준	삼 성	0.3	2.3	4.2	4.3	5.0	7.4	13.3	22.8
	교 보	0.3	2.0	3.7	4.0	3.7	8.5	13.9	26.9
	업계평균	0.3	1.8	2.9	3.4	4.6	12.4	14.9	22.3

④ 이 밖에도 자산재평가차액의 계약자지분중 일정비율을 자본잉여금 항목인 재평가적립금으로 내부유보케하여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전에 사용가능토록 한 점

○ 잉여금중 계약자지분을 계약자배당제한 외에 장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또는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체원으로 사용토록 하였음

○ 계약자에게 충분한 배당을 하지 않고 계약자 몫인 배당금을 외형성장을 위한 자금 및 결손보전 등에 사용하였음

• '83년 이후 삼성·교보 등이 이익을 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90년까지는 이익배분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결론적으로 주주의 권리는 충분한 자본투입 및 전적인 위험부담이 전제되어야 하나 과거 손실 발생시 주주가 충분한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고, 주주의 부채변제 의무를 계약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주주와 계약자간 위험공유(risk sharing)가 이루어져 왔는 바

⇒ 이는 주식회사 형태에서 보험사업의 제반 리스크를 주주가 지는 경우와는 다른 상호회사적 운영형태라 할 것임

### III.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 ☐ 생보사를 상장할 때는 대차대조표를 정리(B/S Clearing before IPO)하여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첫째, '89~'90년의 자산재평가시 계약자지분중 내부유보로 처리되어 현재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삼성 878억원, 교보 664억원)의 처리(자본 측면)

둘째, 상장전 자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valuation)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게 될 평가차액(부동산과 투자유가증권)의 처리(자산 측면)

셋째, 해약식초과적립금의 처리(부채 측면)

- ☐ 또한 생보사를 상장하기 전에

- 현행 이익배분기준의 적정성 여부와
- 배당보험의 분리계정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동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계약자의 공헌도와 현행 법규상의 제약요소들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제 1 안

- ☐ “’91.3월말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대비 내부유보금액을 계약자지분으로 인정

### (세부내용)

- ◇ 계약자지분비율(계약자의 공헌도)은 자산재평가시(’91.3월말) 자본계정(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대비 내부유보액(재평가적립금)으로 정하고
  - 동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으로 계약자에게 배분
  - ※ 과거 계약자 몫은 공익사업에 출연

### < 계약자지분비율 >

(단위 : 억원)

구 분		삼성	교보
주주지분	자본금	936	686
	자본잉여금	61	16
	이익잉여금	1,031	1,321
	소계	2,028	2,023
계약자지분	자본잉여금	878	664
계		2,906	2,687
계약자지분비율		30.2%	24.7%

- ◇ 배분대상계약 및 계약자간의 기여도에 따른 세부배분방법 등은 외부전문기관이 추후 결정

### (기대효과)

- ◇ 자본금 중 계약자지분비율을 명확히 하여 주식으로 계약자에게 배분함으로써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의 배분 문제 해소
- ◇ 보험사의 성장에 기여한 계약자의 공헌도 반영

### (문제점)

- ◇ 계약자지분의 인정을 위하여는 주주의 동의 필요

## 2. 상장전 재평가차액 등의 처리

- ☐ 상장전에 자산에 대해 정확한 평가(valuation)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으나 그 차액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

※ 상장시 주가산정에 필요한 주당순자산가치의 계산을 위해서도 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필요함

- 일부에서는 재평가차액이 미실현이익이기 때문에 배당 등의 형태로 사외에 유출할 경우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것이므로 이를 배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 이를 정당한 권리자인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음

### < 상장전 고정자산 재평가지 평가차액 >

(단위 : 억원)

구 분	평가손	평가익	소계	주주지분	계약자지분
삼 성	△5,560	5,000	△560	△84	△476
교 보	△17	4,797	4,780	717	4,063

주) 1. '99. 8월말 기준 회사별 추정치임

2.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으로 배분



### 3. 해약식 초과적립금의 처리

□ '99. 3월 개정된 회계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실질적 해약식으로 적립토록 함에 따라 순보험료식으로 준비금을 적립해온 회사는 해약식초과적립금의 처리문제 발생

○ 교보와 흥국은 해약식초과적립금을 특별이익으로 처리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손 등에 충당한 반면

○ 삼성은 특별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았음

□ 상장전에 회사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이를 주주와 계약자 간에 배분한다는 측면에서는

⇒ 해약식초과적립금중 계약자몫이 당연히 계약자에게 환원되어야 함

#### < 해약식 초과적립금의 처리 >

(단위 : 억원)

구 분	'98. 3월말 초과적립금	FY'98중 자연소멸	'99. 3월말 특별이익 처 리	'99. 3월말 초과적립금	계약자 지 분
삼 성	24,549	7,487	-	17,062	14,503
교 보	11,812	3,577	8,235	-	-
흥 국	2,005	651	1,354	-	-

#### 4. 이익배분기준 및 분리계정제도

##### < 이익배분기준 >

☐ '89년 K울 방식에 의한 이익배분기준을 도입한 이후 '99년 3월 지급여력비율방식에 의한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나

- 현행 배분기준이 이론적 근거가 미흡하고
- 주주지분의 비율이 과도하다는 견해가 대두됨에 따라

⇒ 주주의 기여도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배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됨

##### ☐ 검토필요사항

① 손익을 자본계정, 무배당 및 배당으로 구분하는 현행방식 유지 여부

⇒ 자본계정운용손익의 인정여부

(현행)

- 자본계정운용손익, 무배당보험손익, 배당보험손익으로 구분
- 배당보험이익은
  -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10%이하~15%이하(감독규정 제78조)를 주주지분으로 하고, 잔액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
- 주주배당은
  - 지급여력비율이 4%이상인 경우만 가능

⇒ 주주몫(자본계정운용손익)을 먼저 산출한 후의 잔여잉여금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분배하는 현행방식은 주주가 잔여재산청구권자임을 감안할 때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는 비난의 여지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함

3.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주주지분 상한을 차등화하는 현행 방식의 유지 여부

< 계약자 배당전 잉여금 : 주주지분 >

지급여력비율	주주지분
8% 이상	15.0% 이하
4%~8%미만	12.5% 이하
4% 미만	10.0% 이하

- '99. 3월까지의 준비금 적립수준(K율)에 따라 주주지분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 '99. 3월 지급여력비율 방식으로 개정

- 과거에는 준비금적립 충실화를 도모한다는 측면, 그리고 준비금을 높게 적립할수록 배당전잉여금이 감소되어 경영을 잘한 회사(준비금을 높게 적립한 회사)의 주주가 상대적으로 손실을 입게되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한 회사의 주주지분을 높게 책정하였으나

⇒ '99년 3월 회계규정개정으로 준비금 적립수준(K율)이 폐지됨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차등화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나 준비금적립수준 등에 따라 주주지분 비율을 차등화시키는 사례는 없음

- 따라서 주주지분의 과다배분을 방지하고 이익기여도에 따른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 주주지분의 상한을 현행 15%에서 10%이하로 낮추고 보다 합리적으로 주주지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분리계정제도 >

☐ 유·무배당 보험을 함께 판매하는 보험사가 배당보험의 이익으로 무배당보험의 손실을 보전하는 등의 보험상품간 상호보조(cross-subsidy)를 방지하여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공개 후에는 배당보험을 별도의 분리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으나

- 자산분류시 저수익 또는 무수익 자산을 배당보험자산으로 분류함으로써 배당보험 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 기존계약에 대한 자산구분의 어려움이 따르고
- 현실적으로 완전한 분리계정의 실행은 불가능(사업비등은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외국의 탈상호회사의 경우 기존 유·무배당계약의 구분운용을 위하여 closed block을 도입

☐ 따라서 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을 별도의 분리계정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 철저한 구분계리를 실시하여 상품간 상호보조현상(cross-subsidy)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것임

※ 외국에서도 배당보험은 분리계정이 아닌 구분계리의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분리계정은 실적배당상품에 대해서만 실시

☐ 상장전에 고정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여

○ 계약자지분은 계약자에게 현금 등으로 배분하여야 할 것임

☐ 해약식초과적립금은 재무건전성측면 등을 감안하여 현금배분보다 내부유보하되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을 명확히 구분(block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기업공개후 배당보험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귀속시키되 주주에게는 자본투자와 경영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여 주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임

○ 주주지분의 과다배분을 방지하고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 주주지분 상한의 하향조정, 주주지분 차등화 방안 등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합리적인 이익배분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임

☐ 동일 생보사에서 유·무배당상품이 동시에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품간 상호보조현상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구분계리가 실시되어야 함

☐ 생보사의 상장은 국내 생보산업의 질적발전에 큰 획을 긋는 사건임을 감안하여 향후 생보산업의 대외적인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정비 등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生命保險會社의 企業公開와 利益配分

## 일 정 표

· 주 제: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와 이익배분에 관한 대토론회

· 일 시: 1999. 8. 4 (수) 13:30~18:0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1층)

· 후 원: 한국경제신문사 · 대한상공회의소

12:30~13:30 등 록

13:30~13:45 개회사: 申 守 植 會長(고려대 교수)

13:45~14:45 연구주제: 生命保險株式會社의 企業公開와 剩餘金 配分

발 표 자: 金 聖 在(한국의국어대 교수)

14:45~16:00 제1차 토 론

사회자: 申 守 植(고려대 교수)

토론자: 康 昌 景(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장)

金 斗 喆(상명대 교수)

金 尙 祚(한성대 교수, 참여연대 재벌개혁 감시단장)

金 星 泰(연세대 교수)

金 鍾 國(전주대 교수)

辛 利 永(생명보험협회 상무)

李 鳳 周(경희대 교수)

鄭 奎 載(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鄭 聖 澤(한국생명 전문)

16:00~16:20 휴 식

16:20~18:00 제2차 토 론(제1차 토론자, 청중질의)

18:00 폐 회

## 토론회를 마치고

우리 학회가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기업공개 문제에 대하여 10년만에 또 한차례의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 생명보험산업에서 기업공개는 80년대 후반부터 일부 회사가 당기순이익을 나타내고 공개요건을 충족시키는 회사가 등장함에 따라 자산재평가차익의 주주와 계약자간의 분배가 문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는 한국보험학회를 중심으로 공청회 개최, 연구보고서의 제출을 주문한 바 있었다. 그 결과 생보사 이익배분기준을 마련하고 기업공개를 전제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침체와 불안정으로 상장을 하지 못하고 2년간의 시한을 수차례 연장하여 오다가 금융감독원 체제로 감독기구가 통합되고 주주와 계약자간의 배분율이 조정되는 한편 1999년에 들어오면서 자본시장이 침체의 늪을 벗어나고 공개시한이 가까워 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학회는 토론회를 준비하여 왔다.

1999년 6월 하순 새롭게 제기된 생명보험의 기업공개 문제가 과거와 달라진 여건으로는 신설 생보사 및 기존 6개 회사 중 일부의 부실화가 심화된 가운데 생명보험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고 재벌의 구조조정, 사업교환 및 사재출연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의 대상회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함께 재벌 주식지분을 채무의 담보물로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생명보험회사 기업공개가 특혜시비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다른 한편으로 자산재평가이익 및 공개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 주주와 계약자간의 분배몫에 대해서 소모성 논쟁이 재연되기에 이르렀다.

학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계획일정을 조정하여 8월 4일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를 토론자로 참가시켜 처음으로 공개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자료로서 발간하기로 하였다.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미묘하여 감독당국과 업계, 특히 공개대상 2개회사로서도 토론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주저하여 왔지만 학회가 회원의 뜻을 모아 중도적인 위치에서 사심없이 다룬 토론회의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니 정책당국, 공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1999년 8월

한국보험학회 회장 申 守 植

# 목 차

주제논문 (김 성 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기업공개와 잉여금 배분

- I.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문제의 부각과 문제영역
- II. 생명보험산업의 회사형태와 계약자배당: 이론적 배경
- III.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성과와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 IV. 금융자유화와 보험감독정책의 변화
- V.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여부
- VI. 기업공개에 따른 시세차액(액면가와 공모가격과의 차액)에 관한 문제
- VII. 배당부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
- VIII. 맺는말

## 토론 요지

강 창 경

김 상 조

김 종 국

이 봉 주

정 성 택

김 두 철

김 성 태

신 이 영

정 규 재



## I.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문제의 부각과 문제영역

### 1.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문제의 부각

-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은 1940년대와 1950년대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절 6개사의 기업이 소수 대주주들에 의해 창업되어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전하였고 1999년 현재 3월말 현재 자산규모가 92조원이 넘는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 그러나 시장구조면에서는 최근 대내외개방으로 20여개의 생명보험회사들이 신설되기 이전까지 30여년간 6개사의 과점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며, 대형사인 기존사들의 소유구조는 아직도 개인이나 가족 등 극히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경영은 폐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정부는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의 자기자본조달을 통하여 재무구조개선과 아울러 자본과 경영의 분리를 통한 전문경영인에 의한 과학적 경영을 제고하도록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즉, 1968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과 1972년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는 기업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상의 유인제도와 행정력을 동원하여 왔으며 1983년에는 “자본시장기능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상장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공개의 여건을 더욱 진작시켰다.

- 다른 금융산업을 비롯한 타산업의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의하여 공개를 하여 왔으나 생명보험회사들의 기업공개는 '80년대말까지 거론되지 않고 있었다. 그 주된 이유는 '80년대 중반까지 생명보험회사들의 적자경영과 취약한 재무구조 때문이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생보사들의 당기순이익의 시현에 따라 기업공개요건을 충족시키는 회사가 등장하자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가 추진되었다. 당시에 기업공개에 따른 자산재평가차익의 주주와 계약자간의 배분이 문제가 되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는 '생보사 이익배분기준'을 마련하고 ('89년 10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당시에 상장을 하지 못하고 舊조세감면법의 특례규정의 상장시한(자산재평가일로부터 2년내)를 4차례에 걸쳐 연기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최근 IMF사태 이후 자본시장여건이 좋아지는 시점에서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기업공개가 다시 거론되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같이 최근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과거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상장을 준비해 온 기존 2개사의 법적인 상장시한의 압박

둘째, 1980년대 후반이래 당기순이익의 시현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셋째, 자산규모의 급격한 증가로 생명보험산업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의 고조

넷째, 급증하는 자산규모에 대해 상대적으로 규모비율이 격감한 소액의 자본금

다섯째, 극소수의 대주주가 소액의 자본금으로 막대한 자산의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을 지배한다는 인식의 확산

여섯째, 내외적 개방에 따른 생명보험시장구조의 변화와 국제화되는 경영환경으로 인한 경영위험의 증대로 보다 효율적인 경영과 자본의 역할 증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일곱째, 소비자 보호단체의 계약자보호에 대한 관심고조

## 2. 문제영역

-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는 생명보험산업의 공익성과 사회성, 그리고 계약자의 경영성과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는 생명보험상품의 성격으로 인하여 타산업과는 달리 복잡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영역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업공개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기업의 공개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편, 기업공개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다. 생명보험산업은 성격상 사회성, 공익성이 강조되는 산업이며, 그 영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타산업과 상이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기업공개는 이러한 산업상의 특징을 포함하여 현재의 재무상태 분석, 앞으로의 경영성과 예측에 기초하여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주식회사의 기업공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이지만 산업의 특성상 정책당국의 적정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며, 만일 공개를 하는 쪽이면 공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공개는 상장이 필수적이며 상장하는 과정에서 공모가격이 가시화된다. 이러한 공모가격과 액면가의 차액에 대한 배당부계약자의 참여가능성이 논쟁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셋째, 자산재평가차익에 관한 문제이다. 기업공개는 그 절차상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산

재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자산재평가는 과거 수년간 취득원가로 대차대조표상에 남아 있는 부동산의 시가로의 평가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평가이익이 일시에 발생할 전망이다. 이러한 재평가차익은 아직 실현이 되지 않은 미실현이익인 한편 이의 소유권에 대해 생명보험회사의 소유자인 주주와 영업성과의 참여를 허용하는 배당부상품의 계약자 사이에 갈등이 크게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해관계의 정립은 기업공개시에 필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넷째, 주주와 배당부상품계약자간의 경상이익의 배분 문제로서 역시 기업공개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업공개는 상장과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으나 그 절차상 상장을 해야 공개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업공개는 공개되는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이 공개주식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 사이에 거래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식의 가치가 기업의 앞으로의 수익력과 주주배당능력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주와 계약자간의 향후이익배분기준을 정립한다는 것은 상장된 주식의 가격형성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제공의 의미가 있다. 만일 이에 대한 정립이 없이 기업공개와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생명보험회사주식의 공모가격결정이 어렵게 될 것이며,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가격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생명보험 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업공개시 또는 그 이전에 향후 주주와 계약자사이의 이해관계가 확실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II. 생명보험산업의 회사형태와 계약자배당: 이론적 배경

### 1. 회사형태와 상품형태

#### [1] 생명보험회사의 형태

##### - 주식회사

- 주식의 발행을 통한 자본의 조성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회사의 소유주는 주주이며, 주주는 이사진을 선출하여 회사를 운영하며 운영결과는 주주배당의 형식으로 주주에게 배분된다.
- 주식회사의 경영진은 주주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생명보험상품의 판매를 통하여 주주에게 지급할 이익을 창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에는 보험원가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지급될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 상호회사

- 주식회사의 보험료가 주주에 대한 이익의 포함으로 인해 필요이상으로 인식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하게 보험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
- 상호회사의 소유주는 계약자인 바 영업성과는 당연히 계약자에게 귀속

	주식회사	상호회사
자본금	있음	없음
소유주	주주	계약자
영업목적	영리	비영리
영업성과의 귀속	주주	계약자
영업성과의 배분	주주배당	계약자배당

[2] 배당부계약과 무배당계약의 성격

- 무배당계약

- 일단 계약이 판매되면 모든 영업성과는 회사에 귀속된다.
- 만일 사망률, 경비율, 투자수익율이 불량하게 나타난다면 그 회사는 이익의 감소 나아가서는 손실을 볼 수 있는 한편, 이들 요소들의 결과가 양호한 경우 초과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

- 배당부계약

-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계약
- 기본적인 목표가 계약자들에게 실비로 보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회사의 실제 사망률, 경비율, 투자수익율의 결과는 계약자들에게 귀속되어 계약자배당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배분된다.

[3] 보험료수준

- 계약자배당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험회사는 계약을 설계할 때 보험료의 수준을 기대치 못한 사건에 의해 초래되는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게 책정한다. 즉, 예상되는 것보다 높은 사망률, 높은 경비율, 그리고 낮은 투자수익의 가정을 보험요율산정에 사용하여 어느 정도의 완충금액을 보험료에 포함
- 배당부계약의 보험료수준은 무배당계약의 보험료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로 다음 두가지를 들 수 있다.

- 첫째, 배당부계약이 영업성과의 분배를 전제로 하는 한편, 양의 성과에 대한 분배에는 문제가 없으나 완충금액을 초과하는 음의 성과에 대한 부담을 사후에 계약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즉 요율산정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완충금액을 필요로 한다.
- 둘째, 배당부계약은 그 성격상 계약집단별 재무적 자립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영업성과를 집단별로 측정하여 이에 따라 차별적인 계약자배당을 통한 집단들간의 공평한 취급에 관심을 두게 된다. 무배당계약은 이러한 집단들간의 공평성유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며 대신 회사전체의 재무상태에만 중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한 계약자집단에서 발생한 이익이 다른 집단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완충금액의 크기가 배당부계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원초납부보험료의 수준은 배당부계약이 무배당계약에 비하여 높으나 배당부계약은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금의 지급이 있기 때문에 배당금지급후의 궁극적인 보험료수준은 무배당보험보다 낮을 수도 있다. 배당부계약과 무배당보험의 최종원가의 비교는 생명보험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 생명보험 계약자배당의 성격:
  -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납보험료의 초과징수분에 대한 환불로 정의

## 2. 주식회사의 배당부계약의 판매와 이해갈등

- 배당부계약은 원래 상호회사의 상품이다. 상호회사의 소유주는 계약자인 바 영업성과는 당연히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이러한 영업성과의 배분이 바로 계약자배당이다.
- 상호회사는 배당부계약만을 판매하고, 주식회사는 무배당계약만을 판매하는 것이 이상적인 조합임
- 주식회사가 배당부계약을 판매하는 경우나 상호회사가 무배당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성과의 배분이라는 계약자배당의 성격상 주주와 계약자간, 배당부계약자와 무배당계약자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든 생명보험회사들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면서 배당부계약을 판매하고 있음

### [1] 주식회사의 배당부계약의 판매이유

- ① **재무안전성제고**: 보험료는 사망률, 이자율, 경비율에 따라 정해지며 이들 요소들은 모두 예측치이다. 이들의 예측은 쉽지 않으며 특히 이자율의 예측은 매우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예측이 부의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빗나가는 경우 재무적인 압박이 발생한다. 무배당계약을 판매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이러한 재무적 압박에 대한 안전장치로 적절한 규모의 자본금 유지와 자산과 준비금 평가에 있어서의 보수성, 보험료에 부과되는 이익마진 등이 있다. 한편, 배당부계약은 무배당계약에 비하여 계약자배당을 전제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배당부계약의 판매시 무배당계약과 배당부계약의 보험료차액은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재무적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② **계약자들간의 공평성유지**: 무배당계약의 경우 예정이자율의 변화 등으로 계약종류, 판매시기에 따라 계약내용이 상이하게 되어 계약자들간의 공평성유지가 어렵다. 배당부계약의 경우 계약자배당을 통하여 계약자들간의 형평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율통성을 가질 수 있다.
- ③ **기업이미지**: 주식회사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상호성(mutuality)의 기업이미지를 심기 위하여 배당부계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상호회사의 설립을 원하나 주식회사설립의 용이함, 또는 상호회사인 모보험회사와의 지분유지의 목적 등으로 주식회사로 설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주로 발생한다.
- ④ **자산성장목적**: 배당부계약은 높은 보험료수준으로 인하여 무배당계약에 비하여 수입 보험료규모가 크며, 또한 상당기간 동안 배당이 지연되거나 배당선택권의 행사로 배당금이 다시 사내에 잔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자산의 성장속도가 빠르다. 이러한 점은 성장지향적인 생명보험회사에 있어 배당부계약 판매의 주요 요인이 된다.
- ⑤ **상호회사화의 기대**: 상호회사는 배당부계약만을 판매하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상호회사화할 의도가 있는 경우 배당부계약을 사전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 ⑥ **이자율경쟁**: 저축성이 강한 계약은 장기적인 이자율가정을 필요로 하는 관계로 무배당계약은 시장에서의 경쟁상 어려움이 있다. 즉, 너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뒤지고 너무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다가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재정적인 부담이 돌아온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식회사가 배당부계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즉, 보수적인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서도 계약자배당을 통하여 시장이자율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⑦가격수준: 미국의 경우 생명보험 가격조사연구들의 대부분은 배당부계약이 무배당계약에 비하여 가격(계약자배당이 반영된 가격)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무배당계약의 보수적인 보험료책정과 배당부계약 고유의 융통성 때문이다.

⑧대리점관계: 계약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질 때 이 배당금이 생명보험의 추가가입등의 선택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배당부계약의 보험료수준이 높기 때문에 수수료수입이 커지게 되어 대리점이 배당부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조직형태를 가진 생명보험회사가 배당부계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재무적인 측면과 경쟁력제고의 측면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생명보험회사들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니면서 배당부계약을 판매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요인들이 상당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약한 경제기반과 생명보험시장, 영세한 자본금, 보험경영경험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재무안정성제고, 기업이미지, 자산성장, 이자율 경쟁 등이 배당부계약판매의 특히 주요한 요인들로 판단된다.

## [2]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해갈등

- 주식회사형태를 가지면서 배당부계약을 판매하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배당금은 두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즉, 계약자에 대한 배당과 자본투자자인 주주에게 투자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주주배당이다.
- 상호회사의 경우 계약자가 소유자인 관계로 잉여금의 배분의 대상이 계약자들이다. 한편 주식회사의 경우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을 투자하는 소유자인 주주들이 존재하며 이들에게 최종적인 영업결과가 귀속된다. 따라서 잉여금의 축적과 배분에 있어 소유권이 없는 배당부계약자들과 소유자인 주주사이에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 생명보험회사의 주주들은 계약발행후에 계약자의 희생으로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 예를들면, 현재의 보험요율이 과거의 주주배당수준을 유지하려는 가정하에 산정되었을 경우 예상밖의 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주주배당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의 가치하락을 가져온다. 물론 계약자들은 이와같은 주주들의 동기를 인식하며, 회사의 투자정책, 자금조달정책, 주주배당 등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평가가 반영되는 보험요율만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주주의 동기에 대하여 계약자들은 해약이나 약관대부를 통하여 대항할 수 있으나 그 효과가 완전하지 못하다. 해약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계약준비금보다 적음으로 계약자는 해약

을 통하여 상당한 손해를 보게되며, 약관대부는 계약의 저축요소의 인출을 허용하나 대부조건이 불리할 수 있다.

- 그러나, 배당부계약을 판매한 주식회사의 경우도 회사전체의 재무적 안전유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계약자배당과 주주배당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 타당성이 적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도 상호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전체의 재무적 안전이 우선적 과제라는 점을 수용한다면 잉여이익금의 사내유보가 이루어진 후의 잔여금액이 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 결론적으로 배당부계약자와 주주사이의 이해관계의 초점은, 첫째, 이익금의 사내유보(잉여금의 축적) 및 총배당가능금액(주주배당과 계약자배당을 모두 포함)의 결정에 관한 것과 둘째, 총배당가능금액의 배당부계약자와 주주간의 분배에 관한 것과 나아가서 계약자지분의 계약자간의 공평한 분배에 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3. 상호회사의 계약자배당이론

- 상호회사는 계약자가 회사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잉여금이나 계약자배당에 관한 이론의 도출에 있어 상대적으로 단순한 상황을 제공한다. 주식회사가 배당부계약을 판매한 경우 주주배당과 계약자배당이라는 두가지 형태의 배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상호회사에 있어서의 계약자배당에 관한 이론적 고찰은 주식회사의 계약자배당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를 제공할 것임
- 배당금이란 원칙적으로 잉여금과 연관되어 있으며, 배당금의 결정과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잉여금의 필요성과 잉여금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잉여금이 회사운영상 적정한가 하는 문제이다. 잉여금의 수준이 결정되면 당해연도의 이익금 중에서 얼마만큼이 계약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배당가능금액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부딪치는 문제는 이 금액을 계약자들간에 어떻게 공평하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 배당가능잉여금의 결정
- 배당가능잉여금 = 당해연도의 이익금 - 사내유보(적정수준의 잉여금 강화)  

$$\text{사내유보} = \text{준비금의 강화} + \text{특별준비금} + \text{자유잉여금}$$

#### [1] 적정수준의 잉여금의 필요성

- 상호회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거대한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이익금을 계약자에게 전부 배당하는 대신 잉여금총액을 경감시키는 데 사용



-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능력을 해치는 여러 가지 비상위험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잉여금 필요

#### ①잉여금의 기능

- 투자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장치의 기능
- 비정상적인 보험인수손실(보험인수위험)과 보험영업비용의 증가(비용위험)에 대한 완충장치
- 잉여금의 투자수익을 창출하며 이러한 추가적인 투자수익은 배당금의 증가나 보험요율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잉여금은 그 축적단계에 있어서 그 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나 일단 축적이 성숙된 후에는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잉여금은 회사에게 시장에서의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 신종상품의 개발판매, 신지역에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며, 투자결정, 가격결정 등에 있어서 보다 공격적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 ②잉여금의 적정수준

- 잉여금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잉여금의 충분성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잉여금과 부채금액과의 비율이나 잉여금과 자산금액과의 비율, 또는 잉여금과 보험료수입과의 비율 등을 사용하고 있다.
- 잉여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이론과 모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이를 결정하기 위한 신뢰성 높은 수학적모형의 개발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 현실 적으로는 이러한 잉여금의 결정이 회사의 경영진과 보험계리인들의 철학과 판단이 강하게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현실적인 계약자배당정책: 안정적인 배당금의 수준 유지:

- 배당금액의 잦은 변경은 비용증가를 초래하여 계약자배당의 감소시 계약자의 불만이 따른다
- 배당가능잉여금이 단기적으로 모자라는 경우라도 현재배당을 유지하게 되며 이에 따라 다른 잉여금들에 대한 할당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배당가능잉여금수준의 저하가 지속적인 현상으로 확인되면 배당금수준의 저하가 이루어져야한다.

#### [2] 배당가능잉여금의 계약자간 배분의 공정성

- 상호회사가 파산의 위험회피, 성장 및 경쟁력제고 등에 필요한 잉여금의 적정수준을 결정하고 난 후에 해야할 의사결정은 배당가능잉여금을 어떻게 공정하게 계약자들 사이

에 분배하느냐 하는 것이다. 상호회사의 소유주는 계약자인 바 배당가능잉여금을 계약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존속계약자와 해약계약자, 구계약자와 신계약자, 다양한 상품별 계약자집단, 다양한 요율체계 등 복잡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분배상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개념이다.
- 계약자배당의 공정성유지에 관한 개념은 이론적으로 매우 어려운 개념인 한편, 현실적으로는 계약자배당에 관한 선택은 확일적이라기 보다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계약자배당의 공정성유지에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온 원칙들의 우선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원칙1) 회사전체의 안전과 보전 그리고 계약자전체의 이익이 계약자들간의 엄격한 공정성유지에 우선하여야 한다.

(원칙2) (원칙1)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험료규모나 기본보장조항들이 상이한 계약집단들간의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각 계약자집단은 미래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준비금과 함께 필요잉여금을 축적하며 이에 따라 배당금수준도 결정되어야 한다.

(원칙3) 각 계약자집단내에서는 계약자개인은 각자의 잉여금축적기여도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도록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종류, 가입연령, 계약유지기간, 특약조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칙4) 대중적인 배당에 대한 기대는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 원칙들이 지켜지는 범위내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원칙5) 공정성유지는 광의의 공정성 달성이 그 전부이다.

### Ⅲ.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성과와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금융자유화 이전을 중심으로

#### 1. 1차 자산재평가 이전(~1989회계연도)

##### [1] 영업성과와 재무상태

-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성장기초는 정부가 경제개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투자재원의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내자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포한 1962년 「국민조합저축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를 저축기관의 하나로 선정한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들은 반강제적 보험가입이라는 정부의 지원아래 단체보험계약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됨과 동시에 성장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 이후 1970년대에는 그 동안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지속적 증대로 반강제적인 단체보험계약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고 대신 자발적 시장인 개인보험 영업부문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자산규모가 1990년 2월말 현재 21조 2천억원(기존 6개사는 18조 3천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 이와같이 생명보험산업은 외형면에서 거대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었다. 1970년초까지의 정부정책방향은 주로 낙후된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었으며, 그 이후의 정부정책은 보험산업의 안정기조 정착과 더불어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를 표방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1981년의 “생명보험회사의 경영효율화 지침”, “생명보험 실효·해약방지 대책”등 경영 효율제고와 계약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 왔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생명보험산업의 보호육성정책 여파가 장기화되어 생명보험회사 재무구조의 여러 가지 취약점에 대하여 상당한 예외규정을 두어 보호하여 왔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대외개방이 시작될 때까지 수십년간 생명보험회사의 신설을 막아 6개사의 과점체계를 유지시키면서 획일적인 상품, 획일적인 요율체계, 획일적인 배당정책 등 획일적인 감독정책을 유지시킴에 따라 감독당국이 표방하고 있는 경영효율화 및 계약자 권익보호 정책의 근원적 요건이 되는 시장경쟁의 부재현상이 계속되어 왔다.
- 한편 생명보험회사의 운영에 있어 보험영업기능과 더불어 주요한 투자영업기능측면과

관련하여 보험료수입의 투자시장인 금융시장 역시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비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들은 금리자유화가 안된 금융시장에의 투자에서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투자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보험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예정이율로 자금조달이 가능하였으며 이차배당을 하더라도 금리차익의 안정된 확보가 가능하였다.

-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부동산투자의 높은 기대수익성과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높은 비율의 부동산투자 허용(자산의 15%까지), 그리고 업무용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모호한 구분으로 인한 과도한 부동산투자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 초기의 불안한 영업상태에 따른 위험을 부동산의 안정적인 투자가치 상승으로 상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다른 산업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타금융기관과는 달리 보험가입기간이 장기적이라는 성격에 의하여 장기적 투자가능성이 부동산투자에 대한 높은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투자환경은 생명보험회사들의 세력확장동기와 결부되어 경영효율의 제고, 기술혁신, 계약자 서어비스 등의 생명보험영업을 통한 사회적 기여보다는 오히려 투자자금의 조성에 치중하는 외형경쟁을 유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외형경쟁은 다음과 같은 현상들을 노출시켜 왔다. 첫째, 생명보험산업의 근원적 기능인 보장성상품의 판매보다는 저축성상품의 판매에 치중하였다. 둘째, 경영의 비효율성이다. 보험경영의 경험부족과 외형제고를 위한 과도한 경쟁은 불필요하게 높은 신계약비의 지출을 가져왔으며, 진정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높은 해약률을 초래하는 비효율적 경영의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셋째, 재무구조 부실에 대한 상쇄노력으로 부동산에의 과다투자를 초래하였다.

## [2] 재무상태

-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들은 언급한 바와 같이 영업초기의 막대한 고정비 투자, 보험경영의 경험부족,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의 투자재원조달정책, 보험회사의 세력확장을 위한 외형성장경쟁 등이 결합되어 다음과 같은 재무구조상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 첫째, 장기간동안의 경영손실의 시현이다. 영업초기의 막대한 비용지출과 외형경쟁으로 인한 사업비의 과다지출로 장기간동안 생명보험산업들은 손실에 허덕여 왔다. '80년대 후반 몇 년간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나 이는 정상적인 보험영업의 결과라기 보다는 주식시장의 이상적인 활황으로 인한 주식거래이익에 의한 이익의 시현이 큰 몫을 하였다.

- 둘째, 계약자준비금의 부실이다. 지속되는 과도한 사업비지출과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순보험료식의 준비금적립이 어려워 해약환급금식의 적립을 가미한 K율방식의 적립이 허용되어 왔으며 순보험료식의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 회사는 '89회년도말 현재 2개사에 불과하였다.
- 셋째, 자본금의 잠식과 파산상태이다. 지속된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자본금이 잠식되어 대부분 회사들이 한때 K율방식의 준비금을 포함하는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파산상태에 도달하였으며 당시 몇 년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의 회사들은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에 있었다.
- 기존 6개사의 1980년대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내용은 <부록 1>과 같다.
- <부록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규모나 자산규모에 비하여 자본규모는 매우 작았고, 특히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의 급진적인 사업규모확장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본금/자산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 [3] 계약자배당제도

-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감독하에서 영위되어 왔었다. 보험사업은 재무부장관의 허가사항이며,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변경은 재무부장관의 인가사항으로 되어 있어 모든 보험회사의 운영이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계약자에 대한 배당도 시장기능과 회사의 결정이 아닌 재무부가 시달한 지침에 따라 실시되어 왔다.
- 정부는 보험료산출기초 및 상품개발지침을 통하여 보험료산출시에 획일적인 예정사망율, 예정이율, 예정경비율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동시에 계약준비금의 적립규모와 방법을 시달하고 있다. 따라서, 생보산업전체에 공통적인 공동상품들은 물론이고 회사별로 개발된 단독상품들도 보험료산출에 사용되는 예정사망율, 예정이율, 예정경비율이 획일적이다. 한편, 계약자배당도 역시 정부가 정해주는 지침에 따라 행하여지는 바 여기서 사용되는 이자율차, 사망률차, 경비율차도 산업전체에 공통적이다. 다시말하면, 보험료율, 준비금의 적립, 계약자배당금액이 정부의 엄격한 감독하에 있다.
- 개별회사들의 실제 사망률, 투자수익, 경비사용 등 영업성과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배당은 모든 회사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 불량한 성과를 나타낸 회사들의 재무상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계약자배당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입연도	배 당	배당의 성격	지급방법	비 고
1965	특별배당	이자율차 배당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액에 가산지급	1972년 폐지
1978	확정배당	이자율차 배당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 가산지급	
1984	사차익배당	사차익배당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 가산지급	1988 폐지
1986	정산배당	간이검험생명표와 기존 조정국민생명 표의 사망률차이 정산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 가산지급	1988 폐지
1988	계약자배당의 확대 실시			
	이차배당	이자율차 배당	현금배당 가능	
	장기유지 특별배당	투자성과배당	현금배당 가능	
	사차배당	사차익배당	현금배당 가능	

## 2. 이익배분기준의 제정(1990년 8월)

- '80년대 후반 생보사들의 흑자시현과 시장개방 등으로 기업공개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익배분 문제가 제기됨.
- '89년 재무부는 계약자와 주주간의 이익배분에 대하여 보험심의위원회와 금융발전심의 위원회에서의 의견수렴과 '90년 3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기초로, '90년 8월 '생명 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을 마련하였음.
- 재무부는 이 지침에 의거하여 '89 사업연도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배분기준'을 확정하고 이 기준이 최근('99.3) 개정될 때까지 적용되었다.
- 지침의 주요 내용: 직전사업연도말 K울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확정배당소요액을 우선 적립한 후의 잔여 이익은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구분하도록 함

요건(K울)	주주지분한도	계약자지분
100%	30% 이하	70% 이상
50%이상	20% 이하	80% 이상
50%미만	10% 이하	90% 이상

- 주주지분으로 분류한 이익중 주주배당은 순보험료식으로 보험료적립금을 완전히

- 적립한 회사(K율 100%)에 대해서만 허용
- 계약자지분으로 분류한 이익은 계약자배당재원 또는 책임준비금적립충실화(K율 상향조정)재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함

### 3. 자산재평가차익 배분기준의 제정과 기업공개를 전제한 자산재평가차익의 실제 배분실적

#### [1] 자산재평가차익의 배분기준의 제정('90. 8)

- 보험업법 제97조 ①항은 고정자산 평가익 또는 매각익과 상장주식의 평가익을 준비금으로 적립할 것을 규정하고, ②항은 제1항의 준비금은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는 경우와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는 경우, 고정자산 및 상장주식의 평가손, 고정자산의 매각손의 전보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③항은 보험사업자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외에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시 자산재평가차익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재평가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재평가적립금이 된다.
- 앞에서 언급한 '90년 8월의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은 자산재평가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배분하였다.
- 우선 재평가적립금은 각 회사의 K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주지분, 계약자지분, 처리유보액으로 된다.

K율	계약자지분	주주지분	처리유보액
100% 이상	40% 이상 70% 이하	30% 이하	잔여금액
50%이상 100%미만	40% 이상 80% 이하	20% 이하	잔여금액
50%미만	40% 이상 90% 이하	10% 이하	잔여금액

- 주주지분은 자본전입과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등의 보전에 사용되며,
- 계약자지분은 부채계정으로 처리되어 1/3 이상이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처리되어 매년 동금액에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평균자산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익사업

재원으로 출연하고 잔여액의 1/2은 재평가특별배당금으로 그 나머지는 계약자배당안정  
화준비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이 아닌 처리유보액  
은 자본계정에 계리하여 결손보전(결손보전사용액은 주주지분이익으로 우선적으로 보  
전하여야 함) 또는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기업공개를 전제로 한 자산재평가차익의 배분 실적

- 교육보험과 삼성생명 은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여 앞의 기준에 의하여 자  
산재평가차익을 배분하였음

	평가일시	자산재평가차익
교육보험	'89. 3	2,190억
삼성생명	'90. 1	2,927억

### 4. '90년대의 경영성과와 현재의 재무상태

#### [1] '90년대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부록 2> 참조

#### [2] '98. 3. 31 현재 지급여력 현황

'99년 3월말 현재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구 분	지급여력 (A)	지급여력기준 (B)	지급여력비율 (A/B)*100	비 고
전 체	9,283	879,416	1.1	
기 존 사	26,894	736,457	3.7	
신 설 사	-17,611	142,959	-12.3	
[전국사]	-12,959	76,178	-17.0	
[지방사]	-4,487	32,611	-13.8	
[합작사]	-901	32,527	-2.8	
[외국사]	736	1,643	44.8	
대 한	-4,767	139,188	-3.4	관리명령(경영개선권고대상)
제 일	1,495	35,345	4.2	
삼 성	27,962	325,226	8.6	
흥 국	722	30,781	2.3	
교 보	8,686	185,084	4.7	
동 아	-7,204	20,636	-34.6	이행계획서 제출



## IV. 금융자유화와 보험감독정책의 변화

### 1. 금융자유화: 보험시장개방과 규제완화

#### [1] 보험시장개방

-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은 최근 양적으로 급성장(수입보험료 기준으로 1998년말 현재 세계 6위)한 한편, 경영환경은 세계화추세, 시장개방, 금리자유화, 자본자유화, 외환자유화 등으로 국제적인 시장경쟁체제로 변화되고 있다. WTO체제의 출범, EU, NAFTA, APEC 등 경제의 블록화 현상과 역내 자유화추세, OECD에의 가입, IMF와 IBRD의 요구 등으로 보험분야의 자유화가 가속되고 있다.

생명보험시장 개방 현황

개방내용	연도
외국사 생보시장 진입 허용	'87
독립대리점	'96
설립허가시 경제적 수요심사제도 폐지	'97
외국사에 직접보험가입(Cross-border) 허용	'97. 1
보험중개인	'98. 4
보험계리업	'98. 4

#### [2] 보험가격자유화: 보험요율과 계약자배당 자유화

- 정부는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을 개정(1994.12.31)을 시작으로 계속하여 규제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가격에 대한 자유화이다.

- 생명보험의 경우 사전적 가격인 보험요율은 자유요율화가 2000년 4월에 일정이 잡혀 있는 반면 사후가격인 위험율차배당과 이자율차배당은 '95년 4월과 '97년 4월에 각각 자유화되었고 사업비차배당은 2000년 4월에 자유화가 예정되어 있다.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일정

		'95. 1 현재	95. 4	97. 4	2000. 4
보험요율	예정위험율	고정요율		범위요율	
	예정이자율	고정요율			자유화예정
	예정사업비율	범위요율*			자유화예정
계약자배당	위험율차배당	범위요율	자유요율		
	이자율차배당	범위요율		자유요율	
	사업비차배당	-			도입예정

\* 예정사업비중 예정유지비율은 자유요율화

## 2. 규제완화와 병행한 보험감독정책의 변화

### [1] 재무안정성에 대한 감독강화

#### 〈1〉 지급여력제도

- 생보사의 자기자본규제를 위하여 보험감독당국은 '94년 6월 처음 지급여력제도를 도입 하였으며, 그 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제도에 이르고 있다.
- 이익배분문제와 관련하여 각 회사는 자신의 직전회계연도말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주주와 계약자의 배분비율이 달라짐

'98년 6월개정 기준	지급여력 기준	해약식 책임준비금
	지급여력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해약환급금식에 의한 보험료적립금을 초과하는 보험료적립금,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준비금,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99년 5월개정 기준	지급여력 기준	1.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미상각신계약비) × 책임준비금 위험계수(=4%)의 소정비율 2. 위험보험금 × 보험위험계수의 소정비율**
	지급여력	1. 합산항목 가. 납입자본금 나.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다.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라.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 - 미상각신계약비"를 초과하는 보험료적립금 마. 대손충당금 중 자산건정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바. 자본조정 사. 후순위차입금 2. 차감항목 가. 신계약비 나. 무형자산 중 영업권

\* 납입자본금의 범위내에서 산입가능, 잔존기간이 5년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

\*\* 이 항에서 위험보험금, 보험위험계수 및 소정비율은 <부록 3> 참조

- 생명보험사업자는 매분기말 지급여력보고서를 분기종료후 1월이내(사업연도말은 2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지급여력이 부족한 회사에 대하여는 부족비율에 따라 경영개선 조치를 명령함

	'98 지급여 력부족비율	'99 지급여 력비율	경영개선 조치
경영개선 권고	0-1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기관 또는 임원에 대한 주의, 경고, 자본금 증액, 투자의 제한 및 동결, 사업비 감축 및 부실자산의 처분 등 경영 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	10%-20%	0% 이상 50% 미만	배당 제한 또는 금지,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 제 한, 임원진 교체 요구 및 조직의 축소, 일부 보험종목의 영업제한 등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 명령	20% 이상	0% 미만	주식의 일부 소각 및 병합,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보험 관리인 선임, 보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계약이전, 합병, 제3자의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

- 경영개선조치명령을 받은 생명보험사업자는 금감위에 2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  
출하여야 함
- 경영개선조치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예정
- 궁극적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는 경영개선 명령

#### 〈2〉 경영실태평가제도의 도입

- 1999년부터 시험적용하고 2000년 이후부터 실제 적용예정

##### ① 내용

- 경영리스크를 반영하는 경영평가제도
- 지급여력평가 + 자산건전성평가 + 수익성평가 + 유동성 평가
- 계량항목평가와 함께 비계량항목평가를 병행
  - 계량항목평가: 제시된 산식과 산정방식에 의하여 평가등급을 결정
  - 비계량항목평가: 비계량 평가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감안하여 계량평가  
에 의해 결정된 평가등급을 조정
- 정기검사: 계량 + 비계량 평가
  - 분기단위평가: 계량적 평가
- 평가결과의 활용:
  - 원칙적으로 비공표
  - 우수회사에게는 메리트를 부여하고 불량회사에는 적기시정조치로 활용

## ② 제량평가의 내용

- 제량평가: 평가항목별 목표치와 등급 <예시>

	등 급	1	2	3	4	5
지급여력 (30점)	지급여력비율 I(20점)	5.0%이상	0.0%	-5.0%	-10.0%	-10.0%미만
	지급여력비율 II(10점)	5.0%이상	0.0%	-5.0%	-10.0%	-10.0%미만
자산건전성 (20점)	부실자산비율 (10점)	1%이하	2%	3%	4%	4%초과
	위험가중자산비율 (10점)	55%이하	60%	65%	70%	70%초과
수 익 성 (15점)	평균예정이율대 총자산수익율 (5점)	100%이상	90%	80%	70%	70%미만
	위험보험료대 사망보험금비율 (5점)	50%이하	60%	70%	80%	80%초과
	예정사업비대 실제 사업비율 (5점)	90%이하	100%	110%	120%	120%초과
유 등 성 (15점)	유등성비율 (7.5점)	35%이상	30%	25%	20%	20%미만
	수지차비율 (7.5점)	20%이상	10%	0%	-10%	-10%미만

주) 평가항목별 목표치 및 등급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③ 최종평가등급의 결정

평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최종평점	1.0-1.4	1.5-2.4	2.5-3.4	3.5-4.4	4.5-5.0

<3>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 표준책임준비금제도 도입
- 위험준비금제도 도입을 예정하고 있음

## 3.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

- 보험환경의 변화와 IMF, IBRD의 요구로 인하여 기존보험회계규정을 보험업회계처리 준칙과 보험감독회계규정으로 분리하면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회계기준을 변경
- 회계제도는 지급여력제도의 운영과 함께 다음에 논의할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회계규정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보험감독회계
			'99.2 제정 FY98부터 적용
주식의 평가	*취득원가, 다만 시가(상장주식) 또는 순자산액(비상장주식)이 장부가액보다 30%이상 하락하고 단기간내에 회복할 수 있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시가 또는 순자산액을 대차대조표가액취득원가평가	유가증권을 상품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으로 구분 ⑤상품유가증권: 시가 평가 ⑥투자유가증권: 상품유가증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①시장성있는 것: 시가 평가 ②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시장성 없는 주식: 취득원가	좌 등: 단, FY98: 50%반영 FY99: 100%반영
대손 충당금	회사별 임의적립	과거경험 또는 업계관행에 따라 적립 (최수불확실 정도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	좌등: 5단계의 무적립 비율부과: 시행중
투자 부동산의 평가	취득원가	저가법(가치하락 손실충당금 설정)	좌 등
보험료 적립금 적립방식	순보험료식 및 해약환급금식 혼용(k율)	순보험료식(신계약부터 적용): 과거 개약도 적용가능	좌 등
신계약비	당기 지출액 전부 비용으로 처리	계약유지기간에 걸쳐 균등상각: 7년이상인 경우 7년간 상각	좌 등
계약자 지분의 구분 처리	규정 없음	자산재평가차액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중 계약자지분을 구분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계약자지분조정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공익사업출연기금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또는 손실)	규정없음

#### 4. 계약자보호정책

[1] 계약자 이익 배분기준의 변경: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

-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처리
- 재평가적립금의 처리

[2] 보험경영 통일공시기준(주요공시내용은 <부록4> 참조)

-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시의성있는 경영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보험가입자 등 시장참가자들에 의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기능을 제고함으

로써 개별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규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

- 기본방향: - 은행의 「금융업 경영통일공시기준」과 상호 일관성 유지
- 국제회계기준상의 요구수준으로 경영공시항목 확대
- 경영공시의 유용성 제고

## V.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여부

- 생명보험회사의 공개는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관계되는 법들의 제약을 공통적으로 받는바 공개의 타당성 또한 일반적인 논리에 의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한편, 생명보험산업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사안을 고려한 분석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 1. 기업공개에의 일반적 고찰

#### [1] 기업공개에의 의의와 필요성

##### 〈1〉 의의

- 기업공개는 증권거래법 등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공모증자하거나 또는 대주주소유의 구주를 매출함으로써 주식을 분산하고 재무내용을 공시하여 자본과 경영의 분리와 아울러 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통하여 공익기업으로서의 체제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 기업공개는 상장과 개념상 별개이나 법인이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시킴으로써 그 절차가 완료되므로 상장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공개의 정도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것은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5조에서 모집 또는 매출실적(공모비율)이 공개 후 발행총주식의 3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 〈2〉 기업공개에의 필요성

- 기업공개에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기업자본금조달능력의 확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기업의 대형화는 자금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는 바 개인재산이나 간접금융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공개는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한다.

#### ②기업의 사회적 책임

현대의 기업은 사회속에서 존재하는 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적 조직으로 인식되며 따라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공개는 주식분산을 통하여 대중의 기업참여와 이익의 분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의 기초가 될 수 있다.

#### ③자본과 경영의 분리

기업공개를 통한 주식의 분산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가져와 폐쇄적인 가족경영에서 전문경영인에 의한 전문경영을 통해 경영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게 한다.

#### ④기업의 성장과 경영합리화

기업공개는 이해관계자의 수를 증가시켜 관심의 증대를 가져온다. 회계감사, 정보의 공시 등을 통하여 기업의 공신력 향상을 가져오며 대수인의 기업참여로 인하여 기업성장의 기회가 제고된다. 또한 이는 타기업과의 경쟁의식을 고조시켜 경영합리화와 재무내용의 건실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⑤기업의 간접적 홍보

기업공개는 주식투자에 뜻이 있거나 경제동향에 유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공개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

#### ⑥우리스주조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업공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결성되는 우리스주조합은 종업원의 주주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요인이 된다.

### [2] 기업공개요건

- 기업을 공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상의 기업공개요건과 「유가증권 상장규정」상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함<sup>1)</sup>
-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상의 주요 기업공개요건
  - 설립후 5년 경과
  - 자본금 30억원 및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 최근 사업연도의 납입자본이익률이 25%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납입자본이익률의 합계가 50%이상

1)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기업공개가 불가능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도 증권거래소의 실질상장 심사를 거쳐 기업공개를 할 수 있는 실질상장심사제도가 최근('99. 4. 1) 도입

- 최근 사업연도말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상장법인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
- 「유가증권 상장규정」상의 주요 신규상장 심사요건
  - 상기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상의 주요 기업공개 요건 5가지
  - 발행주식총수가 30만주 이상
  - 상장신청일전 1년 이내에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가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30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수가 1,000명이상

## 2.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는 원칙적으로 해당회사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자율적인 결정 사항이며 앞에서 언급한 요건들을 만족시키면 기업공개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는 생명보험회사의 운영이 생명보험사업의 사회적, 공익성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이와 연관된 공개에 대한 장단점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 생명보험회사 기업공개에의 장점

-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에의 필요성은 앞에서 언급한 자금조달능력의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자본과 경영의 분리, 기업의 성장과 경영합리화, 기업의 간접적 홍보, 우리 사주조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다 적용되겠으나 특히 자금조달능력의 향상과 사회적책임수행이 중요한 초점이 된다고 본다.

#### 〈1〉 자금조달의 용이

- 생명보험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업공개를 통한 상장은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준다.

#### ① 담보력 증대를 위한 증자의 필요성

파산방지를 위한 장치역할로서의 자본금규모의 증가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금융자유화, 국제화에 따른 투자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투자위험의 증대
- 타금융기관의 저축부분에 대한 경쟁고조
- 무배당상품의 판매증가
- 기타 투자형 생보상품의 판매증가

#### ② 신규자금유입을 위한 증자의 필요성

기존 자본금이 현금인 아닌 부동산(부동산 재평가차익의 일부가 자본금에 전입될 경



우도 동일), 장기대부, 증권 등에 투자되어 적시에 적절한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다.

- 경영효율의 증대를 위한 신규투자의 필요성(경영정보시스템의 도입)
- 타금융기관과의 정보망 수립
- 계약자 서비스의 증대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에의 진출 및 M&A의 필요성 증대
- 종래와 같이 배당부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현재의 자본금수준에 의한 담보력이 충분하지 않다고만 볼 수도 없겠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배당상품, 변액보험등의 상품영역의 확대, 경쟁의 고조, 금융시장의 국제화 등의 요인으로 보험영업, 투자영업의 양자 모두가 위험이 증대될 여지가 많으며, 또한 경영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신규투자의 필요성도 간과될 수 없는 바 신규자금유입을 위한 증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미국의 경우 현재 상호회사형태의 생명보험회사들의 주식회사화(demutualization)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대형 상호회사들은 주식회사화와 함께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의 가장 큰 요인은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M&A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 미국 생명보험시장 보험료기준 규모순위가 각각 1, 2, 9위인 Metropolitan, Prudential과 John Hancock는 '98년 주식회사화를 선언하고 현재 진행중이며 아울러 상장을 추진중이다. Equitable은 '92년에 역시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한 회사로서 상장되어 있다.

#### (미국 10대 생보사의 회사구조)

순 위	생명보험회사	회사형태
1	Metropolitan	상호회사(98)*
2	Prudential	상호회사(98)*
3	Connecticut General	주식회사**
4	Principle	상호회사
5	Nation Wide	상호회사
6	New York Life	상호회사
7	Equitable	주식회사**
8	Hartford Life	주식회사**
9	John Hancock	상호회사(98)*
10	Northwestern	상호회사

주) \* 주식회사와 공개를 발표한 상호회사

\*\* 상장회사

- 한편 신규자금의 유입을 위하여 기업공개시 주식분산은 구주매출과 함께 신주공모를 통한 적정수준의 증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 〈2〉 사회적 책임의 수행: 경영성과의 분산분배

- 현재 대부분의 기존사들은 대주주 지분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99년 3월말 현재 회사별 개인대주주와 법인대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존6개사 대주주 현황 ('99. 3. 31 현재)

	개 인		법 인		대주주 지분율총계
	주주수	지분율	주주수	지분율	
대 한	15	31.13%	5	40.87%	72.17%
제 일	8	38.83%	2	38.56%	87.39%
삼 성	9	45/67%	4	51.67%	97.34%
흥 국	3	96%	1	4%	100%
교 보	5	75.5%	1	24%	99.5%
동 아	1	4.38%	2	95.62%	100%

- 공익성이 강한 막대한 규모의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성과는 소수 대주주가 아닌 다수의 소주주인 국민대중에게 분배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공개시에 요구되는 최소 분산지분비율은 30%이나 가능한 한 주식분산을 높히고 공개이후에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공개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대한 검토

### ① 생명보험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약자자산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견해.

- 기업의 공개는 생명보험회사의 부채로 나타나는 준비금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지분을 분산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며, 지분의 분산을 통한 강화된 감시기능은 오히려 계약자 지분의 보호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 공개시에 이익잉여금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간의 공평하고 정확한 배분기준과 방법이 확립된다면 공개가 계약자에게 해가 될 수 없으며, 공개가 되지 않고 현상태대로의 소수 대주주에 의한 경영지배의 계속이 계약자에게 유익하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음.

### ② 생명보험회사의 공개는 주주배당압력을 유발하여 계약자배당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견해.

-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형태의 생명보험회사들이 배당부계약을 판매하는 경우 주주의 이익이 계약자의 희생위에 도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주식분산이 이루어지

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문제이며, 이러한 주주와 계약자간의 갈등문제는 주주와 계약자 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제리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기인한다. 공개와 더불어 구분제리제도의 발전 등 향후이익배분관계가 정립되면, 이러한 갈등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주의 배당압력은 경영의 효율화, 즉 사업비의 과다지출로 영업손실을 초래하는 외형경쟁을 지양하게 하는 경영합리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상장된 주식의 가격은 생명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수익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공개는 계약자위주 경영체제로의 전환압력이 될 수 있다.

### ③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경영책임소재의 불명확 등 경영비효율성의 문제

-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는 최고 70%까지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공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주주의 경영지배에는 문제가 없다. 상장주식의 시장가격은 단편적인 경영성파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능력에 대한 수많은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공개는 오히려 책임경영의 풍토를 진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3. 종합의견

-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을 것이다. 첫째, 기업의 공신력이 제고된다. 공개기업은 많은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회적 공기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어 계약자는 물론 일반대중, 정부, 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비공개기업보다 높은 공신력을 지니게 된다. 둘째, 기업은 선전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업공개는 주식투자에 뜻이 있거나 경제동향에 유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PR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 셋째, 경영합리화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이 가능하다. 기업공개는 결과 재무내용이 공시되므로 타생명보험회사 또는 타금융기관들과의 경쟁의식이 고조되고, 또한 정기적인 외부감사를 기업진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생명보험회사는 경영합리화의 자세를 확립하고 재무내용의 건실화를 기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도 크게 향상될 수 있다.

-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여부 문제는 '90년에 한번 거론되어 허용이 결정되었던 바 있으며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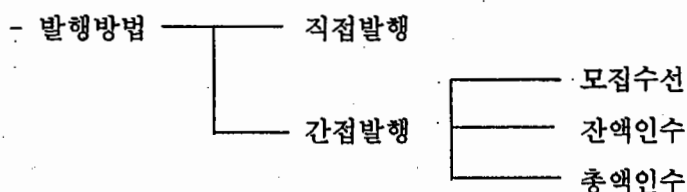
- 총체적으로 보아 기존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현재와 같은 극소수 대주주의 지배보다는 공개를 통한 주식소유의 분산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생명보험회사의 공개는 자본조달의 용이 등 많은 장점이 있는 한편 몇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공개가 되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문제이며, 오히려 기업공개가 많은 문제점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됨.
- 기업공개에 필수적인 선결과제는 주주와 배당부계약자간의 이해관계의 정립이다. 이 문제는 상존하였던 문제이나 기업공개로 인하여 소주주의 수가 증가되므로 더욱 사전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해관계의 정립이 없이는 공모가격의 산정 등 기업공개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는 단순한 주식의 분산차원을 넘어서 생명보험산업의 현존하는 문제점들의 해결은 물론 생명보험산업이 앞으로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 VI. 기업공개에 따른 시세차액(액면가와 공모가격과의 차액)에 관한 문제

### 1. 기업공개에 따른 시세차액의 의의

- 기업공개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공모증자하거나 또는 대주주소유의 구주를 매출함으로써 주식을 분산하고 재무내용을 공시하여 자본과 경영의 분리와 아울러 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통하여 공익기업으로서의 체제를 갖추는 것을 말함
- 한편 기업공개는 상장과 개념상 별개이나 법인이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시킴으로써 그 절차가 완료되므로 상장이 필수적임.
-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5조 3항(주식의 분산요건)은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모집 또는 매출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30%이상이거나 또는 10%이상으로서 1,00만 주(액면 5,000원기준) 이상이며,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수가 1,000명 이상일 것을 규정



- 발행규모가 클 경우 간접발행이 일반적이며 주관사회사는 주식가치를 분석하고 공개자와의 협의하에 인수가액과 조건을 결정
- 인수단들은 인수방법에 따라 공모에 따른 발행위험을 부담.
- 최초공모가격(인수가액)의 수준은 자본시장에 의하여 결정되며, 상장후에도 주식의 가치는 시장의 평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임
- 주식의 가치=f(기업의 현재의 순자산, 기업의 미래의 수익력)  
 생명보험사의 미래의 수익력=f(자산의 구성, 부채의 구성, 경영진의 능력, 기업의 명성 등)
- 기업공개는 해당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자율적 의결사항이며, 공모가격과 액면가의 차액은 기업공개를 통하여 주식가치가 자본시장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시장공개 그 자체에 의하여 주식의 실질가치가 변화하는 것은 아님.

## 2.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주주와 배당부계약자의 법적 지위

### [1] 생명보험회사 주주의 지위

- 다른 기업들의 주주의 지위와 동일
- 임원선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
- 회계장부와 기록에 대한 조사권
- 유한책임
- 이익에 대한 청구권
- 주식의 임의적 양도 가능
- 청산시 잔여자산에 대한 청구권의 후순위: 부채에 대한 변제가 우선
- 주식회사가 배당부계약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주주의 지위, 특히 청산시 부채의 변제에 후순위인 잔여재산청구권에 대한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님

### [2] 생명보험주식회사의 배당부계약자의 지위

- 생명보험주식회사와 계약자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관계와 유사
- 생명보험계약이 배당부계약이라 하여 이러한 근본적인 채권자-채무자 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님: 미국의 경우 1900년대 중반 배당부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장들(e.g: partner-partnership, stockholder-corporation, trustee-beneficiary relationship)이 있었으나 법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기각됨<sup>2)</sup>

- 주식회사의 배당부계약자와 상호회사의 계약자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상이함

	상호회사의 계약자	주식회사의 배당부계약자
의 결 권	있 음	없 음
청산시 잉여금의 배분	잔존계약자간 배분	주주에 우선한 청구권

### 3.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기업공개에 따른 주식의 시세차액(액면가와 공모 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계약자 참여에 대한 논의

#### [1] 법적인 측면

-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제4장)에 의한 회사의 형태로서 주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음
- 상호회사에 대한 근거는 상법에는 없으나 보험업법(제3절)에서 보험회사의 조직형태로 인정되나 아직 상호회사의 형태를 가진 보험사는 없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배당부계약자와 주주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으며 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조항의 유무에 그 관계가 변화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법적으로 배당부계약자는 주식의 공개와 공모에 의한 시세차액에 대한 참여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2] 경영학적 분석

〈1〉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졌으나 사실상 상호회사로 운영되었다는 견해에 대한 검토

- 배당부계약의 영업은 그 성격상 무배당보험에 비하여 경영위험수준이 낮은 한편, 금융자유화 이전 시기의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가 통제되어 있었고 높은 사망률에 기초한 생명표의 사용으로 자산운용과 사망률예측에 따른 위험이 상당히 낮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생명보험회사 경영은 창업 초기와 어느 정도의 규모에 이를 때까지는 수입에 비하여 막대한 영업비용이 발생하는 관계로 기존회사의 경우도 이로 인한 주주의 위험이 상존했다고 보여진다. 1960년대 자금조달창구로서의 생명보험산업의 보호육성에 기인한 성장지향의 외형경쟁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계속되어 높은 사업비율, 높은 해약율,

2) Joseph M.Belth, 'Participating Life Insurance Sold by Stock Companies', The S.S.Huebner Foundation for Insurance Educ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by R.D.Irwin, Inc., 1965 pp.108-109 참조

이에 따른 비차손과 영업손실의 발생이 계속되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시에 의한 이차배당과 사차배당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로 당기손실의 지속과 준비금부실, 자본의 잠식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대부분 기존사들이 회계적인 파산상태에 이른 적이 있다.('83회계년도말). 당시 정부는 이들 생명보험회사에게 실질적인 파산을 선고하지 않았지만 주주는 상당한 영업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 기존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소수 대주주에 의한 지배의 속성상 경영참가를 통한 여러 가지 이익참여의 가능성이 예상되는 한편 자본금 잠식, 주주배당의 불가능이라는 불이익이 주주에게 지속되었다.

- 한편 계약자들은 '80년대 중반까지 보험사의 당기손실의 실현과 자본잠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시에 의한 이원별 독립배당을 통하여 이차배당과 사차배당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감독의 성격상 보험금지급불능상태도 예상할 수 없어 전반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한 위험 수준은 매우 낮았다고 보여진다.

- 1980년대 후반 이후 생보사들이 이익실현과 함께 대외시장개방을 맞이하여 기업공개문제가 부각되었으며, 기업공개를 전제로 경상이익의 배분과 재평가차익 배분에 대한 감독규정이 만들어졌다.

- 계약자배당제도, 경상이익의 배분기준, 재평가차익의 배분기준에 대한 정부의 감독정책은 주식회사의 배당부계약판매로 인한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해갈등관계에 정부가 개입하여 계약자보호의 입장에서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익배분관계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 물론 이러한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IMF사태를 맞이하여 기존생보사중 2개사가 파산함에 따라 이들의 주주지분은 가치를 사실상 상실하였으나, 계약자들은 계약상의 권리를 전부 보호받고 있으며 계약자배당도 유지되고 있음

- 최근 효율자유화 시책에 따라 일부 계약자 배당이 상당부분 자유화 된 한편, 금융감독원은 경상이익의 배분과 재평가차익의 배분에 있어 계약자지분을 상향조정하였음('99.3)

- 보험산업은 정부의 보호육성의 도움을 받은 한편 위에서 살펴 본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경영초기의 영업기반의 제공과 경영위험의 완충이라는 자본의 역할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근대사회에서 상호회사의 설립이 어려운 것은 경영위험에 대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당 수준의 자금을 계약자들끼리 조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 〈2〉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구조의 특성과 자본의 역할: 자산, 보험계약준비금, 자본금
- 기업공개 대상이 되어 있는 생명보험사들이 자산규모에 비하여 매우 작은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 자본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고 있음.

공개대상회사의 재무구조(1999. 3. 31 현재)

(단위: 억원, %)

	자산㉔	납입자 본금㉕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자본 조정	총자본 금㉖	㉕/㉔	㉖/㉔	K율	지급여 력비율
삼성	363,764	936	939	4,131	-112	5,894	0.26%	1.62%	100%	8.6%
교보	206,768	686	680	4,020	-86	5,300	0.33%	2.56%	100%	4.7%

- 생명보험사의 자본은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위험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자본의 충분성의 논의는 생명보험사업의 특성과 보험경영환경을 고려하여야 함.
- 생명보험사업은 예측에 기초하는 사업이다. 보험료의 수준은 예정위험율, 예정이자율, 예정경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보험경영의 실제결과는 이러한 예정율과 상이하며, 나쁜 방향으로의 편차는 보험사의 파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 계약자배당이 자유로화 되어 있는 환경하에서 배당부계약은 보험료가 여유있게 책정된 경우 자체적으로 여분에 상당하는 위험흡수 기능이 있음.
- 생명보험사의 파산은 사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가져옴으로 정부는 계약자보호를 위하여 생명보험사의 재무안정성 유지에 감독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들 중 핵심적인 내용은 계약준비금의 보수적인 적립과 신계약비의 즉시 비용화이다.
- 우리나라의 감독정책은 최근 회계규정이 개정되기<sup>3)</sup> 전까지 신계약비는 전액 당기비용화하면서 보험계약준비금은 K율방식<sup>4)</sup> 즉 순보험료식과 해약환급금식의 혼합방식을 사용하여 적립하게 하였다. K율은 회사의 자율결정이나 한번 K율이 결정되면 추후에는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못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현재 K율이 100%인 회사는 3개사임.
- 순보험료식은 해약환급금식에 비하여 여분의 준비금을 쌓고 있다. 이 여분의 축적은 주

3) '99년 2월: 보험계약준비금 적립방식을 순보험료식으로 통일하고 장기보험의 신계약비는 이연자산화

4)  $tW = tV^{(n)} - \frac{m \times 12 - t}{12 \times m} \times a$ ,  $K율 = \frac{tV^{(n)} - tW}{\text{실제보험료적립금} - tW}$

단,  $t < 3$ ,  $m > 10$  이면  $m=10$ ,  $t > 3$ ,  $m > 7$  이면  $m=7$ ( $tW$ : 해약환급금식준비금,  $tV^{(n)}$ : 순보험료식준비금,  $a$ : 예정신계약비,  $t$ : 납입경과월수  $m$ : 납입기간년수)



주와 배당부계약자에게 돌아갈 정상이익의 감소를 통하여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순보험료식 적립을 하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식의 회사에 비하여 준비금안에 상당한 여분이 있으며, 이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수입되는 평준보험료에 포함된 신계약비의 납입을 통하여 정상이익으로 환원되며 이는 주주와 배당부계약자간에 배분기준에 의하여 배분된다. 결과적으로 이 여분의 해소는 계약자배당의 재원이 되는 한편 주주 이익잉여금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회사규모의 성장, 즉 보험판매의 증가는 또 다른 보험료적립금에 의 여분축적을 필요로 하는 바 성장은 주주의 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준비금을 충실히 쌓는 회사의 경우 보험계약준비금에는 일정의 주주지분이 존재하며, 그 크기는 준비금의 충실도와 준비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 따라서, 생명보험사의 자본의 충분성은 자본계정만 가지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보험계약준비금의 충분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지급여력제도에 잘 나타나 있다. 회사의 지급여력은 총자본액(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과 함께 해약환급금식에 의한 보험료적립금을 초과하는 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 후자의 크기는 해당 보험회사가 준비금을 얼마나 충실하게 쌓았느냐에 달려있으며, 순보험료식의 적립은 부채계정인 준비금을 상대적으로 크게 하는 한편 주주계정의 이익잉여금의 감소를 가져온다.

- 부실자산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바, 자산의 운용 즉 운용자산의 구성과 위험의 정도에 따라 필요 자본금의 크기가 역시 달라진다. 이러한 개념에서의 필요자본금의 계산이 미국과 일본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험기준자본금제도(Risk Based Capital Requirement)이다. 따라서, 한 회사의 필요자본금의 크기는 자산의 구성과 자산리스크관리에 따라 달라진다.

- 생명보험사들은 장기적인 투자자금의 성격상 자산의 장기적 투자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자유화 이전에는 자산운용시장이 정부의 규제하에 있었고 보수적인 운용에 의하여 자산운용위험이 상당히 낮았으나 최근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투자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 경영에 필요한 자본금의 크기는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감독당국은 투자위험을 고려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99년 5월 도입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위험기준자본금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각 회사들은 회계장부상의 자본금의 크기에 관계없이 이러한 지급여력기준에 의하여 정부의 제재를 받는다.

-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금이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자산의 크기 즉 자산/자본금 비율은 해당보험사의 자산리스크관리, 준비금적립의 충실도 등 경영의사결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경영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단순한 자산/자본금의 비율보다는 지급여력비율이나 위험기준자본금비율 등이 개별회사의 재무안정성 유지에 대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 [3] 종합

- 기업공개로 인한 주식의 시장에 의한 평가가격과 액면가의 차이는 공개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점에 따른 가치상승의 가능성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공개 그 자체만으로 주식의 가치변화가 변화한다고는 볼 수 없음
- 법적으로 기업의 소유주는 주주이며 기업공개는 원칙적으로 공개의 장단점을 고려한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자율적인 결정사항임
- 생명보험주식회사와 계약자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이며 생명보험계약이 배당부계약이라 하여 이러한 근본적인 채권자-채무자 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님
- 외국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배당부계약자에게 주식의 시세차익에 대한 참여가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없음
- 생명보험회사 설립초기의 자본금의 역할은 매우 큼: 사후에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는(advance premium nonassessable) 배당부계약을 판매하는 상호보험회사의 설립과 유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임: 계약자들 자체적으로 경영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잉여금(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
- 생명보험사들이 종래 정부의 보호육성책하에 보호를 받은 것은 사실인 한편 계약자들도 정부에 의하여 보호를 받았음
- 최근 제일생명이 독일의 Allianz Group에 매각된 한편 시세차익의 배분논쟁은 없었음
- 경제학은 이익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통 세가지 즉, 성공적인 기술혁신에 대한 보상, 투자위험에 대한 보상, 불완전한 경쟁의 산물을 말한다. 생보사의 기업공개시의 시세차익의 존재는 이들의 복합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생명보험사들의 현재의 기업가치가 불완전한 경쟁에 상당히 기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생명보험산업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의 존재가 생명보험사의 주주의 법적 지위를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4] 기업공개에 따른 계약자이익배분 문제의 본질

- 현재와 미래의 잉여금의 적정한 배분기준과 배분방법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립하는데 있음

- 공개시 현재와 미래의 잉여금의 주주와 배당부계약자간의 이익배분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은 계약자의 이익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본시장이 보험사 주식의 가치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주주배당능력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
- 공개후에 주주와 배당부계약자간의 분쟁의 여지를 없게 하는 것임: 시장공개 후에는 많은 수의 불특정 소주주가 존재하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

## VII. 배당부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

### 1. 배 경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조직형태를 가진 생명보험회사가 배당부계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재무적인 측면과 경쟁력제고의 측면들이 있는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보험회사들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니면서 배당부계약을 판매하는 것도 앞장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당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초기의 취약한 경제기반과 생명보험시장, 영세한 자본금, 보험경영경험의 부족 등의 환경하에서 재무안정성제고, 기업이미지, 자산성장, 이자율경쟁 등이 배당부계약 판매의 특히 주요한 요인들로 판단된다.
- 주식회사의 경우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을 투자하는 소유주인 주주들이 존재하며 이들에게 최종적인 영업결과가 귀속된다. 따라서 잉여금의 축적과 배분에 있어 소유권이 없는 배당부계약자들과 소유주인 주주사이에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주와 배당부계약자간의 이해갈등관계는 무배당계약의 존재로 더욱 복잡하여진다.
- 생명보험산업 전체적으로 무배당상품의 판매가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 기업공개 대상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도 상당히 많은 무배당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삼 성		교 보	
	계약건수	점유율	계약건수	점유율
유배당	9,364,440	67.3%	3,247,384	46.4%
무배당	4,541,332	32.7%	3,751,003	53.6%
계	13,905,772	100%	6,998,837	100%

## 2. 주식회사의 배당부계약자 이익보호를 위한 이익배분에 관한 현행 감독 정책<sup>5)</sup>

### [1] 계약자배당제도(감독규정 제79조)

- 계약자에 지급하는 배당은 이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 위험율차배당으로 함
- 계약자배당의 종류별 배당대상계약 및 배당금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음
- 위험율차배당율('95.4)과 이차배당율('97.4)은 이미 자유화 되었음

### [2]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성격과 배분

#### 〈1〉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성격

- 계약자배당전잉여금=회계연도중 신규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을 제외한 책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의 잔여액
- 보험영업상의 손익과 함께 다음의 자산운용상의 손익이 영업수익(비용)으로 계약자배당전잉여금에 포함됨

- ┌ 투자수입: 수입이자, 금전신탁이익, 수입배당금, 수입임대료등의 투자수입
- ├ 자본이익(손실): 유가증권처분손익과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자본이익(손실)
- └ 미실현이익(손실): 유가증권평가손익\*과 유형자산평가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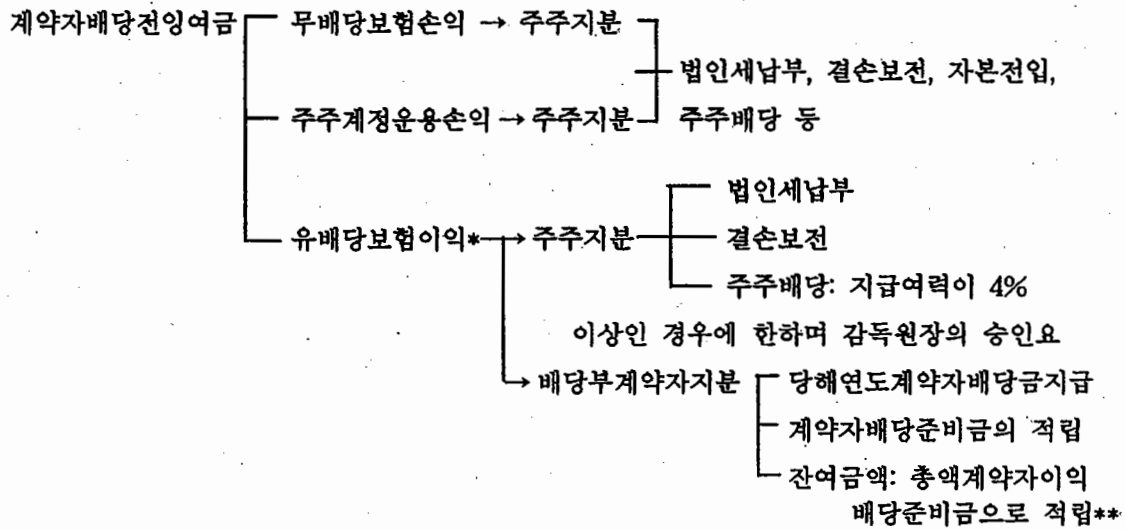
#### - 현행 보험회계규정상

- \*시장성이 있는 상품유가증권(즉 투자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되며 시가의 상승(하락)으로 인한 미실현이익(손실)은 유가증권평가이익(손실)으로 당기손익에 반영
- \*\*투자부동산은 저가법을 사용하여 가치하락분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게 하여 가치하락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

#### 〈2〉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배분과 사용

- 보험감독규정 제78조 1항은 계약전배당잉여금의 배분과 사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5) 최근 개정일은 1999년 3월 26일



주) \* 유배당보험이익의 배분기준(감독규정 제78조 1항)

직전회계연도말 지급여력비율	계약자지분	주주지분
8% 이상	85% 이상	15% 이하
4% 이상 8% 미만	87.5% 이상	12.5% 이하
4% 미만	90% 이상	10% 이하

\*\* - 이월결손금이 있는 보험사업자는 주주지분을 사용하고도 이월결손금이 남는 경우에는 결손보전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당해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내에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3]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배분(감독규정 제76조)

-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의 영업손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직접 자본금과 계약자지분에 반영하여 조정
-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제78조 및 제80조의 계약자배당전잉여금에 대한 당해연도의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의 배분비율에 따라 회계연도말에 계약자지분조정계정과 자본조정계정으로 구분 계상한다.
- 다만,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중 계약자지분조정계정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당해회계연도말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 회계연도중에는 자본조정계정에서 우선 조정하고 매회계연도말에 이를 정산한다.

#### [4]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성격, 배분 및 사용

- 재평가적립금의 성격: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 재평가차익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재평가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으로서 미실현이익임
- 재평가적립금의 배분(보험감독규정 제81조): 직전회계연도말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으로 배분

직전회계연도말 지급여력비율	계약자지분	주주지분	사내유보
8% 이상	40%이상 90% 이하	15% 이하	잔여금액
4% 이상 8% 미만	40%이상 90% 이하	12.5% 이하	잔여금액
4% 미만	40%이상 90% 이하	10% 이하	잔여금액

- 재평가적립금의 사용

- 재평가적립금
  - ①계약자지분 (부채계정)
    - 1/3이상: ⑥계약자특별배당금(2년이상유지계약)
    - (a-a)×1/2이상: ③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 a-b-c: 공익사업출연기금
  - 주주지분: 평가일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전입 (자본계정)
  - 잔여액: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계약자배당재원 (자본계정)

\*: 감독원장의 승인을 필요로 함

\*\*: 감독원장의 허가를 필요로 함

### 3. 주주와 배당부계약자 간의 이익배분 문제 접근의 전제: 구분계리의 정밀성 제고

- 주식회사가 배당부계약을 판매하는 경우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해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시 주주와 배당부계약자간의 이익배분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자본시장이 보험사 주식의 가치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주주배당능력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
- 이익배분기준의 명확화는 특수한 회계처리 방식 즉 구분계리<sup>6)</sup>를 전제로 한다. 주식회

사가 무배당계약도 같이 판매하는 경우는 주주계정, 무배당계약계정, 배당부계약계정 등 3개의 분리된 계정(예: Canada의 경우) 또는 주주계정과 무배당계정을 병합하여 주주계정과 배당부계약계정 2개로 분리(예: 미국의 경우)할 필요가 있다.

### [1] 이익(손실)에 대한 구분회계처리

이익의 구분계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배당부계약 계정	무배당계약 계정	주주 계정	회사 전체
<b>수익항목</b>				
보험료수입	*	*		*
투자수익	\$	\$	\$	\$
총수익	#	#	#	#
<b>차감항목</b>				
보험금지급	*	*		*
준비금증액	*	*		*
비용	@	@	@	@
총차감액	#	#	#	#

- 이러한 구분계리에서 각 계정에 직접적으로 할당하지 못하는 두가지 항목은 바로 투자 이익(\$)(투자수익-투자비용)과 간접비용(@)이다.<sup>6)</sup>

- 배당부계약의 준비금이 원천이 되는 자산, 무배당계약의 준비금이 원천이 되는 자산, 자본이 원천이 되는 자산의 운용은 각자 분리되지 않고 같이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자산운용은 운용자산의 거대화를 통하여 포트폴리오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투자 비용을 절감시킨다. 그리고, 자산의 분리운용은 주주가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투자수익성과 투자위험의 측면에서 자본계정 및 무배당계정자산의 선택이 배당부계약계정자산에 우선될 위험이 있다.

- 그리고, 비용은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눌 수 있다. 판매수당 등 특정계정에 직접 할당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관리자들의 봉급, 상품개발비, 본사관리비 등의 간접비는 직접할당이 불가능하다.

- 이와 같은 투자이익(손실)과 간접비는 공식에 따라 각 계정에 배분되는 것이 필요하며, 투자이익배분공식과 간접비배분공식의 개발과 적정성 확보가 기업공개에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다.

6) 분리계정(separate account)은 일반적으로 운용자산이 분리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분리계정은 변액보험, 개인연금 등에 활용되며 분리 운용된 자산의 투자성과가 그대로 해당 계정에 반영된다.

## [2] 자산, 부채, 자본의 분리제리

	배당부계약 계정 (자산의 할당은 없음)	무배당계약 계정	주주 계정	회사 전체
운용자산				**
부채와 자본				
부채:				
준비금	*	*		*
기타부채	*	*	*	*
자본:				
납입자본금			*	*
자본잉여금			*	*
이익잉여금	*	*	*	*
총부채자본합계	*	*	*	*

- 주식회사가 유배당계약과 무배당계약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의 구분제리가 필요하다.
- 현실적인 계약자배당정책은 안정적인 배당금 수준의 유지를 요구한다. 배당금액의 잦은 변경은 비용증가를 초래하며 계약자배당의 감소시 계약자의 불만이 따른다. 따라서 당해연도의 이익잉여금의 전부 배당되는 것이 아니며 배당의 안정화를 위하여 적정수준의 배당부계약계정 이익잉여금의 적립이 요구된다.
- 주주의 자본과 잉여금이 경영위험에 대한 최종적인 완충역할을 하지만 배당부계약은 스스로의 자립을 기본으로 하는 바 이러한 배당부계약이익잉여금의 축적은 배당부계정의 위험에 대한 완충역할을 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투자수익을 창출하여 추후에 계약자배당금의 증가나 배당부계약의 보험요율의 하락에 기여할 수 있다.
- 이러한 잉여금의 완전 구분제리가 있는 경우에만 자본과 경영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액의 배당부계약잉여금이 주주계정으로 이전될 수 있다.

## 4. 자산재평가적립금의 배분과 사용에 대한 의견

### [1] 자산재평가법의 의의

- 자산재평가제도는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기업의 자산을 시가로 재평가함으로써 장부가액을 현실화하고 감가상각을 통한 채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임.
- 최근 ('98.2) 정부는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와 개방에 대비한 경영권 보호,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등을 통한 경영안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제고하여 우리경제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을 개정하였음

## [2] 현행 자산재평가제도의 내용

	과거제도*	현행제도
유효시한	영구법	2000.12.31까지 한시법으로 운용
재평가대상 자산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 토지는 '83년말 이전 취득분만 - 비업무용은 제외	- (현행과 같음) - '97년말 이전 취득한 토지는 제한없이 허용 - 비업무용도 허용
과세	- 재평가세(3%)만 과세 - 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비과세	- (현행과 같음) - 신규로 재평가 대상에 추가되는 토지에 대해 추후 매각시 이익으로 인식하여 과세(과세이연) - 기존의 재평가 대상자산은 기존제도에 따라 재평가 - 토지 재평가세는 재평가 시점에 손비 인정
물가상승요건	- 생산자물가가 25% 상승해야 재평가 허용	- 폐지
재평가기준일	- 1과세년도에 1회 재평가 허용 법인: 사업연도 개시일	- 1과세년도에 4회 재평가 허용법인: 매분기 개시일

주) \*과거 삼성과 교보의 자산재평가지 적용

## [3]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재평가와 재평가차익 배분의 문제점

- 자산재평가제도는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기업의 자산을 시가로 재평가함으로써 장부가액을 현실화하고 감가상각을 통한 재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제도임.
- 은행등의 금융기관들과 일반기업들은 재평가적립금이나 동 적립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됨.
- 자산재평가가 가능한 대상은 투자부동산과 업무용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나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자산재평가의 실제 대상은 대부분 업무용부동산임: 투자부동산은 재평가가 가능하나 그 규모가 매우 적고, 회계규정상 저가법으로 평가함으로 시가하락시 가치하락손실충당금의 설정과 함께 평가손실이 계약자배당전잉여금에 반영됨으로서 자산재평가의 대상으로서 의미가 적음
-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경우 자산재평가는 배당부계약의 존재로 인하여 주주와 배당부계약자간의 자산재평가차익배분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현행 재평가차익 배분제도는 미실현이익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배분하고 계약자특별배당금, 공익사업출연금(X 자산운용수익률)으로 자금의 사외유출을 허용하고 있어 자산

재평가로 인하여 유동성의 악화와 투자재원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 업무용부동산은 보험사가 보험사업을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을 평가한 회계적 수치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금유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험사나 주주, 계약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의 취지에도 어긋남.
- 미실현이익의 상당부분을 평가당시에 2년이상 유지된 계약자에게 특별배당을 지급하는 것도 계약자간의 형평성을 크게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투자부동산과 업무용부동산 모두 매각시에는 이익(손실)이 실현되어 앞에서 살펴본 계약자배당전잉여금에 포함되어 배분기준에 따라 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분된다.
- 미실현이익인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간의 배분논쟁은 의미가 없음. 더욱이 부동산의 가치가 거의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논쟁은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업무용부동산의 재평가는 허용되지 않음.

#### 연도별 지가변동률 추이

연도별 Year	전국평균 Nationwide Average	상업 Commercial	연도별 Year	전국평균 Nationwide Average	상업 Commercial
1980	11.68	19.22	1990	20.58	20.45
1981	7.51	10.19	1991	12.78	12.22
1982	5.40	6.80	1992	-1.27	-1.38
1983	18.50	18.20	1993	-7.38	-7.18
1984	13.20	13.20	1994	-0.57	-0.47
1985	7.00	7.40	1995	0.55	0.37
1986	7.30	7.80	1996	0.95	0.80
1987	14.67	14.46	1997	0.31	-0.08
1988	27.47	25.00	1998	-13.60	-17.07
1989	31.97	29.89	1999 1/4	0.35	0.03

#### [4] 자산재평가에 대한 제안

- 자산재평가가 기업공개에 의무사항이 아닌 한편 자산재평가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접근법의 하나는 미실현이익인 자산재평가차익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배분할 것이 아니라 총액자산재평가준비금으로 적립(회사의 부채계정)하면서 사외유출을 막는 한편 지급여력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 이와같이 실제로 부채의 성격은 아니지만 부채계정에 나타나는 독특한 성격의 준비금항목으로 미국의 경우 AVR(Asset Valuation Reserve: 주식, 채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산과 담보대출의 가치변동위험을 흡수)과 IMR(Interest Maintenance Reserve: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채권의 실현손익을 흡수)이 있다. 이 AVR과 IMR는 미국의 지급여력제도인 RBC계산 시에 자본금으로 계산됨

- 추후에 평가한 자산의 매각시에(이익이 실현되었을 경우) 이 준비금의 일부(실현이익)를 주주와 계약자간에 배분하면 될 것이다.

- 배분기준은 유배당계약이익에 대한 주주부과금의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주주계정과 무배당계정을 고려)을 주주지분으로 하고 나머지는 계약자 지분으로 하면 될 것이다. e.g.; 15%: 85% 또는 20%: 80%

- 그러나 자산재평가의 대상이 업무용부동산인 관계로 이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평가차익이 언제 실현될 지는 미지수임: 다만 현재 부동산은 투자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동산의 조기매각을 예상할 수 있음.

- 총액자산재평가준비금의 적립으로 회사의 지급여력의 상승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본비용의 감소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기업이익이 상승할 수 있고 이는 자유화된 계약자배당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지급여력의 상승은 주주에게도 큰 도움이 되며, 기업공개시 이로 인한 주가의 상승이 있을 수 있고 주식의 매각을 통하여 이익실현이 가능하다. 한편, 배당부계약자는 이익실현이 장기적이고 직접적이지 못하므로 현금유출인 재평가세(3%)를 주주계정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자산재평가차익은 회계적인 처리로 인한 미실현이익이다. 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배분과 2년이상 유지계약자에 대하여 특별계약자배당금의 형태로 사외유출되는 것은 계약자간의 형평성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유동성감소와 투자재원의 감소로 인한 손실은 다시 계약자에게로 환원된다. 생명보험은 장기계약인 바 배당부계약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익배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에 보다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배당부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는 미실현이익에 대해서가 아닌 실현이익에 대한 이익배분의 충분성에 대한 논의에 의미가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 4.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배분과 사용에 대한 검토

- 완전한 구분계리가 이루어진다면 현행의 무배당보험손익계정(주주지분), 주주운용손익계정(주주지분), 유배당보험이익계정(이익의 일정비율을 주주지분으로 이전)의 구분계리

는 바람직한 방식으로 인정됨.

### [1] 이론적 근거

- 주식회사가 배당부계약을 판매했을 경우 배당부계약의 영업이익에 대한 주주의 권리에 대하여 잘 논의하고 있는 논문으로 Joseph M. Belth의 논문이 있다.<sup>7)</sup>

- Belth는 분리계리<sup>8)</sup>를 전제로 하여 배당부계약의 영업이익에 대한 주주의 참여를 논의하고 있으며, 배당부계약계정 잉여금의 주주계정으로의 이전을 주주부과금(stockholders' charge)으로 부르고 있다.

- 이러한 완전한 분리계리와 함께 주주부과금이 허용될 경우 주주부과금의 크기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으로 다섯가지의 학설을 논의하고 있다.

①주주무자격설: 주주는 배당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으로 이는 배당부계약의 판매는 무배당계약의 판매증가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가정에 기초를 둔다. Belth는 이설은 배당부계약을 판매하는 주식회사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보며, 더욱이 배당부계약영업이 완전자립이 되지 못하는 영업초기에 주주의 자본에 의한 보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학설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본다.

②경영관리비(management fee)설: 배당부계약영업은 주주가 제공하는 건물, 경영인, 영업점등을 활용한다. 따라서 분리계리하에서의 공평한 비용할당을 고려할 때 주주는 이러한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부계약계정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elth는 이 학설이 이익을 목적으로 배당부계약을 판매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무배당계약의 판매증대를 위한 판매전략으로 배당부계약을 판매하는 경우 이 학설이 적용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

③주주귀속설: 배당부계약의 영업이익은 계약자배당이 지급된 후 모두가 주주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이 학설의 가정은 배당부계약자에 대한 회사의 유일한 의무는 계약조항과 회사정관의 준수에 있다는 것이다. Belth는 배당부계약과 연관된 위험은 배당부계약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주주는 그 위험을 부차적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로 이 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④주주공유설: 주주는 배당부계약의 영업이익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이 설은 배당부계약자들과 주주들은 합작투자업체를 영위하여 그 위험을 상호공유하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가정의 당위성은 계약자에 대한 회사의 경영철학에 밀접히

7) Joseph M. Belth, 1965

8) 분리계리(separate account)로 명명하고 있으나 자산의 분리운용이 없는 사실상의 구분계리임

연관되어 있다. Belth는 명실상부한 이익공유가 이루어질 경우 적용가능성은 있으나 회사가 어느 한쪽의 이익제공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고 보며, 특히 주주귀속설과 마찬가지로 배당부계약의 영업위험은 계약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주주의 부담은 부차적이라는 면에서 이 설의 타당성에 부정적이다.

⑤이자(interest return)설: 주주는 배당부계약계정에 투입된 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이 설은 배당부계약영업은 그 위험을 계약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주주는 단지 부차적인 위험부담역할을 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설은 주주와 배당부계약자와의 관계를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로 가정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계약자를 배당부계약계정의 주주로서의 채무자로 보고 주식회사의 주주는 이에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로 본다는 것이다. Belth는 이 이자설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본다.

- 이상과 같은 Belth의 주주와 배당부계약자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설들은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배분에 있어 유용한 이론적 준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이러한 설들을 준거하는 데 있어 다음 몇가지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위의 가설들의 전개는 Belth가 언급한바와 같이 배당부계약영업의 완전구분계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완전한 분리계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산, 부채, 비용과 수익, 잉여금 등의 완전한 분리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둘째,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접근법은 재무관리의 일반이론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주와 계약자의 위험과 투자수익률 관계의 분석에 있다는 점이다. 즉, 주주와 계약자의 투자수익률은 각각 자기가 부담한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셋째, 주주와 배당부계약자간의 이익배분문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는 바 어떤 한 학설이 특정경우를 모두 설명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며, 만일 어떤 학설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주부과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 또는 제한하느냐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이다.

넷째, 이러한 가설의 적용은 배당가능잉여금뿐만 아니라 사내에 유보되는 잉여금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 [2] 현실적 준거

### 〈1〉 미국

- 미국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의 생명보험회사가 배당부보험을 파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임

- 미국의 많은 주들이 주주와 배당부계약자간의 이익배분에 대하여 언급이 없음:
- 이러한 현상은 배당부계약의 경우 계약자배당이 예시되고 시장경쟁에 의하여 배당 수준이 결정되는 관계로 주 보험감독청의 개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른 한편으로는 변액보험 등과 같은 분리계정 비중의 증대, 실제투자수익을 반영하는 Universal Life Insurance, Current Assumption Life Insurance 등 투자형 상품의 개발과 판매로 인하여 배당부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은 중요 논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뉴욕주: 1905년 주식회사에 의한 배당부계약에 대한 뉴욕주의 조사(Armstrong Investigation) 이래 주주부과금에 대한 논쟁이 거듭된 이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1939년에 현재의 기본내용이 만들어 졌고 1957년 약간의 수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음:

배당부계약의 잉여금에 대한 주주참여의 한도<sup>9)</sup>

배당부계약계정 이익의 10%  중 큰 금액  
연말보유계약액 \$1,000당 \$0.5

## 〈2〉 일본

- 보험업법 시행규칙: 주식회사의 배당부계약이익 배분에 대하여 명시된 규정이 없음

### [3]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배분과 사용에 대한 검토

-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은 자산운용이익을 포함한 모든 경영성과가 계상되고 있음. 따라서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배분기준과 방법은 계약자이익 보호의 핵심임.
- 주주지분과 배당부계약자 지분에 대한 완전한 구분계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 구분이 어려운 투자수익과 간접비의 구분을 위한 적절한 배분공식의 개발이 필요함
- 완전한 구분계리가 이루어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현행의 무배당보험손익계정(주주지분), 주주계정운용손익(주주지분), 유배당보험이익계정(일정비율을 주주지분으로 이전)의 분리는 바람직한 방식으로 인정됨.
- 그러나, 현행 보험회계상 시장성이 있는 상품유가증권이 시가로 평가되는 바 이에 따른 미실현이익을 주주, 무배당계약, 배당부계약 계정간에 배분하고, 다시 주주가 배당부계약 계정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참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미실현이익은 당기이익으

9) New York Insurance Law, Article 42, Section 4231, (g)(2)(B):

---no profits on participating policies and contracts in excess of the larger of ten percent of such profits, or fifty cents per year per thousand dollars of participating life insurance other than group term insurance in force at the end of the year, shall inure to the benefit of the stockholders:---

로 제상하지 말고 각 계정의 잉여금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험회계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Belth의 주주와 배당부계약자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설들은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배분에 있어 유용한 이론적 준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어떤 한가지 설이 우리나라의 현상에 맞다고 보기는 힘들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주주와 계약자가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을 공유하여야 성질의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이의 배분기준을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찾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주주부과금의 적정규모에 대한 현실적인 준거도 부족한 상황임. 그러나, 뉴욕주의 현재의 기준은 1900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장기간의 논쟁의 산물인 바 현실적 준거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지급여력의 조기확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현행의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10%-15%의 주주부과금의 한도수준은 주주나 계약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이 비율은 최대한도를 의미하는 바 계약자배당 경쟁에 따라 주주부과금의 실제수준은 낮아질 수 있음

- 그러나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기업공개 대상인 회사들인 바, 앞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여 자산재평가차익을 총액준비금으로의 전입시에는 지급여력이 높은 회사들의 주주부과금의 한도수준을 10%-15% 범위내에서 다소 하향조정하여 계약자의 지분이 증가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VIII. 맺는 말

생명보험은 조기사망, 질병, 노령화 등에 대한 장기적인 보장책이다. 계약자들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이익배분보다는 장기적인 계약자배당 수준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배당부계약자의 이익확보는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와 선결과제이다. 보험감독당국은 엄격한 구분계리 및 적정한 주주부과금의 시행과 함께 계약자배당예시제도의 도입, 가격비교지수의 개발 및 공시 등 계약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자유화 시대의 계약자이익보호의 원천은 생명보험시장의 유효경쟁의 존재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공개대상 대형사들의 높은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 각 보험사들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가격경쟁과 상품개발 및 서어비스 혁신, 판매경로혁신 등에서 유효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구조가 아

니라고 보여진다. 보험감독당국은 우선 재무적으로 취약한 보험사들이 빠른 시일내에 재무 안전성을 회복하도록 함과 동시에 보험사들이 최소경제규모를 달성하도록 유도하여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기업공개에 대상이 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은 수십년간의 경영노력의 결과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경쟁력을 가진 대형사로 성장되었다. 이들 회사들의 주식의 가치는 기술혁신에 대한 보상과 투자위험에 대한 보상의 요인이 있는 한편, 생명보험시장의 불완전한 경쟁에 힘 입은 바 크다. 성장과정에서 정부의 보호정책, 투자자금의 조성을 위한 외형경쟁, 불완전 모집과 이와 연관된 높은 해약률과 해약에 따른 손실, 소수 지배대주주의 경영참가를 통한 여러 가지 이익참여의 가능성 등으로 계약자들의 불만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불완전경쟁의 존재가 생명보험사의 주주의 법적 지위를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개회사의 오늘과 같은 성장과 발전은 수많은 계약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며 이에 대한 주주의 부담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경영성과에 대한 배분대상은 계약자가 되어야 하겠으나 기여도에 따른 계약자간의 공평한 배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공개에 따른 상장은 주식의 현금유동화를 용이하게 한다. 주식분산과 이에 따른 주식의 현금화는 대주주들이 성장의 성과를 사회전체에 환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부록 1〉 會社別・年度別 財務狀態와 營業成果 (’80년대)

年 度	會 社	資 産	運用資産	不動産	有價證券 賣却利益	保險契約 準 備 金	納入 資本金	資本 剩餘金	利 益 剩 餘 金		
									利 益 準備金	前期移越 純利益	当期 純利益
80	대 한	116,301	111,403	17,482	89	115,123	300	-	-	△1,830	△51
	제 일	81,795	77,324	12,468	53	78,243	500	18	-	△154	△154
	삼 성	350,844	340,699	31,968	3,133	331,720	1,000	-	-	△1	5,318
	흥 국	81,756	78,648	7,280	190	79,899	500	-	-	△3,293	△32
	교 보	30,216	297,976	39,587	324	297,603	500	-	-	△879	213
	동 아	47,865	41,751	2,030	393	48,287	1,000	-	-	△3,680	△584
	계	988,779	947,803	110,818	4,185	950,861	3,800	18	-	△8,962	4,709
81	대 한	182,450	174,526	26,935	59	175,115	300	-	-	△1,882	37
	제 일	134,310	128,649	17,102	329	128,864	500	-	-	△308	△36
	삼 성	485,922	479,380	53,015	2,304	472,004	1,000	-	500	4,816	2,086
	흥 국	122,306	117,922	11,222	1,252	118,855	500	-	-	△3,326	32
	교 보	406,299	451,219	64,209	1,195	434,699	2,000	1,165	15	197	327
	동 아	67,578	56,334	3,675	1,138	68,716	1,000	-	-	△4,265	△399
	계	1,468,868	1,408,033	176,161	6,280	1,398,256	5,300	1,165	515	△4,767	2,047
82	대 한	308,138	292,118	111,428	431	305,751	2,000	2,891	600	360	△9,234
	제 일	252,330	242,601	25,322	880	244,864	1,500	1,226	-	103	△3,089
	삼 성	844,729	818,284	96,741	2,363	819,165	1,000	-	500	7,632	△9,122
	흥 국	206,543	199,234	24,853	616	201,268	500	-	-	△60	△2,489
	교 보	768,580	742,427	75,151	1,861	742,920	2,000	69	800	844	△5,512
	동 아	107,915	101,643	7,888	246	127,141	1,000	1,165	-	△5,877	△18,566
	계	2,448,238	2,396,310	341,386	6,400	2,441,113	8,300	5,352	1,300	3,004	△48,015
											△8,872
											△2,986
											△989
											△2,550
											△3,867
											△24,444
											△43,710

生命保險會社의 企業公開와 利益配分

年 度	會 社	資 產	運 用 資 產	不 動 產	有價證券 賣却利益	保險契約 準 備 金	納入 資本金	資本 剩餘金	利 益 剩 餘 金			
									利益 準備金	前期移越	當期 純利益	利益剩餘金 小計
83	대 한	439,177	415,094	164,619	510	457,840	2,000	-	-	△8,124	△27,040	△35,165
	제 일	360,735	347,041	40,218	1,976	356,316	1,800	-	-	△2,470	△6,246	△8,717
	삼 성	1,273,186	1,236,125	164,371	2,091	1,236,870	3,000	10,260	-	294	△4,424	△4,129
	흥 국	293,003	283,357	33,896	650	291,970	500	69	-	△3,009	△4,687	△7,697
	교 보 아	1,147,804	1,111,969	90,447	5,105	1,114,606	2,000	1,165	-	△3,860	8,419	4,559
84	동 계	171,511	161,053	7,687	148	205,098	1,000	-	-	△24,533	△15,586	△40,119
	대 한	610,815	578,742	200,102	86	656,060	2,000	-	-	△35,139	△33,588	△66,728
	제 일	471,841	444,442	54,722	3,016	458,738	1,800	-	-	△8,824	△9,702	△16,727
	삼 성	1,908,796	1,843,487	218,583	1,918	1,854,629	3,000	6,131	-	4	5,428	14,563
	흥 국	420,987	406,431	39,262	505	409,120	500	-	-	△7,714	△5,356	△12,570
85	교 보 아	1,625,676	1,572,634	111,797	3,109	1,584,257	3,000	165	230	533	1,339	5,269
	동 계	275,948	257,066	7,529	66	311,274	1,000	-	-	△40,975	△15,392	△55,367
	대 한	768,650	711,738	226,152	765	857,251	2,000	-	-	△69,136	△51,230	△120,367
	제 일	504,884	486,148	63,855	3,848	516,294	1,800	-	-	△19,918	△8,805	△28,724
	삼 성	2,567,362	2,509,770	254,499	5,444	2,504,933	3,000	6,131	300	5,132	4,522	9,955
86	흥 국	486,021	475,526	42,646	2,072	479,233	500	-	-	△13,070	△1,631	△14,702
	교 보 아	2,214,424	2,151,663	132,986	5,223	2,088,842	3,000	165	1,000	855	1,622	3,477
	동 계	380,178	361,238	7,881	489	439,793	1,000	425	-	△56,416	△13,628	△70,045
	대 한	6,921,522	6,696,085	728,022	17,845	6,886,348	11,300	6,297	1,300	△152,555	△69,151	△220,406
	제 일	1,066,597	988,267	227,026	2,534	1,155,179	2,000	-	-	△117,831	△1,151	△116,983
86	삼 성	639,192	617,305	67,726	14,810	649,088	1,800	-	-	△28,478	△145	△28,824
	흥 국	3,403,564	3,334,286	295,352	27,450	3,334,432	3,000	6,131	300	9,645	3,461	22,538
	교 보 아	586,215	569,052	44,844	9,418	579,644	500	-	-	△14,702	57	△14,145
	동 계	2,918,235	2,811,567	149,195	18,347	2,863,163	3,000	165	1,500	1,559	4,764	10,989
	대 한	518,775	479,638	9,143	5,333	583,937	1,000	0	-	△70,110	△5,411	△74,521
86	동 계	9,132,581	8,800,117	793,287	77,894	9,165,445	11,300	6,297	1,800	△219,917	1,574	△198,946

年 度	會社	資 產	運用資産	不 動 産	有價證券 賣却利益	保險契約 準備金	納入 資本金	資本 剩餘金	利 益 剩 餘 金			
									利益 準備金	前期移越	當期 純利益	利益剩餘金 小計
87	대 한	1,585,109	1,496,440	223,241	89,520	1,611,664	2,000	-	-	△118,872	60,310	△56,561
	제 일	853,342	829,292	83,043	50,477	850,196	1,800	-	-	△28,627	11,443	△15,383
	삼 성	4,426,581	4,320,211	435,639	99,877	4,329,230	3,000	6,131	300	13,142	1,972	24,547
	흥 국	826,524	804,647	45,792	34,653	813,722	500	-	-	△14,645	10,877	△3,267
	교 보	3,804,352	3,663,944	157,771	65,033	3,669,958	3,000	165	1,500	7,275	20,163	32,104
	등 아	744,549	690,343	14,212	33,320	796,705	1,000	0	-	△75,366	7,776	△66,590
	계	12,240,459	11,804,880	959,700	372,881	12,071,478	11,300	6,297	1,800	△217,093	112,544	△85,151
88	대 한	2,237,167	2,137,084	256,040	105,348	2,214,502	2,000	-	-	△58,645	34,158	△24,487
	제 일	1,214,364	1,184,899	89,644	57,888	1,189,499	1,800	-	-	△17,216	13,352	△3,864
	삼 성	6,326,962	6,187,155	498,022	282,579	6,069,477	6,000	6,131	1,500	13,390	35,553	50,983
	흥 국	1,211,984	1,172,811	67,319	66,739	1,199,967	500	-	-	△3,767	4,719	952
	교 보	5,036,686	4,874,769	202,347	137,732	4,719,225	3,000	165	1,500	26,045	74,459	102,025
	등 아	877,255	816,540	48,169	34,885	914,492	1,000	0	-	△67,620	18,090	△49,530
	계	16,914,421	16,372,861	1,161,543	685,192	16,307,166	14,300	6,297	3,000	△107,254	180,334	76,086
89	대 한	2,890,096	2,754,740	296,890	48,031	-	8,000	-	-	△25,088	-	-
	제 일	1,548,364	1,523,734	95,462	24,565	-	1,800	-	-	△3,863	-	-
	삼 성	7,883,057	7,698,073	610,234	113,486	-	6,000	6,131	3,000	47,367	-	-
	흥 국	1,531,389	1,485,769	91,200	44,365	-	5,000	-	-	969	-	-
	교 보	6,008,335	5,808,886	262,385	38,249	-	3,000	165	1,500	100,161	-	-
	등 아	1,070,213	1,007,854	94,292	31,979	-	3,000	0	-	△49,530	-	-
	계	18,330,457	20,279,060	1,450,463	300,675	-	26,800	6,297	4,500	70,116	-	-

註: 1989년 통계는 1990. 2. 28 現在

資料: 生命保險協會, 生命保險統計年報

〈부록2〉 회사별, 연도별 재무상태와 영업성과 ('90년대)

연도	회사	자산	운용자산	부동산	유가증권 매각이익	보험계약 준비금	납입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잉여금			
									이익 준비금	전기이월	당기 순이익	이익잉여금 소계
89	대한	2,935,717	2,800,403	293,373	51,403	2,891,995	8,000	-	-	△25,147	5,536	△19,611
	제일	1,597,767	1,561,719	92,888	30,249	1,565,868	1,800	-	-	△3,859	3,859	-
	삼성	8,180,116	7,974,209	633,718	219,114	7,966,796	6,000	6,131	3,000	47,367	30,962	81,329
	홍국	1,575,058	1,525,464	90,209	48,133	1,547,874	500	-	-	983	208	1,192
	교보	6,396,909	6,173,953	482,643	82,338	5,975,504	3,000	221,485	1,500	100,061	20,003	121,564
	동아	1,087,384	1,023,573	101,117	33,713	1,116,953	3,000	-	-	△48,388	2,003	△46,385
90	계	21,772,951	21,059,320	1,693,948	464,951	21,064,989	22,300	227,617	4,500	71,017	62,572	138,089
	대한	3,825,703	3,647,676	400,411	928	3,772,527	8,000	-	-	△20,581	10,886	△9,695
	제일	2,138,645	2,086,556	99,322	6,153	2,096,093	1,800	-	-	3	166	169
	삼성	10,975,628	10,687,565	1,042,754	33,036	10,530,871	93,600	93,889	3,000	74,888	25,191	103,079
	홍국	2,229,358	2,155,003	172,084	8,448	2,191,584	500	-	-	553	18	571
	교보	7,749,681	7,458,346	540,754	4,576	7,320,134	68,600	68,003	1,500	117,702	12,912	132,114
91	동아	1,420,203	1,350,475	167,486	947	1,423,037	3,000	-	-	△47,930	1,082	△46,848
	계	28,339,216	27,385,622	2,422,412	54,089	27,343,245	175,500	161,892	4,500	124,634	50,256	179,390
	대한	4,946,727	4,601,233	582,060	3,927	4,865,903	10,000	-	-	△10,790	10,790	-
	제일	2,520,312	2,450,816	131,975	5,502	2,453,261	3,828	-	-	△714	2,353	1,638
	삼성	13,675,255	13,330,873	1,079,864	30,593	13,164,963	93,600	93,889	15,097	81,646	28,354	125,097
	홍국	2,698,160	2,609,112	208,083	6,642	2,655,662	2,000	-	-	△68	779	711
	교보	8,845,155	8,532,236	577,400	21,475	8,377,927	68,600	68,003	14,412	113,212	16,895	144,518
	동아	1,690,401	1,604,606	230,295	5,921	1,697,073	6,000	-	-	△49,783	2,082	△47,701
	계	34,376,010	33,128,876	2,809,677	74,061	33,214,789	184,028	161,892	29,509	133,502	61,253	224,264

연도	회사	자산	운동자산	부동산	유가증권 매각이익	보험계약 준비금	납입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잉여금			
									이익 준비금	전기이월 순이익	당기 순이익	이익잉여금 소계
92	대한	5,837,796	5,586,507	638,634	8,869	5,726,723	20,000	-	-	168	43	210
	제일	2,706,156	2,596,220	197,805	6,072	2,632,992	3,828	-	-	635	15	651
	삼성	15,744,227	15,341,001	1,222,294	47,379	15,163,396	93,600	93,889	29,545	79,792	60,393	169,730
	한국	2,932,411	2,847,613	244,407	5,837	2,885,630	2,000	-	-	72	2,252	2,324
	교보	9,851,498	9,488,928	588,841	44,864	9,345,755	68,600	68,003	19,412	115,378	34,160	168,949
	동아	1,763,641	1,668,378	289,741	3,575	1,773,577	10,000	-	-	△48,249	1,455	△46,794
93	계	38,853,728	37,528,647	3,181,723	116,597	37,528,075	198,028	161,892	48,957	147,796	98,317	295,070
	대한	6,725,941	6,431,447	701,056	8,869	6,579,376	30,000	-	210	△1,163	4,335	3,382
	제일	2,900,395	2,798,114	209,111	6,702	2,811,861	3,828	-	-	△1,007	2,220	1,213
	삼성	17,077,864	16,677,141	1,466,123	47,379	16,385,660	93,600	93,889	59,087	92,085	72,146	224,945
	한국	3,062,122	3,005,382	261,120	5,837	3,007,114	4,000	-	18	1,487	2,853	4,358
	교보	10,334,292	9,939,190	621,553	44,864	9,779,006	68,600	68,003	34,212	115,692	41,261	193,887
94	동아	1,869,574	1,767,934	323,489	3,575	1,853,634	12,000	-	-	△47,374	38	△47,336
	계	41,970,188	40,619,208	3,582,452	116,596	40,416,651	212,028	161,892	93,527	159,720	122,854	380,449
	대한	7,846,297	7,493,248	740,802	53,136	7,657,046	30,000	-	592	-3,408	6,601	3,784
	제일	3,186,487	3,604,921	222,732	48,858	3,084,194	3,828	-	-	-611	2,874	3,317
	삼성	19,507,704	18,983,153	1,790,601	228,249	18,767,417	93,600	93,889	64,236	120,754	51,590	253,784
	한국	3,160,524	3,097,112	268,107	56,733	3,085,869	8,000	-	58	2,830	4,075	7,394
95	교보	11,514,372	11,078,072	653,848	115,761	10,878,736	68,600	68,003	34,300	136,974	47,298	253,381
	동아	1,923,093	1,819,923	365,653	18,704	1,889,972	22,000	-	-	-47,911	93	47,818
	계	47,138,477	45,536,430	4,041,742	521,441	45,381,234	226,028	161,892	99,186	208,628	112,531	455,842
	대한	9,674,511	9,141,985	778,641	26,342	9,460,210	30,000	-	813	1,893	5,334	8,040
	제일	3,479,909	3,352,491	241,547	42,298	3,362,532	3,828	-	-	480	3,075	4,833
	삼성	23,757,785	23,053,447	2,245,766	231,792	22,972,513	93,600	93,889	63,143	154,705	25,287	269,037
	한국	3,244,707	3,143,694	274,851	30,352	3,161,312	8,000	-	58	6,697	3,306	10,061
	교보	14,092,433	13,581,646	729,519	137,821	13,409,936	68,600	68,003	34,300	160,627	51,686	277,235
	동아	2,201,687	2,094,788	423,744	8,341	2,479,663	30,000	-	-	△262,696	△120,047	△382,742
	계	56,451,033	54,368,052	4,694,067	476,946	54,846,166	234,028	161,892	98,314	61,704	△31,359	186,463

연도	회사	자산	운용자산	부동산	유가증권 매각이익	보험계약 준비금	당기 순이익	납입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잉여금 소계	자본 계
96	대한	12,033,571	11,360,467	922,223	27,333	11,723,501	32,937	30,000	-	39,799	69,799
	제일	3,732,457	3,591,477	266,819	20,515	3,609,176	2,169	3,828	-	4,976	8,804
	삼성	28,653,062	27,674,744	2,606,349	171,096	27,786,374	42,005	93,600	93,889	292,322	479,812
	흥국	3,492,096	3,357,242	307,093	30,879	3,392,947	1,018	8,000	-	9,640	17,640
	교보	17,247,206	16,620,253	843,514	49,816	16,491,319	30,292	68,600	68,003	292,143	428,746
	동아	2,432,767	2,316,994	465,959	9,727	2,622,977	△91,397	170,000	-	△474,688	△304,688
	계	67,591,158	64,921,177	5,411,958	309,367	65,626,295	17,025	374,028	161,892	164,191	700,111
97	대한	13,921,897	13,204,246	1,246,884	21,204	13,574,162	10,980	30,000	-	49,600	79,600
	제일	3,579,698	3,427,619	310,824	10,310	3,445,061	7,635	3,828	-	10,615	14,443
	삼성	33,164,995	31,965,177	3,310,558	119,122	32,012,614	62,622	93,600	93,889	345,584	533,074
	흥국	3,283,483	3,127,728	326,841	7,659	3,173,841	2,059	8,000	-	10,259	18,259
	교보	19,473,279	18,705,272	935,641	32,519	18,602,180	103,105	68,600	68,003	386,724	523,327
	동아	1,900,628	1,792,359	481,245	4,195	2,214,400	△85,749	170,000	-	△560,986	△390,986
	계	75,323,980	72,222,400	6,611,992	195,008	73,021,859	100,652	374,028	161,892	241,797	777,717
98	대한	13,075,928	10,821,472	1,797,675	28,788	15,621,002	-2,723,654	30,000	-	-2,685,735	-2,656,861
	제일	3,827,150	3,444,412	482,884	6,575	3,840,122	2,187	3,828	-	12,802	-28,066
	삼성	36,376,373	34,265,808	3,647,325	316,985	35,022,726	95,619	93,600	93,889	413,112	589,413
	흥국	3,403,847	3,048,863	366,899	15,361	3,309,345	2,624	8,000	-	17,396	22,811
	교보	20,676,794	18,483,103	1,011,648	101,311	19,780,377	51,191	686,000	68,003	401,997	529,953
	동아	1,403,253	1,245,595	498,898	4,596	2,209,006	-374,661	170,000	-	-939,195	-817,913
	계	78,763,345	71,309,253	7,715,329	473,616	79,682,578	-2,946,694	374,028	161,892	-2,779,623	-2,360,663

### 〈부록 3〉 위험보험금, 보험위험계수 산출방식 및 소정비율

#### ☐ 위험보험금(제25조 제2항 제2호)

<div style="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padding: 2px; font-weight: bold;">위험보험금</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보험가입금액(①) - 책임준비금           </div>	+	<div style="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padding: 2px; font-weight: bold;">출입보험금 산출액</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일반사망보험금액(②) (책임준비금 미포함)           </div>
---	---	---

#### ☐ 보험위험계수(제25조 제2항 제2호)

$$\frac{\text{위험보험금} - \text{보험가입금액(①)}}{\text{보험가입금액(①)}} \times 100 = \text{보험위험계수}$$

$$\frac{\text{보험금지급액} - \text{책임준비금}}{\text{보험금지급액}} \times 100 = \text{보험금지급률}$$

- 주) 1. 위험은 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장애, 질병/입원으로 구분하며, 보험금지급율과 보험금점유율 및 자기부담율은 위험별로 산출하여 적용
2. 위험보험료: 직전 1년간 수입된 위험보험료(재보험 출재전)
3. 지급보험금: 직전 1년간 발생된 위험에 대한 지급보험금(수입재보험금 수령전, 소멸계약의 책임준비금 미차감)
4. 보험금지급율: 지급보험금/ 위험보험료
5. 보험금점유율은 지급보험금중 각 위험이 차지하는 지급보험금의 점유비율
6. 자기부담율: (지급보험금 - 수입재보험금)/ 지급보험금

#### ☐ 소정비율(제25조 제2항 제2호)

구 분	소정비율	구 분	소정비율
1999. 9월말	6.25%	2002. 3월말	50.00%
2000. 3월말	12.50%	2002. 9월말	62.50%
2000. 9월말	18.75%	2003. 3월말	75.00%
2001. 3월말	25.00%	2003. 9월말	87.50%
2001. 9월말	37.50%	2004. 3월말 이후	100.00%

주) 종업원퇴직직립보험, 퇴직보험 및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실적배당 상품은 제25조 제2항의지급여력기준 산출대상으로 제외함

## 〈부록 4〉 보험경영 통일공시기준 주요내용

### ① 공시항목 체계의 정형화

- 종전 공시항목은 영업실적과 경영효율 등 주로 단순 경영지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선안은 보다 구체적으로 항목을 세분화하는 등 은행의 공시기준에 부합토록 함.

종 전	⇒	개선안
○회사개황		○일반현황
○영업실적		○경영실적
○경영효율		○재무상황
○기타(민원 등)		○경영지표
		○리스크관리
		○기타경영현황
		○제무제표
		○기타(이용자편람등)

### ② 공시내용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관련항목 신설 또는 보완

- 재무상황
  - 부실 및 무수익대출현황
  - 유가증권 투자현황 및 평가손익
  - 파생금융상품 거래정보
- 경영지표
  - 지급여력비율 등 자본적정성 지표
  - 유동성자산비율 등 유동성 지표
  - 대손충당금 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
- 리스크관리
  -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관리방법 및 내용
- 기타경영상황
  - 자회사 경영실적
  -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

### ③ 경영공시의 유용성 제고



- 정기공시 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
  - 회계년도말 결산실적 공시는 물론 상반기 가결산결과도 의무적으로 공시
- 공시방법의 다양화
  - 공시자료 비치장소를 종전 본·지점에서 영업소까지 확대
  - PC통신,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한 공시 추진
- 공시자료 이용의 편의성 제고
  - 일반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 해설 등 이용자편람(user's guide) 발간

#### ④ 경영공시의 신뢰성 확보

-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및 조치수단 마련
  - 공시자료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경영진의 서명 첨부를 통한 책임소재 명확화
  - 불성실·허위공시에 대한 정정공시 및 재공시 요구등 제재조치 마련

## 토 론 요 지

### 강 창 경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장)

#### 1. 기업공개에의 의의에 대하여

- 기업공개는 기업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황을 공개하고 그 공개내용을 기초로 사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임.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그 사회적 역할이 크고 그 기업과 거래하는 제3자는 물론 노동자, 지역주민,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므로 사회의 주위와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임.
- 기업공개가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통하여 공익기업으로서의 체제로 갖추는 것은 아님(자료 24면 참조).

#### 2. 기업공개는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 기업 특히 대규모 사업하는 기업은 설비투자, 상품개발비용 등 장기투자 비용을 소수 주주만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기업의 주식 공개 모집은 자금조달을 쉽게 하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생보사의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워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함. 오히려 생보사의 자금을 기업에 조달하여 주지 않았는가 묻고 싶음.
- 그리고 회사의 자본은 담보가치로 기능하나, 이는 자본3원칙이 따른 회사의 경우에 한정되는 이야기임. 실제 담보력은 자산에 달려 있음.
- 파산방지를 위한 장치로 자본금 증가가 필요한 것은 아님. 오히려 경영의 효율화, 과도한 모집비용 문제해결, 적정투자 등을 통하여 경영위험을 줄여 나아가야 하는 것임. 자본금이 아무리 크더라도 파산할 회사는 파산하게 되어 있음.

#### 3. 기업공개와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

- 기업공개는 경영성과의 분산분배를 가능케 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의견이 있음.
- 기업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설립·경영하고 창출한 이윤은 주주나 기업소유자의 몫으로 분배되어 돌아가게 됨. 이러한 점에서 생보사도 예외는 아님.
- 그러나 기업을 공개하여 경영성과를 분산분배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책임의 수행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는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여 투자자로서 과실을 취하는 것일 뿐 이러한 것을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지 않음.

#### 4. 생보사의 영리회사화에 대하여

- 그리고 생보사는 종전에 비영리 보험단체 보호라는 강력한 이념하에 보호받아 왔고 이러한 이념에 기초하여 국가와 계약자로부터 지원과 도움을 받아 왔음. 이러한 생각이 바뀌어 오늘에 와서 갑자기 생보사의 영리회사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주식 공개의 문제로 들고 나오고 있음. 이러한 큰 변화가 있으려면 그 환경조성이 필요함.
- 수십년간 비영리회사로 인식되던 보험단체가 영리추구를 최우선으로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걱정하여야 함.

#### 5. 기업공개를 통한 주식분산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 합리적 경영을 가능케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 우리의 기업풍토로 보아 주식공개가 바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 그 장점이 바로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은 무리임.
- 또한 전문경영인 체제가 모두 옳다는 생각에도 찬성할 수 없음.
- 소유자지배의 실현과 주주의 자기책임원칙이 강조될 때 기업은 제대로 성장할 것임.

#### 6. 맺는말

- 생보사의 공개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음. 특히 공개하여 주식의 거래가 자유롭게 될 경우에는 기존 주주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게 됨. 이른바 주식상장의 이익이 기존 주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것임.
- 우리의 생보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지원과 국민 모두의 참여하에 발전되어 왔고, 상장 대상이 되는 생보사는 이러한 정부와 계약자인 국민의 도움과 희생아래 성장한 것임.
- 그 동안 보험사는 정부의 감독하에서 적정수익을 낼 수 있도록 보험료와 보험금, 약관 등 거래조건에서 과도한 보호를 받아온 것도 사실임. 또한 보험계약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비용, 불공정 모집은 이미 관행화된지 오래되었음. 수십만명의 보험모집인을 동원한 보험계약 목표달성 경쟁은 우려할 만한 사항임. 연고모집 등 과도한 모집경쟁은 비자발적이고 부실한 계약을 낳아 이는 우리 소비자의 큰 불만이 되었음.
- 요컨대 생보사의 보험경영은 다수 계약자의 도움과 희생 그리고 정부의 지원아래 이루어졌으므로 그 과실의 분배문제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연후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공개의 실익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김 두 철(상명대 교수)

- 무엇보다도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및 이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는 어떻게 하면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명보험산업과 생명보험기업의 발전을 이  
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모든 생보사의 경우가 고  
려되어야 하며, 또한 공개를 추진하는 특정 기업이나 대주주의 주변 상황에 연계시키  
는 것은 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

- 현 시점에서 위의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업공개에 따른 상장은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투명한 경영과 스타오피션제등을 통한 보다 철저한 책  
임경영을 담보할 수 있고, 종합금융화가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금융환경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회사가 상장여건을  
충족시키고 이를 추진하는데는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다.

회사의 형태는 설립목적, 계약자 지위, 경영책임, 이익귀속 및 소유구조 등이 어떻게 되  
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어떠한 종류의 상품을 팔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품도 명칭(배당 혹은 무배당)에 따라 성격이 획일화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경우,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불확정보험료 보험이나 금리감응형 상품 등의 무  
배당상품은 배당상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초래되었던 이유는 시대  
적인 환경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생보사들은 처음부터 경영성과에 따라 계약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상  
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 다만 생명보험회사는 주식회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60년대  
초반 시중금리의 상승으로 생보상품의 경쟁력이 기타 금융상품에 비해 떨어지게 됨에  
따라 보완적인 수단으로 계약자배당이란 편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같은  
맥락에서 여러 종류의 계약자배당금이 지급되고 또한 배당상품이란 용어도 사용되었  
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상품들은 정부에서 정해진 지침에 따라 보험요율을 산정하  
고 계약자배당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경영에 대한 위험을  
보장해 주는 무배당상품의 성격에 가깝게 운용되었다. 따라서 상호회사적 주식회사 혹  
은 외형상 주식회사란 존재할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주식회사다.

- 회사의 형태는 이익의 배분 문제와 연관된다.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이

익에는 자산재평가차익, 경상이익 및 주식의 상장후 예상되는 자본이익이 있다. 이익의 배분문제에 있어서는 주식회사가 상장하는 것이지 상호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개과정에서 자산재평가차익과 경상이익을 자본이익과 같은 맥락에서 분배를 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정해진 원칙과 일반적인 경제논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경상이익과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배분기준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자본이익에 관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분배에 관한 근거와 당위성이 없다. 자본이익은 공개 시세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주주에게 새로운 가치나 부의 증대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주주가 주식시장에서 그 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는 미현실이익을 계약자들에게 배분하게 된다면 이것은 기업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어 재정적으로 부실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자산에 비하여 자본의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주주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보험회사자산의 대부분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자본은 기업 설립 초기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이익은 현행 법적인 측면에서나 혹은 보험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전적으로 주주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 그러나 현시점에서 기업공개의 취지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첫째는 충분한 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보수적인 보험료 산출의 관행에 따른 보험료 초과 징수분이나 잘못된 보험관행으로 인해 계약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가 있나 하는 것이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검토하는 것이다. 만약 초과 징수분이나 오류가 있다고 공정성을 확신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판단될 때에는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계약자들에게 현금으로 혹은 주식으로 골고루 분배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실용성이지 못하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계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모든 생보기업이 공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기본 틀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여기에는 보험료, 배당금 혹은 적립금 등의 적절성을 전문가에 의하여 점검되도록 만드는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생보사들이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보험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효율자율화를 포함한 완전한 경영자율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 문제해결을 위하여 일단의 논리에 집착하거나 외국의 선례를 적용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 사태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험논리의 단편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잘못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전혀 상황이 다른 외국의 사례를 근간으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공개후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확정적인 것처럼 논리를 전개하거나 충분한 검증이나 논리의 뒷받침이 없이 직감에 의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여론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생명보험산업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논리와 작은 이익에 집착하기 보다는 이해와 미래를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김 상 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재법개혁 감시단장)

1. 먼저, 김성재 교수께서 논문에서 제시한 방대한 이론과 자료들이 본 토론자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 둡.

2. 본 토론의 기본 방향

- 생보사의 공개여부 및 이익분배 문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 대한 통합적 고려를 요구함. 첫째, 주식회사 일반의 원칙, 둘째, 생보업의 산업적 특수성, 셋째, 대부분의 생보사가 재벌의 계열금융기관인 한국적 현실 등이 그것임.
- 그런데 현재의 논쟁 구도는 주로 첫째 및 둘째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음. 김 교수의 논문 역시 기본적으로는 그러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현 시점에서 기업공개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들을 어느 정도 갖춘 생보사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뿐이고, 이들이 바로 삼성그룹 및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핵심에 있다는 현실을 무시하고서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함.
- 따라서 본 토론은 첫째 및 둘째 측면과 관련하여 김 교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셋째 측면과 관련하여 본 토론자의 생각을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주식회사 일반의 원칙 對 생보업의 산업적 특수성

(1) 주주와 배당부계약자의 위험부담 정도?

-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기본적 역할 중의 하나는 사업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기본재산, 즉 자본을 제공하는 것임. 그러한 위험부담의 대가로 주주는 여타 이해관계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잔여수의 청구권(residual claim)을 가지는 것임.
- 그런데 생보사가 판매하는 배당부계약의 경우, 김 교수의 논문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그 일차적인 위험부담자는 보험계약자임. 이것이 바로 생보업의 산업적 특수성임.
- 따라서 과거 우리 나라 생보사의 성장과정에서 주주와 배당부계약자가 각각 어느 정도 위험을 부담하였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러나 아쉽게도 김 교수의 논문에서는 충분한 근거없이(특히 90년대 생보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음(p.18)) 또는 서로 상반되는 서술 끝에 '경영초기의 영업기반의 제공과 경영위험의 완충이라는 자본의 역할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음(p.34).

〈표〉 6대 기존 생보사의 재무상태

(단위: 억원, %)

	자 산			납 입 자 본			B/A(%)			자본계	
	(A)			(B)						(C)	C/A(%)
	80	89	98	80	89	98	80	89	98	98	98
대한	1,163(11.8)	29,357(13.5)	130,759(16.6)	3	80	300	0.26	0.27	0.23	-26,569	-
제일	818 (9.3)	15,978 (7.3)	38,272 (4.9)	5	18	38	0.61	0.11	0.10	-281	-
삼성	3,508(35.5)	81,801(37.6)	363,764(46.2)	10	60	936	0.29	0.07	0.26	5,894	1.62
흥국	818 (8.3)	15,751 (7.2)	34,038 (4.3)	5	5	80	0.61	0.03	0.24	228	0.67
교보	3,102(31.4)	63,969(29.4)	206,768(26.3)	5	30	686	0.97	0.05	0.33	5,300	2.56
동아	479 (4.8)	10,874 (5.0)	14,033 (1.8)	10	30	1,700	2.09	0.26	12.11	-8,179	-
합계	9,888(100)	217,730(100)	787,633(100)	38	223	3,740	0.38	0.10	0.47	-23,607	-

주: ( )는 각 생보사의 자산 점유 비중임.

자료: 김성재 교수의 본 논문, 부록1 및 부록2

- 그러나,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자산 대비 0.50%에도 못미치는 납입자본금의 비중은 기존 주주의 위험부담 정도가 결코 크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임.
- 또한, 생보사들이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배당부계약 판매에 주력했던 것은, 자본이 배당부계약의 초기 비용과 위험을 흡수했다기보다는, 결국 배당부계약이 과소자본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p.8 주식회사의 배당부계약 판매이유 중재무 안정성 제고).

## (2) 과거 잉여금 분배비율의 적정성 여부?

- 주주와 배당부계약자 간의 위험부담 정도에 대한 평가 부재는 곧 과거에 이루어진 계약자배당전잉여금 및 자산재평가적립금 분배비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봉쇄하는 효과를 가짐. 그리고 이것은 '상장에 따른 차익이 법적으로나 경영학적으로 당연히 주주의 몫이라는 결론(pp.32-35)'에 도달하도록 함.
- 그리고 모든 논의의 방향이, 과거를 묻지 않는 대신, 미래의 재설계(엄격한 구분계리(pp.39-41), 자산재평가적립금 배분과 사용(pp.41-45),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배분과 사용(pp.45-49))으로만 집중됨.
-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 재설계될 미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잉여금 분배비율이 과연 적정했는가 라는 문제는 당연히 제기되고 또 평가되어야 할 것임.



### (3) Why 구분계리? Why not 분리계정(separate account)?

- 주식회사형 생보사가 배당부계약을 판매하는 한 주주와 배당부계약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는 피할 수 없음.
- 김 교수께서는 잉여금 분배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구분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산운용 자체를 분리하는 분리계정은 반대하고 있음(p.40), 그러나 그 근거가 불충분.
- 배당부계약과 무배당계약의 본질적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한 주주와 배당부계약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감안할 때, 은행의 은행계정-신탁계정, 투신사의 고유계정-신탁계정 처럼, 자산운용까지 완전 분리된 계정처리와 함께 엄격한 차단막(fire wall) 설치가 요구됨.

### (4) 생보사의 주식회사화(demutualization) 및 기업공개의 필요성?

- 금융자유화: 국제화의 경제환경 속에서 상호회사에 비해 주식회사가 재무적·조직적 신축성(financial and organizational flexibility)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며, 기업공개는 그러한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편익은 아무런 대가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께서는 그 비용을 너무 낮게 평가(pp.29-30)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 특히 '기업공개'의 필수적인 선결조건으로서 주주와 배당부계약자 간의 이해관계 정립'을 언급(p.30)하였지만, 이것이 구분계리의 정착, 계약자배당전잉여금 및 자산재평가적립금의 배분과 사용 제도의 재설계 등만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음. 즉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이라는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과제의 이행이 필요함.

## 4. 재벌개혁: 생보사 기업공개와 전제조건

- 국내 생보사 대부분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을 만큼 생보사 자체의 수익성은 그다지 높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벌들이 생보업 신규진입을 요구했고, 이것이 80년대 말 이후 생보사 난립에 의한 과당경쟁의 주요 요인임. 또한 5대 재벌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신규진입이 금지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관계사 형태로 이미 진입해 있는 상황임.
- 결국 국내 생보사 주주의 주된 관심은, 생보사 자체의 운영수익에 따른 주주배당이 아니라, 계열금융기관으로서의 생보사 지배에 따른 유무형이 이익이었음. 따라서 생보사 기업공개는 생보업 내부만의 문제가 아님.
- 재벌개혁은 생보사 상장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임. 즉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

하면서 재벌의 사금고로 기능하였던 사례, 편법상속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사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특히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개혁 및 집단 소송제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 함.

## 김 성 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 契約者配當의 법적 성격.

#### (1) 보험기술적 배경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회사의 형태를 막론하고 매년 결산기의 이익(잉여)을 계상하는데, 이 이익의 원천은 보험료율계산의 기초가 된 제반 豫定率과 실제율과의 차이이다.

근대 생명보험은 이른바 「수지상등원칙」과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을 기조로 비로소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박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보험료율은 사망률·경비율·이율에 관한 장래의 예측에 입각하여 총수입보험료에 의해 지급보험금 총액과 운영경비가 지급된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료율에 의해 다수 가입자를 집적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비로서 經營安定을 도모함과 아울러 가입자는 확정적 보험료를 납입하여 장래의 保險保護에 관해 안심할 수 있게 된다.

보험은 이러한 틀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료율은 「保守的으로」 계산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장기계약인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가입의 편의를 위하여, 장기간의 납입보험료를 일정하게 하는 이른바 「平準보험료 방식」을 채택하므로 더한층 요율산정기초를 保守的으로 설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생명보험사업에 있어서 이익의 원천이 이러하므로, 설사 회사 주식회사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도 이익의 전부를 株主에게만 배분하는 것은 衡平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생명보험 사업발전의 오랜 역사에서 사업잉여금의 加入者에 대한 분배가 점차 정착된 것은 바로 保險의 技術的 基礎를 고려한 衡平관념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서 계약자배당은 概算還給으로 이해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2) 법적 성질

##### 1) 期待權

株式會社型 생명보험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즉 사업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따라서 회사와 계약자의 관계는 개인법적·채권법적 거래관계이고, 구체적 내용은 保險約款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익의 배당도 약관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에게 권리가 인정될 뿐이다. 더욱이 그 배당액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익이 생긴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종의 債權의 期待權에 불과하다.

참고로 相互會社の 경우에는 계약자는 보험단체에의 가입으로 동시에 사원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사업의 결과 회사에 잉여금이 생기면, 당연히 그 사원자격에서 그 분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주식회사의 주주에 대한 利益配當과 그 법적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있다.

## 2) 商品政策의 문제

주의할 것은 회사의 형태와 유배당·무배당 상품의 선택과는 논리필연적 관련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주식회사형 생명보험이라고 해서 반드시 무배당상품만 판매하여야 한다면, 심지어 배당형 상품을 주식회사가 판매한다고 그 조직구조가 相互會社와 마찬가지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

상품의 선택에 있어서, 각 보험사업자는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배당부 상품을 어느 비중으로 판매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보험사업자의 經營 내지 販賣戰略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배당부상품 편중 또는 배당률의 적정 여부에 대한 주무당국의 운용, 감독의 타당성을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이는 별개문제이다.

## 2. 營利保險과 相互保險

이는 사보험을 경영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보험업법 제5조 2항은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및 외국보험사업자)만이 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자의 차이에 관한 이해는 오늘 토론회 논의에 있어서 핵심적 전제가 되는 부분이다. 항간에는 이점에 관한 이해부족으로 輿論을 誤導할 우려가 있어, 분명히 짚어 둘 필요를 느낀다.

### (1) 營利保險

영리보험은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단체의 운영주체는 商人이며(상법 제46조 제17호), 주식회사나 외국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보험이다. 영리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단체의 운영주체와 가입자간의 개별적 채권계약에 의해 위험단체가 구성된다. 따라서 가입자 상호간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교섭이 없다. 또한 보험료는 사전정수하며, 보험단체의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사업자는 생, 손보 예외없이 모두 이 형태를 취한다.

### (2) 相互保險

#### 1) 상호보험의 성격

상호보험(mutual insurance)은 동종의 위험에 놓인 다수가 상부상조정신에 입각, 스스로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이 되며, 운영주체가 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보험의 초기 형태로서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구성원자격도 당연히 상실한다. 상호보험은 “사원의, 사원에 의한, 사원을 위한” 회사자치제도의 형태로서, 이론상으로는 이상적인 조직이지만, 그 규모가 큰 만큼 실제에 있어서는 사원인 보험계약자의 경영참여의식이나 가능성이 희박하여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 보험업법은 相互會社도 보험사업의 주체로 허용하고 있다(업법 제5조 2항). 상호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중간형태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상호회사는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가 목적이 아니므로, 상법상의 회사는 아니다. 그러나 그 설립에서 소멸까지 상법 회사편 등 다수의 규정이 준용된다(업법 제51조).

## 2) 주식회사와의 비교

양 조직은 다음 2가지 점에서 주목할만한 차이가 있다.

### 1 - 단체운영상의 의사결정방식

주식회사는 1주 1의결권 방식(자본다수결: 상법 제369조)이지만, 상호회사에 있어서는 1사원 1의결권 주의(두수주의: 업법 제62조)에 의한다. 이는 상호회사가 資本團體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 2 - 경영상의 위험부담 여부

주식회사와는 경영상의 危險을 사원인 계약자가 부담하느냐 하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상호회사 사원은 보험업법상 間接(제53조)·有限(제54조) 책임을 질 뿐이다. 즉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회사채무에 관한 사원의 책임은 보험료를 한도로 하지만, 회사의 자산상태 악화로 파산, 해산의 우려시 保險金額의 削減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제56조). 이는 정관의 「絶對的 記載事項」으로서, 통상 정관에 사원총회의 결의로 삭감액을 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사원인 계약자가 경영위험을 부담함과 동시에, 잉여금이 발생하면 원칙상 각연도말에 사원에게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제70조).

요컨대 계약자가 경영위험과는 전혀 무관한 주식회사에 비하여, 相互會社는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다.

## (3)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생보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세차익의 주주귀속을 비판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 물음에 「생명보험회사의 주인은 株主」라고 답하는 것이 정답이다. 만약 계약자를 주인이라고 한다면, 銀行의 주인도 예금자인가? 은행이 예금자의 돈으로 고수익을 올

리고, 주가도 상승했다고, 약정이자 이외에 시세차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과 같은 논리이다. 더 비슷한 예로, 외상으로 물건을 들여놓고 파는 가게에서, 주인이 외상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외상으로 물건을 대 준 사람이 주인은 아니다.

배분론은 사회적 관점을 감안한 표현으로서,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결코 正答이라고는 할 수 없다.

### 3. 株式上場으로 인한 時勢差益의 귀속 문제

시간관계상 이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의견을 밝히기로 한다. 따라서 자산재평가차익의 배분, 상장의 필요성 문제 등 다른 논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는 예외없이 株式會社이다.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는 한, 법적으로 株主의 지위와 契約者의 지위는 전혀 별개이다. 이 점에서 계약자가 당연히 보험단체의 구성원의 지위를 겸하며, 이에 따라 직·간접으로 보험사업에의 경영참여권이 인정되는 이른바 상호회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생보사가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호회사로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이 문제를 상호회사의 논리로 접근하는 태도는 타당하지 않으며, 근거도 없다.

#### (1) 주식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

##### 1) 危險負擔者로서의 株主

한편, 법적으로 株式은 자본의 구성단위로서,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위 내지 권리의 총체이다. 그 경제적 평가액이라 할 수 있는 주식가치의 등락은 당해 기업에 대한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의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여기에는 주주의 일정기간의 보험사업 경영성과 즉 자산가치 및 과거·현재의 경영성과 미래의 수익에 대한 기대 기타 복합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

오늘 논의되는 생명보험회사 주식의 時勢差益의 크기가 관심을 끈다. 그 차익이 과다하다는 등의 지적이 그것인 바, 이는 국민정서의 문제이며, 이것이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며, 그것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계약자의 참가를 주장하는 데에는 법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 시세차익은 과거의 성과분의 누적일 뿐 그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에 있어서 投資結果는 오로지 당해 투자자에게만 귀속한다. 즉 투자수익도 투자자(주주)만이 누리는 대신, 그로 인한 위험(투자손실)도 전적으로 주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2가지 생보 회사형태에 관한 차이를 보면 무리없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다.

## 2) 관련문제와의 준별

다만 종래 우리나라 생명보험사의 자산운용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理事에 대한 責任을 추궁하거나, 公正去來法上的 制裁 등이 뒤 따름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별개 차원에서 논할 문제이지, 주식시세차익 귀속문제와 혼동해서는 아니된다.

## 3) 글로벌 이코노미

다시 강조하거니와, 주주는 주주이고 채권자는 채권자이다. 양자의 지위를 혼동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본다. 이를 엄격히 가리지 않는 태도는 자본주의, 증권시장의 기본원리에 반한다. 기업·경제규범체계가 강한 국제적 통일지향성을 갖는 오늘날, 명확한 이론적 근거없이 '한국식' 자본주의 내지 '우리 정서'를 내세우는 것은 다른 면에서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시세차익의 무리한 제3자배분 주장은 財産權保障原則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對外信認度を 실추시켜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 4. 맺음말

결론적으로, 時勢差益을 계약자에게도 배분하여야 한다는 어떠한 설득력 있는 논리나 선택도 찾을 수 없다. 그간 정책당국의 생명보험사 주식상장의 시기선택의 적절성 증시정책·보험감독정책·경쟁정책 등의 보완문제를 별론으로 하고, 상장으로 생기는 시세차익은 株主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하다.

## 김 종 국(전주대 교수)

### 1. 보험은 보장을 위해 가입

- 보험은 경제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이며 투자의 목적이 아님. 따라서 보험회사의 가장 큰 의무는 가입자들과 약속, 즉 보험금 지급책임을 다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장기 안정적 경영이 가장 중요함

### 2. 과거 생명보험정책과 실태

- 과거에는 정부의 보험산업 육성시책과 사회보장제도의 미흡으로 생보산업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으나,
  - 생보업체의 양적성장 위주의 경영과 정부의 과점체제 유지 및 획일적 감독정책으로 시장경쟁원리가 부재됨.

### 3. 생보사 기업공개 필요하다.

- 생보사의 기업공개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실시해야 함.
  - 생보사를 공개할 경우 ① 생보사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됨. 정보공사가 충실해지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생명인 신뢰도가 제고됨 ② 외국 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고 또한 국내 투자도 활성화 시킴 ③ 경영위험 증대에 따른 담보력 확충과 적정자본금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 더욱이 최근 문제화 되고 있는 기업 오너의 독단경영의 폐해를 막을 수 있음.
  -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상장요건을 갖춘 우량기업의 공개를 막는 것은 어불성설임.

### 4.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

- 생보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있음. 상호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하면서 사원인, 즉 주주가 되는 형태이고 주식회사는 계약자와 주주가 분리되어 있음.
  - 우리나라 전 생보사는 계약자와 주주가 분리되어 있는 주식회사임.
- 계약자에게 배당을 해주는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므로 상호회사적 주식회사라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 계약자배당은 이자율과 사망률의 오차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되돌려 주는 것이므로 배당 여부가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 5. 자산재평가 차익의 배분

- 생보사 기업공개시 이루어지는 자산재평가 차익은 통계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나 계약자와 주주의 기여도에 따른 배분이 가능함.
  - 이는 생보사가 계약자에게 약정한 보험금과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경영성과에 의한 이익이 생긴 것이므로 주주의 기여도와 계약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배분할 수 있기 때문임.
- 90년에 정한 자본이득에 대한 배분기준은 '계약자 70% 이상, 주주 30% 이하'로 정했으며, '99년에 계약자 몫을 85%로 늘리고 주주몫을 15%로 줄임.
  - 99년에 정한 85%: 15%의 지분율은 기여도 분석 등을 통해 조정이 가능함.
- 한편 계약자지분은 과거의 계약자와 현재의 계약자, 실효·해약 계약자들의 기여도 측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공익사업 등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특히 삼성, 교보 두 회사가 90년부터 실시해온 재평가차익을 재원으로 한 공익사업의 경우 자사의 홍보나 영업지원 등의 목적에 주로 활용해 왔음.
  - 따라서 향후에는 해당회사가 아닌 중립적인 기관에서 보험학제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공익사업추진기구를 설립하여 관리해야 할 것임.

## 6. 주주의 자본이득에 대한 배분 논란

- 생보사 기업공개시 상장에 따른 주식의 시세차익, 즉 자본이득을 계약자와 배분해야 된다는 논리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험한 논리임.
  - 기업공개시 주식가치가 높은 것은 건전한 기업경영에 따른 성과이며 주주가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합리적판단에 의한 성공적인 투자결과로 주주의 몫임.
  - 또한 상장에 따른 주가는 일시적인 것이며(향후 떨어질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음) 주식을 판매해야만 이익이 실현되는 것임(미실현이익). 따라서 현재 시가를 근거로 시세차익을 계약자에게 나눌 수는 없음.
- 자본이득을 계약자와 배분해야 한다는 논리를 따른다면 제조업체도(주주몫인) 상장에 따른 주식의 시세차익을 구매자들에게 나눠주어야 하며,
  - 역으로 주식가치가 떨어지면 소비자들이 주주의 시세차손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됨.

## 7.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내유보 확대 필요

- 향후 생보사의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은 재무건전성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사내

에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배당은 다소 줄여나가야 할 것임.

- 최근 보험가입자들의 보험회사 선택기준이 신뢰도, 즉, 재무건전성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으며, 국내 진입이 가시화 되고 있는 외국생보사는 재무건전성이 국내 생보사들보다 우수함.
- 따라서 국내 생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급여력 확보, 경영 안정 차원에서 내부유보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신 이 영 (생명보험협회 상무이사, 경영학 박사)

오늘 논의의 핵심은 생보사 기업공개와 이익배분 문제이지만 이에 앞서 ① 생보사의 조직형태와 판매상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어서 ② 생보사 기업공개 여부와 ③ 그에 따른 시세차익 분배, ④ 자산재평가 실시문제, ⑤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배분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 □ 생보사 조직형태와 판매상품

#### <생보사 조직형태>

- 생명보험회사에는 2가지의 조직형태가 있음. 상호회사와 주식회사 형태가 그것임. 상법에는 주식회사만 규정되어 있고 보험업법에 이렇게 분류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생보사는 모두 주식회사만 운영되고 있음.
- 본래 생보사는 중세의 길드나 우애조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조합형태의 상호회사가 먼저 발생하였음. 상호회사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주주인 형태이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하면 경상이익이건, capital gain 이건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계약자에게 100%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유보 등을 통해 이른 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있음.
- 반면, 주식회사는 계약자와 주주가 완전히 분리·운영되고 있음. 보험계약자는 보험상품을 구입한 채권자의 위치에 있고 주주는 경영의 결과,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차지하는 자본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생보 주식회사의 경우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상의 계약이행을 수행하는 단순한 채무자의 관계에 불과함.

#### <세계적인 추세>

- 비록 우리나라에는 상호회사가 없지만, 외국의 경우 유수한 회사들이 상호회사임. 미국의 Prudential, Metropolitan, 일본 Nissay, Daiichi 등이 그러함. 그러나 이러한 회사들은 주식회사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이유는 기업공개를 통해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M&A, stock-option 부여를 통한 종업원/경영진의 생산성 향상 유도, 기업신뢰성 확보 때문에 이른 바 demutualization 현상이 일고 있음.

#### <상호회사와 주식회사의 판매상품>

- 대체로 상호회사는 배당부보험, 주식회사는 무배당보험을 팔고 있는데 반드시 이러한

등식이 성립치 않음. 상호회사가 무배당상품을 팔고, 주식회사가 유배당상품을 파는 예는 허다함. 회사의 경영전략과 재무구조, 저축성·보장성 여부 등과 같은 판매전략으로 인해 구분·판매하고 있음. 미국, 유럽 다 마찬가지임.

#### □ 생보사 기업공개 여부

-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은 주식회사로서 기업공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 더욱이 생보사의 기업공개는 특정 회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생보산업 전체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사안임. 즉, 2개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27개 생보사 전체의 문제임.
- '97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갖는 중요성이 극명하게 부각되고 있는 바, 기업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생보사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자기자본을 보다 용이하게 확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생보산업 자체와 계약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임.
- 또한, 기업공개로 인해 소유구조가 보다 분산됨으로써 일반·소액주주들의 관심과 감시가 강화되고,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며, 인수/합병이 보다 용이해짐으로써 자발적 구조조정 및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게 됨.
-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도 생보사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졌으며, 일본도 상호회사의 주식회사 전환제도를 정비하는 등 demutualization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생보사의 기업공개는 이와 같은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임.

#### □ 기업공개에 따른 시세차익 배분

- 기업 상장에 따른 주주의 자본이득을 그 기업의 고객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그러한 유례가 없음.
- 생보사가 상호회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감안, 정해진 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분배해 왔음. 설령 생보사 상장으로 주주가 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계약자 이익이 상쇄되는 것이 아닌 만큼, 계약자 이익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음.
- 상장차익의 문제는 비단 생보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의 경우에 이와 유사한 논란이 전혀 없었던 반면, 생보사들에 대해서만 이를 이슈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경영을 잘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SK 텔레콤의 주식이 160만원인데 SK가 주당 33만원에 매입했음. 그 시세차익을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돌려주었는가? 상장 시세차익의 분배를 논하는 것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참겠다는 격임.

## □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 <자산재평가>

- 자산재평가는 기업의 실질적인 재산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는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음. 이러한 이유로 얼마전 정부는 대기업들의 자산재평가를 통한 재무개선 계획을 불허한 바 있고, 2001년 이후 동 제도를 폐지할 계획임.
- 만약 자산평가에 따른 평가익을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지급한다면 기업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배당금 지급에 따른 엄청난 유동성 압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산의 함유익, 즉 내재된 solvency margin이 축소됨으로써 유사시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재무적 능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음.
- 본인이 독일 뮌헨 재보험사를 방문했을 때 사옥의 장부가격이 단돈 1마르크였음에 놀란 적이 있음. 이는 일본 생보사들이 금리하락에 따른 이차손을 자본함유익의 실현을 통해 보전할 수 없었던 경험과 함께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음.

### <이익배분률>

- 국제적으로 이익의 10~20%를 주주 몫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주주지분률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고, 현재 직면한 자본금 확충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을 감안할 때 배분률은 오히려 상향조정될 필요성도 있음.
- 과도한 계약자배당은 생보사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 2004년까지 강화된 지급여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약 7조5천억원의 자금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자지분을 높게 책정한다면 자금의 사외유출 증가로 자본축적이 지연될 것이며, 투자 incentive를 감퇴시켜 외자유치를 통한 구조조정 또한 한층 어려워질 것임.
- 발표자가 언급했듯이 생보사들이 사업초기 막대한 영업비용 및 높은 해약률등에 따른 비차손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배당을 계속한 결과 당기순손실의 지속 및 자본금 잠식 확대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급기야는 '98년 4개사가 퇴출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 이는 배당이 계약자의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올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생보사의 부

실화 내지 추가 구조조정을 야기함으로써 오히려 계약자의 불편과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함. 결국 이 문제는 생보산업 전체와 계약자의 장기적인 이익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것임.

계약자를 대상으로 100% 공모하여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주주와 계약자 간에 배분 하자는 얘기는 타당하지 않다. 첫째, 이는 주인 없는 기업을 만들라는 얘기인데, 주식분산이 잘 되었다고 우량하고 바람직한 기업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과연 무엇 때문에 국민기업이라 했던 기아자동차의 정상화를 위해 무려 7조5,000억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했고, 결국 다시 주인을 찾아야만 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주인없는 은행의 부실경영으로 이미 42조8,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앞으로도 추가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소위 법치국가에서 특정기업의 소유권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논의 자체가 옳지 못하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기업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다.

현재 유배당상품의 예정이율은 7.5%, 무배당상품의 예정이율은 9.5%로 무배당상품이 높으나, 매년 유배당상품에는 약 1%의 확정배당, 0.5% 정도의 이차배당, 0.12% 이상의 장기유지특별배당 등의 배당이 이루어져왔고, 따라서 실제 유배당상품의 이율은 9.12% 이상이다. 즉,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의 이율은 거의 같은 수준이며, 따라서 유배당상품 계약자가 주주와의 이익분배에 있어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회사형태와 판매상품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일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통해 돌려주자는 주장에도 반대한다. 본인이 영국을 방문했을 당시 영국의 생보사들은 어떠한 공익사업을 행하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기업으로서 이익을 많이 내어 가급적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답변이었다. 즉, 기업의 최대 목적인 이윤추구에 충실한 것 자체가 공익사업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반드시 이익을 따로 떼어내어 공익사업을 행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이 봉 주(경희대 교수)

### 1. 삼성, 교보생명 기업공개에 관한 논란의 원천

양대 생보사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주식회사로서 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충족시키는 한, 공개와 관련된 모든 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특혜시비가 제기되고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1) 정치경제적 측면

삼성자동차, 대한생명의 예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고객의 자산이 대주주의자금으로 사용되는 등의 대리문제(agency problem)가 심각하였다는 관점. 즉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과 相通.

#### 2) 보험산업적 측면

- ① 1992년초까지 계약자배당을 지급하는 배당부상품만이 판매되어 왔으나, 투명한 구분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많은 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의 운용성과가 계약자배당의 형태로 투명하게 지급되어 오지 못하였다는 관점.
- ② 선단보호행정하에 동일한 보험요율과 계약자배당을 적용하여, 기여도에 합당한 계약자배당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관점.

### 2. 기업공개에 대한 견해

- 삼성·교보생명은 법률상 주식회사이지만 실질적인 경영내용은 상호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 오히려 상호회사로 전환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 여지도 있으나,
- 삼성자동차처리에 이어 대우쇼크로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재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상호회사로의 전환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 한편, 기업공개는 한국경제의 취약점인 투명성 결여 문제를 개선하고, 주제발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여러 이점이 있으므로, 본인은 기업공개를 찬성함.
- 그러나 기업공개 이후, 주주와 보험계약자간의 이해상충문제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구분계리의 이행과 감독, 선임(독립)계리인(Appointed actuary)의 도입, 계약자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 여신심사위원회 등의 보완 조치가 요구됨.

### 3. 배당부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

- 배당부계약의 계약자배당은 주제발표에서 보듯 발생이익의 배분에 대해 주주무자격설,

경영관리비설, 주주귀속설, 주주공유설, 이자설 등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음 (Belth(1965))

- 미국의 경우, 배당상품의 계약자배당에 대한 견해는 역사적 변천을 보여온 것으로 판단함
- 예컨대, 1917년 미국의 Royal Trust Co. v. Equitable Life Assuranc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247 F. 437(1917) 사례를 보면, 주주무자격설을 채택한 것으로 보임
- 즉, 이는 에퀴터블이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소송인데, 여기서 법원은 주주에 대해 잉여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음.
- 그러나, 미국 보험법의 준거역할을 하는 뉴욕주의 보험법은 발표자료(46쪽)에서 보듯, 10%이상의 이익을 주주에게 허용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캐나다, 독일, 영국, 싱가포르등도 90%이상 계약자에게 배분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이익배분에 있어 90/10 규칙의 도입을 제안함.
- 이러한 이익 배분은 순보험료식준비금에서 실질적인 해약환급금식준비금으로 회계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임.

#### 4.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배분

- 자산재평가의 원천은 계약자의 기여에 의한 것이므로, 기여도 개념에 의해 차익을 배분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도 90/10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5. 상장과실의 참여 여부 및 대안

- 이는 오늘 토론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으로서, 발표자는 법리적 측면에서 시세차익에 대한 계약자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바, 법리상으로 볼 때, 이는 논리적인 귀결이라 할 것임.
- 그러나 기업공개에 따른 논란의 원천을 생각할 때, 단순히 법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본인은 주저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발표자와 반대 입장이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기업공개대상인 삼성과 교보생명의 지금까지의 성장은 40년 이상에 걸쳐 수많은 계약자들의 보험료에 의해 수십조원의 자산이 형성되고 거대한 판매조직이 육성되었으며 운영경비가 조달된 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임.
- 참여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본인은 주주의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음.
- 왜냐하면 주주는 엄연히 자본을 출자하였기에 여기에 따른 합당한 수익을 향유할 자격이 있는 것임.(경영권의 행사에 따른 다각적인 이익의 향유는 물론 포함하지 않은 것임)



- 이런 관점에서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삼성생명에 대해 단순한 분석을 해보았음. 삼성생명의 주주가 57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실제 출자한 금액은 여섯 차례에 걸쳐 39억7,500만원임.
- 과연 57년부터 98년말까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올린 것이 적절한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됨
- 이론적으로 적정투자수익률은 무위험률 + 리스크프리미엄이나 연구를 위한 시간적 제약으로 42년간 연평균수익률 20%를 단순 적용해보았음
- 근거라면 83년부터 지금까지 보험사의 가장 높은 자산운용수익률이 76년의 16.2%였으며, 여기에 경영능력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여 20%로 해본것으로서, 4년후면 출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높은 수익률이며, 42년간 복리로 환산하면 원금의 2116배가 되는 수준임
- 이렇게 따져 보았을 때, 1990년초에는 납입자본금이 약263억원, 1999년초에는 약 1,357억원이 됨. 그러나 주지하듯 자산재평가의 전입으로 납입자본금은 90년 93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98회계년도말 자본금은 5,894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적용기간 42년, 해당연도 실제투자금액 부리시〉

	1990. 1	1999. 1	납입자본금 (99. 3. 31)	총자본금 (99. 3. 31)
r = 20%	26,291백만	135,659백만	936억	5,894억
r = 18%	19,216백만	85,232백만		
r = 15%	12,791백만	45,000백만		

- 이러한 단순 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주주는 투자자본에 대한 적절한 수익률을 이미 실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② 나아가 그동안 주주의 중요한 기능인 위험부담(risk bearing)기능을 해왔다고 볼 수 없다. 1983년경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연 파산상태에서 실제 증자를 한적이 있는가? 삼성의 경우 자산재평가로 자본전입을 했을 따름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본금 잠식이었을 때, 주주가 추가로 출자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주주와 계약자의 위험 공유(risk sharing)만이 있어 왔을 따름이다.(Belth, 배당계약자는 1차위험부담자)
- ③ 한편 발표자는 '외국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배당부계약자에게 주식의 시세차익에 대한 참여가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없다'(32쪽)하나, 외국의 경우 이익의 배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

④ 나아가 기존생보사처럼 100% 배당상품만을 취급하는 주식회사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오직 상호회사만 그러할 따름이다. 따라서 오랜 기간동안 실제 내용은 상호회사적 성격으로 운영되어온 것이라고 판단한다.

- 따라서 본인은 계약자의 기여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며, 상장에 따른 과실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봄

- 이런 관점에서 2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1안> 공모비율을 100%이상으로 하여 국민기업화를 유도

- 이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주주와 계약자의 기여도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계약자의 충성도를 증대시키는 장점을 갖는다. (물론 대주주의 반대가 예상됨)

- 계약자에게 주식우선인수권(preemptive right)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상호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임.

- 우선인수권부여시 기업공개에 따른 현행 규정과 상충되는 점은 개정을 통해 특별규정을 삽입하여 해결토록 함.(미국의 뉴욕주도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허용하며, 법규를 신설한 바 있음)

- 공모시 공모비율을 최소 100% 이상으로 하고, 상당비율을 계약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함.(예컨대 현행 우리사주조합 20%: 기관투자가 30%: 일반투자자 50% → 우리사주조합 20%: 계약자 50%: 기관투자가 10%: 일반투자자 20%)

- 공모가는 주당순자산가치로 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봄

- 대상 계약자의 문제도 쉽지 않은 기술적 사항임. 이는 Union Mutual 등 미국의 상호회사가 전환한 사례와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해결토록 함.

#### <제2안> 계약자기여분의 완전 사회 출연(독립 공익재단 설치)

- 과거 재평가차익의 사내유보분, 그리고 공개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는 자산재평가에 의해 사내유보될 부분, 그리고 대주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출연한 자금으로, 주주의 영향력이 배제된 순수한 독립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토록 함.

- 이는 그동안의 성장의 과실을 본질적으로 주주가 차지하기에 <제1안>보다 대주주에게 유리함.

## 정 규 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1. 생보사 공개문제

#### - 토론의 전제

생명보험 회사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지 또 무엇 때문에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생보사는 자산운용의 주체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실제 우리나라 생보사들의 주주가 초기자본금 외엔 추가출자를 한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상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할 것이다. 일본의 대형 생보사들이 지난 80년대 후반 상장공개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었다가 결국 무산되었던 것도 보험사의 자금조달 필요성에 대한 원초적 의문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험사에 대한 주식시장의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과 상장에 따른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출자자가 창업자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상장공개의 효과다.

주제발표자는 이점을 애써 간과하고 있으나 이는 회피할 문제가 아니며 생보사 공개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찬반토론의 요체이니 만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할 성격이라고 본다. 생보사 공개문제와 관련된 토론은 단순히 명분과 원칙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일반인들의 불신만 부채질할 것이다.

일반인들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하지 않는 것은 일부의 주장처럼 때를 쓴다거나 배가 아프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이야 말로 생보산업의 이해관계자라는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이 아무리 원칙과 학문적 이론을 강조한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이를 쉽게 납득하지 않는 것은 상당수 전문가들이 생보사들과 깊은 공적 혹은 사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선에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 - 공개 문제 이번에 결론내야

생보사 공개상장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삼성생명 주식의 사재출연 문제와 대한생명주식의 입찰매각, 제일생명의 소유권 해외 매각등 시장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에서 보듯이 이미 일정한 시한이 설정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 공개 문제는 비록 해외에서 준거할 만한 사례가 부족하고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미룬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기회에 생보사 자산이나 자본차익에 대한

일정한 배분기준을 확립(선택)하고 공개상장시키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본다.

공개상장을 통해 거대자산의 운용주체인 생보사들의 폐쇄적 경영을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생보사 개혁의 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 2. 자산에 대한 평가 및 지분

보험자산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본다. 주체발표자는 상호회사적 성격과 주식회사적 성격이 상호침투해 현재로서는 굳이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생보사 공개상장에 따른 자본차익은 역사적 누적물에 대한 평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평가가 없을 수 없다고 본다.

지난 89년과 90년 삼성·교보에 대한 자산재평가가 이루어 질 때만해도 우리 생보사들은 자산의 총액이 미확정상태로 있는 저축성 유배당 보험만을 판매하는 상호회사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본다. 법률적으로는 주식회사의 구조를 갖고 있었던데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상호회사적 자산구성을 갖는 모순이 내재해있었고 이것이 논란의 시발이 됐다.

반면 주주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경영의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이중의 모순이 존재해왔다. 따라서 당시로서 적절한 해결방법은 주주의 자본출자분을 창업기금으로 보고 이를 평가해 주주에게 환원해준 다음 상호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을 것이나 역사적 누적물인 자산에 대해 주주지분과 계약자 지분을 3대 7로 나누어 이를 배분하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은 국제금융환경이 크게 변했고 이미 상호회사적 성격이 상당부분 탈색되고 있음이 현실이므로 이를 다시 상호회사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89년 재산재평가 당시 주주에게만 자본전입 혜택이 주어졌고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공익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배분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회사의 경영을 지원하는 별도계정과 같은 성격처럼 운영되어 왔던게 사실이다.

### - 계약자 지분 인정해야

현재 정부는 자산재평가나 이익배분에 있어서 주주기여분을 15%로 하고 계약자지분을 85%로 하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결과에 대한 배분일 뿐 아직도 자산의 지분별 구분계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주자본과 보험자산의 철저한 구분계리가 필요하고 이는 생보사의 공개상장과는 별도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기업공개에 따른 차익은 시세차익이라는 말보다는 자본차익 또는 창업자이득이라고 규정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자본차익이 무엇이라는 논의에 있어 김성재 교수는 주식의 장래가치, 다시말해 배당능력이 관건인 만큼 공개와 관련해 장래의 주주배당 가능비율을 확정해 투자자들에게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가치는 배당 가능이익에 대한 현가일 뿐만 아니라 자산에 대한 지분증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배당가능 이익만 정하면 주주의 몫이나 계약자의 몫이라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주장은 주식가치의 한측면만을 규정한 것으로 지금 논란이 되어있는 자산가치에 대한 아무런 준거들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주주자본은 회사의 전체 자산을 지배하는 외형상 특성을 갖고 있고 이는 85%를 계약자의 지분으로 보는 보험사의 본질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자지배분에 대한 일정한 지분증서가 따로 발행되는 것이 자본차익에 대한 올바른 배분 방법이 될 것이다.

#### -. 신주발행해 계약자에게 배정

주주자본만 공개될 경우 대부분 보험자산이 주주자본으로 의제되는 회계상 착시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주는 자신의 몫 이상으로 과대평가된 주가로부터 과도한 자본차익을 얻는 모순된 결과가 나온다. 또 주식의 가치는 현재의 가치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미래 자산의 변동분)도 반영된다. 때문에 공개시장에서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의 결과를 일정금액으로 계약자에게 준다고 해서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개상장을 맞아 계약자 지분에 상당한 주식을 발행해 계약자들에게 지급한 것이 자산에 대한 배분 비율을 반영하는 공정한 해결방법이다. 현재 정부는 자산의 85%를 계약자에게 돌리고 있으나 이 비율대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기존의 대주주가 경영권을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주주 경영지분이 유지되는 선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옳다. 1백% 중자도 한방법이라고 본다.

다만 무상증자를 통한 배정보다는 공모주 우선 청약권을 주는 방법이 적절할 것임. 계약자의 청약자격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되 2년 이상 가입자등 기간제한을 줄 필요가 있음. 이는 공개대상 생보사들의 지나친 시장판매력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생보사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임.

## 정 성 택 (홍국생명 전무이사)

### □ 도입

- 안녕하십니까? 홍국생명 정성택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홍국생명에서 재무기획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보험계리인입니다.
- 먼저 이런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훌륭한 내용의 주제를 발표하여 주신 김성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는 김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과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는 앞서 토론회 주신 분들도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업계에 몸담고 있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가급적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요점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문제조기

- 금융권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기업공개의 요건이 충족되면 기업공개를 통하여 기업자금을 조달하는 등 기업공개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은 아직 기업공개를 이루지 못했으며 지금 우리 나라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라는 역사의 장을 이루려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 그간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에 대하여 찬반론은 물론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신문지상에 게재되었습니다.  
왜 유독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에 대하여 어느 금융기관과 달리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올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 생보사의 기업공개 문제는  
기업공개 여부에 관한 문제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배분 문제  
자본이득(시세차익)에 관한 문제  
기타 문제  
등으로 문제의 영역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 □ 본론

### 《기업공개 여부에 관한 문제》

- 우선 기업공개 여부에 관한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10년 전에 결론이 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에 대하여 일부 부정적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기업이 공개의 요건을 갖추고 공개를 추진한다면 상장자체를 저지할 명분과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 외국의 경우(주로 미국이나 일본)도 상호회사 형태의 생보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脱 상호회사化 추세에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우 공개요건이 충족되면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더욱이 우리나라는 기업의 소유분산, 투명성제고, 담보력 강화 등의 사회적 요구와 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의 국제화 시대적 요구를 강력히 요구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문제는 공개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이 일부 부정적 견해를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배분문제》

- 다음으로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배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생보사 이익의 원천 및 배분문제의 발생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즉, 주식회사 형태의 생명보험사가 무배당 상품과 배당부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였기 때문에 영업성과의 배분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금년 들어 정부는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문제의 이익배분방법과 기준을 선진외국을 참고로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이 규정에 의하면 생보사의 손익을 유·무배당 및 자본계정손익으로 구분하여 무배당/자본손익계정은 주주지분으로 하고, 유배당 이익은 주주 對 계약자지분으로 배분하되 배분비율은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주주지분 한도를 10%~1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이 주주지분 한도 10%~15%가 과대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하는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대하지 않고 적절한 배분율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 참고로 외국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미국 뉴욕주의 경우는 결산손익의 배분방법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고 유배당 보험이익의 주주지분 최고한도는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경우 주주지분 최고한도를 15%로, 일본의 경우는 주주지분 최고한도를 10%에서 20%로 최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다면, 배당부 보험이익의 주주지분 최고한도는 10%~20%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 나라의 15%는 과대하다고 할 수 없으며,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배분 방식이나 기준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본계정 및 유·무배당으로 구분계리함에 있어 계정과목별로 그 소재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의 처리가 이익배분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현재의 구분 기준을 계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본이득(시세차익)에 대한 문제》

- 다음은 어쩌면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자본이득 즉 시세차익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생보사의 주식상장문제가 대두되자 소비자 및 시민단체에서는 「생보사의 주식을 상장하면 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高평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주주가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되는데, 이는 주주의 경영노력이나 경영성과에 비하여 과대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 왔습니다.

- 이에 대하여 주주측에서는

「생보사의 주주가 공개를 통하여 자본이득을 취하는 것은 결코 “새로운 특혜”가 아니고, 과거 수십 년간 축적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지분을 시장가치로 환산한 주주의 정당한 대가이다. 따라서 이를 계약자와 분배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자본시장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우리보다 이러한 문제를 일찍 경험한 외국의 경우에도 주식회사가 상장되는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주식을 교부하거나 배당을 실시하여 주주의 자본이득을 계약자와 분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저의 생각도 법적으로 자본이득은 주주의 몫이며, 배당부 계약자가 주식의 공개와 공모에 의한 시세차익에 대하여 참여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 업계에 근무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 종 국(전주대 교수)

### <2차 토론 요지>

#### · 보험보호의 기능을 파악해야

1. 보험산업은 먼저 보험보호의 기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즉 사망, 사고, 재해, 노후보장 등 보험보호의 본원적 기능을 고려하고 차후에 계약자 배당 등 계약자의 권한을 논의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 · 자본주의의 논리로 풀어야

2. 생보산업의 소수지배의 문제는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논쟁을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자본주의란 어떤 특정산업에 투자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이익을 창출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많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 자본주의의 생리요, 최고경영자의 꿈이라 생각한다. 많은 내재가치가 인정되어 큰 폭의 시세차익이 형성된다면 이를 칭찬해야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는 자본주의의 근본이념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경계의 대상으로 파악해야 한다.

#### · 재벌의 사금고화 지적에 대하여

3.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재벌의 사고금고화의 지적에 대하여 일정부분 인정한다. 제조업과 함께 재벌의 일원으로서 운영되었던 생보산업의 일부 사금고화 기능을 전혀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기업을 공개하여 소액주주에게 소송권을 주는 현행법을 이용하고 수많은 주주에게 내부거래를 감시하는 역할을 주는 기업공개로 택하자는 것이다.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길은 바로 기업공개이다. 이러한 경제행위가 특혜 운운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경제현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라고 사료된다.

#### · 경상이익, 자산재평가이익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문제

4. 생보산업을 경영해서 사차익, 이차익, 비차익이 발생하면 주주와 계약자의 배당은 15:85 또는 10:90으로 조종할 수 있다. 또한 자산재평가 이익도 15:85 또는 10:90으로 조정할 수 있다. 경상이익과 자산재평가이익은 대부분 계약자의 몫이 될 수 있고 또한 이를 엄격하게 계리하기 위해서는 구분계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독립계리인제를 채택할 필요도 있다.

5. 자본이득은 단연 주주 몫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칙을 무시하면 자본주의의 큰 매력을 상실케 하는 조치로써 크게 경계해야 한다. 다만 생보산업을 경영해서 큰 이익을 얻었

다면 그동안 정부의 보육정책, 국민의 호응 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도 주주의 의사에 따라 권장되어야지 강제사항은 아니다.

• 공익사업의 회사자유재량에 대하여

6. 공익사업을 회사자유재량에 맡기는 문제는 제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장이 미흡한 나라는 절박한 입장에 있는 공익사업이 많다고 파악되고 있다.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추진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폭넓은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해야 한다.

# 生保社 企業公開의 爭點事項에 대한 學術討論(第2次)

## 일 정 표

- 주 최 : 한국보험학회
- 일 시 : 1999. 12. 23(목). 14:00 ~ 18:00
- 장 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토론회 :
  - 13 : 00 ~ 13 : 45 접수 및 등록
  - 13 : 45 ~ 개회사 신수식교수(보험학회 회장)
  - 14 : 00 ~ 16 : 30

### 제1부 학술토론회

- 사회자 : 이경룡(서강대학교 경영대학장)
- 토론자 : 고평석(경남대 교수)
  - 류근옥(서울산업대 교수)
  - 박시룡(서울경제신문 정경부장)
  - 이균성(외국어대 교수)
  - 이재복(목포대 교수)
  - 정홍주(성균관대 교수)
- 16 : 30~16 : 45 Coffee Break
- 16 : 45~18 : 00 제2부 참석자 토론

## 자료발간의 말씀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기업공개에 관하여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해서 12월 23일 본 학회는 학회임원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학술토론내용을 정리하여 여기에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8월 4일 제1차 토론에 참석한 교수들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가한 교수들을 제외한 새로운 인물들을 중심으로 제2차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생명보험주식회사 기업공개에 따른 계약자와 주주의 관계설정 및 이익배분 문제는 10여 년의 해묵은 과제로서 정책당국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새로운 한 세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 학회의 이번 토론자료가 정책결정 및 관계자들의 진정한 이해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999년 12월

한국보험학회 회장 申 守 植

# 목 차

I. 爭點事項 要約

II. 討論內容 要約

III. 討論內容 速記(省略)

## 생보사 기업공개에 관련한 쟁점사항 요약

### 1. 생보사의 성격

- (1) 법률적 형태 : 주식회사, 상호회사
- (2) 주주 및 계약자 권리/의무 : - 주주 권리 및 의무  
- 계약자 권리 및 의무
- (3) 판매상품 성격 : - 주식회사 : 배당부 상품, 무배당 상품  
- 상호회사 : 배당부 상품
- (4) 배당부 상품 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 : - 주식회사  
- 상호회사

#### (쟁점사항)

A관점 : • 국내 생보사는 법적으로 모두 주식회사

- 주주와 계약자의 관계는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
- 배당상품을 판매해도 관계변화 없음
- 주식회사(생보사)의 주인은 주주

B관점 : • 법적으로 주식회사이나 경영방식은 상호회사 형태로 운영

- 배당상품 판매비중 과다
- 보험사업에 따르는 위험공유
- 상호회사 성격이 강하므로 상호회사의 주식회사 공개방식으로 접근 필요성

### 2. 주주와 계약자의 위험공유

- (1) 생보사 경영의 주주위험 : - 사업성패의 전반적 책임이 있음.  
- 결손보존 또는 주식소각 처분 리스크.
- (2) 생보사 경영의 계약자 위험 : - 사업성패에 대한 직접적 책임없음.  
- 부실경영에 따른 채권보존 위험.  
- 상품종류(예: 변액보험)에 따라 투자리스크의 일부 부담.

(쟁점사항)

- A관점 : · 계약자는 채권자로서 주주와 같은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지 않음.  
· 주식회사의 계약자는 주주의 권리에 우선하여 보호되고 있음.  
· 자본금이 크기와 계약자의 리스크분담 논리는 무리임.  
· 영업 및 투자 리스크를 계약자가 부담했다고 할 수 없음.
- B관점 : · 과거 손실발생시 주주가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고, 주주의 부채변제 의무를 계약자에게 전가시킴.  
· 계약자의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등 계약자에게 경영리스크를 전가시킴.

### 3. 생보사의 성장 및 이익 창출 기여

- (1) 주주의 기여  
(2) 계약자의 기여 : - 배당부 상품 계약자 기여.  
- 무배당 상품 계약자 기여.

(쟁점사항)

- A관점 : · 생보사의 성장 및 이익창출은 궁극적으로 경영능력의 결과임.  
· 경영에 따른 최종책임이 주주에게 있음.  
· 계약자는 상품을 구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만큼 기여함.
- B관점 : · 성장 및 이익 창출은 주주와 계약자가 동등하게 기여함.  
· 현 생보사 가치는 계약자 기여분.

### 4. 상장이익 (및 주식배분) 배분

- (1) 상장이익의 성격 :  
(2) 상장이익의 주주 배분의 정당성 :  
(3) 상장이익의 계약자 배분의 정당성 :  
(4) 상장주식의 계약자에 대한 배분의 정당성 : - 생보 주식회사 공개시 :  
- 생보 상호회사 공개시 :

(쟁점사항)

- A관점 : · 계약자에 대한 상장이익 배분 불인정





- 경우에 따라 평가 후 계약자 배당 실시.
- B관점 : · 고정자산, 유가증권 대상 재 평가 실시.
- 평가차익은 주주와 계약자에게 공정하게 분배.
- 평가익은 현 이익배분 기준에 따라 처리.
- 현금배당, 보험료 감액, 보험금증액등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배분.

## 7. 해약식 초과이익 처리방법

- (1) 계약준비금의 성격 : · 모든 계약준비금은 생보사의 부채임.
- 적립방식에 따른 적립금액 차이의 성격규명.
- (2) 해약식 초과이익의 성격 : · 실질적 이익 처리.
- 회계상 이익 처리.

### (쟁점사항)

- A관점 : · 별도 준비금으로 적립 주장.
- 지급여력 강화 측면 강조.
- 부채계정으로 유지.
- B관점 : · 초과 적립액 계약자 몫으로 분배.
- 계약자 몫과 주주몫을 명확히 구분.

## 8. 이익 배분 기준 적정성

- (1) 배당부 상품(주식회사)의 성격 및 배경 :
  - 주식회사가 배당부 상품을 판매한 배경.
  - 배당부 상품의 배당자원 원천 및 성격.
- (2) 주주배당과 계약자 배당의 차이 : - 주주배당
- 계약자 배당
- (3) 잉여배분의 합리성 :
  - 계약자의 생보사 경영잉여에 대한 청구권리.
  - 계약자 배당의 합리적 수준.
  - 잉여에 대한 합리적 주주몫의 수준.

(쟁점사항)

A관점 : · 지급여력을 감안 현행 10~15% 기준 수용가능.

· 배당경쟁에 따라 계약자 몫 증대 가능

B관점 : · 주주몫을 10% 이내로 인하.

· 주주몫을 먼저 산출한 후의 잔여잉여금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분배하는 현행 방식에 문제있음.

## 생보사 기업공개의 쟁점사항에 대한 학술토론회

본 학술토론회의 진행상황 및 토론요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 1. 토론회 개최 의의

본 건과 관련하여 수차례 걸쳐 공청회를 하였으나(보험학회 1회, 금융연구원 2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첨예한 대립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론적 관점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 생보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생보사 경영의 올바른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보다 본질적이고 학술적 토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2. 토론회 진행 방식

본 학술토론회는 기존의 공청회 형식과 달리하여 주제발표는 없고 기존의 공청회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참석한 각 토론자가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토론자는 충분한 시간을 이용하여 각 쟁점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었다.

### 3. 토론 사회자의 토론 시작전 서언

사회자는 토론시작에 앞서 몇가지 사항을 이야기했다.

첫째, 생보사의 기업공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주요 원인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험전문가가 부족할 뿐만아니라 보험학회를 비롯한 보험학자 또는 보험전문가 집단에 충분한 자문 또는 의견교환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책결정을 하고자 한데서 비롯한 것이다.

둘째, 생보사(9주)의 기업공개 문제를 주식회사의 기업공개 측면과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관심의 차원에서 논의되다 보니 원칙과 본질을 벗어나 많은 혼란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셋째, 본 토론회는 특정그룹 또는 생보사의 현안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고 생보산업

의 발전과 모든 생보사(주)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보주식회사의 잉여금 배분 및 기업공개와 관련된 원칙 및 기본방침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 4. 주요 쟁점사항의 토론요지

##### (1) 생명보험회사의 성격

- 참석토론자 전원이 우리나라 생보사의 법률적 형태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와 계약자의 관계는 채무자나 채권자의 관계이며, 배당부 상품을 판매해도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고 함.
- 또한 우리나라 생보주식회사가 상호회사적 성격이 강하므로 상호회사의 주식회사 공개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함.
- 단지 과거의 생보시장 환경이 독과점적 성격이 다소 있어서 보험가격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 생보주식회사의 배당부 상품 계약자에게 합리적이고 충분한 계약자 배당은 이루어져야 하나, 계약자가 주인의 위치에서 주식을 배분받을 권리는 없다고 주장됨.

##### (2) 주주와 계약자의 위험공유

- 주주와 계약자의 관계가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라는 기본적 성격에 따라 생보사 경영에 따르는 위험을 공유한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논의됨.
- 과거 생보사 경영에 있어서 보험가격의 결정이 다소 비정상적이어서 기업의 도산위험은 주주에게 있으나 수익성 위험은 계약자에게 있다는 주장도 있었음.
-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장된 권리를 모두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위험도 크지 않음.
- 계약자의 권리는 주주의 권리에 우선하여 보호되고 있으며 계약자 배당의 실시는 정부의 정책적 규제에 좌우되어 왔음.

##### (3) 생보사의 성장 및 이익 창출기여

- 생보사의 성장 및 이익 창출은 궁극적으로 개별회사의 경영능력에 따른 결과이며 계약자는 기업의 고객으로서 보험상품을 구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만큼 기여함.
- 계약자와 주주가 생보사의 성장 및 이익 창출에 동등하게 기여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취약함.

#### (4) 상장이익(및 주식) 배분

- 상장이익의 발생은 자본시장에서 생보사의 장기적 경영결과와 미래의 사업성을 높이 평가하여 나타나는 현상임.
- 생보사의 장기적 경영결과와 미래의 사업성 평가는 생보사 주인의 경영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장이익은 본질적으로 주인인 주주의 몫이어야 함.
- 상장이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로 불가능한 것임.
- 더욱이나 상장이익을 계약자에게 주식형태로 배분한다는 것은 계약자의 이익보호 논리와 다른 것임.
- 생보주식회사가 상장되기전에 계약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계약자 배당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가치는 적절히 계산되어야 하고 주가가 그러한 가치를 감안한 후 평가되어야 함.

#### (5) 자산 재평가 차익 처리 방법

- 주식회사 자산 재평가법의 취지에 따라 생보주식회사의 자산 재평가 필요성을 부인하거나 평가익도 모두 주주의 몫이라고 주장도 하지만, 배당부 상품을 주종으로 판매하는 생보주식회사의 경우 자산 재평가 차익의 일부가 계약자 배당 재원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이론적 합리성이 있음.
- 자산 재평가 차익을 계약자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재평가 차익이 미 실현이익이라는 점과 생보기업의 유동성 리스크관리 문제점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 계약자 배당의 형태에 어떠한 경우라도 주식배분은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재평가 차익의 계약자 배당도 주식배분 이외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임.
- 특정 생보사들의 기존 재평가 차익 중 유보된 금액의 처리는 미래의 결손보존 및 계약자 배당 재원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기존 재평가 차익 중 유보된 것은 실제로 과거 계약자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함.
- 과거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합리적 처리 방법이 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생보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또는 공익사업에 현금으로 기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존 재평가 차익 중 유보액은 그 성격상 주주몫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상장시 적절히 감안되어야 하며 과거 계약자의 배당몫으로 사용될 때 어떠한 경우라도 주식형태의 배분은 타당하지 못함.

#### (6) 잉여금 배분기준 적정성

- 배당부 상품을 판매하는 생보주식회사의 잉여금을 주주와 계약자 사이에 배분하는 기준은 향후 이론적 연구가 더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선진국들의 선례를 참조하여 10%~15%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잉여금의 크기와 개별회사의 지급여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

- 향후 생보시장의 배당경쟁이 심화되면 주주몫의 수준은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인하될 가능성이 있음.

- 잉여금 배분에 있어서 과도한 주주의 몫도 문제이고 생보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지나친 배당경쟁도 문제임을 인식해야 함.

#### (7) 해약식 초과이익 처리방법

- 적립금 처리방식에 따른 회계상의 이익을 계약자 배당으로 처리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며 지급여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부채계정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이로 인하여 잉여금이 확정될 때 일반적 잉여금 배분방식에 따라 계약자와 주주 사이에 배분하면 됨.

### 5. 토론회 맺음말

- 생보사 기업공개와 관련하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왔고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생보산업의 발전과 계약자의 이익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심을 하여왔다.

- 생보사 기업공개와 관련한 쟁점사항을 토론헬에 있어서 모두 생보기업의 경영 건전성과 계약자 이익보호를 추구하는 마음은 같으나 관점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견해들이 표출되고 있다고 본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적 또는 이론적 관점에서 생보기업 경영의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며, 그 밖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라 본질이 왜곡되어 정책결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우리나라의 생보주식회사가 지난 세월동안 과도기적 시장여건 아래서 경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약자의 이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생보사업은 본질적으로 계약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해야 사업의 성공은 물론 사업의 가치도 있는 것이다.

- 따라서, 향후 생보기업은 법적인 측면에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계약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며, 넓은 의미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정성

을 쏟아야 할 것이다.

-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생보업계가 새로운 각오로 국민경제와 생보산업의 발전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 학술토론 내용 요약

### 1. 사회자 및 토론 참가자

사회자 : 이 경 룡 (서강대 경영대학장)

토론자 : 고 평 석 (경남대 교수)

류 근 옥 (서울산업대 교수)

박 시 룡 (서울경제 경제부장)

이 균 성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 재 복 (목포대 교수)

정 홍 주 (성균관대 교수)

2. 토론내용의 요약은 쟁점별 토론순서에 따라 토론자별로 정리

3. 사회자의 사회 내용과 comment는 일반적으로 제외하였음

4. 요약의 자세한 내용은 본 책자의 마지막 부분인 토론 속기록을 참조하시기 바람

5. 제2부 참석자 토론 내용은 역시 토론 속기록을 참조하시기 바람



## 1. 생보사의 성격

토 론 자	토 론 내 용
류 근 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구조(자기자본 대 타인자본의 비율)는 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사항이며(e.g. leverage buyout 전략) 상호회사적 성격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님</li> <li>- 배당부 상품은 상호회사만 무배당상품은 주식회사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판매가 가능. NY주와 같은 경우 상호회사도 승인을 얻어 배당부상품 판매 가능</li> <li>- 상품의 배당의 유무가 상품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아님</li> </ul>
정 홍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형태별 상품판매 종류는 경영전략적 문제임</li> <li>- 문제는 성장과정에서 생명보험상품가격이 정부가 제시한 가격으로서 높게 책정되었고 따라서 독과점적인 이익이 있었는 바 이의 회수가 문제 (e.g. 낮은 예정이율, 높은 사업비)</li> <li>- 은행이나 손해보험의 이익발생과 다른 보험의 문제는 은행의 경우 거래가 자발적인 데 비하여 보험은 비자발적이고 Push에 의한 거래인 데 문제</li> <li>- 즉 소비자가 경쟁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아닌 비싼 가격으로 원치 않는 상품을 구매한 측면이 있는 데 문제</li> </ul>
류 근 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방식은 상호회사와 주식회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님 (e.g. 갑압적인 신문구독 요청을 했다해서 신문사가 상호회사는 아님)</li> <li>- 다만 생보산업의 단기기간내의 성장은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한 바가 있는 바 이익의 사회적 환원 측면에 대해서는 공감</li> </ul>
고 평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와 계약자의 권리 의무는 법에 의한 것임</li> <li>- 주주는 출자한도내에서 의무를 가지며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장부열람권등을 가지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통하여 경영지배</li> <li>- 주주는 담체법리가 적용되며 출자한도내에서 의무를 가지며 그 이상의 의무(e.g. 재차투자 의무의 부과)를 부과하는 것은 형행법상 의미가 없음</li> <li>- 계약자는 개인법리가 적용되며 권리의무는 계약내용과 약관에 따라 결정됨(e.g.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납입)</li> <li>- 계약자의 상장이익참여는 법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한편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한계가 있다고 보여짐</li> <li>- 주주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한편 계약자는 불가능</li> <li>- 계약자는 개별법리가 적용되며 배당부계약은 유상계약이며 보험계약내용이 중요</li> </ul>
이 재 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생보사가 '상호회사적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문제의 발단</li> <li>- '상호회사적 성격'이 있다는 점에 공감, 그러나 발상은 정반대임</li> <li>- pooling과 sharing은 보험의 본질이며 이 이념대로 만든 것이 상호회사임</li> <li>- 우리나라 생보사가 주식회사이면서 상호회사의 좋은 점을 가미 (e.g. 배당부 상품을 통한 계약자배당)했다고 하여 상호회사로 간주하려는 것은 무리</li> <li>- 미국의 경우 상호회사가 주식회사로의 전환시 상호회사의 주인인 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당은 당연하며 우리의 문제와는 틀림</li> </ul>

토 론 자	토 론 내 용
박 시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회사는 계같은 조직으로 비영리 상호부조 단체인 반면 주식회사는 영리 목적의 집단임</li> <li>- 실정법상 우리나라 생보사들이 주식회사인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한편 배당부상품의 계약자의 권리가 쟁점임</li> <li>-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계약자와 회사와의 관계는 채권채무관계임</li> <li>- 주식회사의 주주는 물권관계이며 채권행사권리가 없음 (e.g.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공적자금투여시 기존주권의 소각 또는 감자, 대한생명의 배당부계약자의 부담이 없었음)</li> <li>- 현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시장경제 자본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거나 계약자의 배당금청구권을 주주의 기업소유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li> <li>-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장시 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분문제는 별개임</li> </ul>
이 균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주식회사를 '상호회사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론적으로 무리</li> <li>- 배당부상품의 판매는 회사의 성격과 무관: 보험의 수지상등의 원칙, 넓은 의미의 상호주의와 상호회사를 혼동하고 있음</li> </ul>

## 2. 주주와 계약자의 위험공유

토 론 자	토 론 내 용
이 재 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이며 경영상의 위험부담을 하는 것은 아님</li> <li>- 계약자배당금의 부실이 있다면 이는 계약자의 경영위험의 부담이라기 보다는 정책당국의 책임 (e.g. 과다보험료 책정, 준비금의 과다적립 등)</li> </ul>
류 근 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권을 비롯한 모든 주식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는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위험을 어느 정도 공유(e.g. agency cost)</li> <li>- 우리나라 보험사의 경우 금융권에서 제일 먼저 보험보증기금을 도입 계약자의 위험을 감소시켰음</li> </ul>
정 홍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가 주식회사인 점은 분명, 그러나 가격의 비경제적 결정이 문제; 고가격 저배당으로 인한 차익이 발생됨</li> <li>- 경영리스크를 도산위험과 수익률위험으로 구분</li> <li>- 도산위험의 경우 계약자의 부담이 없었음</li> <li>- 그러나 계약자들은 상당히 많은 수익률 위험을 짐; 계약자는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li> <li>- 생보사들은 주식회사가 분명하고 공개시 상호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전환방식의 적용은 불법이고 부적합하지만 현금으로 계약자에게 보상하면서 보험사가 아주 많은 수준에서 양보해야 할 것임</li> </ul>
고 평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는 투자자가 아니므로 주주와 동일한 위험부담 논리는 부적절</li> <li>- 계약자의 권리의무는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li> <li>- 부실경영으로 인한 적자의 경우 이는 주주의 책임이며 계약자에게 전가될 수 없는 데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험공유가 안됨</li> </ul>

토 론 자	토 론 내 용
박 시 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저축의 경우 정부가 이자원금을 일부 보장하는 것은 저축이 투자가 아니기 때문</li> <li>- 배당부상품은 보장적 성격, 저축성, 계약자배당으로 인한 투자의 성격이 믹스돼 있는 한편 크게 봐서 배당부계약자들인 경영위험을 공유했다고 보기는 어려움</li> </ul>
이 균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가입은 위험전가를 의미하며 투자자인 주주와의 위험공유는 아님</li> <li>- 주주는 경영위험을 부담</li> <li>- 상법의 자본충실의 원칙, 보험업법의 여러 제도, 예금보험제도, 예탁금제도, 회사파산 시 보험계약의 포괄적 이전 등 계약자보호제도가 존재</li> <li>- 결과적으로 계약자의 위험부담은 극히 작음</li> </ul>

### 3. 생보사의 성장 및 이익창출 기여

### 4. 상장이익(및 주식배분) 비분

토 론 자	토 론 내 용
이 균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익기여도에 따른 문제는 복잡하며 광범위하게 보면 노동자,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기여자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임</li> <li>- 원칙적으로 기업이윤은 회사 자율권으로 해결하여야 함</li> </ul>
이 재 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규모에서 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99%계약자가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li> <li>- 계약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험업법 97조에서는 재평가적립금을 계약자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 주식회사형태에서는 특례적인 조치를 하고 있음</li> <li>- 그러나 부실화된 생보사의 경우 계약자의 기여도에 대한 처리에 대한 의문이 생김</li> <li>- 상장대상 보험사들의 잉여금적립은 경영능력의 결과이며 잉여금적립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모순</li> <li>- 생보사의 성장과 이익창출은 준비금때문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며 이는 은행 및 타 보험사들도 같이 혜택을 봄</li> <li>- 은행의 경우도 수탁자산을 가지고 부동산투자를 통한 이익창출을 하였으나 공개시 문제가 안됨</li> </ul>
정 홍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의 경우도 고객이 중요하며 그 동안 생보사의 성장은 시장경쟁 및 가격구조, 경제성장, 소비자와 회사를 동시 보호하는 감독정책, push형 영업, 보험상품의 특성에 기인</li> <li>- 일본의 경우 최초 생보사는 주식회사였으나 한 임원이 보험특성을 고려하여 최초의 상호회사를 설립</li> <li>-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보사업의 특성상 소액자본으로 주주가 대규모이익을 갖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li> <li>- 정부의 체신보험의 경우도 생보산업 전체의 성장에는 기여하지만 소유구조상 문제임</li> <li>- 성장 및 이익창출은 주주들의 경영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계약자들의 기여도를 상당히 인정하여야 함</li> </ul>

토 론 자	토 론 내 용
이 균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설립시 자본확정의 원칙; 주식액면 X 주식총수가 최저자본금이상이 되어야 함: 그 이후 액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li> <li>- 상장은 주식의 잠재가치를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하는 과정</li> <li>- 자산재평가차익을 계약자에 주식을 액면으로 주자는 의견이 있으나 주금납입후 액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e.g. 미국 캘리포니아주법)</li> <li>- 주식의 무상배분은 주주에 의한 인수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제3자 인수에 한정함</li> <li>- 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분은 정관의 개정이 필요하며, 정관개정에 의한 배분도 유상이어야 하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의한 배분은 불공정거래로서 결의한 이사들의 책임이 됨</li> <li>- 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분은 현행법 테두리내에서는 어려움</li> </ul>
정 홍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은 기본적으로 주식가격이 현실화되는 것임; 상장시 시장가격은 자산 시가, 향후 발생이익의 천가 등이 합산된 것임</li> <li>- 한 상장회사의 경우 한주당 70만원, 2천만주이면 14조원이 되는데 이중 어느 정도까지 주주가 미안한 마음 없이 가져갈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임</li> </ul>
류 근 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의 경우 예금주의 자금으로 성장하였으나 예금주에 대한 상장이익배분의 논쟁이 없음</li> <li>- 기여와 상장이익배분은 분리하여 생각하여야 함; 상장이익을 논하기에 앞서 유보금액의 주주와 계약자간 배분이 선행되어야 함; 기업의 순가치는 회사의 경영능력, 이미지, 장래성 등을 투자자들이 평가</li> <li>- 국내 생보사들은 주식회사형태이기 때문에 상장이익은 소유권자인 주주에게만 배분되는 것이 원칙</li> <li>- 회사가 경영전략적 차원(e.g. 마케팅측면에서 회사 이미지 제고, 해약률 감소등)에서 자발적으로 계약자에게 주식을 줄 수는 있겠으나 강제적인 배분은 불가</li> </ul>
고 평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이익의 성격은 복합적; 자본금투자수익, 보험료초과징수분, 경영성과 등</li> <li>- 수십년간의 영업결과로 엄청난 상장이익이 발생</li> <li>- 엄청난 상장이익이 소수 가족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국민적 정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익배분도 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li> </ul>
박 시 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가치는 액면보다 높을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음</li> <li>- 고객의 기여를 고려하는 등 기여원천을 확대하면 끝이 없음(e.g. 은행의 고객, 자동차회사의 고객 등)</li> <li>- 주식회사의 원칙에 의해 주식배당은 고주의 고유권한; 미국예: Harford사, Nationwide사의 경우 주식회사이면서 배당부상품을 판매하였고 상장시 2,000여백씩 상장주가가 올랐으나 이런 논쟁은 없었음</li> <li>- 상장전이나 상장후나 주식회사 제도의 주주의 권리와 의무,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는 법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바 상장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당연</li> </ul>
이 균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이익중 자본이득의 계약자배분은 현행법개정이나 주주의 결의에 의한 정관개정,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 때만 가능</li> <li>- 상장이익중 회사차원의 상장이익인 유가증권평가익은 계약자에게 현금배당이 마땅</li> <li>- 재평가적립금의 현금배당과 함께 계약자에게 공모주우선청약권을 주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임</li> </ul>

## 5. 기존 재평가액중 유보액 처리

## 6. 신규 자산재평가 처리 방법

토 론 자	토 론 내 용
정 홍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두가지는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함</li> <li>- 기존의 방법은 자본으로 처리하여 문제가 생김</li> <li>- 기본적으로 보험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여야 할 것임</li> </ul>
류 근 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인 배당부상품 계약자에게 부동산재평가이익까지 참여시킨다면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변액보험은 의미를 상실</li> <li>- 보험사의 순자산(자본+잉여금)은 계약자잉여금으로 표현함; 이는 계약자의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돈인 한편, 계약자잉여금이라 하여 다 계약자의 돈은 아님</li> <li>- 지난번평가이익중 주주가 30% 계약자가 40%를 배분해 가고 30%가 유보되어 있는 바 이는 주주의 돈도 계약자의 돈도 아니기 때문에 이의 사용에는 반대</li> <li>- 유보이익은 차후 추가적인 보험금지급을 위한 것인 바 이를 배분하는 것은 지불능력유지라는 감동정책과 모순</li> <li>- 굳이 배분한다면 과거 계약자들에게 과거 배당을 보완하는 것으로 사용</li> </ul>
고 평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익원천에 따라 이익이 배분되어야 함</li> <li>- 자본금투자수익은 주주에게, 보험료 초과징수분은 계약자에게 배분되고, 경영성과는 주주와 계약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li> </ul>
이 재 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재평가액 처리는 '90년 8월 재무부의 행정지침에 의한 것임</li> <li>- 이 지침은 30%의 처리유보액을 자본계정으로 처리하여 결손보전 또는 계약자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자기자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한 바 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당이 불가</li> <li>- 최근 금감원 상장자문위원회의 계약자 주식배당안은 기존 공문과 배치되는 자가 모순</li> <li>- 국민정서를 고려한다면 현금배당을 하고 공모주 우선청약권을 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li> <li>- 그러나 행정지시나 여론몰이식 방법은 안되며 주주의 자유재량권에 의한 경영전략적 측면에서 계약자배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li> </ul>
박 시 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래 자산재평가법은 재평가이익에서 세금납부와 결손금보전을 하고 남은 잔여금을 자본적립하도록 함</li> <li>- 생보사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부를 계약자배당을 위해서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보험사고나 지불불능상태, 배당불능상태를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임</li> <li>- 만약 생보사가 경영을 잘못하여 유보액을 써버렸으면 유보액은 없는 것이며 현재 공개대상 생보사들이 유보액이 있다는 것은 경영을 잘한 결과임</li> <li>- 계약자의 실체는 매우 불투명: 과거, 현재, 미래 계약자가 포함</li> <li>- 유보액을 사용한 공익재단의 설립은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이 의문시 되며 계약자들의 실익은 매우 제한적임</li> </ul>

## 7. 해약식 초과이익 처리 방법

## 8. 이익배분 기준 적정성

사회자 comment:

- 앞으로 자유 경쟁시장원리에 의하여 시장경쟁이 유도된다면 이익배분문제는 상당히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완전한 시장경쟁의 원리가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임
- 시간제약으로 인하여 토론 생략

## Ⅲ. 討論內容 速記(省略)

## 삼성·교보생명 자본계정 분석('06.3월)

(단위 : 억원)

구 분	삼성생명	교보생명
<b>I. 자본금</b>	<b>1,000</b>	<b>925</b>
1. 보통주자본금	1,000	925
2. 우선주자본금	-	-
<b>II. 자본잉여금</b>	<b>939</b>	<b>918</b>
1. 자본준비금	-	15
2. 재평가적립금	939	903
( '90년 자산재평가분 <sup>※</sup> )	(878)	(662)
<b>III. 이익잉여금</b>	<b>39,896</b>	<b>12,610</b>
1. 이익준비금	500	463
2. 기타법정적립금	23	-
3. 임의적립금	-	-
4. 처분전이익잉여금	39,373	12,147
<b>IV. 자본조정</b>	<b>40,664</b>	<b>110</b>
1. 주식할인발행차금	-	-
2. 자기주식	-	-
3.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9,523	34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이익	259	76
5. 해외사업환산대	-	-
6. 파생상품평가손익	10,881	-
<b>자본총계</b>	<b>82,499</b>	<b>14,562</b>

※ '90년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경우, 재평가처리지침('90년 재무부고시)에 의거 궁극적으로 계약자에게 배분될 금액





김 애 실 의 원



# 1. 상호저축은행 관련

- 부실채권 비율현황
- 1998년도 이후 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

☐ 상호저축은행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현황

(단위 : %)

	'02.6.말	'03.6.말	'04.6.말	'05.6.말	'06.6.말
고정이하 여신비율	12.4	11.2	12.1	12.6	10.4 (잠정)

□ 1998년도 이후 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

	구분	조치 기준	비고
'98.6월	경영개선권고	- BIS비율 5% 미만	적기시정 조치근거 마련
	경영개선요구	- BIS비율 3% 미만	
	경영개선명령	- BIS비율 1% 미만 -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98. 12월	경영개선권고	- BIS비율 5% 미만 - 거래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BIS비율 5%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기준 추가
	경영개선요구	- BIS비율 3% 미만 - 거래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BIS비율 3%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개선명령	- BIS비율 1% 미만 -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99.3월	경영개선권고	- BIS비율 4% 미만 - 거래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BIS비율 4%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기준 하향조정
	경영개선요구	- BIS비율 2% 미만 - 거래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BIS비율 2%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개선명령	- BIS비율 1% 미만 -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구분	조치 기준	비고
'99.12월	경영개선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S비율 4% 미만</li> <li>-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BIS비율 4%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 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li> </ul>	조치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등급) 추가
	경영개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S비율 2% 미만</li> <li>-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BIS비율 2%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li> </ul>	
	경영개선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S비율 1% 미만</li> <li>-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li> </ul>	-
'04.6월	경영개선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S비율 5% 미만</li> <li>-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BIS비율 5%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 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li> </ul>	조치기준 상향조정
	경영개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S비율 3% 미만</li> <li>-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BIS비율 3%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li> </ul>	
	경영개선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S비율 1% 미만</li> <li>-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li> </ul>	-

## 2. 상호저축은행 관련

-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지표(BIS비율, 부실채권 등) 산정방식 설명(은행권과 비교하여)

□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활용되는 계량평가지표 중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자본적정성지표)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연체대출채권 비율(자산건전성지표)의 산정방식 설명

### 가. BIS기준자기자본비율(자본적정성지표)

#### (1) 개념

-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국제적 기준으로서 연결대차 대조표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위험가중자산)를 자기자금(자기자본)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 (2) 산정방식

- BIS자기자본비율 : 
$$\frac{\text{BIS기준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 \frac{\text{기본자본} + \text{보완자본} - \text{공제항목}}{\sum(\text{대차대조표자산} \times \text{위험가중치}) + \sum(\text{부외항목} \times \text{신용환산율} \times \text{위험가중치})}$$
- BIS기준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의 계산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붙임) 참조

### (3) 은행 BIS자기자본비율과의 비교

구분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	은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기본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li> <li>· 자본준비금</li> <li>· 이익잉여금</li> <li>· 연결관계회사의 외부주주지분</li> <li>· 자본조정중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li> <li>· 자본잉여금</li> <li>· 이익잉여금</li> <li>· 연결자회사의 외부주주지분</li> <li>· 신종자본증권*</li> </ul>
보완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평가적립금</li> <li>· 자본조정중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시장성 있는 경우에 한함)의 45%</li> <li>· 대손충당금(위험가중자산의 1.25%이내)</li> <li>· 영구후순위채무, 누적적우선주</li> <li>· 만기 5년이상 기한부후순위채무, 만기 5년 이상 후순위예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평가적립금</li> <li>· 자본조정중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및 지분 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시장성 있는 경우에 한함)의 45%</li> <li>· 정상 및 요주의 분류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위험가중자산의 1.25%이내)</li> <li>· 영구후순위채무, 누적적우선주</li> <li>· 만기 10년이상 기한부후순위채무 (상위 기한부후순위채무) 및 만기 5년이상 기한부후순위채무 (하위 기한부후순위채무)</li> <li>· 신종자본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상환우선주</li> </ul>
공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권</li> <li>· 이연법인세차</li> <li>· 주식할인발행차금</li> <li>· 자기주식</li> <li>· 금융업 영위 비연결관계회사 출자금</li> <li>· 자기자본비율 제고 목적으로 타 저축은행 및 금융기관과 상호보유한 자본조달수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li> <li>· 이연법인세차</li> <li>· 주식할인발행차금</li> <li>· 자기주식</li> <li>· 금융업 영위 비연결자회사 출자금</li> <li>· 자기자본비율 제고 목적으로 타 은행과 상호보유한 자본조달수단</li> <li>·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액</li> <li>· 자본조정중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및 지분 법적용투자주식 평가손실</li> <li>·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li> <li>· 금융지주회사 또는 동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다른 자회사등과 상호보유한 자기자본</li> </ul>
위험 가중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만기, 담보 및 보증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부여된 위험가중치(0,10,20,50,100%)를 자산에 곱하여 산출</li> <li>· 영업권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만기, 담보 및 보증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부여된 위험가중치(0,10,20,50,100%)를 자산에 곱하여 산출</li> <li>· 영업권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제외</li> <li>· 대손충당금 중 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는 부분 제외</li> </ul>

\* 일정요건(비누적적 영구 우선주 또는 채권형태일 것,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등 보완자본보다 후순위 특약조건일 것, 부실금융기관지정 등 사유시 배당지급 정지조건일 것, 은행이 배당의 시기와 배당규모의 결정권을 가질 것, 발행후 5년 이내 상환되지 않을 것 등) 충족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증권

## 나. 연체대출채권비율(자산건전성지표)

### (1) 개념

- 저축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의 질적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향후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 (2) 산정방식

- 연체대출채권비율 :  $\frac{\text{연체대출채권}}{\text{총대출채권}} \times 100$
- 연체대출채권 :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미납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권
- 총대출채권 : 계급부금, 부금급부금, 일반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36)의 자산건전성분류대상 대출채권

### (3) 은행 연체대출채권비율과의 차이

-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의 범위에서 콜론이 제외\*되나 은행은 포함
- \* 저축은행의 콜거래는 중앙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대출채권에서 제외

## 다. 고정이하여신비율(자산건전성지표)

### (1) 개념

- 총여신에 대한 고정이하 분류여신 비율로서 문제여신 보유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 (2) 산정방식

- 고정이하여신비율 :  $\frac{\text{고정이하여신}}{\text{총여신}} \times 100$



- 고정이하여신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36)의 자산건전성분류에 따른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자산의 합계
- 총여신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36)의 자산건전성분류 대상이 되는 대출채권, 콜론 및 확정지급보증의 합계

### (3) 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과의 차이

- '00년 은행의 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 Forward Looking Criteria) 도입으로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달라짐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여신자산의 건전성을 5등급(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등급에 대해 일정한 대손충당금 적립률(0.5, 2, 20, 75, 100%)을 적용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비교

구분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	은행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정상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와 3개월미만의 연체여신	·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요주의	·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 <예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등	·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고정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등 경영내용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 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여신 · <예시> 6개월 이상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여신 등	·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등
회수의문	·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등
추정손실	·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 <예시>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채무관계인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한 여신 등	·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등

(붙임)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1> 건전성비율 산정기준

####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 가. 자기자본비율 산식

자기자본비율은 연결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 및 총자산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begin{aligned} \text{○ 자기자본비율} &= \frac{\text{BIS기준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 &= \frac{\text{기본자본} + \text{보완자본} - \text{공제항목}}{\sum(\text{대차대조표자산} \times \text{위험가중치}) + \sum(\text{부외항목} \times \text{신용환산율} \times \text{위험가중치})} \end{aligned}$$

##### 나. 연결대차대조표 작성방식

###### (1) 연결범위

(가)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로 한다.

(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회사는 상호저축은행이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호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아래 1, 2, 3에 해당되는 다른 회사를 '종속회사'라 한다)로 한다. 다만 주식 분포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력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2.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3.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동 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 등과 담보제공액 및 상호저축은행 대차대조표 난외 지급보증액의 합계액이 상호저축은행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다른 회사 납입자본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상호저축은행과 종속회사(종속회사의 종속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1 내지 3”에 규정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실질지배력을 보유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다) (나)의 규정에 의한 종속회사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상호저축은행 경영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 금융서비스업(신용관리, 전산시스템, 연구조사, 현금수송 등)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종속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한다.

(라) 기타 작성기준이나 절차는 연결재무제표준칙 및 관련 예규 등에 의한다.

## (2) 작성요령

(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연결재무제표준칙에 의거 연결회사 상호간의 투자계정과 자본계정 및 채권과 채무를 상계 제거하여 작성한다.

(나) 양식은 공고용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되, 연결재무제표준칙상 연결대차대조표 작성관련 항목(연결조정계정, 외부주주지분 등)을 추가한다.

## 다. 자기자본의 계산

### (1) 기본자본

- 1) 자본금
- 2) 자본준비금
- 3) 이익잉여금
- 4) 연결관계회사의 외부주주지분

\* 관계회사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개정 2002. 1. 31>

5) <삭제 2003. 6. 13>

6) 자본조정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개정 2003. 6. 13>

(2) 보완자본

1) 재평가적립금

2) 자본조정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관련분에 한한다)의 100분의 45 상당액 <개정 2003. 6. 13>

3) 대손충당금(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에서 산입)

4) 영구후순위채무,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발행자금

5) 기한부 후순위채무

차입기간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 차입자금(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권 발행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만기가 5년 이상인 주주(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 이상 소유자)의 후순위예금

6) <삭제 2002. 1. 31>

(3) 공제항목

1) 영업권 상당액, 연결조정차계정 상당액, 이연법인세차계정 상당액, 주식할인발행 자금 및 자기주식계정은 자기자본(기본자본)에서 공제한다.

2)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연결 관계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 1. 31>

3)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상호 보유한 타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기관에 의한 자본조달수단(주식, 부채성 자본조달수단,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차입 자금 및 후순위예금)은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4) 보완자본의 한도 등

1) 보완자본의 한도는 1998. 12월 가결산시부터는 그 한도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1999. 6월 결산시부터는 기본자본의 200%범위내에서, 2000. 6월 결산시부터는 기본자본의 100% 범위내에서 자기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2) <삭제 2002. 1. 31>

3) 부채성자본 조달수단 발행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 조건일 것

\*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채권전액을 상환받은 후에야 상환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

② 만기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

③ 상호저축은행이 영업을 지속하는 상태에서 손실의 보전에 충당이 가능할 것

④ 상호저축은행의 수지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자지급 의무의 연기가 허용될 것

- 4) 기한부 후순위채무는 기본자본의 50%이내(단, 기한부 후순위예금은 기본자본의 범위내)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잔존기간이 5년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하되, 만기 5년인 후순위예금으로서 예치 당시, 예치기간 만료후 자동적으로 같은 기간을 후순위로 재예치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약정기간을 잔존기간에 산입한다.

가) 기한부 후순위 차입자금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②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전액을 상환받을 때까지 기한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나) 기한부 후순위 예금

①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② 상호저축은행의 수지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자지급 의무의 연기가 허용될 것

③ 예금예치조건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없을 것

④ 예금 금리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5) 상호저축은행은 타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
- 6) 상호저축은행은 부채성 자본조달수단 및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자금공여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등을 통하여 관련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 7) 기한부 후순위채무는 후순위예금을 예금자의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 또는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장이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수준 등을 고려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상호저축은행이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을 발행하거나 후순위예금을 제외한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라. 위험가중자산의 계산

### (1) 대차대조표 자산

- 1) 대차대조표 항목의 위험가중자산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부여된 위험가중치(0, 10, 20, 50, 100%)를 해당자산에 곱하여 산출한다(<표1> 참조)
- 2) 대차대조표 자산 중 영업권, 연결조정차계정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은 위험가중 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2. 1. 31>
- 3)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상계하여 동 설정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실질자산을 산출한다.
- 4) 지급보증은 부외자산으로 간주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이 경우 부외자산의 신용환산율을 100%로 하여 환산된 금액에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 5) “다. (2). 6)”에서 일정액을 출연하는 자금지원 방법인 경우 차입금원본 해당액에 대하여는 이 기준 “<표1>대차대조표자산의 위험가중치”중 1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에 가산한다.
- 6) 증권투자신탁 등을 근거로 발행된 수익증권(이하“수익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험가중자산을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① 약관상 당해 수익증권 편입가능자산의 위험가중치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거나 약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위험가중치가 높은 편입한도 비율부터 적용)한다. 다만 최저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 ② 위 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기유동성 확보를 위해 당해 신탁재산의 5%이내에서 보유하는 유동성이 높고 신용등급이 우량한 CP,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등 단기금융자산(현금, 예금 제외)은 위험가중치 적용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③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익증권은 당해 약관에 신탁재산의 운용범위와 운용내역에 대하여 수익자를 위한 공시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고,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 거래되거나 환매제한이 없어야 한다.
  - ④ 신탁재산의 위험회피 목적 이외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 가능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표1〉 대차대조표 자산의 위험가중치

가중치	자 산 내 용	계 정 과 목 (예 시)
0%	1. 보유중인 현금 (외국통화, 금 포함)  2. 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3. 법정 지급준비예탁금  4. 당해 상호저축은행예금에 의해 담보된 채권	- 통화, 외국통화, 귀금속  -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 한국은행 및 정부관련 유가증권 ·통안증권, 재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 중앙회의 지준예치금  - 예·적금담보대출, 계·부금급부금 및 계약금액내대출중 수입된 계·부금 범위내의 관련 대출 채권.
10%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과 동 기관의 보증 또는 동 기관 채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①지방자치법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관 ②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 ③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 (신용보증기금 등) ④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 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공사 다만, ② 및 ③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함	- 원화대출금중 관련채권  - 지방채 등
20%	6.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한 채권 또는 그에 의해 보증된 채권	- 국내은행 관련채권 ·대출금중 관련채권(은행보증대출 등) ·콜론(은행 및 중앙회) ·환매조건부채권매수(비은행분 제외) 등 - 중앙회에의 예치금(지준금 제외)



가중치	자 산 내 용	계 정 과 목 (예시)
20%	<p>7. 다음의 국내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p> <p>①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이상인 기관 또는 50%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p> <p>②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p> <p>8. 추심과정에 있는 현금항목</p>	<p>-미결제환대, 은행타점권 등</p>
50%	<p>9. 주거용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된 대출</p> <p>9-1. 동일인에 대한 3백만원이하의 대출중 감독규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상 “정상”으로 분류되는 여신 &lt;삭제 2003. 1. 1.&gt;</p> <p>10.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대출</p>	<p>-직원주택대여금, 중소기업 및 가계자금대출 중 관련대출</p>
100%	<p>11. 상기이외의 채권 및 자산</p> <p>·민간부문에 대한 채권</p> <p>·업무용 및 비업무용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해당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다)</p> <p>·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조달 수단(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하지 않는 경우)</p> <p>·기타 모든 채권 및 자산</p>	<p>-대출금(민간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등)</p> <p>-유가증권(사채, 주식 등)</p> <p>-업무용·비업무용 고정자산</p> <p>-기타자산 등</p>

\* 은행에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BIS자기자본비율 또는 유사비율 규제대상금융기관을 포함(증권, 증권, 보험<보증보험 제외>)한다.

### 3. 외부감사대상 관련

- 1) 1998년 이후 연도별('06년 상반기까지)/자산규모별/상장·비상장별 외부감사 대상 법인수 현황
- 2) 2003~'06.6월말 현재 연도별/회계법인별 지정회사수 현황
- 3) 2003~'06.6월말 현재 연도별/회계법인별 지정감사보수 현황
- 4) 2003~'06.6월말 현재 연도별/회계법인별 매출액 현황

☐ '98년 이후 연도별/자산규모별/상장·비상장별

- 붙임1 참조

☐ '03~'06.6월말 현재 연도별/회계법인별 지정회사수 현황

- 붙임2 참조

☐ '03~'06.6월말 현재 연도별/회계법인별 지정감사보수 현황

- 붙임2 참조

☐ '03~'06.6월말 현재 연도별/회계법인별 매출액 현황

- 붙임3 참조

자산규모구분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비상장	계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비상장	계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비상장	계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비상장	계				
10 ~ 70	0	0	539	539	2	0	309	311	2	0	274	276	2	0	624	626				
70 ~ 80	0	0	406	406	0	0	277	277	6	0	315	321	2	0	393	395				
80 ~ 90	1	0	436	437	0	0	387	387	0	1	395	396	1	3	420	424				
90 ~ 100	0	0	440	440	2	0	367	369	0	0	402	402	0	8	455	463				
100 ~ 200	8	0	2257	2265	4	0	2309	2313	6	1	2474	2481	15	120	2785	2920				
200 ~ 300	17	0	908	925	15	0	966	981	16	1	1087	1104	13	139	1080	1232				
300 ~ 500	41	0	759	800	50	0	869	919	45	0	991	1036	44	172	882	1098				
500 ~ 700	54	0	352	406	54	0	394	448	43	1	485	529	48	95	420	563				
700 ~ 800	25	0	128	153	17	0	141	158	22	0	143	165	21	28	129	178				
800 ~ 1000	39	0	181	220	39	0	196	235	42	0	224	266	43	34	180	257				
1000 ~ 2000	104	0	347	451	122	0	345	467	128	0	384	512	125	63	349	537				
2000 ~ 3000	67	0	120	187	71	0	105	176	85	0	128	213	76	14	107	197				
3000 ~ 5000	63	0	80	143	68	0	92	160	66	0	99	165	58	10	75	143				
5000 ~ 7000	34	0	26	60	37	0	30	67	33	0	41	74	32	5	39	76				
7000 ~ 8000	14	0	13	27	14	0	11	25	14	0	11	25	10	0	11	21				
8000 ~ 10000	16	0	23	39	20	0	22	42	20	0	23	43	20	2	19	41				
10000 ~ 20000	52	0	30	82	43	0	32	75	47	0	38	85	47	2	39	88				
20000 ~	85	0	49	134	90	0	40	130	77	0	50	127	74	15	72	161				
계	620	0	7094	7714	648	0	6892	7540	652	4	7564	8220	631	710	8079	9420				

주) 감사인 계약체결보고 기준

자산규모구분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주권상장	포스다상장	비상장	계	주권상장	포스다상장	비상장	계	주권상장	포스다상장	비상장	계	주권상장	포스다상장	비상장	계	주권상장	포스다상장	기타	계
10 ~ 70	0	6	441	447	1	9	515	525	2	26	600	628	5	24	49	78				
70 ~ 80	1	3	387	391	3	7	412	422	0	15	537	552	1	17	925	943				
80 ~ 90	0	7	503	510	0	8	598	606	3	9	658	670	1	8	1066	1075				
90 ~ 100	2	3	551	556	0	9	595	604	0	10	694	704	5	12	915	932				
100 ~ 200	12	167	3212	3391	17	173	3626	3816	16	161	4204	4381	20	163	4683	4866				
200 ~ 300	18	167	1225	1410	17	172	1422	1611	18	151	1610	1779	18	158	1666	1842				
300 ~ 500	56	205	1021	1282	51	214	1132	1397	50	226	1253	1529	56	225	1308	1589				
500 ~ 700	58	110	435	603	46	103	533	682	45	112	594	751	49	108	621	778				
700 ~ 800	20	35	154	209	22	38	176	236	20	32	191	243	20	33	202	255				
800 ~ 1000	38	38	201	277	58	40	206	304	47	44	252	343	50	46	264	360				
1000 ~ 2000	127	59	393	579	126	58	463	647	133	66	518	717	135	61	533	729				
2000 ~ 3000	90	11	133	234	89	20	153	262	81	16	147	244	79	17	143	239				
3000 ~ 5000	60	16	77	153	62	9	94	165	67	13	110	190	69	15	109	193				
5000 ~ 7000	37	3	39	79	38	2	45	85	30	2	54	86	30	2	56	88				
7000 ~ 8000	12	2	15	29	16	2	16	34	18	2	21	41	17	3	20	40				
8000 ~ 10000	16	4	23	43	15	0	17	32	19	0	24	43	20	0	28	48				
10000 ~ 20000	44	1	39	84	45	1	57	103	45	1	45	91	44	0	52	96				
20000 ~	70	6	48	124	73	5	48	126	78	4	50	132	76	5	55	136				
계	661	843	8897	10401	679	870	10108	11657	672	890	11562	13124	695	897	12695	14287				

주) 감사인 계약제

## 2.3) '03~'05 회계법인별 지정회사수 및 감사보수 현황

(단위 : 원)

연 번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회계법인명	회사수	지정감사보수	회계법인명	회사수	지정감사보수	회계법인명	회사수	지정감사보수
1	가립	1	57,000,000	가립	1	82,000,000	가립	1	46,000,000
2	남일	1	57,000,000	남일	1	63,000,000	나무	1	42,500,000
3	다산	1	33,070,000	다산	3	78,782,000	남일	2	97,000,000
4	다인	2	162,000,000	다인	1	100,000,000	다산	6	219,900,000
5	대성	3	194,726,000	대성	3	106,700,000	다인	2	150,000,000
6	대주	7	575,500,000	대주	8	702,674,000	대명	3	137,947,000
7	대현	1	17,000,000	대현	1	37,000,000	대성	5	177,000,000
8	미래	1	52,000,000	동남	1	22,000,000	대주	10	289,020,000
9	보람	1	101,600,000	동명	1	56,960,000	대현	2	56,530,000
10	부일	1	60,000,000	미래	1	54,000,000	동남	3	164,600,000
11	삼경	3	230,795,000	보람	1	110,000,000	동명	2	61,330,000
12	삼덕	1	88,450,000	부일	1	41,000,000	두레	1	24,563,000
13	삼영	1	42,000,000	삼경	4	240,000,000	미래	2	90,000,000
14	삼일	29	2,260,000,000	삼덕	8	419,180,000	보람	2	57,000,000
15	삼정	15	2,010,200,000	삼영	1	21,000,000	부일	3	160,300,000
16	삼화	1	37,400,000	삼일	57	4,305,771,000	삼경	6	195,280,000
17	상록	1	52,000,000	삼정	15	3,091,800,000	삼덕	15	530,528,000
18	서일경영	1	64,000,000	삼화	1	60,000,000	삼영	1	38,300,000
19	선명	1	148,000,000	상록	1	52,000,000	삼일	99	4,999,000,000
20	선일*	2	59,138,000	새빛	1	30,000,000	삼정	36	3,046,273,000
21	선진	1	54,000,000	새시대	1	36,000,000	삼화	3	124,000,000

(단위 : 원)

연 번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회계법인명	회사수	지정감사보수	회계법인명	회사수	지정감사보수	회계법인명	회사수	지정감사보수
22	성도	1	45,000,000	서일경영	2	88,870,000	상록	2	70,000,000
23	성신	1	70,000,000	선일*	1	31,000,000	새빛	4	131,000,000
24	세림	1	38,368,000	선진	1	53,300,000	새시대	2	63,802,000
25	세일	1	53,450,000	성도	3	91,000,000	서일경영	3	220,430,000
26	세정*	1	35,900,000	성신	1	40,000,000	서정	2	39,500,000
27	승현	1	85,000,000	세림	1	35,000,000	선명	1	35,000,000
28	신성	1	27,000,000	세영	1	37,924,000	선진	3	90,687,000
29	신우	3	155,000,000	세일	1	35,000,000	성도	3	118,038,000
30	신한	8	570,180,000	세현	1	51,163,000	성신	2	59,000,000
31	안건	2	380,000,000	신우	4	155,700,000	성지	1	33,000,000
32	안진	16	1,840,830,000	신원	1	37,000,000	세림	2	70,000,000
33	열린	1	26,000,000	신한	7	496,210,000	세영	2	91,924,000
34	우리	2	37,000,000	안건	6	337,680,000	세일	2	90,000,000
35	위드	1	30,000,000	안진	10	979,500,000	세현	2	79,265,000
36	이정	1	28,700,000	열린	1	30,000,000	신성	2	76,540,000
37	이지	1	22,390,000	우리	3	184,683,000	신영	2	48,800,000
38	이촌	1	43,905,000	위드	1	33,000,000	신우	8	345,572,000
39	인덕	2	108,720,000	이정	1	25,000,000	신원	3	138,000,000
40	인일	1	44,290,000	이촌	1	24,550,000	신정	2	70,000,000
41	정연	1	62,100,000	인덕	2	99,599,000	신한	15	540,006,000
42	정일	1	40,000,000	인일	1	14,000,000	신화	3	184,490,000
43	제원	2	60,000,000	일신	1	20,000,000	안진	62	4,241,636,000
44	지성	1	15,000,000	정연	1	21,000,000	열린	2	56,000,000
45	합	1	40,000,000	정일	1	40,000,000	우리	7	257,785,000

(단위 : 원)

연 번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회계법인명	회사수	지정감사보수	회계법인명	회사수	지정감사보수	회계법인명	회사수	회계법인명	회사수	지정감사보수	회계법인명
46	천지	2	46,500,000	제원	3	130,000,000	우림	2	우림	2	46,000,000	우림
47	충정	1	120,000,000	참	1	33,054,000	참	2	위드	2	80,000,000	위드
48	태영	1	113,000,000	천지	1	42,000,000	천지	2	이정	2	65,000,000	이정
49	하나*	6	523,000,000	충정	1	51,480,000	충정	2	이지	2	100,000,000	이지
50	한길	2	115,568,000	태영	2	190,000,000	태영	5	이춘	5	139,550,000	이춘
51	한림	1	30,000,000	하나*	9	533,500,000	하나*	4	인덕	4	128,640,000	인덕
52	한영	6	939,630,000	한길	1	62,400,000	한길	2	인일	2	56,000,000	인일
53	화인경영	2	93,000,000	한림	1	28,000,000	한림	2	일신	2	75,000,000	일신
54				한영	3	759,000,000	한영	1	재정	1	35,000,000	재정
55				화인경영	3	123,900,000	화인경영	2	정동	2	62,560,000	정동
56								2	정연	2	62,000,000	정연
57								2	정일	2	65,160,000	정일
58								1	정진	1	9,500,000	정진
59								4	제원	4	143,060,000	제원
60								1	제일	1	24,000,000	제일
61								1	중앙	1	36,000,000	중앙
62								1	지성	1	33,000,000	지성
63								1	지암	1	50,000,000	지암
64								2	참	2	85,000,000	참
65								1	천지	1	35,000,000	천지
66								2	청안	2	33,200,000	청안
67								3	충정	3	154,470,000	충정
68								2	태영	2	67,000,000	태영
69								1	한경	1	45,000,000	한경

(단위 : 원)

연 번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회계법인명	회사수	지정감사보수	회계법인명	회사수	지정감사보수	회계법인명	회사수	지정감사보수
70							한길	2	83,582,000
71							한림	2	62,870,000
72							한미	2	85,000,000
73							한영	61	3,062,249,000
74							한울	3	130,000,000
75							화인경영	6	258,400,000
76							호림	1	30,000,000
합 계		148	12,195,410,000		190	14,624,380,000		467	23,199,787,000

\* 선일, 세정, 하나회계법인은 피합병소멸법인



### 3년간 회계법인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2003사업연도 (02.4.1~03.31)		2004사업연도 (04.4.1~05.3.31)		2005사업연도 (05.4.1~06.3.31)	
	회계법인명	매출액	회계법인명	매출액	회계법인명	매출액
1	가립	1,537	가립	2,948	가립	3,993
2	광장	1,691	나무	135	나무	2,291
3	남일	4,696	남일	4,893	남일	4,843
4	다인	1,678	다산	3,089	다산	9,019
5	대성*	1,474	다인	2,072	다인	3,047
6	대주	28,308	대명	3,012	대명	5,841
7	대현	3,484	대성*	9,439	대성*	7,933
8	동남	5,136	대주	30,176	대주	34,565
9	동명	3,378	대현	4,041	대현	6,594
10	미래	4,342	동남	5,687	동남	6,264
11	보람	2,175	동명	3,288	동명	3,137
12	부일	8,440	두레	747	동원	2,334
13	삼경	6,895	미래	4,750	두레	3,889
14	삼덕	16,193	보람	2,435	리안	21
15	삼빛	483	부일	8,631	미래	4,999
16	삼영	1,312	삼경	6,519	보람	2,827
17	삼일	280,014	삼덕	17,364	부일	9,200
18	삼정	65,965	삼영	1,964	삼경	7,245
19	삼화	7,339	삼일	296,265	삼덕	18,669
20	상록	1,005	삼정	81,751	삼영	2,464
21	새빛	2,640	삼화	6,710	삼일	311,345
22	새시대	2,947	상록	1,586	삼정	106,620
23	서일경영	3,763	새빛	3,842	삼화	6,449
24	서정	40	새시대	3,667	상록	1,848
25	선명	1,251	서일경영	4,127	상지원	341
26	선일	1,136	서정	1,551	새빛	4,288
27	선진	7,473	선명	1,625	새시대	5,063
28	성도	7,659	선진	7,639	서일경영	4,101
29	성신	2,342	성도	8,707	서정	1,675
30	세림	3,188	성신	2,135	선명	1,925
31	세영	2,054	성지	294	선진	8,433
32	세일	2,084	세림	4,108	성도	8,619
33	세현	2,873	세영	2,948	성신	2,171
34	송현	6,975	세일	2,679	성지	1,850
35	신성	4,614	세현	2,523	세림	5,071
36	신영	26	송현	3,047	세영	3,435
37	신우	15,128	신성	5,108	세일	4,212
38	신원	4,077	신영	1,008	세진	1
39	신정	385	신우	18,497	세현	3,301
40	신한	22,419	신원	4,185	송현	2,709

연번	2003사업연도 (02.4.1~03.31)		2004사업연도 (04.4.1~05.3.31)		2005사업연도 (05.4.1~06.3.31)	
41	신화	1,137	신정	2,306	신성	4,909
42	안건	37,823	신한	22,864	신영	1,413
43	안진	62,768	신화	2,034	신우	19,621
44	열린	1,239	안건	38,112	신원	4,632
45	영화	57,363	열린	1,529	신정	2,732
46	우리	9,836	우리	10,719	신한	24,943
47	웅지	1,816	우림	836	신화	2,717
48	위드	2,693	위드	3,223	안건	2,320
49	이원	3,836	이원	4,219	안진	147,717
50	이정	2,322	이정	2,672	열린	1,453
51	이지	1,704	이지	1,485	예일**	-
52	이춘	4,930	이춘	6,046	우리	12,411
53	인덕	5,775	인덕	6,143	우림	2,588
54	인솔	2,454	인일	8,358	원	304
55	인일	8,026	일신	2,564	위드	4,388
56	일신	2,024	일품	471	이정	3,053
57	정동	690	재정	1,204	이지	2,181
58	정연	3,848	정동	2,342	이춘	7,199
59	정일	3,287	정연	4,016	인덕	6,467
60	제원	6,823	정일	3,440	인일	8,482
61	제일	-	정진	89	일신	3,303
62	중앙	-	제원	7,175	재정	2,819
63	참	1,380	제일	2,633	정동	5,223
64	청안	-	중앙	1,784	정연	4,489
65	충정	2,567	지성	2,329	정일	4,450
66	태영	1,511	지암	0	정진	4,121
67	하나	39,642	참	2,687	제원	6,660
68	한길	3,755	천지	2,241	제일	4,105
69	한림	3,010	청안	3,555	중앙	2,669
70	한미	677	충정	3,425	지성	3,299
71	한울	407	태영	2,338	지암	298
72	화인경영	11,469	하나안진	85,862	지평	2,928
73			한경	333	참	3,773
74			한길	3,721	천지	2,392
75			한림	3,574	청안	4,411
76			한미	1,520	충정	4,431
77			한영	60,691	태영	2,055
78			한울	1,509	한경	1,677
79			화인경영	13,142	한길	3,605
80					한림	3,877
81					한미	3,061
82					한영	100,250
83					한울	7,358
84					현대	-

연번	2003사업연도 (02.4.1~03.31)		2004사업연도 (04.4.1~05.3.31)		2005사업연도 (05.4.1~06.3.31)	
85					화인경영	16,501
86					효림	2,098
	합계	823,431	합계	898,383	합계	1,082,015

\* 대성회계법인은 6월결산법인이므로 전기 수치 사용

\*\* 예일은 6월결산법인이며 2005.11.16 신설되어 미반영

#### 4. 적기시정조치 관련

##### 4-1. 적기시정조치 발동 법적·규정 근거

##### 4-2. 금융권역별·단계별 적기시정조치 기준 및 조치(제재)사항

##### 4-3. 적기시정조치 관련 제도개선 및 보완방향

#### 4-1) 적기시정조치 발동 법적·규정 근거

□ 근거법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경영건전성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건전경영의 지도)

#### □ 근거규정

-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경영개선권고), 제35조(경영개선요구),  
제36조(경영개선명령), 제37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제30조(경영개선권고), 제30조의2(경영개선  
요구), 제30조의3(경영개선명령), 제30조의4(적기시정조치의 유예)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6조(경영개선권고), 제47조(경영개선  
요구), 제48조(경영개선명령 등), 제5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의4(경영개선권고), 제20조의5(경영개선  
요구), 제20조의6(경영개선명령), 제20조의7(경영상태개조치의 유예)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7조(경영개선권고), 제18조(경영개선 요구), 제19조(경영개선명령), 제2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 증권업감독규정 제2-32조(경영개선권고), 제2-33조(경영개선요구), 제2-34조(경영개선명령), 제2-35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제31조(경영개선권고), 제32조(경영 개선요구), 제33조(경영개선명령), 제34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 선물업감독규정 제28조(경영개선권고), 제29조(경영개선요구), 제30조(경영개선명령), 제31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경영개선권고), 제7-18조(경영개선요구), 제7-19조(경영개선명령), 제7-23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 완화 · 면제)

#### 4-2) 금융권역별 · 단계별 적기시정조치 기준 및 조치(제재)사항

구 분				적기기정조치 종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sup>1)</sup>
조 치 발 동 요 건	자 본 충 실 도	은행 <sup>2)</sup>	BIS비율	8%미만	6%미만	2%미만
		증권 <sup>3)</sup>	영업용순 자본비율 <sup>4)</sup>	150%미만	120%미만	100%미만
		보험	지급 여력비율	100%미만	50%미만	0%미만
		저축 은행	BIS비율	5%미만	3%미만	1%미만
		여전	조정자기 자본비율	7%미만	4%미만	1%미만
		신용 카드	조정자기 자본비율	8%미만	6%미만	2%미만
	경 영 실 태 평 가	은행등 <sup>5)</sup>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부문 4등급 이하	종합등급 4등급 이하	-
		여 전		종합등급 4등급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부문 3등급 이상	종합등급 4등급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부문 4등급이하	종합등급 5등급
		신용카드		종합등급 1~3등급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부문 4또는 5등급	종합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
	조치내용 (권역 공통)				조직·인력 운용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신규업무 진출제한 등	점포폐쇄 및 신설제한,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정지 등

- 1)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상호저축은행,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경영개선명령발동시 '자본충실도' 및 '경영실태평가'요건 외에 '부실금융기관지정'요건 포함
- 2) 종금·부동산신탁회사 포함
- 3)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업자 포함
- 4) 증권회사·선물업자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 자산운용사는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 5) 여신전문회사, 선물업자, 부동산신탁회사를 제외하고 각 권역공통

#### 4-3) 적기시정조치 관련 제도개선 및 보완방향

□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권리구제장치 강화차원에서  
다음 사항의 제도개선을 추진중('06.8월중 완료예정)

- ① 감독원장이 결정하던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계획 승인에 대해  
금감위가 결정하도록 변경

\* 비은행(중금,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권역은 현행유지

- ② 적기시정조치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사전심의시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권리구제절차 보완

- ③ 적기시정조치시 비계량평가항목중 중복되거나 불명확한 항목은  
정비하고, 주관적 판단가능성이 큰 항목을 삭제하는 등 비계량  
평가항목의 객관화·최소화

□ 향후에도 적기시정조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권리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

5. 2000년 이후 연도별 현재까지, 보험사별 보험가입 신청 및  
가입·거부 현황(거부사유별 구분요)

(붙임 참조)



## 보험사별 신계약 건수

(단위 : 건)

금융회사명	FY01	FY02	FY03	FY04	FY05
	신계약_건수	신계약_건수	신계약_건수	신계약_건수	신계약_건수
대한생명(주)	2,374,458	3,131,167	1,795,058	1,856,459	2,036,471
알리안츠생명(주)	987,262	897,902	560,409	350,649	215,323
삼성생명(주)	3,743,249	2,756,418	3,430,522	3,629,389	3,620,077
흥국생명(주)	940,255	1,164,391	1,829,753	1,332,146	1,585,223
교보생명(주)	3,646,565	3,238,422	1,904,275	2,227,977	2,745,876
녹십자생명(주)	0	0	70,877	47,865	73,969
신한생명(주)	848,786	733,346	2,034,201	1,303,845	3,272,398
LIG생명(주)	319,302	914,566	462,909	882,366	1,404,465
금호생명(주)	1,345,754	529,584	541,291	455,603	436,010
미래에셋생명(주)	1,564,416	607,428	435,785	369,712	594,283
KB생명(주)	0	0	0	40,824	53,210
동부생명(주)	70,350	124,011	1,096,263	731,420	1,025,211
동양생명(주)	1,110,340	2,291,370	1,839,077	1,748,448	2,905,232
Met Life(주)	183,371	1,145,945	262,847	295,137	291,456
PCA생명(주)	783,515	265,512	132,522	100,850	166,778
뉴욕생명(주)	14,738	26,458	29,396	17,353	21,963
푸르덴셜생명(주)	153,342	140,085	156,816	150,226	155,865
ING생명(주)	155,540	203,904	265,262	293,828	379,739
하나생명(주)	3,470	1,237	14,795	34,846	43,588
라이나생명(주)	0	0	0	752,209	1,197,068
AIG생명	2,811,153	6,057,638	3,821,078	4,646,473	5,894,887
SH&C생명	0	9,027	63,385	140,425	148,001
생보사계	21,055,866	24,238,411	20,746,521	21,408,050	28,267,093
메리츠화재(주)	2,858,598	3,014,574	3,182,166	3,745,278	3,887,089
신동아화재(주)	1,938,440	2,132,888	2,168,839	1,647,878	1,900,330
대한화재(주)	1,022,355	1,065,992	1,099,196	1,392,043	1,236,039
그린화재(주)	692,880	618,468	794,099	734,007	832,766
흥국쌍용화재	1,610,106	1,974,259	1,849,520	1,845,181	1,977,082
제일화재(주)	1,655,727	1,793,070	1,839,400	1,896,401	1,929,011
삼성화재(주)	10,553,000	11,456,119	11,764,155	11,859,862	11,948,240
현대해상(주)	4,665,672	4,799,704	4,961,208	6,143,234	7,697,182
엘아이지손해(주)	4,643,744	4,770,066	4,848,670	5,338,379	5,885,479
동부화재(주)	4,829,780	4,982,324	4,981,618	5,516,718	11,662,062
서울보증(주)	15,963,652	22,365,000	18,730,714	19,903,508	17,557,663
교보자동차(주)	369,922	2,146,902	556,508	1,416,727	1,659,050
교원자동차(주)			50,918	321,928	549,608
다음자동차(주)			17,308	291,026	276,124
A.H.A 한국지점	235,770	296,678	317,299	588,479	767,485
ACE 한국지점	71,944	107,242	172,327	325,847	444,346
RSA 한국지점	52	3	7	0	0
Federal 한국지점	140,663	68,553	68,736	57,603	74,924
퍼스트권원 한국지점	5	857	652	29,669	72,300
미쓰이 한국지점		231	1,038	984	1,470
손보사계	51,252,310	61,592,930	57,404,378	63,054,752	70,358,250
전체계	72,308,176	85,831,341	78,150,899	84,462,802	98,625,343

주1) 현재 보험회사 전산시스템으로는 가입거부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주2) FY01부터 산출 가능

## 6. 저축은행 관련

### 6-1. 1998년도 이후 연도별 저축은행 현황

(개수/수신규모/대출규모)

### 6-2. 1998년도 이후 연도별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현황

(연체율/부실채권비율)

### 6-3. 2003년도 이후 연도별 저축은행 M&A 내역

#### ☐ 상호저축은행 연도별 현황

(단위 : 개, 조원, %)

	'99.6.말	'00.6.말	'01.6.말	'02.6.말	'03.6.말	'04.6.말	'05.6.말	'06.6.말
저축은행수	204	166	125	120	115	114	112	110
수 신	24.6	21.4	18.6	21.5	24.0	30.0	34.2	41.1
여 신	19.9	17.6	14.1	17.5	21.7	26.9	30.1	37.1

#### ☐ 상호저축은행 연도별 자산건전성 현황

(단위 : 개, 조원, %)

	'99.6.말	'00.6.말	'01.6.말	'02.6.말	'03.6.말	'04.6.말	'05.6.말	'06.6.말
연체율	41.5	34.6	28.2	18.8	19.8	20.9	19.6	15.4
고정이하 여신비율	30.0	26.6	21.4	12.4	11.2	12.1	12.6	10.4

#### ☐ 2003년 이후 상호저축은행 합병 현황

연도	합병 건수	비고
2003년중	0	-
2004년중	0	-
2005년중	1	'05.3월 (제주)미래저축은행과 (서울)삼환저축은행 합병
2006년중	0	-

## 7. 연도별 신탁의 주요 현황

### □ 신탁의 주요 현황 추이

(단위 : 개, 억원, %, 건)

구분	'03.말	'04.말	'05.말	'06.3.말
조합수	1,086	1,066	1,051	1,044
수신	163,530	188,824	204,882	207,848
여신	105,256	122,717	135,463	136,106
중앙회 누적손실	△7,063	△6,678	△5,623	△5,723

### □ 신탁의 자산건전성 현황

(단위 : %)

구분	'03.말	'04.말	'05.말	'06.3.말
순자본비율	2.34	2.56	2.89	2.59
연체율	16.5	15.7	13.9	15.1
부실여신비율	4.3	4.0	3.5	3.6

### □ 신탁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현황

(단위 : 개)

구분	전년말 조합수	퇴출				신규 및 신설합병	변동계	연 말 조합수
		인가취소	파산	해산	합병			
'98	1,666	1	29	39	15	10	△74	1,592
'99	1,592	1	77	27	47	2	△150	1,442
'00	1,442	-	48	35	43	1	△125	1,317
'01	1,317	-	33	15	1	-	△49	1,268
'02	1,268	-	15	17	3	-	△35	1,233
'03	1,233	-	128	17	2	-	△147	1,086
'04	1,086	-	10	9	1	-	△20	1,066
'05	1,066	-	6	6	3	-	△15	1,051
'06.3.	1,051	-	2	5	-	-	△7	1,044
계		2	348	170	115	13	622	

## 8.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분류 및 총당금 적립내역

☐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및 총당금 적립 내역

(단위 : 억원)

구분명	2002년06월		2003년06월		2004년06월		2005년06월		2006년06월	
	대상채권*	총당금	대상채권	총당금	대상채권	총당금	대상채권	총당금	대상채권	총당금
정상	145,760	785	177,867	1,038	203,818	1,046	226,852	1,219	282,397	2,163
요주의	7,337	212	14,918	531	32,872	1,074	39,711	1,241	49,675	1,538
고정	11,175	2,280	9,893	2,006	14,423	2,920	22,275	4,462	19,744	4,072
회수의문	7,788	5,838	11,816	8,897	15,773	11,765	18,782	14,108	13,614	10,266
추정손실	2,933	2,932	2,941	2,942	3,399	3,428	7,641	7,713	6,291	6,327
합계	174,991	12,048	217,436	15,414	270,285	20,233	315,261	28,743	371,721	24,367

\*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 = 대출채권+확정지급보증+미수금

9. 2000년 이후 연도별 현재까지, 보험사별 당기순이익 현황

"붙임 참조"

000년 이후 연도별 현재까지 보험사별 당기 순이익 현황(생명보험)

(단위:천원)

금융회사명	2000년03월	2001년03월	2002년03월	2003년03월	2004년03월	2005년03월	2006년03월
생보사계	-424,396,717	-506,935,004	1,781,509,723	2,854,507,800	1,594,083,418	2,106,326,345	2,097,246,834
대한생명(주)	-814,397,219	-298,874,389	868,438,670	979,447,720	614,971,797	536,639,023	374,856,467
알리안츠생명(주)	-1,781,555	-109,916,412	-98,891,937	55,518,958	18,543,689	-65,328,952	25,609,373
삼성생명(주)	309,767,993	247,069,453	630,825,674	967,363,776	327,669,979	575,798,735	626,247,897
흥국생명(주)	5,912,903	6,671,637	11,960,361	50,252,190	53,389,514	26,327,983	46,415,822
교보생명(주)	50,266,667	-254,028,933	128,783,194	356,629,576	84,646,130	381,667,335	231,866,835
농심자생명(주)	-	-	-	-	-8,181,114	-19,800,728	3,883,379
신한생명(주)	64,051,057	-57,973,062	12,089,125	86,332,932	96,704,583	92,984,377	101,903,893
LIG생명(주)	-21,919,857	-36,613,695	10,427,877	-21,808,355	7,648,314	18,006,537	19,086,032
금호생명(주)	-40,706,396	-8,744,826	45,903,208	40,683,031	20,871,143	35,800,264	75,354,155
미래에셋생명(주)	-27,029,722	-58,670,184	24,873,474	82,134,384	16,639,055	43,219,571	29,066,514
KB생명(주)	-	-	-	-	-	-4,245,291	5,470,230
동부생명(주)	26,040,312	6,211,845	16,403,957	18,066,486	488,964	22,651,049	22,458,098
동양생명(주)	11,438,061	12,157,326	10,030,319	16,474,063	79,370,030	66,772,231	74,097,643
Met Life(주)	5,610,190	10,437,940	21,418,349	42,719,555	32,464,202	30,260,863	67,100,303
PCA생명(주)	-1,151,930	656,487	-1,551,763	-5,304,443	-12,701,172	2,157,586	-8,066,044
뉴욕생명(주)	-10,333,632	-9,849,463	-8,675,712	1,769,444	500,497	-31,969	-6,917,018
푸르덴셜생명(주)	17,172,576	34,424,067	65,746,252	85,010,417	98,345,242	84,892,265	101,962,035
ING생명(주)	2,962,088	11,524,886	37,241,114	78,558,522	103,088,562	145,772,896	151,593,083
하나생명(주)	-5,826,571	-9,398,643	-1,985,521	-1,670,581	1,816,027	1,535,073	436,716
라이프나생명(주)	6,032,155	16,990,654	16,970,885	20,224,489	20,694,086	31,827,368	52,390,253
아메리카생명 한국지점	-503,837	-9,009,692	-8,497,803	3,695,426	40,259,092	97,500,736	96,113,064
에쓰에이치앤씨생명보험주식회사	-	-	-	-1,589,790	-3,145,202	1,919,393	6,318,104

2000년 이후 연도별 현재까지 보험사별 당기순이익 현황(손해보험)

(단위:천원)

금융회사명	2000년03월	2001년03월	2002년03월	2003년03월	2004년03월	2005년03월	2006년03월
손해보험사계	-3,351,689,311	-728,541,829	249,016,015	338,779,559	564,260,044	1,146,739,450	1,197,119,574
메리츠화재(주)	13,743,646	-19,783,161	43,668,181	34,058,859	20,022,345	21,113,420	26,416,502
신동아화재(주)	-36,834,410	-43,347,606	7,145,132	-70,077,997	6,494,111	3,745,411	-11,779,903
대한화재(주)	-38,775,028	-105,188,242	37,097,597	39,283,554	3,411,938	10,187,765	2,708,073
그린화재(주)	-9,667,732	-81,692,539	51,395,648	-3,083,264	-18,943,652	6,111,507	6,338,504
흥국상용화재	6,878,739	-78,815,452	6,250,473	-23,362,781	-6,802,396	6,061,346	-25,212,923
제일화재(주)	992,687	-66,141,142	18,922,018	3,931,151	-698,072	7,363,922	10,649,439
삼성화재(주)	139,925,361	96,237,968	274,800,705	267,778,457	170,122,509	278,205,959	262,042,084
현대해상(주)	-8,490,133	-27,359,065	128,384,636	41,231,149	50,020,507	68,105,265	44,302,140
엘아이지손해(주)	18,286,224	-141,100,313	109,700,379	64,579,184	41,432,820	45,082,107	35,461,017
동부화재(주)	82,015,921	4,137,841	149,468,407	79,135,949	45,303,897	114,374,650	123,100,693
서울보증(주)	-3,551,313,656	-285,762,192	-600,629,006	-161,526,910	243,488,471	519,582,880	657,139,029
코리안리보험(주)	29,379,568	26,137,580	68,106,283	57,675,148	65,012,284	53,781,639	62,551,494
교보자동차(주)	0	0	-6,998,224	-8,690,464	2,714,802	901,042	-7,230,945
교원자동차(주)	-	-	-	-	-5,739,450	-7,922,193	-6,075,898

다음자동차(주)	-	-	-	-	-	-	-6,146,828	-12,185,595	-10,638,141
A.H.A 한국지점		2,043,049	-3,073,305	-9,086,726	-15,173,849	-9,784,277	-5,637,092	-11,338,656	
ACE 한국지점		126,453	-897,806	-2,255,324	2,681,502	-3,147,252	-2,812,146	-4,713,567	
RSA 한국지점		0	-765,180	-23,211,458	-6,373,278	-6,415,427	-5,637,306	-2,759,844	
Federal 한국지점		0	-1,129,215	-2,513,451	-3,948,509	401,885	4,048,121	5,340,513	
필론재보험 한국지점		0	0	-714,273	5,989,416	-1,384,935	4,453,444	4,134,607	
스위스재보험 한국지점		0	0	-705,557	13,934,794	-6,229,429	13,805,686	6,477,501	
민첸재보험 한국지점		0	0	736,224	7,221,098	4,327,508	12,360,783	11,708,655	
퍼스트권원 한국지점		0	0	-545,649	-405,395	-729,329	-291,935	452,504	
미쓰이 한국지점	-	-	-	-	-827,373	-22,321,472	3,946,287	5,194,300	
ERC 한국지점	-	-	-	-	-424,731	1,112,025	5,557,522	11,042,339	
동경해상 서울지점	-	-	-	-	-	-1,262,539	2,860,590	4,698,253	
SCORE RE 한국지점	-	-	-	-	-	-	-423,629	356,633	
RG재보험 한국지점	-	-	-	-	-	-	-	-1,050,452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	-	-	-	-	-	-	-	-2,194,377	



10. 2002년 이후 연도별/은행별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중기대출 별도  
구분) 만기구조 현황

"붙임 참조"

(붙임)

##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만기구조 현황

(단위 : 억원)

은행	구분	2004년말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3년 이하	3년 초과
우리은행	가계자금대출금	41,061	92,008	186,049	275,083	12,635
	기업자금대출금	69,479	140,542	256,068	296,954	28,686
신한은행	가계자금대출금	53,939	108,807	213,086	274,269	76,539
	기업자금대출금	79,881	176,419	300,965	334,342	21,082
SC제일은행	가계자금대출금	9,210	20,428	40,848	70,503	112,049
	기업자금대출금	13,721	36,265	61,879	72,357	2,317
하나은행	가계자금대출금	37,282	75,441	143,626	211,588	63,218
	기업자금대출금	47,026	99,319	175,122	193,925	6,012
한국외환은행	가계자금대출금	20,124	41,426	87,461	114,367	5,435
	기업자금대출금	37,497	76,840	118,966	127,722	12,459
한국씨티은행	가계자금대출금	14,274	30,381	54,431	88,469	38,583
	기업자금대출금	21,859	51,978	83,395	93,046	4,950
국민은행	가계자금대출금	94,673	185,031	401,038	690,079	134,859
	기업자금대출금	86,188	170,979	307,784	349,184	15,480
대구은행	가계자금대출금	4,953	12,227	22,916	29,285	584
	기업자금대출금	11,997	26,192	49,949	58,775	7,138
부산은행	가계자금대출금	3,833	10,148	20,102	29,983	3,004
	기업자금대출금	15,917	29,092	46,677	55,104	7,618
광주은행	가계자금대출금	2,933	6,251	12,095	15,289	733
	기업자금대출금	6,706	14,854	29,180	34,673	1,879
제주은행	가계자금대출금	716	1,473	2,791	3,877	98
	기업자금대출금	1,726	3,350	6,383	7,118	704
전북은행	가계자금대출금	1,748	3,358	6,067	8,986	239
	기업자금대출금	4,171	8,384	13,846	15,081	611
경남은행	가계자금대출금	1,978	4,926	10,072	15,836	1,513
	기업자금대출금	7,739	17,141	33,141	41,244	5,644
한국산업은행	가계자금대출금	-	-	-	-	212
	기업자금대출금	13,208	25,883	54,469	105,594	61,995
중소기업은행	가계자금대출금	9,798	23,068	46,104	57,203	7,564
	기업자금대출금	69,397	163,965	306,380	355,810	44,950
한국수출입은행	가계자금대출금	-	-	-	-	-
	기업자금대출금	4,955	12,286	13,355	14,258	1,15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계자금대출금	21,343	61,420	139,984	266,056	36,237
	기업자금대출금	47,195	97,638	165,517	266,123	89,20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가계자금대출금	2,172	4,546	10,464	17,191	3,512
	기업자금대출금	5,763	12,300	24,662	35,159	5,267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기준

##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만기구조 현황

(단위 : 억원)

은행	구분	2005년말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3년 이하	3년 초과
우리은행	가계자금대출금	47,634	103,503	200,967	291,951	63,948
	기업자금대출금	69,650	147,424	272,587	320,825	45,299
신한은행	가계자금대출금	48,621	102,720	208,939	264,045	135,165
	기업자금대출금	81,059	177,270	304,889	344,031	22,849
SC제일은행	가계자금대출금	10,514	22,891	43,397	83,570	156,591
	기업자금대출금	13,698	33,509	57,773	65,931	4,599
하나은행	가계자금대출금	34,993	81,150	152,246	206,316	91,204
	기업자금대출금	44,333	96,289	174,858	200,277	8,397
한국외환은행	가계자금대출금	23,472	48,565	97,028	116,042	17,690
	기업자금대출금	36,937	76,116	130,730	140,296	13,416
한국씨티은행	가계자금대출금	10,167	22,103	39,882	68,791	46,809
	기업자금대출금	15,053	37,764	63,467	70,907	3,950
국민은행	가계자금대출금	83,452	171,960	379,758	586,406	228,278
	기업자금대출금	79,190	152,162	278,953	326,021	17,578
대구은행	가계자금대출금	4,827	11,294	22,844	31,417	1,156
	기업자금대출금	12,001	28,261	54,264	65,662	10,838
부산은행	가계자금대출금	5,436	11,276	22,259	29,942	4,886
	기업자금대출금	12,041	25,990	50,222	59,765	11,164
광주은행	가계자금대출금	3,508	6,725	12,629	17,776	2,369
	기업자금대출금	7,244	16,060	29,428	36,324	3,270
제주은행	가계자금대출금	865	1,716	3,163	4,276	91
	기업자금대출금	1,916	3,507	6,549	7,945	808
전북은행	가계자금대출금	1,684	3,872	7,393	10,331	382
	기업자금대출금	4,209	8,659	14,694	16,056	832
경남은행	가계자금대출금	2,786	5,824	11,769	19,533	4,724
	기업자금대출금	12,320	22,835	38,215	46,480	5,433
한국산업은행	가계자금대출금	8	20	40	183	49
	기업자금대출금	11,307	25,023	53,062	114,160	60,398
중소기업은행	가계자금대출금	12,118	28,324	55,638	77,057	19,699
	기업자금대출금	91,444	196,687	352,622	407,497	59,710
한국수출입은행	가계자금대출금	-	-	-	-	-
	기업자금대출금	6,705	18,067	20,818	23,678	36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계자금대출금	28,968	73,631	163,687	303,454	59,225
	기업자금대출금	72,556	150,490	252,488	344,198	37,39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가계자금대출금	2,724	5,667	12,178	19,723	3,534
	기업자금대출금	7,142	15,983	32,205	44,319	8,185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기준

##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만기구조 현황

(단위 : 억원)

은행	구분	2006년 6월말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3년 이하	3년 초과
우리은행	가계자금대출금	41,304	92,863	201,987	305,289	136,995
	기업자금대출금	86,483	156,254	313,415	369,880	53,951
신한은행	가계자금대출금	50,188	102,345	200,541	270,391	165,016
	기업자금대출금	84,659	155,913	292,929	333,911	22,843
SC제일은행	가계자금대출금	8,711	18,401	41,874	78,617	151,676
	기업자금대출금	12,581	26,875	53,348	64,711	3,989
하나은행	가계자금대출금	30,259	70,268	147,840	204,930	126,748
	기업자금대출금	40,111	87,276	205,779	241,478	8,303
한국외환은행	가계자금대출금	27,248	49,138	92,689	113,148	22,589
	기업자금대출금	43,836	78,422	134,567	145,634	12,678
한국씨티은행	가계자금대출금	6,937	12,865	30,171	56,369	53,467
	기업자금대출금	19,190	32,662	67,593	73,114	3,717
국민은행	가계자금대출금	81,178	172,175	330,950	517,011	297,458
	기업자금대출금	79,763	158,167	286,061	339,261	20,314
대구은행	가계자금대출금	6,244	11,124	22,459	31,740	2,415
	기업자금대출금	12,818	27,145	56,200	68,693	11,156
부산은행	가계자금대출금	5,559	10,511	21,865	28,413	5,755
	기업자금대출금	14,441	26,405	55,313	66,260	12,918
광주은행	가계자금대출금	2,914	6,132	12,046	18,356	3,020
	기업자금대출금	7,299	14,595	31,130	39,502	3,303
제주은행	가계자금대출금	877	1,602	3,372	4,449	85
	기업자금대출금	1,835	3,591	7,154	8,777	755
전북은행	가계자금대출금	2,177	4,071	7,477	10,576	425
	기업자금대출금	4,719	8,265	15,403	17,238	851
경남은행	가계자금대출금	3,042	6,937	12,226	20,352	7,942
	기업자금대출금	11,685	21,645	39,954	49,837	4,631
한국산업은행	가계자금대출금	9	19	43	182	45
	기업자금대출금	14,254	35,920	64,779	118,584	62,605
중소기업은행	가계자금대출금	13,104	27,896	59,472	89,488	21,099
	기업자금대출금	94,023	185,255	396,296	463,031	68,966
한국수출입은행	가계자금대출금	-	-	-	-	-
	기업자금대출금	10,374	25,302	26,777	29,649	4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계자금대출금	37,897	78,759	169,948	318,609	65,150
	기업자금대출금	68,417	126,676	255,070	349,125	41,91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가계자금대출금	2,970	5,708	11,392	21,350	2,573
	기업자금대출금	8,472	16,216	35,325	50,484	8,765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기준

## 11. 해외증시 상장 관련(국내기업의 해외증시 상장)

- 현재까지 연도별 해외증시 상장/등록 회사리스트(원주상장/DR상장/사채발행 구분)
- 1998년도 이후 금감원의 해외증시 상장 및 관련 제도 개선 실적
- 1998년도 이후 금감원의 해외증시 발굴실적 및 해당회사 상장결과

“붙임 참조”

(붙임)

- 현재까지 연도별 해외증시 상장/등록 회사 리스트(원주상장/DR상장/사채발행 구분)

□ 원주 상장

(단위 : US\$)

법인명	발행연도	발행금액	상장거래소
두루넷	1999	209,070,000	NASDAQ
그라비티	2005	108,000,000	NASDAQ
픽셀	2005	36,000,000	NASDAQ
와이더댄	2005	48,000,000	NASDAQ
어니언텍	2005	9,240,000 <sup>1)</sup>	싱가폴
STX팬오션	2005	621,000,000 <sup>1)</sup>	싱가폴
인터파크지마켓	2006	139,073,366	NASDAQ

1) 싱가포르달러

□ DR 상장

(단위 : US\$)

법인명	발행연도	발행DR형태	발행금액
한국전력공사(유통DR)	1999	ADR	753,600,000
신한은행	1999	GDR	400,000,000
한국통신	1999	ADR	2,485,664,291
삼성SDI	1999	GDR	200,000,000
삼성SDI	1999	GDR	30,000,000
포항종합제철(유통DR)	1999	ADR	1,011,000,000
한빛은행	1999	GDR	1,000,000,012
현대자동차	1999	GDR	500,004,960
현대전자산업	1999	GDR	100,000,014
현대건설	1999	GDR	115,000,000
동양메이저	1999	GDR	50,000,720
주택은행	2000	ADR	-
미래산업	2000	ADR	120,198,000
하나로통신	2000	ADR	372,240,000

법인명	발행연도	발행DR형태	발행금액
신세계백화점	2000	GDR	292,340,000
신세계백화점(우선주)	2000	GDR	43,850,000
한미은행	2000	GDR	392,273,088
포항종합제철(유통DR)	2000	GDR	336,000,000
동부제강	2000	GDR	46,465,910
SK글로벌	2000	GDR	179,931,312
하이닉스반도체	2001	GDR	1,249,980,000
한국전기통신공사	2001	ADR	2,242,287,304
한국담배인삼공사	2001	GDR	309,174,000
한미은행	2002	GDR	198,730,000
INI스틸	2002	GDR	99,750,000
SK텔레콤(유통DR)	2002	ADR	1,422,878,701
한국담배인삼공사	2002	GDR	229,226,611
우리금융(유통DR)	2003	ADR	-
금강고려화학(구주)	2003	GDR	28,224,000
대우조선해양	2003	GDR	225,677,974
아이앤아이스틸	2003	GDR	106,756,801
중소기업은행	2003	GDR	284,577,641
웹젠	2003	ADR	111,755,850
LG필립스LCD	2004	ADR	51,471,000
한국씨티은행	2004	ADR	740,034,973
금호타이어	2005	GDR	28,520,000
한국씨티은행	2005	ADR	77,215,645
엘지.필립스엘시디	2005	ADR	1,385,800,000
하이닉스반도체(유통DR)	2005	GDR	1,207,743,831
포스코	2005	ADR	690,620,000
롯데쇼핑	2006	GDR	2,834,115,726

## □ 사채 발행

- 파악되지 않음

## - 1998년도 이후 금감원의 해외증시 상장 및 관련제도 개선 실적

### □ '98년 이후 해외증시 상장관련 제도개선

일자	관련제도	내 용
'98.6.	해외증권발행규정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해외증권 발행규정* 폐지</li> <li>* 해외증권발행시 사용용도 규제, 주식예탁중서 소유제한, 원주등의 보관, 발행관련 보고의무</li> </ul>
'00.12.29.	주권상장법인등의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산정방법 제시 (발행공시규정§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은 3가지 시가*중 높은가액 이상으로 함(국내외 발행증권 동일)</li> <li>* ①1개월평균종가, 1주일평균종가, 최근일종가 등의 산술평균, ②최근일종가, ③청약일 3거래일의 종가</li> <li>○ 2이상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기등급을 받거나 ABS의 기초자산인 경우 전환가액 결정시 10%할인 가능(본건은 2001.8.1. 추가)</li> </ul>
'00.12.29.	주권상장법인 등이 해외에서 주권 또는 DR발행시 발행가액 할인율 적용 배제 가능 (발행공시규정§57조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감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에서 주권 또는 DR발행시 발행가액에 대한 할인율* 예외 적용 가능</li> <li>* 국내 일반공모나 제3자배정 경우 각각 30%, 10%내에서 할인</li> </ul>
'02.4.4.	주권상장법인 등이 전환가액 조정가능한 전환사채 발행시 조정정한도 규정 (발행공시규정§61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시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및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시가이상으로 전환가액 결정 (국내외 발행증권 동일)</li> </ul>



일자	관련제도	내 용
'02.4.4.	주권상장법인 등의 해외상장시 상장· 등록 가능 거래소 지정 (발행공시규정§59조의2)	○ 뉴욕, 나스닥, 런던, 도쿄 등 세계 유수의 거래소에 한해 상장·등록할 수 있도록 지정
'02.4.4.	해외증권 발행시 전환권 단축을 위한 요건 신설 (발행공시규정§62조)	○ 해외공모 발행시 1년간 내국인 취득금지 하는 경우에 한해 전환권 행사기간을 1년에서 1월로 단축 허용
'02.4.4.	해외 신주인수권부사 채에 대한 해외전환 사채 관련규정 준용 (발행공시규정§63조)	○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기간 단축에 관한 규정 준용
'02.4.4.	해외거래소 등에 주권 또는 DR을 상장·등록 한 상장·코스닥법인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발행공시규정§69조⑥)	○ 해외거래소 등에 주권 또는 DR을 상장· 등록한 상장·코스닥법인이 해당국가에 주요 경영사항 등을 신고한 경우 동내용을 신고  ○ 주요경영사항을 비롯 사업보고서 등에 준하는 공시서류를 해당국가에 신고한 경우 동내용을 신고(2004.12.30.개정)

- 1998년도 이후 금감원의 해외증시 발굴실적 및 해당회사  
상장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12.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발간 근거 및 내용에 대한 감독사항 여부

### □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발간 근거

-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함)\* 발간은 증권사의 고유업무인 고객을 상대로 한 투자권유 업무에 수반되는 업무이고, 증권사가 수행하는 독립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근거를 제시하기는 곤란

\* 증권사가 증권업을 영위함에 있어 업무상 작성하는 특정 유가증권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

### □ 조사분석자료 내용에 대한 감독사항 여부

- 현행 증권업감독규정에서는 증권사의 투자권유(조사분석자료 발간 포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증권사의 자기매매를 위한 투자권유의 금지 등(증권업감독 규정 제4-6조)
  - 조사분석자료 내용의 사실상 확정시부터 24시간 동안 증권사의 자기매매의 금지와 조사분석자료 공표전에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사실 및 최초 제공시점의 공표의 무 등(동 규정 제4-7조)

- 증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 있는 유가증권의 매매권유시 일반고객에 대한 그 이해관계 내용의 사전 고지의무와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자 및 영향력 행사자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동 규정 제4-16조)

\* 재산적 이해의 범위, 고지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규정에 위임(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제1-17조)

(별 첨)

## 관련법규

### <증권업감독규정>

**제4-6조(자기매매를 위한 투자권유 금지 등)** ①증권회사는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자기계산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히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증권회사는 유가증권 발행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 당해 유가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고유재산 운용자나 영업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하거나 매매를 권유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등)** ①증권회사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특정 유가증권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체 조사분석자료나 매매권유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일반인에게 공표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주요내용을 더 이상 수정하지 아니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등 조사분석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로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법인이 발행한 주권, 주식관련사채, 당해 주권을 기초로 한 파생증권·상장 파생금융상품 등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매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3.11.19, 2006.2.16>

1.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매매 기타 거래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개정 2006.2.16>
2. 현물시장과 선물시장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헷지 거래,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거래, 시황급변에 따른 방어적 매매거래 등으로서 고유재산 운용자가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매매 기타 거래의 경우<개정 2006.2.16>
3. 고유재산 운용자가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매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4. 당해 조사분석자료가 종전에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권유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신설 2006.2.16>

②증권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

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제3항의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에 관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당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8, 2005.4.27>

③ 증권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5.4.27>

**제4-16조(매매권유와 관련한 이해상충 예방)** ①증권회사는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보유 등)로 그 유가증권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일반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20, 2002.7.18, 2003.11.19, 2006.2.16>

1. 고객이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의한 매매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매를 권유한 영업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증권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영업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매매권유가 고객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의한 매매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증권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 및 주식관련채권의 매매를 일반고객에게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하여야한다. 이 경우 재산적 이해의 범위, 고지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신설 2002.3.20>

③증권회사는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유가증권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유가증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서는 아니된다.<신설 2002.3.20>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제1-17조(조사분석담당자의 재산적 이해관계고지)** ① 증권회사는 조사분석담당자가 일  
반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 주식관련사채, 주  
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적 이해관계라 함은 조사분석담당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  
지 자기 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계산으로 다음 각호  
의 유가증권 또는 권리,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 등”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7, 2005.12.7)

1. 매매권유 대상회사가 발행한 주식, 신주인수권증서(신주인수권증권을 포함한다), 전  
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2. 매매권유 대상회사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  
환사채
3. 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매매권유 대상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4. 제1호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개정 2003.3.6,  
2005.12.7)
5. 삭제 <2005.1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조사분석담당자의 성명
2.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 현재의 유가증권 등의 보유내역(종  
류·수량·취득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부여받은 일자·수량 및 행사가액)
3. 기타 이해상충 예방을 위하여 고객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적 이해관계의 고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고객이  
이를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여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말미에 눈에 띄는  
활자체로 고지
2. 일반공중을 상대로 한 강연이나 설명회, 언론기관 인터뷰, TV나 컴퓨터 등 전자통  
신에 의한 화상강연, 개별고객에 대한 상담 등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경  
우에는 구두로 고지하거나 자막으로 게재
3. 기타 고객이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사분석담당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의 보유가액의 합계가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은 보유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고  
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보유가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식옵션의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의 직전영업일 종가 (개정 2005.12.7)
2. 신주인수권증서(신주인수권증권을 포함한다)·주식관련사채·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권리행사 대상주식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의 직전영업일 종가<종전 제1-5조의2에서 조문이관, 2002.7.16> (개정 2005.9.7, 2005.12.7)

# 13 -1. 2003년 이후 시기별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인가기준 및 근거

## □ 인가기준 및 근거

인가기준	근거
종합증권업(자기매매업·위탁매매업·인수업) 영위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 ②항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 ②항,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 ②항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이상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 ②항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등이 아닐 것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 ②항
전문인력 확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 ②항
금감위가 정하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관한 요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 ②항, 증권업감독규정 제1-15조

## □ 인가기준 변동현황

- 05.3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시 자기자본요건이 3,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하향됨(자기자본요건은 일몰조항으로 07.4월 이후 폐지될 예정)

※ <붙임> ‘관련법규’ 참조



## 13-2. 2003년 이후 장외파생상품 인가 증권사 및 장외파생상품 취급규모

### □ 연도별 장외파생금융상품 겸영인가 증권사

인가 증권회사	인가일자
삼성증권, 엘지투자증권*, 대우증권	2002.10.11.
굿모닝 신한증권, 하나증권, 동원증권**	2003.2.14.
현대증권, 우리증권*,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	2004.6.11.
리먼브러더스증권 서울지점	2004.12.24.
대신증권, 신영증권	2005.2.25.
CS증권 서울지점	2005.6.24.
미래에셋증권	2006.3.10
총 14개사	

\* 엘지투자증권과 우리증권은 합병하여 우리투자증권으로 출범('05.4월)

\*\* 동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합병하여 한국투자증권으로 출범('05.6월)

### □ 연도별 장외파생금융상품 취급규모

- 06.6월말 현재 장외파생금융상품 발행잔액은 ELS 12.6조원, ELW 40.6조원(납입금액기준으로는 3.7조원) 등 총 118.3조원 규모

#### <증권회사 장외파생금융상품 발행잔액>

(단위 : 억원)

구 분	'04년말	'05년말	06.6월말
ELS	48,273	93,035	126,362
ELW	40,909(1,127)*	65,278(4,760)	405,848(37,329)
파생결합증권	-	476	2,041
일반장외**	53,257	208,100	649,212
합 계	142,439	366,889	1,183,463

\* ( )안의 수치는 납입금액 기준 발행잔액

\*\* 일반장외는 ELS, ELW,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장외옵션,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의 거래를 의미

**13-3. 2003년 이후 연도별 금감원에 장외파생상품 인가  
신청서 제출 증권사(없다면 인가여부 등에 공문으로  
문의한 증권사)**

☐ 연도별 인가신청 증권사 현황

연도	인가신청 증권사
2003년	-
2004년	우리증권, 현대증권,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 리먼브러더스증권 서울지점, 대신증권, 신영증권
2005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2006년	-

\* 인가신청일 기준

**13-4. 2003년 이후 연도별 장외파생상품 인가 계량적 기준  
(자본금, 자기자본규제비율 등) 초과/미달 증권사 현황  
(회사수)**

☐ 2003년 이후 연도별 장외 파생상품 인가 계량적 기준

기간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 인가 계량적 기준
2003.1~2005.3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이상
2005.4~2007.3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이상
2007.4~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이상

☐ (자본금, 자기자본규제비율 등) 초과/미달 증권사 현황(회사수)

구 분	증권사수
초과증권사	38사(기인가증권사 13사 포함)
미달증권사	14사
합 계	54사

\* 2006.3월말 기준

<붙임>

## 관 련 법 규

### □ 증권거래법

제51조(겸업의 제한) ①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한다.

1. 금융업(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증권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증권회사가 겸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업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
    - 가. 증권업과 관련된 업무
    - 나. 증권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 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증권회사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으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업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0.1.21]

##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타업무겸영의 인가신청) ①증권회사는 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7.3.22, 1999.5.24, 2000.9.8>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그 개요
5. 당해 업무의 개시시기
6. 당해 업무를 겸영하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당해 업무의 겸영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의사록
3. 최근의 대차대조표
4. 당해 업무의 겸영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제36조의2(증권회사의 업무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2.2.9>

1.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한한다)
- 1의2.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선물거래법」의 규정에 따른 선물시장을 말한다) 밖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이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라 한다)와 그 거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개정 2004.4.1, 2005.3.39>
  - 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가격·이자율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 나. 통화 또는 일반상품(「선물거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 다. 신용위험의 지표
- 2.~3. 생략

②제1항제1호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증권회사로 한다. <개정 2001.7.7, 2002.2.9>

1. 제1항제1호의2의 업무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
  - 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영업을 모두 영위하는 증권회사일 것
  - 나. 당해 증권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별표 제1호바목(3)의 요건에 적합할 것
  - 다. 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규제비율을 100분의 300 이상 유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라.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상근임원등 파생금융상품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마.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생략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1항제1호의2·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2.2.9>

④~⑥ (생략)

[본조신설 2000.9.8]

※ 별표 제1호바목(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등) ①영 제36조의2제1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3.29>

1. 당사자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이 규칙 제1조의3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기초자산”이라 한다)을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를 포함한다)
  2. 당사자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이자율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이하 이 조에서 “지수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장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등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3. 장래의 일정기간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교환하거나 지수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 일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 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
- 나. 기초자산의 매매거래
- 다. 지수등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5. 신용위험(당사자나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의 지표의 변동과 연계한 거래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거래

② 영 제36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의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5.3.29>

[본조 신설 2002.8.12]

## □ 증권업감독규정

제1-15조(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 등) ①영 제 36조의2제2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3의2>에 의한 종합평가결과가 양호이상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3의2> “1. 평가항목”중 다음 각목의 평가점수는 각각 2.4점 이하일 것
  - 가. 리스크관리조직 및 인력
  - 나. 리스크측정 및 관리실무
  - 다.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전산시스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등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제2항제1호라목(3)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의 충족여부의 확인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7.18]



<별표3의2>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관한 평가기준(제1-15조제1항 관련)

1. 평가항목

대항목(3개)	중항목(12개)
1.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인력	리스크관리조직 및 인력, 내부통제조직 및 인력, 현업부서 조직 및 인력, 후선 업무부서 조직 및 인력
2.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절차	리스크관리에 관한 규정,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리스크 측정 및 관리실무, 내부통제관련 실무, 위기상황대비대책
3.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종합적인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전산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2. 평가방법

가. 중항목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점~5.0점으로 평가한다.

기 준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평가점수	1.0~1.4	1.5~2.4	2.5~3.4	3.5~4.4	4.5~5.0

나. 대항목의 평가점수는 중항목의 평가점수를 단순평균하여 산출한다.

다. 종합평가점수는 대항목의 평가점수를 아래의 가중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대항목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인력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절차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가중치	30%	40%	30%

라. 종합평가결과는 종합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종합평가점수	1.0~1.4	1.5~2.4	2.5~3.4	3.5~4.4	4.5~5.0
종합평가결과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 3.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의 평가

가.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되 제1호의 중항목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는 본사의 구축실태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제1호의 중항목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본사를 기준으로 서면심사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리스크관리조직 및 인력중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통제조직 및 인력·내부통제에 관한 규정·내부통제 관련실무·내부통제 전산시스템중 감사업무와 관련된 사항

나. 가목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은 본사에 관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직, 조직별 업무분장, 담당임직원, 주요경력, 전산시스템에 관한 구축도, 한도설정·배분·관리체제에 관한 절차도, 규정(기준) 및 한도배분 현황, 관련 규정등

다.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은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본사의 연대책임 확약서 및 서명자의 결제권한에 관한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4. 유사수신업체 관련

1) '03~'06.6월말 현재 연도별·유형별(상품권 판매 가장 등)  
유사수신업체 적발 실적

2) 상품권발행 요건 및 제재기준

1) '03~06.6월말 현재 연도별·유형별(상품권 판매 가장 등) 유사수신  
업체 적발 실적

☐ 유사수신 업체 연도별·투자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구 분	단순 수신	특정상품 판매	부동산 투자	벤처사업 및 주식투자	문화,오락 레저사업 (상품권)	대부업 전주모집	기타 (쇼핑몰 등)	계
2003년	12	50	19	14	15	18	5	133
2004년	18	61	15	22	37	4	24	181
2005년	15	60	12	10	34	3	32	166
2006년	1	75	4	1	20 (13)	-	-	101
합계	46	246	50	47	106 (13)	25	61	581

※ '99.11월 금융감독원에 전담팀 신설 이후 총 902개 업체 사법당국 통보

2) 상품권발행 조건 및 제재기준

☐ 1999.2.5 상품권법(소관부처:재정경제부) 폐지로 상품권 발행요건  
및 제재기준 없음

## 15. 외부감사 및 지정감사 관련

15-1) 2002년 이후 연도별 기업규모별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회계처리비용현황(회계감사/비회계감사 구분  
작성)

### □ 사업연도별 회계법인 매출액 구성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FY200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회계감사	3,392	44.3	3,680	44.7	4,040	45.0	4,627	42.8
세 무	795	10.4	1,302	15.8	1,542	17.2	2,024	18.7
컨설팅 등	3,469	45.3	3,252	39.5	3,402	37.8	4,169	38.5
총 수 입	7,656	100.0	8,234	100.0	8,984	100.0	10,820	100.0

15-2) 1998년 이후 연도별 지정감사 해당기업 및 회계  
법인 자격요건 변화 내역

- 첨부자료 참조

## 2) 1998년 이후 연도별 지정감사 해당기업 및 회계법인 자격요건 변화 내역

### 가. 연도별 지정감사 해당기업

지정사유	비 고
감리조치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지정사유에 해당
부당교체	
관리종목(주)	
감사인 미선임	
소유경영미분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요청	
회사요청	
대여금과다	상장법인에 대해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지정사유에 해당하지만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보편화로 최근 5개년 간 실질적인 지정사례 없음
부채비율	
산업합리화대상	2001년부터 지정사유에서 제외
관리종목(코)	2004년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사유에 포함
투자유의종목(코)	
IPO	2005년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사유에 포함

## 나. 회계법인 자격요건

감 사 인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p>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①)</p>	<p>모든 회사.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는 증선위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li> <li>2.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li> <li>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li> <li>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li> </ol>
<p>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미만인 회계법인(②)</p>	<p>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8000억원 미만인 회사.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인 회사를 감사하거나,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로 부터 지명을 받은 회사를 감사하는 경우로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또는 지명을 받은 사업연도 중에 당해 회사의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이 된 때에는 그 3개 사업연도 또는 지명을 받은 사업연도기간 종료시까지의 당해 회사를 감사할 수 있다.</p>
<p>감 사 반(③)</p>	<p>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회사.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한 회사를 계속 감사한 회사를 계속 감사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회사로 한다.</p>

◎ 1998.6~2003.6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9조(지정시 고려사항) 준용

- 1) 1998. 6. 20 개정 : 상기 표(외감법 시행규칙 제4조 준용)와 같음
- 2) 2000. 7. 28 개정 : 300억원→500억원, 500억원→1,000억원(③)
- 3) 2003. 6. 30 개정 : ②, ③ 삭제

◎ 2003.7~현재 외감규정 별표 제3호(감사인 특성에 따른 감사인 지정 요건)준용

감사인 특성에 따른 감사인지정 요건

지정대상 회사의 자산규모	감사인 요건					지정대상 회계법인
	소속공인 회계사수	설립경과 연수	매출규모	손해배상 능력	외국법인과의 제휴현황	
8,000억원 이상	100인 이상	10년 이상	300억원이상	50억원 이상	실질적 업무제휴	4가지 요건충족
3,000억원 이상~ 8,000억원 미만	50인 이상	7년 이상	10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실질적 업무제휴	4가지 요건충족
5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20인 이상	3년 이상	30억원	5억원 이상	단순 업무제휴	3가지 요건충족
500억원 미만			-			전체회계법인

\* 소속공인회계사수는 별표 제2호의 감사인점수 산정기준에 의함

\* 손해배상능력은 손해배상공동자금 적립액,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 손해배상책임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외국법인과의 제휴현황 중 실질업무제휴는 규정 제21조에 의한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하며 단순업무제휴는 그 이외의 단순제휴를 말함

\* 자산규모 8,000억원 이상 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자산규모 500억원 미만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함. 단, 공개예정법인의 지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2006.6.29 삭제>

\* 외감법 시행규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8,000억원이상 회사에 대한 감사인 요건 5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함



### 15-3) 2002년 이후 지정감사 사유별 지정감사 현황

#### □ 2002년 이후 지정감사 사유별 지정감사 현황

지정사유 \ 지정연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공개예정법인	-	-	-	296
관리종목(주권상장)	68	57	39	19
관리종목(코스닥상장)	-	-	41	45
투자유의종목	-	-	11	9
감리조치	43	52	47	5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요청	29	23	29	26
회사요청	8	7	13	9
감사인미선임	6	1	5	5
감사인부당교체	5	2	-	-
소유/경영미분리	3	6	5	4
합 계	162	148	190	467

## 16. 공시관련

### 16-1) 공시의무 범위와 불공정 공시에 대한 제재 내용

- 공시의무 범위와 불공정 공시에 대한 제재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 임 : 공시의무 범위와 불공정 공시에 대한 제재 내용

<붙임>

## 공시의무 범위와 불공정 공시에 대한 제재 내용

### <공시의무 범위>

#### 1. 발행시장관련 공시의무

□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제도(증권거래법 제3조)

- 유가증권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법인에게 당해 기업내용을 간략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사전적 공시제도

□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 등 제출 제도(증권거래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의 내용 및 발행회사의 사업·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지원하는 제도

- 유가증권신고서 : 발행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의 내용과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로서 모든 청약권유의 근간이 되는 공시서류(증권거래법 제8조)

- 사업설명서 : 발행인이 작성하여 청약권유의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청약의 권유문서로서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 전에 사용하는 예비사업설명서,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사용하는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요약한 간이사업설명서가 있으며, 상기 사업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청약의 권유를 할 수 없음(증권거래법 제12조)

- 발행실적보고서 : 유가증권의 모집·매출내역 및 자금사용내역 등을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유가증권신고제도의 사후관리제도 (증권거래법 제17조)

□ 소액공모신고서제출 제도(증권거래법 제18조의2)

- 모집·매출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유가증권의 청약권유 대상자에게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

## 2. 유통시장관련 공시의무

□ 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 제도(증권거래법 제186조의2·3)

- 상장·등록되었거나 모집·매출을 통하여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산된 유가증권의 발행인이 기업내용, 일정기간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를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

- 사업보고서 :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실적 등을 공시(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 반기·분기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6·9월간의 영업실적 등을 공시(증권거래법 제186조의3)

□ 수시공시제도(증권거래법 제186조제1항)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재산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이를 결정한 때에 해당내용을 지체없이 신고·공시하도록 하여 현재 또는 미래의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제도

### 3. 특수공시관련 공시의무

#### □ 합병 등의 신고제도(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 기업실체에 변동을 초래하게 되는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분할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신고·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제도

#### □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의 신고제도(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 상장주식의 수급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게 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및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해지에 대하여 관련내용을 일정한 서식에 따라 신고·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 □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 제도(5% Rule)(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의결권과 관련된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거나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된 경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M&A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 공개매수신고 제도(증권거래법 제21조의2)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다수인으로부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의 일정량(5%이상)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지원하고 공개매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 및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증권거래법 제188조제2항 및 제6항)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로 하여금 주식소유 및 변동상황을 신고·공시하도록 하고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회사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증권선물거래소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

□ 공정공시제도(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애널리스트 등 특정인에게 당해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도 동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조회공시제도(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8조)

- 거래소가 상장법인에 대하여 풍문, 보도 등의 사실여부, 주가 및 거래량 급변 사유 등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당해 주권상장법인이 이에 대하여 거래소에 신고하는 제도

## <불공정 공시에 대한 제재내용>

- 금감위는 증권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20조(위원회의 처분권), 제193조(상장법인등에 대한 조치), 제206조의11(과징금) 및 제213조(과태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음

공시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li> <li>·사업설명서 등 제출의무(증권거래법§8,11,12)</li> <li>- 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의무(증권거래법§186의2·3)</li> <li>- 합병 등 신고서 제출의무 (증권거래법§190의2)</li> <li>- 수시공시 의무(증권거래법§186①)</li> <li>- 공개매수신고 의무(증권거래법§21의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징금 부과</li> <li>- 다음 조치 병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증권 발행제한</li> <li>· 고발·수사기관 통보</li> <li>· 임원해임권고 등</li> </ul> </li> <li>- 경미한 사안인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고 또는 주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증권발행인등록의무(증권거래법§3)</li> <li>- 소액공모신고서제출의무(증권거래법§18의2)</li> <li>-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증권거래법§17)</li> <li>-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의 신고의무(증권거래법§189조의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부과</li> <li>- 다음 조치 병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증권 발행제한</li> <li>· 고발·수사기관 통보</li> <li>· 임원해임권고 등</li> </ul> </li> <li>- 경미한 사안인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고 또는 주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 의무(증권거래법§200의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조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증권 발행제한</li> <li>· 고발·수사기관 통보</li> <li>· 임원해임권고 등</li> </ul> </li> <li>- 경미한 사안인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고 또는 주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증권거래법§188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조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발·수사기관 통보</li> </ul> </li> <li>- 경미한 사안인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고 또는 주의</li> </ul> </li> </ul>

16-2) 2002년 이후 연도별·행태별 불공정 공시 적발현황 및 제재현황

□ 2002. ~ 2006. 6. 위반행위별 제재 현황(공시심사실)

○ 2002년

(단위 : 건)

구 분	발행공시	정기공시	특수공시	수시공시	계
과 징 금	8	2	—	12	22
과 태 료	13	—	—	—	13
수사기관통보 등	—	—	1	13	14
경고·주의 등	19	51	17	33	120
임원해임권고	—	—	—	3	3
계	40	53	18	61	172



○ 2003년

(단위 : 건)

구 분	발행공시	정기공시	특수공시	수시공시	계
과 징 금	33	2	—	38	73
과 태 료	1	—	—	—	1
수사기관통보 등	2	1	—	12	15
경고·주의	5	13	1	15	34
임원해임권고	—	—	—	1	1
계	41	16	1	66	124

○ 2004년

(단위 : 건)

구 분	발행공시	정기공시	특수공시	수시공시	기타	계
과 징 금	6	—	—	27	—	33
과 태 료	5	—	—	—	—	5
수사기관통보 등	—	—	—	3	10*	13
경고·주의	6	2	1	6	—	15
임원해임권고	—	—	—	—	—	0
계	17	2	1	36	10	66

\* 공시위반과는 무관한 것으로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혐의를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한 건임

○ 2005년

(단위 : 건)

구 분	발행공시	정기공시	특수공시	수시공시	기타	계
과 징 금	5	2	—	41	—	48
과 태 료	2	—	—	—	—	2
수사기관통보 등	—	—	—	—	12*	12
경고·주의	3	2	—	15	—	20
임원해임권고	—	—	—	—	—	0
계	10	4	0	56	12	82

\* 공시위반과는 무관한 것으로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혐의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정보사항 제공 또는 수사기관통보한 건임

○ 2006. 6월

(단위 : 건)

구 분	발행공시	정기공시	특수공시	수시공시	기타	계
과 징 금	1	—	—	7	—	8
과 태 료	—	—	—	—	—	—
수사기관통보 등	—	—	—	—	11*	11
경고·주의	—	—	—	8	—	8
유가증권발행제한	—	10	—	6	—	16
임원해임권고	—	—	—	—	—	—
계	1	10	—	21	11	43

\* 공시위반과는 무관한 것으로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혐의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정보사항 제공 또는 수사기관통보한 건임

## 17. 증권사 일임매매 관련

17-1) 1998년 이후 시기별 증권사 일임매매 관련 감독규정  
및 처벌(제제조치) 내용

17-2) 일임매매 관련 감독 개정방향(계획) 및 미국/영국/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선진국의 일임매매 운영 방식

### 17-1) 98년 이후 시기별 일임매매 관련 법규내용

☐ 일임매매 관련 법규 내용 : 붙임 참고

☐ 1998년 이후 법규내용 변동현황

○ 2004. 1.29 거래법 개정

-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일임매매와 관련한 증권회사의 선관주의  
의무·금지행위 등을 거래법에 직접 규정

○ 1999. 6.12 시행규칙 개정

- 일임매매 대상 종목수를 5종목 이내에서 10종목 이내로 확대

## 17- 2) 일임매매 관련 감독 개정방향(계획) 및 미국/영국/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선진국의 일임매매 운영 방식

- 일임매매는 증권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의 규제방안에 관해서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존재할 수 있고 실제 그 규제방식이 국제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현재 금융투자회사 및 자본시장에 관한 기능별 규율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으므로, 동 법안이 확정·시행까지 일임매매 규제의 기본 골격을 어떻게 반영시킬 지에 관하여 재정부와 충분히 논의할 예정
- 입법예고된 법률안의 기본방향은 일임매매를 투자일임업으로 규제하는 한편 그간 문제가 되어 온 과당매매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증권사 자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 【 미국, 일본의 일임매매 운영방식 】

#### 1 미국

- 증권회사의 일임매매를 투자일임업으로 일원화하여 규제  
(40년투자자문업자법 Section 203)
- 투자자문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동법에 따라 SEC에 등록하고 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

□ 다만, 증권회사의 경우 일정조건하에 예외 인정(SEC Rule 202a11)

- 투자자문업무의 수행이 i) 브로커-딜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ii) 동업무 수행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문업법 적용을 면제
- 일임매매(투자결정의 재량권 행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브로커-딜러로서의 업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 미국은 과거 증권회사 일임매매를 증권사 영업의 부수업무로 보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 05.4월 SEC Rule을 개정하여 증권회사의 일임매매에 대해 투자자문업자법을 원칙적으로 적용시키기로 방침을 변경

## **2** **일본**

□ 일임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증권거래법 §42①)

- 증권회사, 그 직원 또는 사용인은 유가증권, 선물·옵션거래의 매매 혹은 그 수탁 등에 대하여 고객의 개별 거래별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구분, 종목, 수량 또는 가격에 대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
  - 다만, 거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임매매 허용

## ※ 일임매매금지의 예외

- i) 비거주자인 고객으로부터 매매구분, 종목 및 수량에 대해 동의를 얻은 후 가격에 대해 시차를 고려하여 동의 범위내에서 증권사가 정할 수 있는 계약
- ii) 매매구분, 종목, 수량 및 가격중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컴퓨터에 의한 처리 등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증권사가 이를 집행하는 경우 등

<붙임>

## 관계 법규

### □ 증권거래법

제107조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①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②증권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이를 매매거래(이하 "일임매매"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9>

1. 고객의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에 의한 투자원칙에 반하여 일임매매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위탁받는 행위
  2. 위탁받은 취지와 위탁받은 금전 및 유가증권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임매매를 이용하는 행위
- ③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 1998.5.25>

제20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2. (생략)
3. 제63조·제95조제1항·**제107조제1항** 또는 제173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생략)

제213조 (과태료) ①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제27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6조·제46조 또는 **제107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이하 생략)

##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일임매매의 방법등) ①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과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좌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임매매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일임종목수는 10종목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한 경우 그 고객의 성명, 유가증권의 수량·가격·매매시기 등을 그 매매거래가 행하여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일임매매의 계약서의 서식, 계좌관리자의 지정 및 관리, 일임매매에 관한 보고, 그 밖에 일임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 □ 증권업감독규정

제4-49조(일임매매계약의 체결) ①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 및 매매시기의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에 의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일임의 범위
2. 일임계약의 존속기간
3. 일임매매관리자
4. 일임계약의 변경 및 해지방법
5. 매매손익의 고객에의 귀속 및 손실보전·이익보장금지
6. 약정시 기재사항이외의 계약내용은 무효라는 뜻

②제1항제1호의 일임의 범위는 유가증권매매의 수량·가격·매매시기의 전부 또는 일부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일임매매관리자는 당해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영업점의 임직원중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제4-50조(일임매매계좌의 관리) ①제4-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임매매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는 일임매매계좌를 일반계좌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일임매매계약이 만료될 때에는 일반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증권회사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영업점별로 일임매매상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10조(일임매매계좌의 관리) 준법감시자는 매월 일임매매계좌의 매매거래내역을 점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11조(일임매매의 주문) ①증권회사는 고객의 일임매매주문을 받을 때에는 종목별로 매매의 구분과 방법 및 일임사항을 명확히 정한 일임매매주문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일임매매주문표에는 고객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화에 의하여 일임매매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주문접수자는 이를 녹음한 후 일임매매주문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전신·모사전송(FAX)에 의하여 주문하는 경우에는 주문접수자가 일임매매주문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일임매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일임매매주문표에 따라 매매주문표를 작성하여 일임매매주문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객이 매매의 시기를 일임한 경우 그 처리기간은 주문한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12조(일임매매주문표의 서식등) ①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일임매매약정서 및 일임매매주문표의 양식을 정할 수 있다.

②규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임매매상황의 보고의 접수에 관하여는 이를 협회에 위임한다.

③협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매월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8. 각 은행별 BIS비율

－ 2005년말 현재 BIS비율

### □ 2005년말 현재 국내은행 BIS비율

은행명	BIS비율(%)
조흥	10.94
우리	11.65
SC제일	10.74
하나	13.29
외환	13.68
신한	12.23
한국씨티	15.05
국민	12.95
대구	11.33
부산	12.25
광주	11.60
제주	11.71
전북	11.53
경남	10.59
산업	18.43
기업	11.11
수출입	13.87
농협	11.81
수협	12.59

## 19. 소비자교육관련

### 19-1) 2003년 이후 청소년 금융교실 개최 실적

### 19-2) 2005년도 및 2006년도 청소년 금융교실 교재(사본)일체

- ☐ 금감원은 미래 경제주체인 어린이·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금융경제 기초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수업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2006.2월 겨울 방학기간 중 제1회 청소년 금융교실을 개최하여 중·고교생 89명을 대상으로 금융경제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음
  - 2006.8월 여름 방학기간에는 제2회 청소년 금융교실을 개최할 계획이며, 중·고교생 각각 40명 이외에 어린이 및 동반학부모 120여명을 포함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자율·화폐·물가의 기초개념, 개인 신용 관리요령, 금융회사 기능과 역할 등 금융경제에 대한 기초지식을 교육할 예정이며
  - 어린이 동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내 자녀를 위한 경제교육 방안, 금융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금융상품별 특성 및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임

(붙임)

**청소년 금융교실 교재(사본)**

1. 어린이용 교재

○ 별첨

2. 중학생용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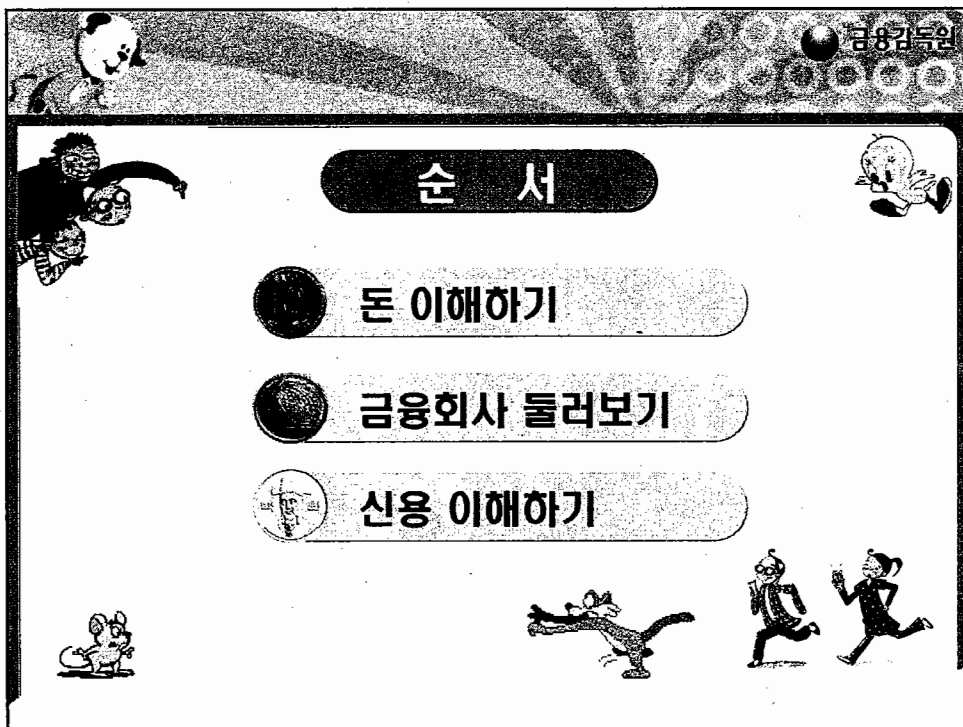
○ 별첨

3. 고등학생용 교재

○ 별첨


4. 학부모용 교재

○ 별첨






## 돈 이해하기



**왜 돈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불려졌어요!



아무도 돈없이 살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돈에 대한 지식,  
즉 금융지식이 없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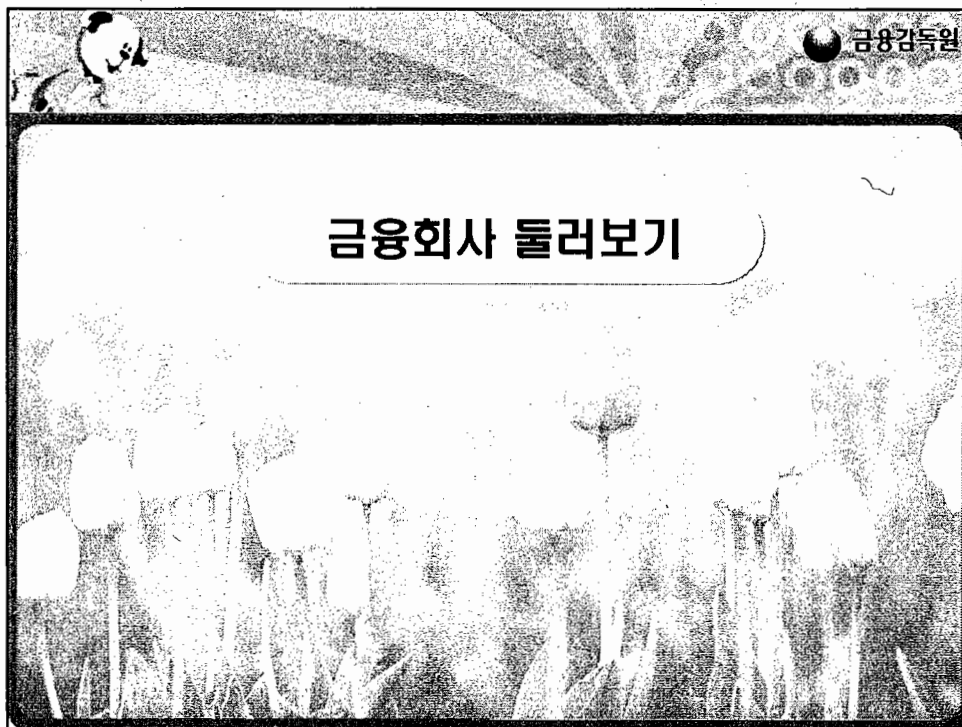






**금융이해력 측정결과**





교육 단계	측정 결과
고등	55.2
중등	40.1
목표	56.8






## 금융이란 ?






금융이란 ?


- 돈의 융통(돈 다스리기)
- 즉,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활동



기업

돈 필요한 사람(수요자)





가게

돈 대주는 사람(공급자)



## 우리나라 금융회사













### 다양한 금융기관









**은행은 어떤 일을 할까요?** 금8김독원



돈이 남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맡아 주고 대가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고객이 저축한 돈을 이용하여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  
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보험은 왜 들지요?** 금8김독원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사고가  
생길 수 있어.

질병, 자동차 사고,  
사망, 화재, 도난,  
실직, 노령…….







**매번 30분씩 늦게오는 친구**

내게 친한 동생이 있습니다.

**어제도 30분**

**지난 주에 30분**

**지난 달에도 30분**

**내일 만나기로 했다면?**




## 신용은 뭘까?

 금8감독원


장래의 어느 시점에 그 대가를 치를 것을 약속 하고  
현재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내 능력 을 말합니다.

### [ 신용 = 나 자신(Me) = 약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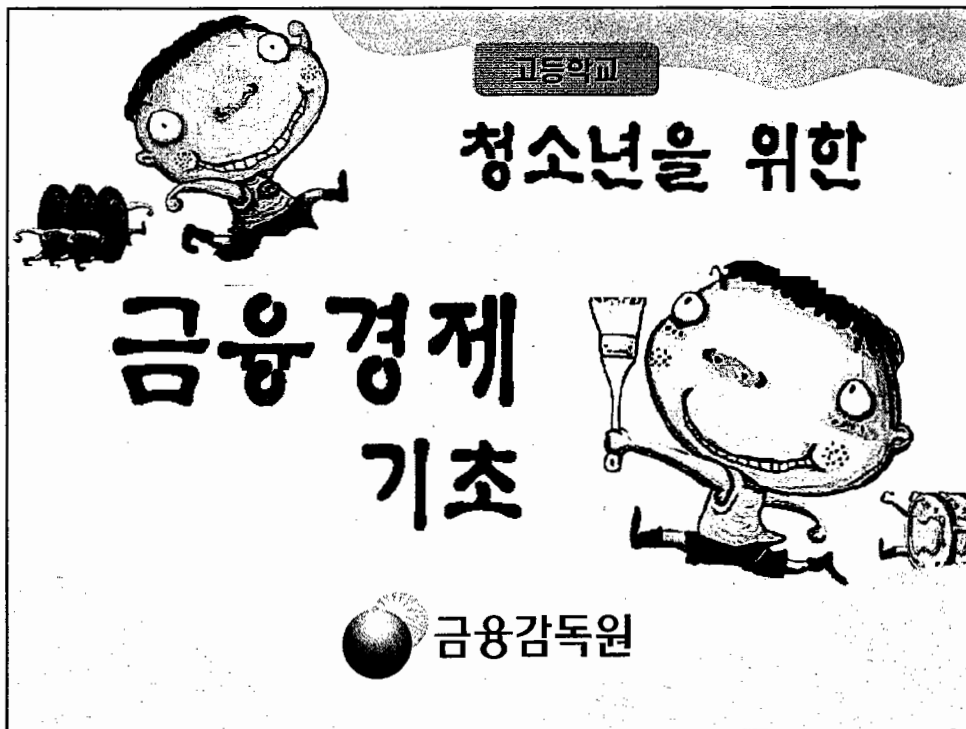


## 나는 신용이 몇 점 ?

 금8감독원

1 나는 종종 빌린 물건(비디오, 책 등)을 늦게 반납한 적이 있다
2 친구가 새로 산 물건을 보면 나도 따라 산다
3 나는 지주 간식을 사먹거나 친구한테 선물을 사준다
4 이분 동안 쓰는 용돈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
5 저축은 부모님이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6 돈을 어디에 쓸지 미리 계획하지 않는다
7 나는 주변사람으로부터 지주 돈을 빌린다
8 가지고 있는 물건 중 쓰지 않는 물건이 많다
9 용돈을 받은 날 한꺼번에 많이 쓴다
10 용돈 기입장에 지출기록을 전혀 하지 않는다



## 나의 금융지식 몇점 ?

1. 모든 이자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2.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금융상품이나 주식투자보다 부동산 투자가 낫다.
3.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에 비해 신용대출 금리가 높다.
4. 소득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5. 자녀가 없는 사람 보다 있는 사람에게 생명보험은 더 필요하다.
6. 선불카드나 직불카드도 신용카드의 일종이다.
7. 신용카드의 모든 수수료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부담한다.

## 돈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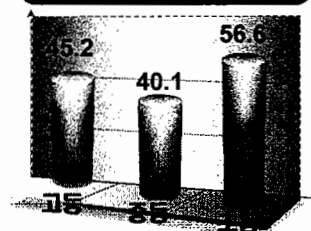
### 왜 돈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불려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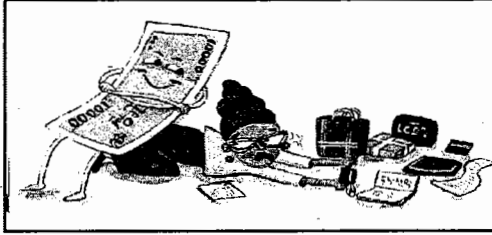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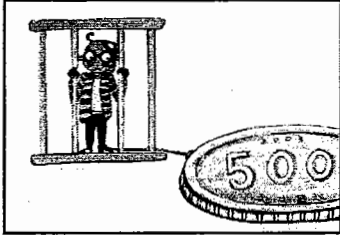


아무도 돈없이 살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돈에 대한 지식,  
즉 금융지식이 없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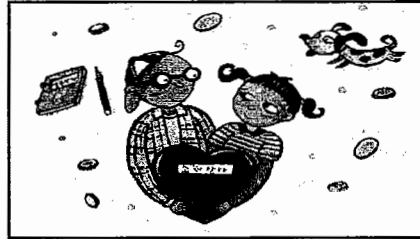
금융이해력 측정결과



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면....



## 금융회사 둘러보기



## 금융이란 ?



금융이란 ?

- 돈의 유통(돈 다스리기)
- 즉,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활동



돈 필요한 사람(수요자)



돈 대주는 사람(공급자)

## 우리나라 금융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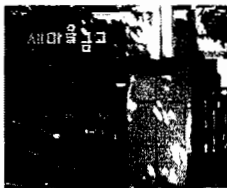
SAMSUNG  
anycar



다양한 금융기관

신한생명

SAMSUNG *fn* .com



우리투자증권 W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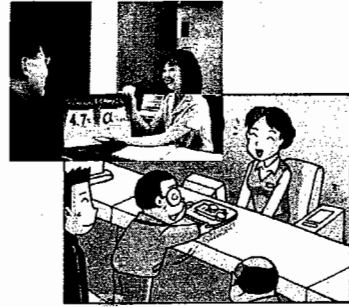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 은행은 어떤 일을 할까요?



돈이 남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맡아 주고 대가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고객이 저축한 돈을 이용하여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  
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 보험은 왜 들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사고가  
생길 수 있어.

질병, 자동차 사고,  
사망, 화재, 도난,  
실직, 노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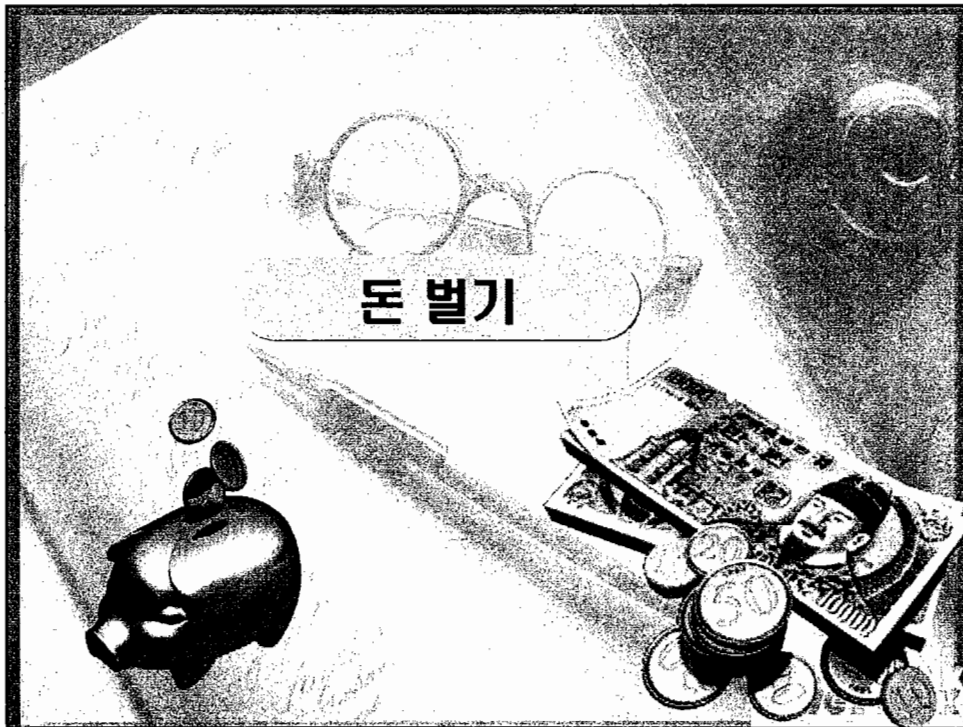


## 증권회사 이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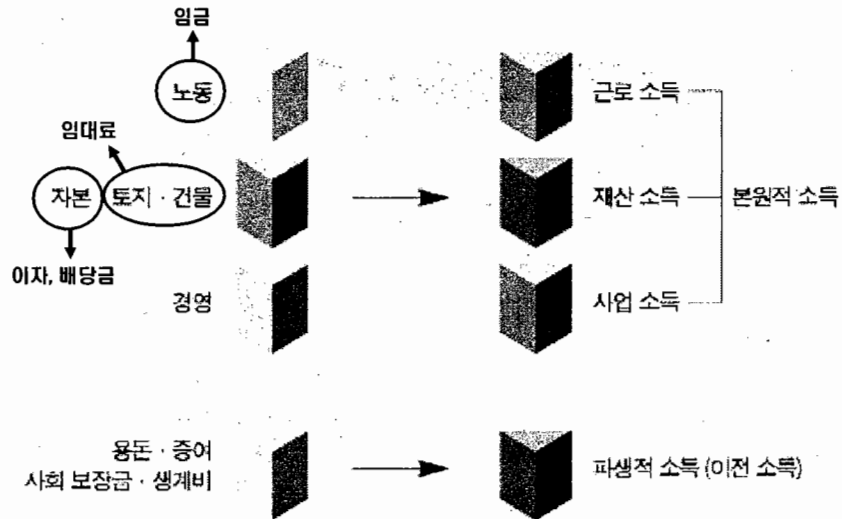
눈에 보이는 시장과 보이지 않는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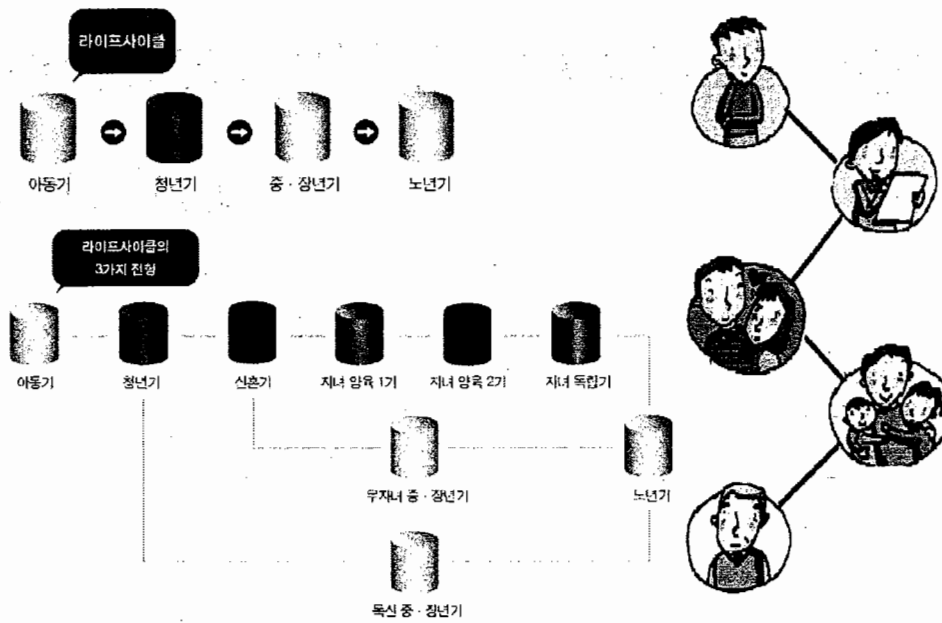
증권시장은 주식, 채권과 같은 증권을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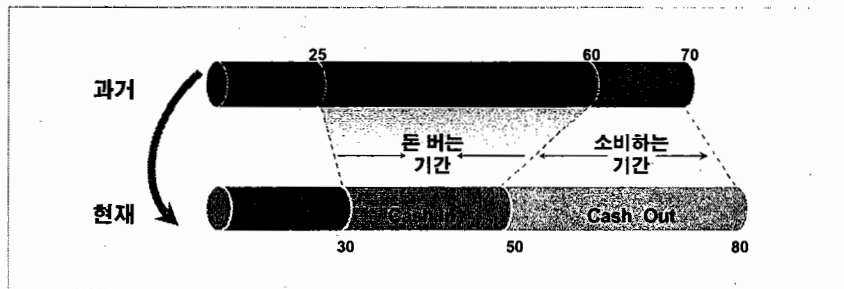
## 1. 돈을 버는 방법



## 1. 라이프사이클과 재무설계



## 2. 고령화 사회와 저금리 시대 진입



### 은행 실질금리 추이



참고: 실질금리 = 예금금리 -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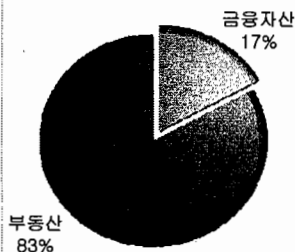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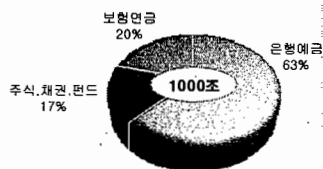
정기적금 金利 사상 첫 3%대로 하락

매달 100만원 1년 적금  
利子 한달에 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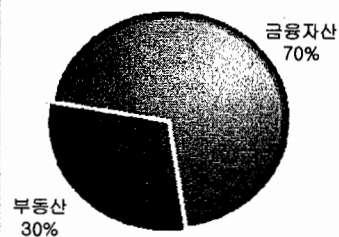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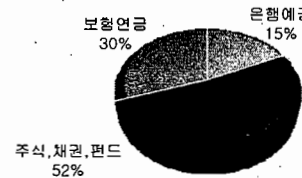
고령화 사회 진입과 정기적금의  
세금 인센티브 소멸로 정기적금  
의 인기에 차질이 예상된다.  
은퇴준비 자금으로 정기적금  
은퇴준비 자금으로 정기적금  
은퇴준비 자금으로 정기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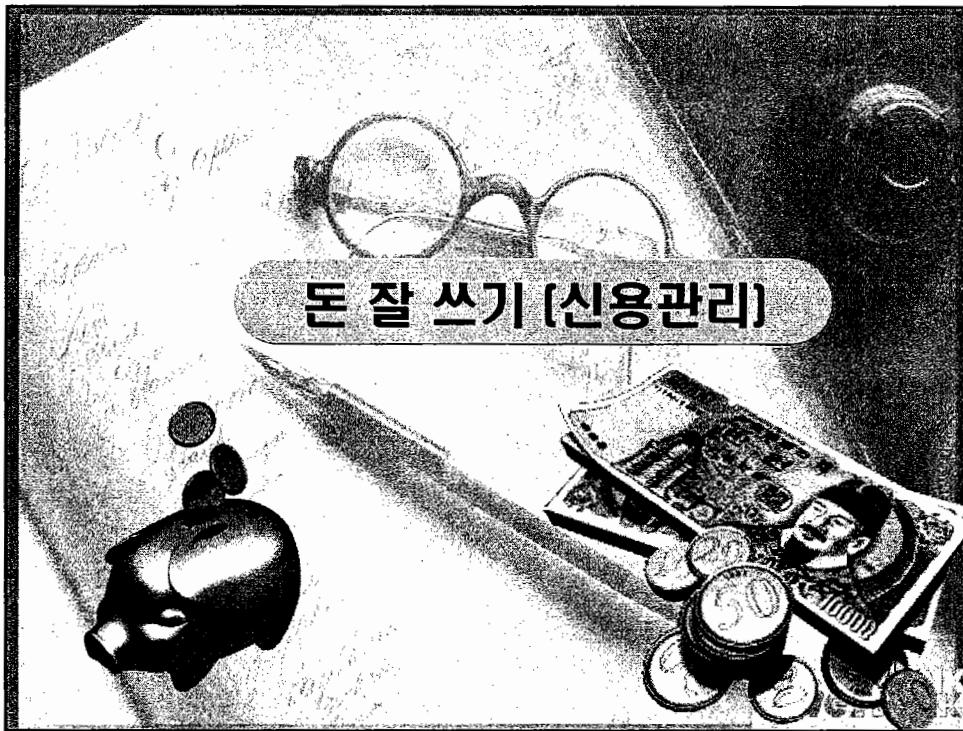
## 개인 자산구성 비교

### 한 국



### 미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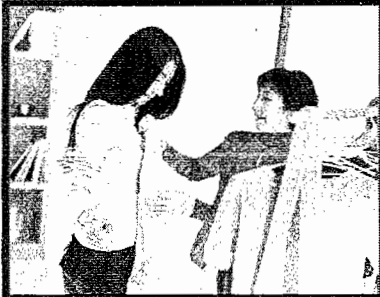


## 돈 잘 쓰기 [신용관리]

### 나는 신용이 몇 점 ?

- 1 나는 종종 빌린 물건(비디오, 책 등)을 늦게 반납한 때가 있다
- 2 친구가 새로 산 물건을 보면 너무 따가워진다
- 3 나는 자주 간식을 사먹거나 친구한테 집세를 시킨다
- 4 하루 동안 쓰는 용돈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
- 5 저축은 부모님이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6 돈을 어디에 쓸지 미리 계획하지 않는다
- 7 나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자주 돈을 빌린다
- 8 가지고 있는 물건 중 쓰지 않는 물건이 많다
- 9 용돈은 받은 날 한꺼번에 많이 쓴다
- 10 용돈 기입장에 지출 기록을 전하지 않는다

## 1. 소신있는 소비습관



무엇을 입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인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소신있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삶을  
살 가치가 있다.



주체성 없는  
모방소비는  
자신의 몰개성·  
몰가치화를  
낳는다.

## 2. 신용거래 소비자신용?

**신 용**

장래의 어느 시점에서 그 대가를 치를 것을 약속  
하고 현재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장차 값기로 하고 현재 현금,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일종의 계약행위

**신용거래**

## 소비자신용

☞ 개인이나 가게에서 소비 행위와 관련하여 신용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신용이 좋다' 혹은 '신용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개인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평가



따라서 어떤 사람의 신용이 불량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



## '빚'이란 무엇일까?



'신용'과 '빚'은 다른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신용'이란 신용을 제공하는 쪽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빚'이란 그 신용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쪽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말로

☞ '신용'과 '빚'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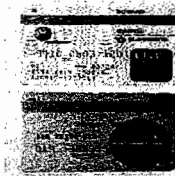
## 소비자 신용은 왜 필요한가?



신용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혼이 빛지는 것이라고 생각.....

현명하게 이용하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

신용은 미래 소득을 현재로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다 주어 소비자가 원하는 생활 수준 유지 가능



신용카드,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도 일종의 신용 행위

신용관리를  
잘 못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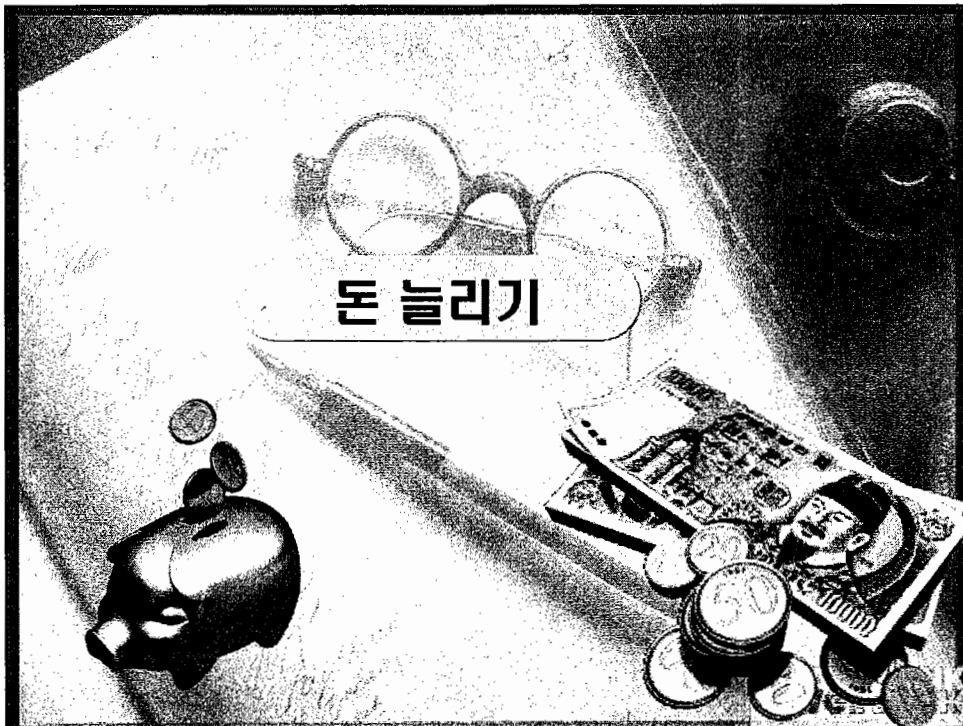
## 연체를 하면 어떻게 될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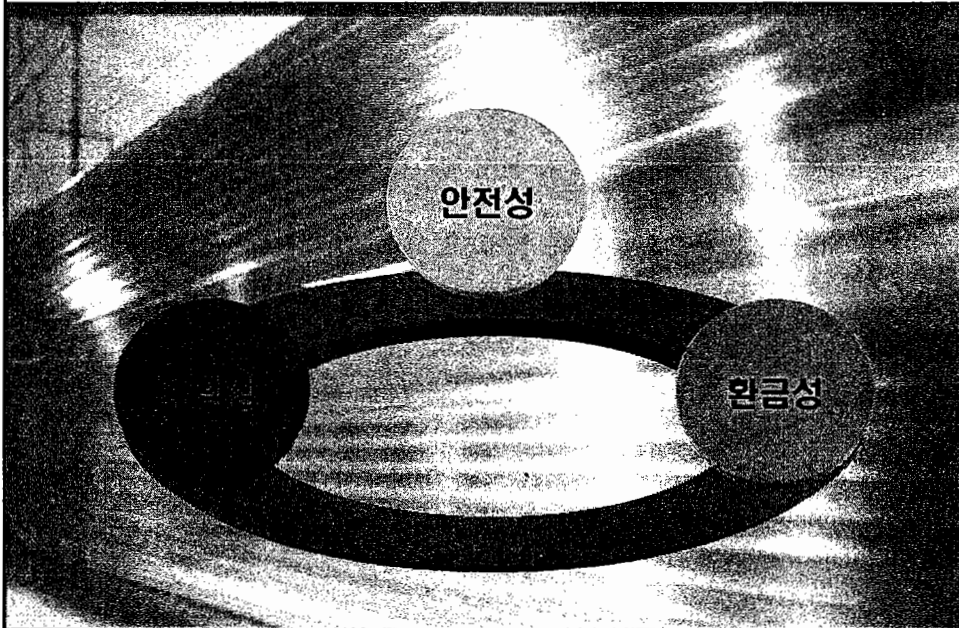
### ➤ 대출금을 장기적으로 연체하게 되면 .....

- 해당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도 신용정보 공유
- 공유한 정보 오래도록 보존
- ☞ 금융회사와의 거래, 물건 할부구매 경우에도 규제

즉, 신용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불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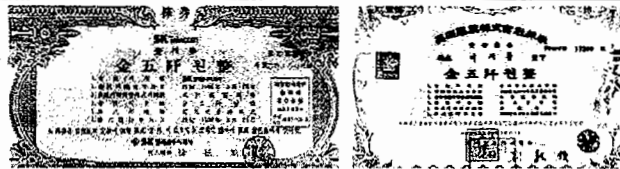
## 투자를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는?



## 주식 · 채권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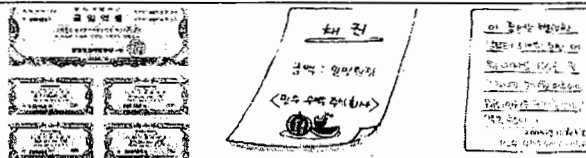
### 주식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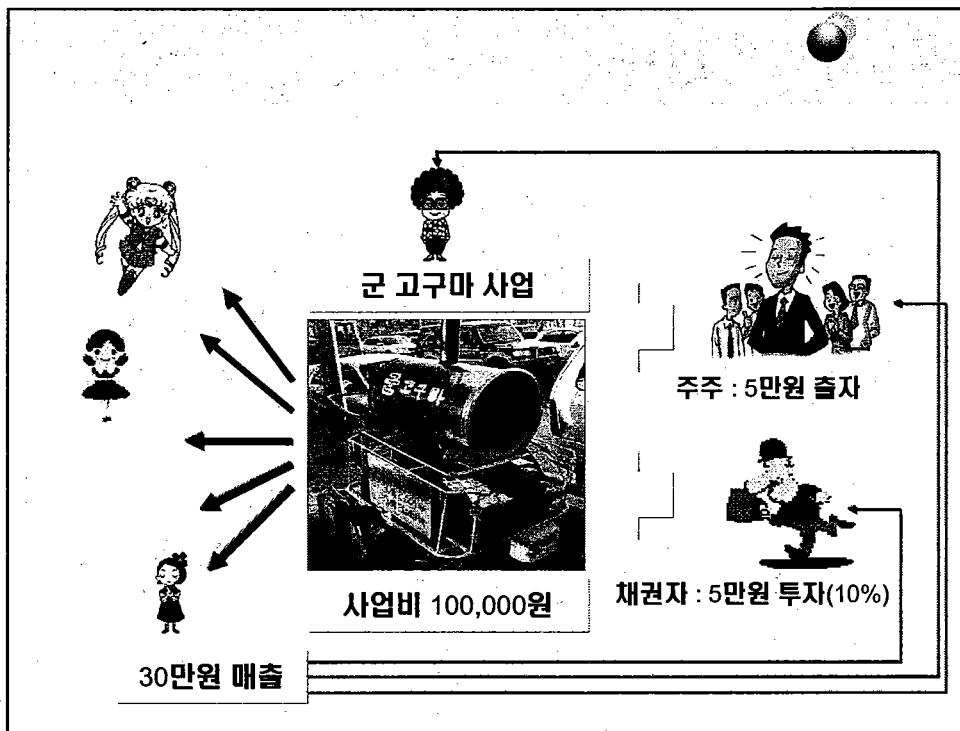
회사의 경영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게 발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투자한 사람을 주주라고 합니다.



### 채권이란?

돈을 빌린 국가, 지방 자치 단체, 회사, 은행 등이 얼마의 돈을 빌렸으며, 이자는 얼마를 줄 것이며, 언제 까지 돈을 갚겠다는 내용을 적은 증서를 만들어서 돈을 빌린 사람에게 주는 것을 채권이라고 합니다.







**1332**

## 선청면(상속민)

- ④ 금융거래조회신청

④ 회 근(3~15일)  
(적수번호 확인)

(1) 결구종교부

출판: 전하통보(6~15일)  
(접수번호 확인)

అనుబంధం

## 각 법 회

국립수목원·국립생물자원관  
임원·교직원

⑤ 田舎 (1~2歳)

④ 조희은  
(3~5회)⑤ 회 신  
(6~15일)

각금융기관

소비자종합홈페이지 <http://www.fss.or.kr>.

■ 사이버민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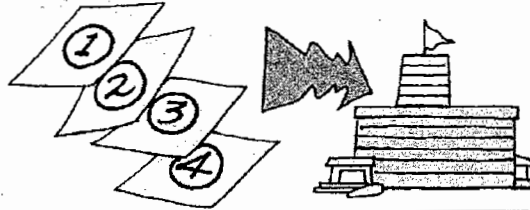
■ 금융거래주의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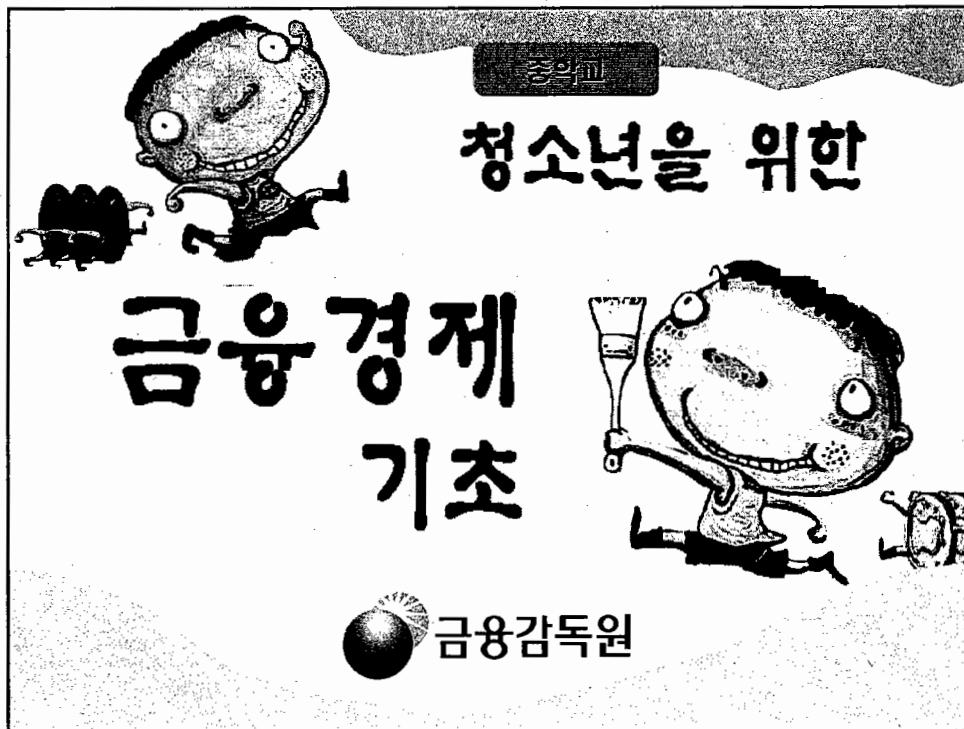


■ 민원상담사례 코너



■ 분쟁조정사례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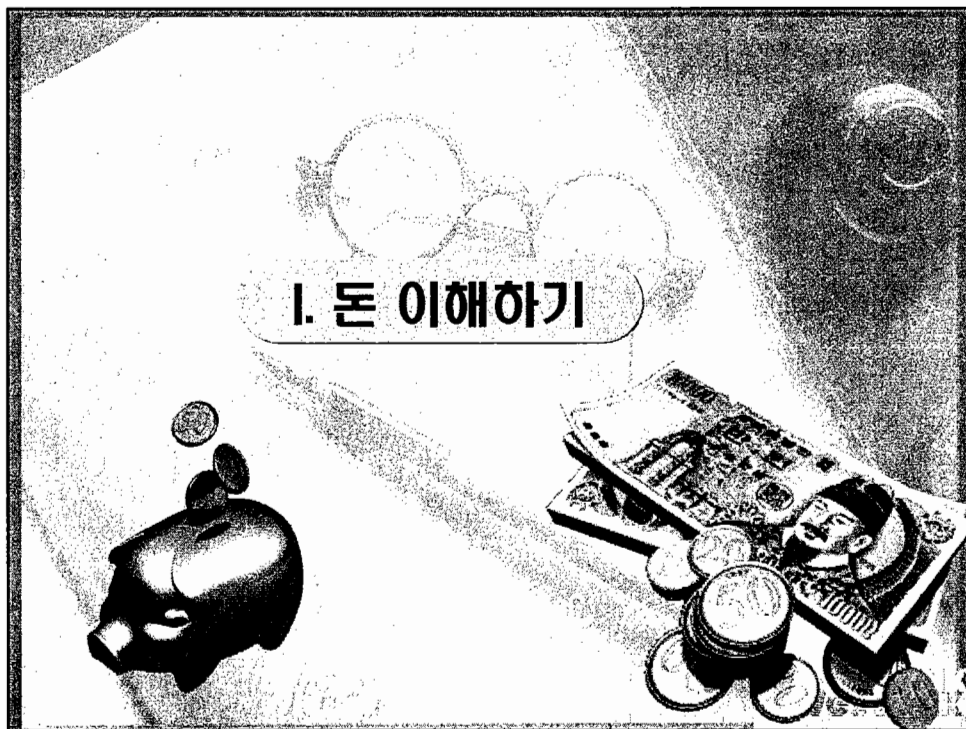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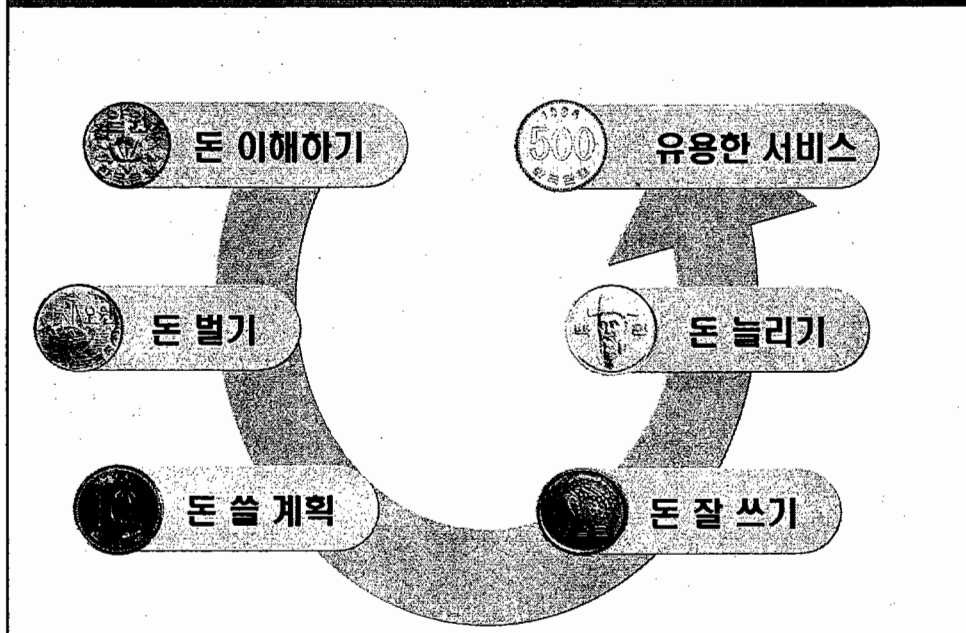




## 나의 금융지식 몇점 ?

1. 모든 이자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2.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금융상품이나 주식투자보다 부동산 투자가 낫다.
3. 일반적으로 집을 담보로 한 대출에 비해 신용대출 금리가 높다.
4. 소득이 낮은 사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5. 자녀가 없는 사람 보다 독신자에게 생명보험은 더욱 유용하다.
6. 선불카드나 직불카드도 신용카드의 일종이다.
7.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회사가 아니라 사용자가 부담한다.

## 배 울 내 용



# 1. 우리가 지향하는 돈의 모델



## 돈을 부자로 부린 경우

"전 재산 불우노인에..." 다 주고 간 스승  
퇴직교사 이효중씨 유족 1억 기탁

"고인이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이효중씨가 30년 가까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모은 1억원을  
'노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가족을  
통해 기탁하신 것입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잘 써달라"며 이 돈을 전달했다.



## 돈을 주인으로 삼긴 경우

새마을금고 강도, 20대 주부가 범인

[SBS TV <뉴스 24> 11월 21일]



<8뉴스> <앵커> 지난 26일 충  
북 청주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강도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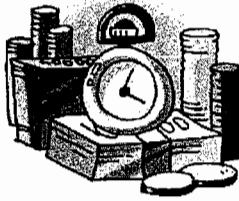
자식 둘을 키우는 24살의 주부였  
습니다.

청주방송 황현규 기자입니다. <  
가치> 새마을금고 여직원을 장  
시간 폭행한 용의자를 검거했습  
니다.





## 2. 희소성과 선택



한정된 돈, 시간, 물건

+



한없는 욕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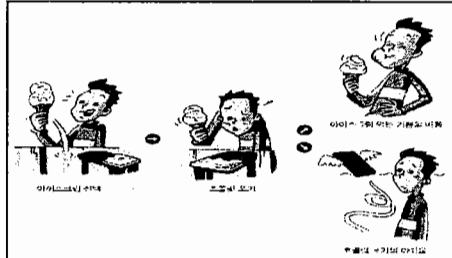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는 상충

- 자유재 : 유용하지만, 양이 많아 돈을 치를 필요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 경제재 : 희소한 자원이라 노력을 하거나 돈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것
- 희소성 : 가치있고 유용하면서 동시에 원하는 것에 비해 그 숫자가 적은 것



선택해야 함

### ■ 선택에도 비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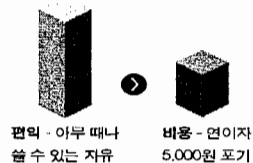
선택을 한다는 것은  
대안을 포기한다는 의미

#### 기회비용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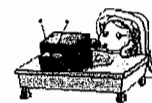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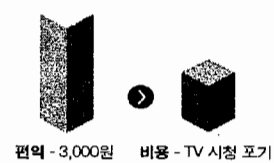
무언가를 선택함에 따라  
포기해야만 하는 다른  
대안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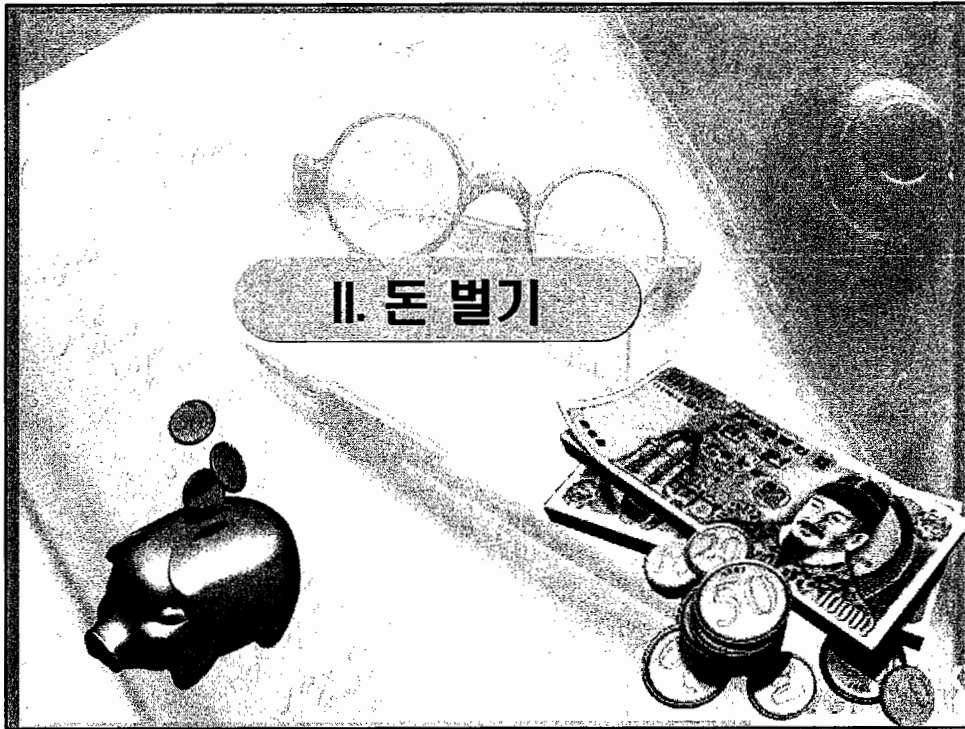
### ■ 편익과 비용 고려 편익이 큰 쪽을 선택

#### 10만원 대저저금통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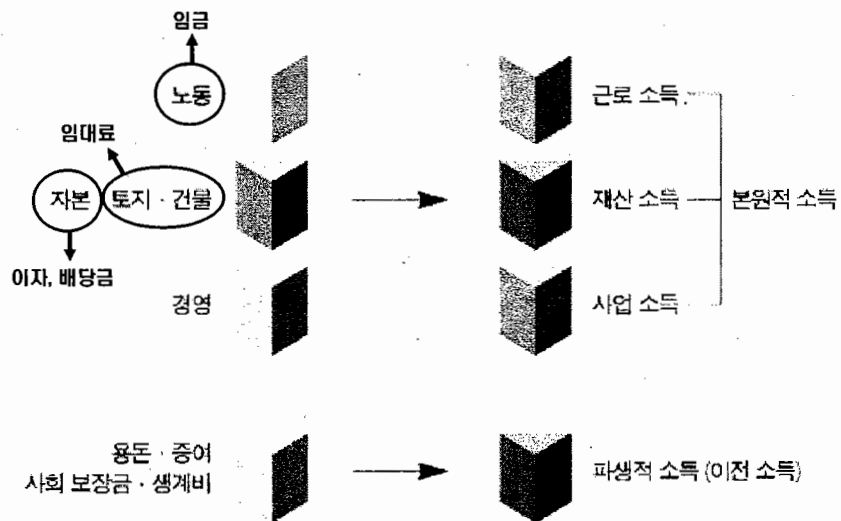


#### 심부름할때 편익과 비용





## 1. 돈을 버는 방법



## 2. 21세기 유망직업

세상의 변화를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

### ● 2005년 10대 유망직업

•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 고학력에 대한 수요증가

• 삶의 질을 높이는 직업 비중 증가

• 여성 노동력 증가

• 인터넷 도입에 의한 직무내용 변화

순위	직업	점수
①	정보보안전문가	844
2	인사컨설턴트	831
3	생명공학전문가	796
4	국제협상전문가	770
5	헤드헌터	741
6	커리어코치	713
7	게임기획자	660
8	경영컨설턴트	574
9	브랜드매니저	556
10	변리사	529

※자료:인크루트(3500점 만점)



### 바리스타 - 커피를 만드는 예술가

고객 입맛에 대한 배려와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  
전문지식과 세심한 감각 지는 교양인

### 매너컨설턴트 - 직종 · 직책에 맞춤형 매너교육

"세련된 자기표현은 인생의 격을 높여주죠"  
두터운 고객층, 개별 컨설팅 의뢰도 늘어나는 추세



### 환경 컨설턴트

성장가능성 무궁무진한 클린 솔루션  
지구환경보호 대명사에 부합되는 유망직종



## 캐릭터 디자이너 - 제품 · 기업이미지 높여주는 분야

"자기만의 독특한 감각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팬시 · 광고회사, 기업홍보실 등 넓은 활동영역

## 게임 기획사

"세련된 자기표현은 인생의 격을 높여주죠"  
작가 · 디자이너 · 디렉터로 세분화  
황금알을 낳는 엔터테인먼트의 리더



## 특수효과 기술자

현실에서 구현하기 힘든 장면 재현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아름다운 현혹자  
컴퓨터 그래픽 이용한 '포스트 프로그램' 작업



## 여행 코디네이터 -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되는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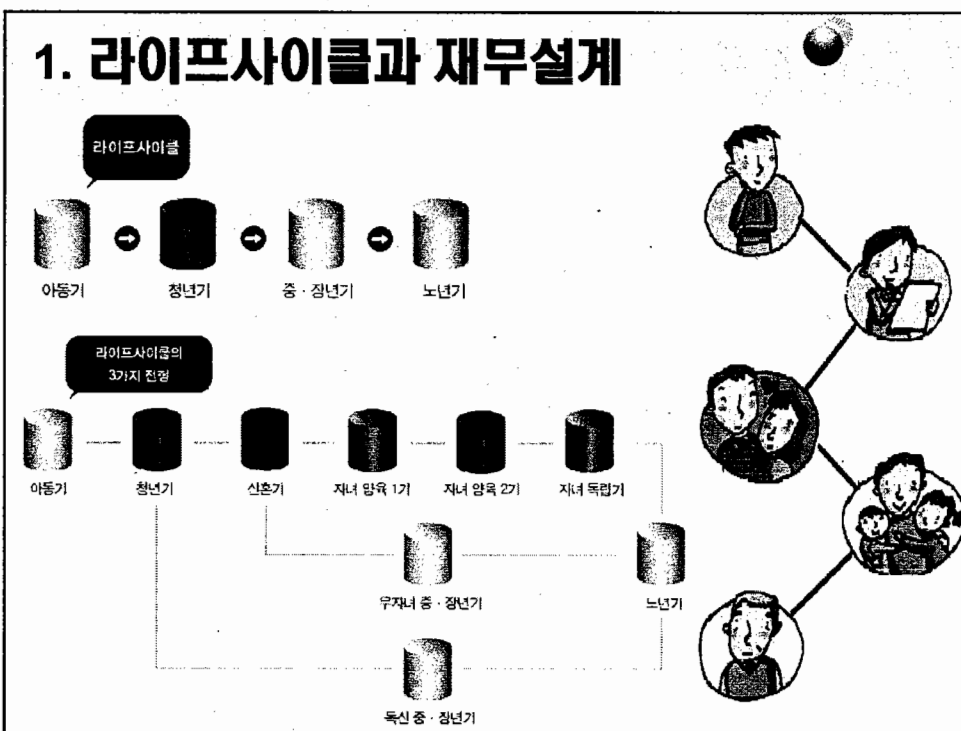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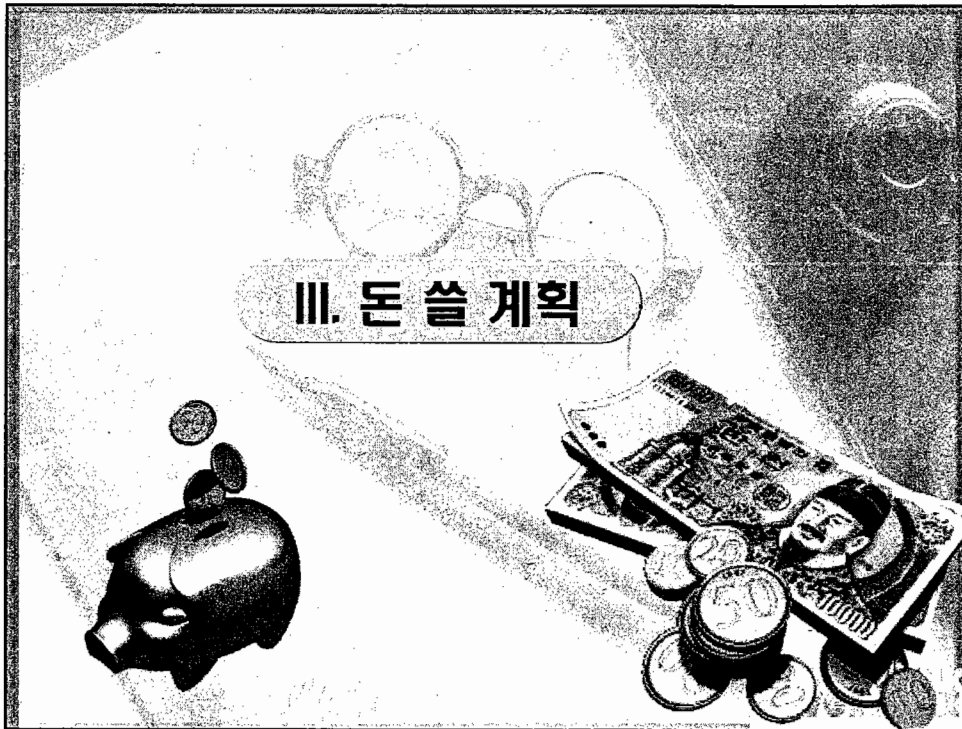
감동과 추억을 만들어 주는 족집게 여행박사  
A부터 Z까지 '랜투맨식' 완벽 가이드

## 실버 플래너

고령화사회, 미래를 설계할 실버산업 전문가  
요양원 · 복지관 등에서 수요 폭증  
사회복지 증진 추세로 매력적인 직업 · 사업 아이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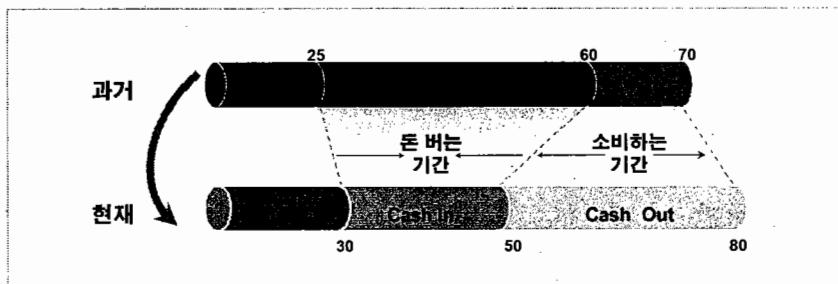
니는 무엇을 잘할까?  
니는 좋아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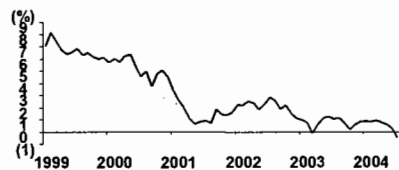
## 연령별 주요 재무사건

20대	취업, 결혼
30대	자녀출산, 내집 마련
40대	자녀교육, 노후자금 준비
50대	자녀교육, 노후자금 준비, 조기퇴직, 재취업
60대	퇴직, 연금생활

## 2. 고령화 사회와 저금리 시대 진입



### 은행 실질금리 추이



참고: 실질금리 = 예금금리 -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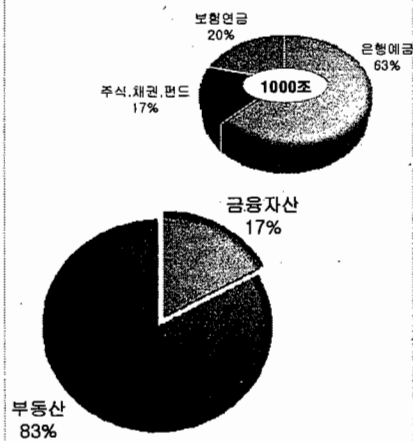
### 정기적금 金利 사상 첫 3%대로 하락

매달 100만원 1년 적금  
利子 한달에 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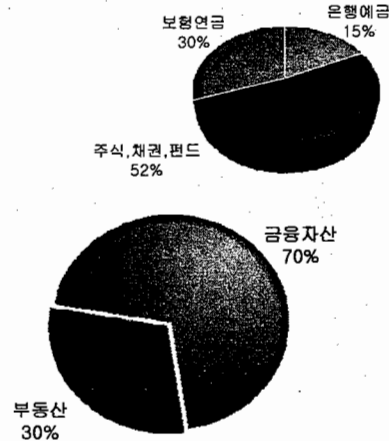
그런데,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은 아직 전년 대비 1%포인트 높은 4%대에 머물러 있어 저금리 시대에 대비한 자금의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저금리 시대에 대비한 자금의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개인 자산구성 비교

한 국



미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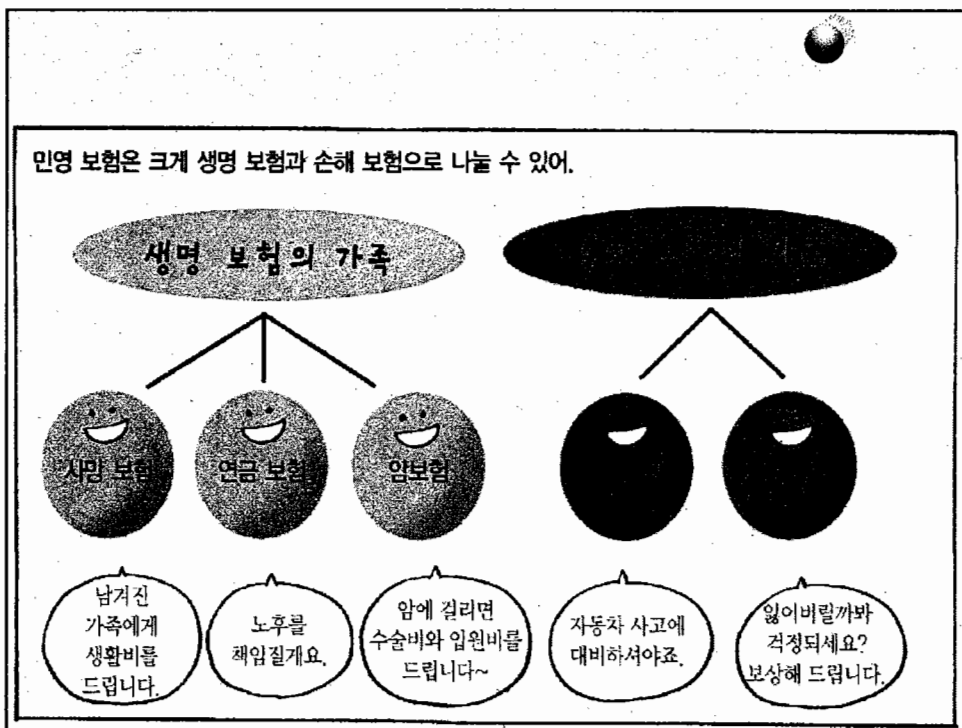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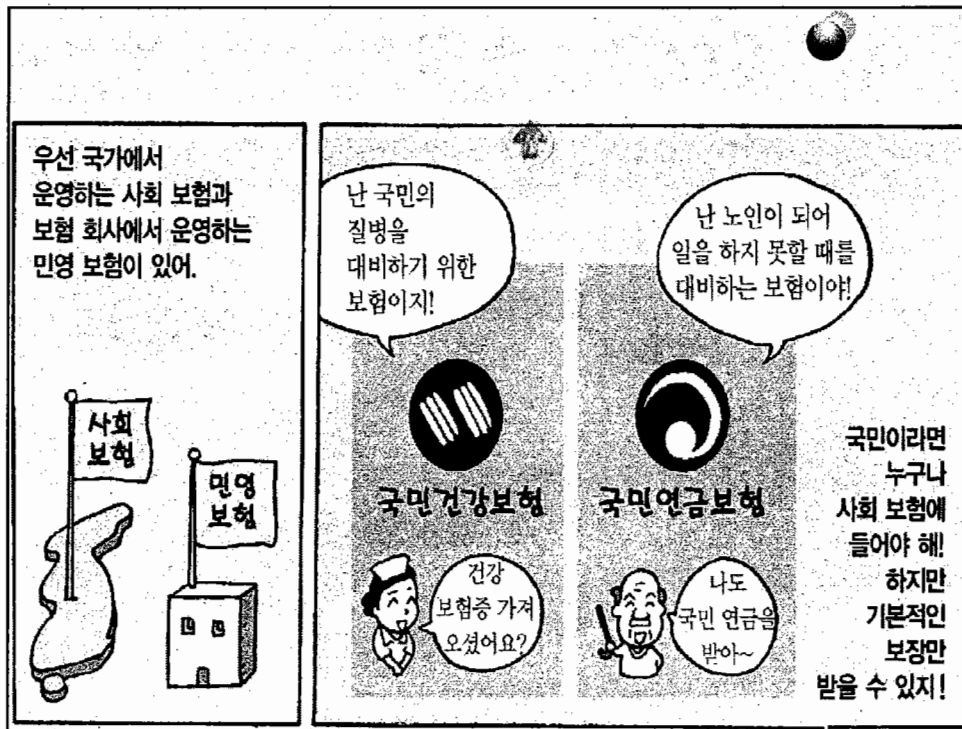


## 3. 위험관리와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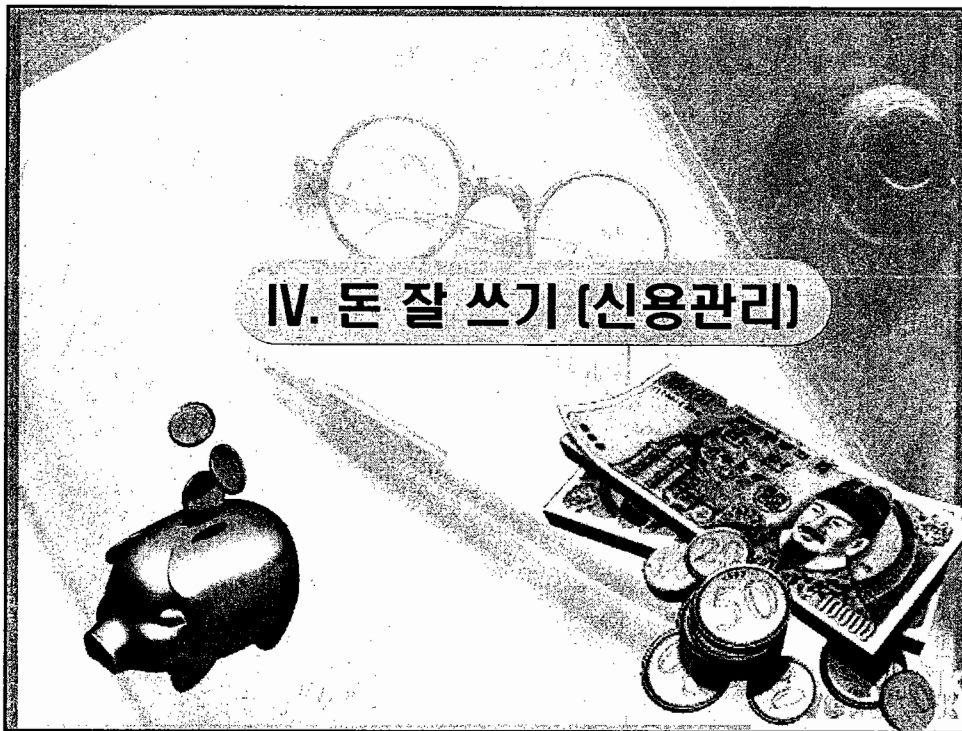
모든 사람에게는  
위험한 사고가  
생길 수 있어.

질병, 자동차 사고,  
사망, 화재, 도난,  
실직, 노령…….









## 합리적 소비와 소비의 외부효과

Microsoft Internet Explorer

주소: http://shopping.empas.com/

**특별한 이벤트**

- 발행된 상품**  
[가전제품] 광학 렌즈  
특별한 날 선물세트 모음전  
온라인 가구의 열거 KBM
- 비밀 특가**  
인기 특가 상품의 온라인  
사전예약에서 상점까지까지  
이벤트 참여 혜택 제공
- LG전자 다이소**  
3% 할인  
or 4% 적립
- 송이꽃화**  
특별한 날  
특별한 날
- 세탁기의 새로운 선택**  
세탁기 선택하는  
이웃과 함께  
특별한 날

**EG SALE**

- 2005 주중하는 상품  
최저가 5,000원
- 2005년 K2 인기인  
최저가
- FORUM**  
최저가
- 100% 할인  
상품
- 나이키/무마**  
아티스틱/리복  
5%쿠폰 증정

**이벤트**

- 케옥스 V6 49만원대  
이벤트 가격
- 동대문공정  
내장자리를 위한 패션이벤트  
히트 후티 4,900  
후티플러스 히트 3,900원
- 아이세이브존  
최저가 상품할수 사은품까지  
할인율인입점 특별전  
플리켓 화이트데이가림 커튼
- 디앤상**  
할인율인입점화 최고 20%  
영종 5대 브랜드 S/S 신  
영종 인기 할수 대스타 스텝
- 루타닷컴**  
이벤트 2,000원부터  
할인 할 수 있는  
개별리세일 2사~3사까지
- Comel**  
브랜트 트레이닝복 세일  
모달리 10% 할인쿠폰  
플리플러스 히트 최고 54%

**부화뇌동 효과**

**스님 효과**

## 합리적 소비를 위한 7단계

제1단계 : 욕망의 구체화

제2단계 : 예산 범위 설정

제3단계 : 후보 재화의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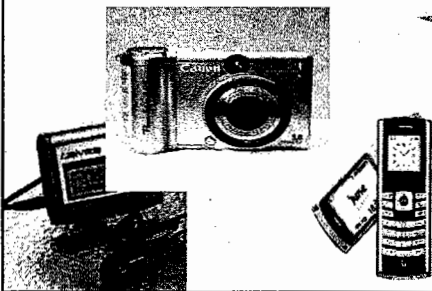
제4단계 : 요구 기능·특징 추출

제7단계 : 1순위 제품의 구매

제6단계 : 숨겨진 비용·점의 탐색

제5단계 : 격자포를 통한 점수 비교

가격비교 사이트 활용  
예누리, 다나와



	가격	크기	주요 기능	MP3 기능	전파성	합계
S사의 제품 모델 X	250만~27만 원	45	87	9/10	5/5	23/27
L사의 제품 모델 Y	240만~25만 원	35	87	9/10	4/5	22/27
P사의 제품 모델 V	200만~23만 원					
E사의 제품 모델 K	280만~29만 원					

## 2. 신용거래 소비자신용?

**신용**

장래의 어느 시점에서 그 대가를 치를 것을 약속하고 현재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장차 값기로 하고 현재 현금,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일종의 계약행위

**신용거래**

## 소비자 신용

☞ 개인이나 가게에서 소비 행위와 관련하여 신용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신용이 좋다' 혹은 '신용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개인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평가



따라서 어떤 사람의 신용이 불량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



## '빚'이란 무엇일까?



**'신용'과 '빚'은 다른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신용'이란 신용을 제공하는 쪽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빚'이란 그 신용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쪽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말로

☞ '신용'과 '빚'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개념



## 소비자 신용은 왜 필요한가?



신용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흔히 빚지는 것이라고 생각.....

현명하게 이용하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

신용은 미래 소득을 현재로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다 주어 소비자가 원하는 생활 수준 유지 가능



신용카드,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도 일종의 신용 행위

## 사람이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용은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게 해주어 금전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

학자금 마련

결혼 비용 마련





## 연체를 하면 어떻게 될까 ?



### ➤ 대출금을 장기적으로 연체하게 되면 .....

- 해당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도 신용정보 공유
- 공유한 정보 오래도록 보존
- ☞ 금융회사와의 거래, 물건 할부구매 경우에도 규제

즉, 신용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불이익.....

## 신용 불량이란 ?



친구들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

☞ 거래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용 불량으로 낙인

한번 신용을 잃게 되면 연체금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신용전과 기록이 오래도록 보존

☞ 따라서, 고통받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게 돼 .....

2004년말 현재

400여만명

10가구당 3가구에

1명

경제활동인구 7명 가운데 1명이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

## 신용불량자(연체자)가 되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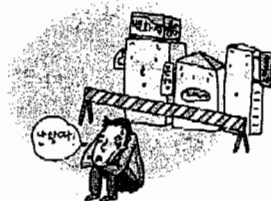
대출을 새로 받을 수가 없거나 대출시 불이익

재산상의 불이익

연대 보증 금지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 신용을 통한 금융 거래 금지 등

회사 취직 및 비자 발급에 제약



신용불량(연체)기록은 각 금융회사에서 오래도록 보존

☞ 개인신용관리 매우 중요

##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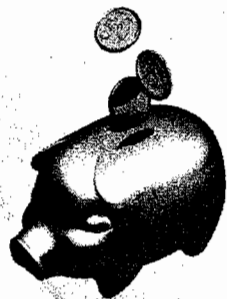
평소에 신용 관리를  
잘 했던 성실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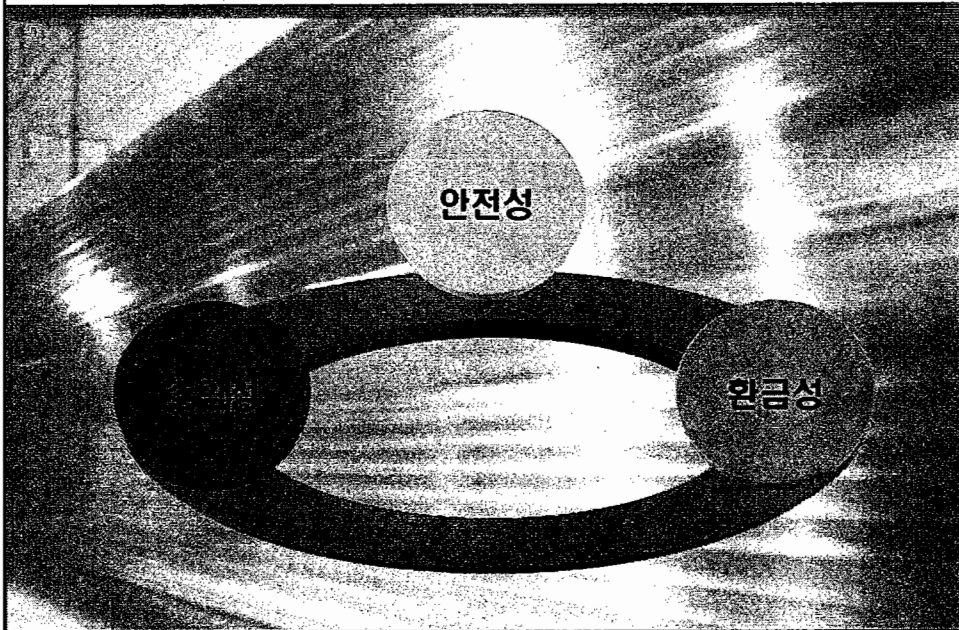
평소에 신용을 잃어  
신용 불량이 된 왕따씨



## V. 돈 늘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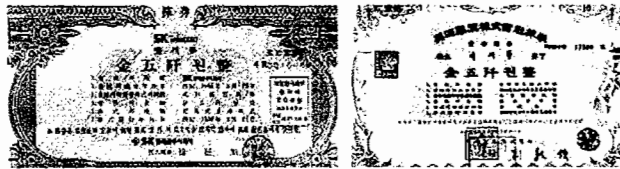
## 투자를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는?



## 주식 · 채권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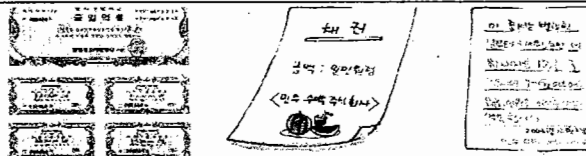
### 주식이란?

회사의 경영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게 발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투자한 사람을 주주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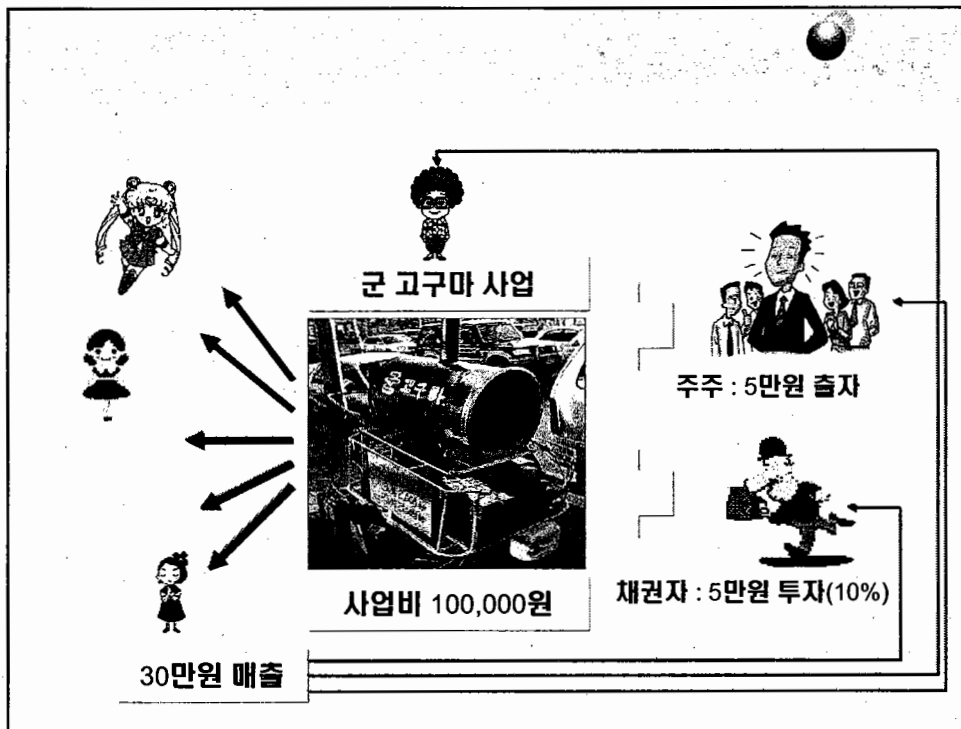


### 채권이란?

돈을 빌린 국가, 지방 자치 단체, 회사, 은행 등이 얼마의 돈을 빌렸으며, 이자는 얼마를 줄 것이며, 언제 까지 돈을 갚겠다는 내용을 적은 증서를 만들어서 돈을 빌린 사람에게 주는 것을 채권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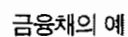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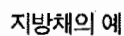





## 어디에 투자를 해야되요?

투자 수단의 특성 \_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을 중심으로

투자 수단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
부동산	●	●	●
주식	●	●	●
은행 예금	●	●	●
채권	●	●	●





## 신경인 (상속면)

- ④ 금융거래조회신청

১৯৬৩

별 회 근(3~15일)  
(집수번호 확인)

(四) 習字練習

· 2. 공화통보(6~15일)  
(일수번호 확인)

১৯৭৬ সালে  
 ১৯৭৬ সালে

각 협회

④ 조회요청  
(3~5일)

각급유기관

(6) 회 신  
(6-15일)

소비자종합홈페이지 <http://www.fss.or.kr>.

■ 사이버민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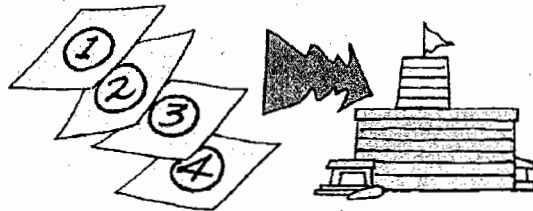
■ 금융거래주의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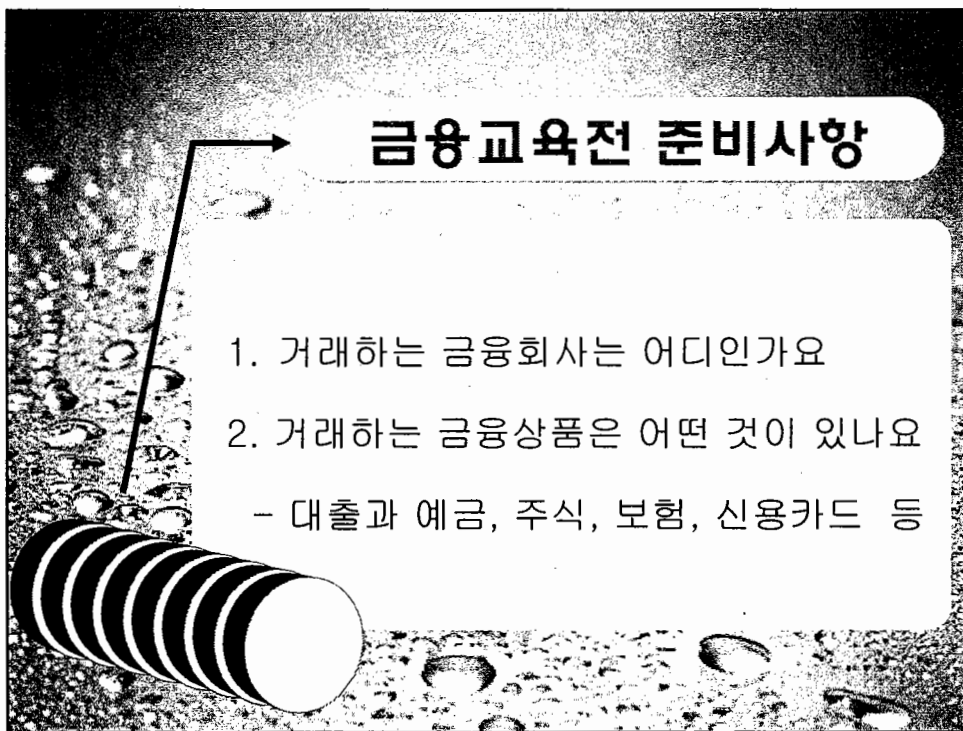


■ 민원상답사례 코너



■ 분쟁조정사례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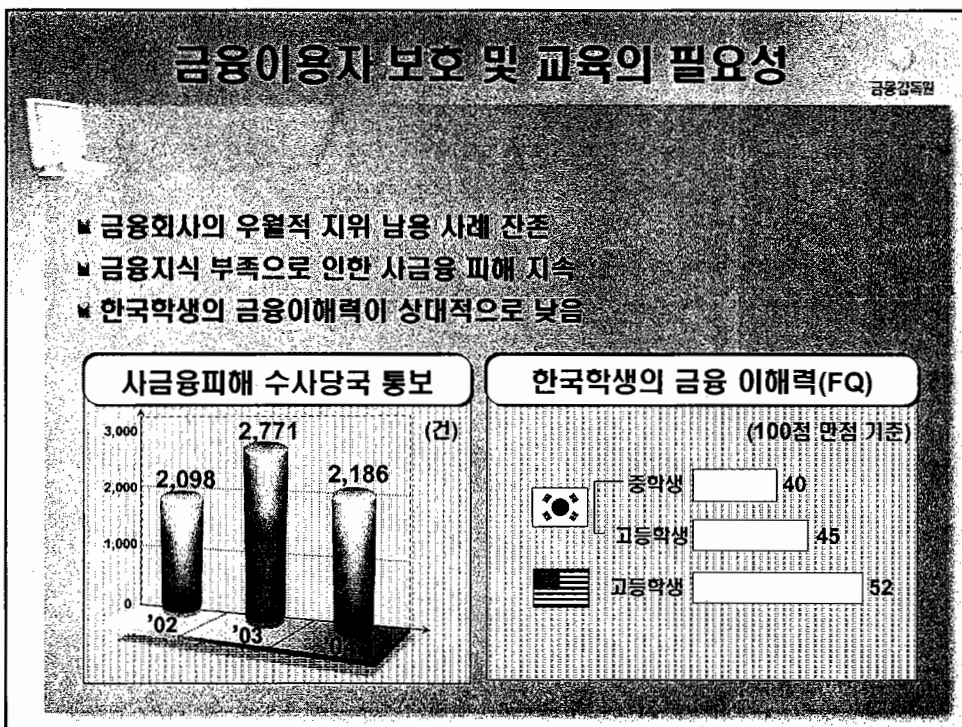


# 순서

- 금융지식의 필요성
-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 기타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서비스제도

금융감독원

## 금융지식의 필요성





### 중·고 때부터 '신용' 교육 강화

**사회·경제 교과서 수록키로**

내년부터 중·고교 교육과정에서 '신용'과 관련된 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 중·고교 교과서에 건전한 신용관리와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간다고 23일 발표했다. 그동안 교과서에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수업 지도자료에는 신용불량자 문제 등 관련 내용

이 있었으나 교과서에는 신용카드 사용법 등 기본적인 것만 실려 있었다.

대상 교과서는 중학교 '사회'와 고교 '사회', '경제', '반과 사회' 등으로 총 19개 책의 30여 곳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C발행시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신용생활의 빛과 그림자' 주제에는 '신용은 개인과 보이지 않는 재산이며, 건전한 신용 관리는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는 설명이 나

### '신용교육 어릴적부터'

### 중·고 교과서 대폭 실어

교육부는 23일 내년부터 중3 및 고교 교과서에 건전한 신용관리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중요성 등을 담아 신용교육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10~20대 신용불량자가 급증, 사회문제화함에 따라 유능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저축 등에 대한 금융교육은 있었지만 신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교육은 없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10~20대 신용불량자는 무려 73만여명에 이른다. 이중 10대 신용불량자도 4,000여명이나 된다.

마구잡이식 카드 남발로 대폭성 한 반면 으레 지급 속에 신용카드 1~2장을 있게 마련인데 쓴 것은 법만 알지, 권리는 법률 물의 결국 상당수 10~20대 젊은이들이 '신용불량'이라는 말을 듣고 살고 있는 것이다.

신용 관련내용이 세로 실리는



**"信用이 재산" 학교서 가르친다**

합리적 소비생활 등 내년부터 中·高교과서 수록

**중·고교 신용교육 강화한다**

내년부터 교과서 수록 확대    부 19개 30여곳에 달한다.  
예를 들어 C발행시의 중학교 '사회'


**신용불량 미리 가지치기**

**중·고교 내년 교육강화**

신용불량자 예방조치·합리적 소비...

**中·高교과서에 실린다**

## 금융거래시 민원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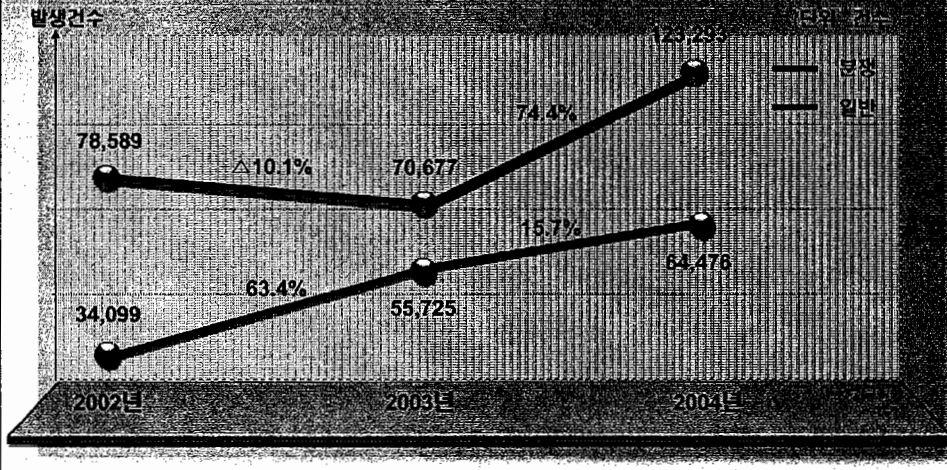
### 1. 금융민원 발생현황

### 2. 금융분쟁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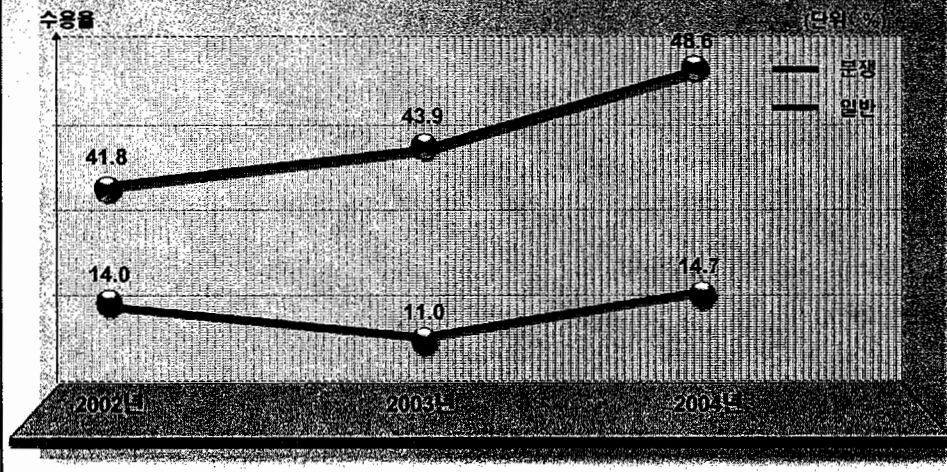
# 1. 금융 민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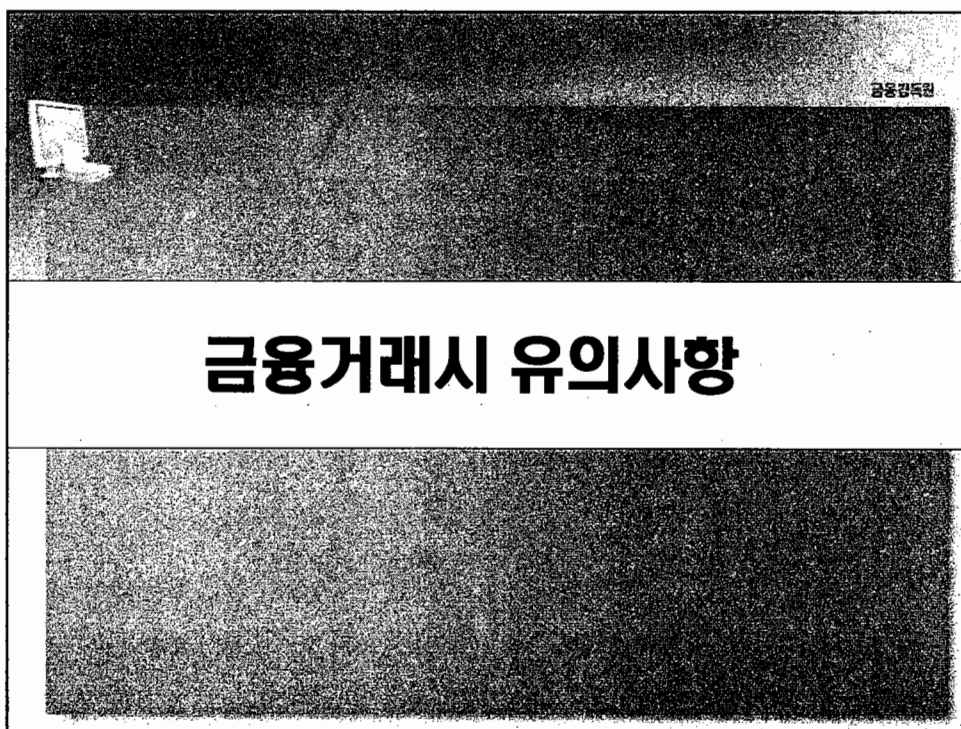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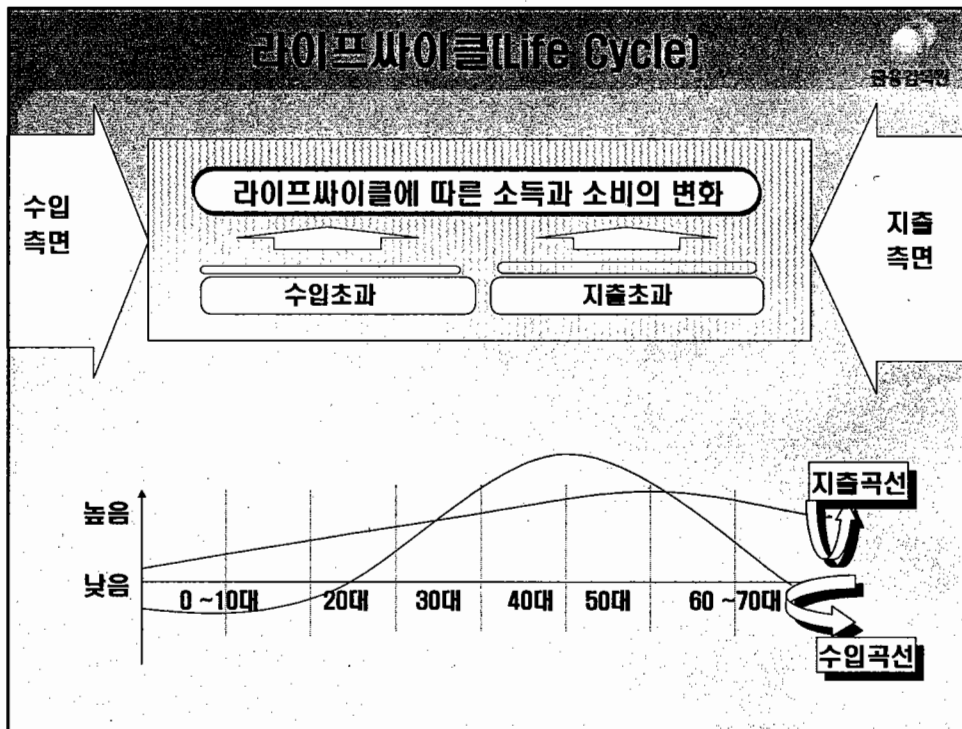
● '99년 이후 '04년까지 연평균 민원 증가율 30.0%



## 민원 수용율

● 분쟁민원 수용율 계속 증가 추세





## 은행

## 은행거래시 유의사항

1-1

### 담보제공 또는 보증을 설 때

- 차주, 금액, 근저당권 설정 (보증)기간 확인
  - 채무범위 명확화
- 보증내용 확인후 자필기재 및 사본 수령
  - 포괄적 위임(백지위임) 금지

1-2

### 담보설정된 부동산 매매시

- 매수인
  - 채무합계액을 매매계약 체결전에 담보권자인 은행으로부터 확인하고 서면으로 확인서 수령
- 매도인
  - 채무자 명의를 반드시 변경해야 대출금 연체시 불이익 방지

## 은행

## 은행거래시 유의사항

1-3

### 예적금 거래시 유의사항

- 통장과 인감은 본인이 보관하되 분리보관
- 비밀번호는 제3자 추정 및 누설 금지
- 통장이나 인감분실시 유선으로 은행에 신고하고 신고받은 직원의 이름, 시간을 기록

1-4

### 예금상품별 금리비교

- 금리 및 세금우대상품 비교(100만원 예금시)
  - 보통예금(0.1%) : 1,000원 - 세금16.5% = 835원
  - 정기예금(4.0%) : 40,000원 - 세금16.5% = 33,400원
  - 세금우대(4.0%) : 40,000원 - 세금10.5% = 35,800원
  - 비 과 세 (4.0%) : 40,000원 - 세금 0.0% = 40,000원

## 증권

## 증권거래시 유의사항

2-1

### 내부자거래

- 임직원 및 10%이상 주주가 자사주식을 매매
- 공시되지 않고 타인이 모르는 정보 이용
- 손실회피 및 부당이득이 목적  
[제약회사 & 건설회사]

2-2

### 주가조작

- 증권사직원, 기관투자자, 펀드매니저 관여
-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요 및 공급 조절
- 인위적인 가격조정을 통한 부당이득이 목적

## 증권

## 증권거래시 유의사항

2-3

### 임의매매 일임매매

- 임의매매는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유가증권을 임의로 매매
  - 형사처벌 대상. 고객주인시 회사배상 불가
- 일임매매는 유가증권매매와 관련된 행위를 증권회사 직원에게 맡기는 것
  - 약정 기간은 1년 이내, 일임종목은 5종목 이내
  - 과도한 일임매매시 증권회사 책임

2-4

### 강통계좌

- 신용거래를 이용하여 주식거래시
  - 주가가 상승하면 큰 이익
  -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원금까지 손실
- 강통 계좌는 담보유지비율이 100% 미만인 계좌

**보험**

**생명보험거래시 유의사항**

3-1

**중도해약**

- 중도해약시 환불 금액
  -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 환불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 보험가입후 15일이내에는 청약철회 가능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환불

3-2

**청약서 작성**

-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기재
  - 계약자는 청약서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고지
  - 허위·부실고지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계약 해지
- 청약서는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작성

**보험**

**생명보험거래시 유의사항**

3-3

**보험료 납부**

- 보험료납부시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회사발행 영수증 수령
- 무통장입금시 보험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 설계사나 대리점 명의의 계좌송금 금지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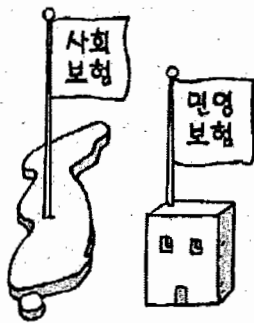
**부 활**

- 실효된 계약은 2년이 지나면 부활금지
  - 2년이내에는 연체보험료와 이자납입후 부활가능
- 부활시에도 처음과 같이 보험 계약의 성립, 책임 개시일, 계약전 알릴의무 적용

## 사회보험과 일반보험 비교

금융감독원

우선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 보험과  
보험 회사에서 운영하는  
민영 보험이 있어.



난 국민의  
질병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지!



국민건강보험



건강  
보험증 가져  
오셨어요?

난 노인이 되어  
일을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보험이야!



국민연금보험



나도  
국민 연금을  
받아~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회 보험에  
들어야 해!  
하지만  
기본적인  
보장만  
받을 수 있지!

민영 보험은 크게 생명 보험과 손해 보험으로 나눌 수 있어.

### 생명 보험의 가족



사망 보험



연금 보험



암보험

남겨진  
가족에게  
생활비를  
드립니다.

노후를  
책임질게요.

암에 걸리면  
수술비와 입원비를  
드립니다~

### 손해 보험의 가족



자동차 보험



도난 보험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죠.

잃어버릴까봐  
걱정되세요?  
보상해 드립니다.

**마이바흐와 대우 프린스 충돌 (04.1.26)** 금융감독원

100만원짜리 국산 중고차 7억원짜리 최고급 수입차 충돌 (되게로)  
 - 수리비 3천만원 ?

**보험 자동차보험거래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4-1**  
자동차보험 구조

- 대인배상 1
- 대인배상 2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차량손해

**4-2**  
운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 기명 피보험자의 매느리, 사위



## 보험

## 자동차보험거래시 유의사항

4-3

### 무면허운전

- 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불가
  - 무면허 운전은 면허없이 운전하는 것은 물론 면허취소·정지기간중 운전 포함
- 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 (8천만원한도)  
대물배상(1천만원한도)  
자기신체사고 (1억원한도)는 보상가능

4-4

### 뺑소니사고

- 책임보험 보상한도(8천만원)내에서 보상가능
- 뺑소니 차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 정부로부터 보상사업업무를 위탁받은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 신청

◦ 달리는 자동차에서 뺑긴  
돌에 맞아 다친 경우

◦ 언덕에 세워둔 차량의  
핸드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미끄러져 사고를 낸 경우

◦ 운전중 졸음을 피하기 위해  
차를 갓길 정차후 차에서  
휴식중 사고를 당한 경우

➡ 보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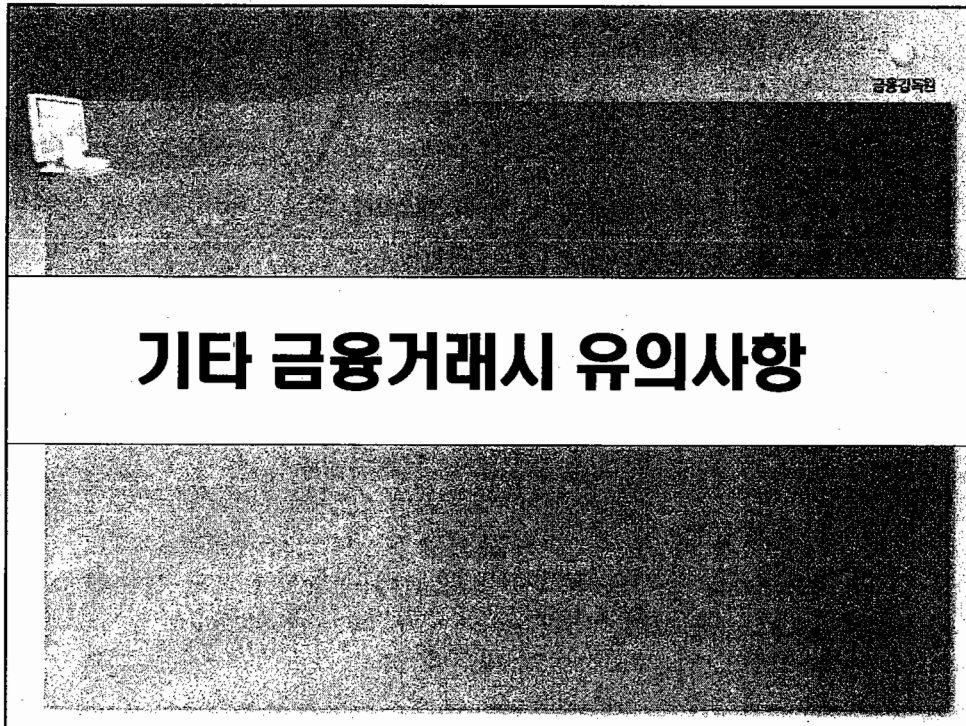
자동차 운전중 차창밖으로  
병을 던져 행인이 다친 경우

◦ 쇼핑을 하고 차량에 물건을  
싣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

◦ 더위를 피해 주차장에서  
자동차 에어컨을 켜 채로  
잠자다 사망한 경우

➡ 보상 불가





## 기타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유사금융**

**유사금융거래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6-1

**유사금융업체란?**

- 정부의 인 허가없이 투자금을 받아 지금을 보장하는 업체
- 피해 발생시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정부로부터 보장 불가
- 투자금 회수는 민 형사상 절차에 따라 회수
- 잔여재산이 없거나 은닉하는 경우 회수 곤란

6-2

**요 주의 업체**

-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높은 워킹 배당금 지급 약속
- 아위투자자들의 지금을 상위투자자들의 높은 배당금으로 지급
- 상호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이 불명확하고 보안을 강조하는 업체
- 정부가 자금모집을 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
- 투자자 유치사 수당을 주는 업체

## 사금융      사금융거래시 유의사항

7-1

### 사채업체란?

-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않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는 상법상의 회사 또는 개인 사업자
- 2002년 10월 27일 대부업법 시행이후 사·도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업체를 대부업자라고 함

7-2

### 사채거래 유의사항

- 사·도 지자체 등록업체를 이용
- 등록업체의 경우 연 이자율 66% 초과 금지
- 대표이사 명의 영수증 필히 보관
- 협박 있을 때 녹취 등 증거를 확보
- 사채업자에 신용카드 위임 절대금지

## 전자금융      전자금융거래시 유의사항

8-1

### 전자금융거래란?

-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금융업에 활용하여 주로 자금이체, 송금 및 대금결제 업무 수행
- 먼저 금융회사에 가서 정해진 절차 이행
- 수수료 면제, 시간절약, 공간의 제약없이 거래 가능

8-2

### 전자금융 유의사항

- 비밀번호 관리 철저
- 한번 또는 하루 이체 가능금액 설정 적정화
- 거래중 통신 이상 발생시 잔액 조회나 입출금 내역 조회 필수화
- 이메일, 전화를 통해 카드번호, 계좌번호 요구시 금융사기 위험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제도

금융감독원

9-1

예금자  
보호제도란?

-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나 파산으로 고객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지급 보장
-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1인당 5천만원 이내 (원리금 기준)

9-2

보호대상  
금융상품

- 보호상품
  - 예금, 적금, 분금, 개인보험, 법연보험 등 퇴직보험
- 비보호상품
  -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법인 보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비스제도

## 상속조회 상속자 금융조회 서비스

10-1

### 상속자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란?

■ 상속자가 피상속자의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

- 피상속자(사망자, 금치산자, 실종자)의 금융거래내용 파악을 위해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불편 방지
- CFI 상속포기, 한정상속

10-2

### 조회대상 조회절차

■ 조회 대상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보증 및 신용카드 거래

■ 조회절차

- 사망확인 서류, 상속인 사실 증명원,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후 상속본인 직접 감독원 방문 신청

## 민원

##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 서비스

11-1

### 민원상담

■ 금융이용자의 피해 및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금융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

- 국번없이 전화 1332번
- 팩스, 인터넷(fss.or.kr)이용

11-2

### 분쟁조정제도

■ 금융관련 분쟁에 대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용부담없이 신속·공정하게 처리

- 30일 이내 처리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금융조회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서비스

12-1

###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서비스란?

- 국민들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여부 확인
-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유사금융회사가 불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12-2

### 조회방법

- 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지역·업종 및 금융기관명으로 조회
-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이용

## 전자공시 전자공시 서비스

13-1

### 전자공시 시스템이란?

- 전자공시시스템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 <http://dart.fss.or.kr>

13-2

### 공시종류

- 정기 공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결산보고서
- 수시공시
  -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투자자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내용 공시

## 신금융소비자

21C가 요구하는  
금융소비자

금융지식 함양

금융에 대한 관심

깨어있는 금융이용자

금융마인드 제고

참고

## 사금융 이용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그 밖에 대부업자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이 있나요?  
이번 기회에 애네나 박대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그럼요, 있습니다

대출광고를 할 때 ①영청 또는  
대표자의 성명, ②대부업등록번호,  
③대부이자율(연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④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⑤금전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그 사실, ⑥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⑦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물론 미등록  
사채업자는 대출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 20. 조치의뢰제도 도입 사유/근거/적용대상/향후 확대 계획

### □ 도입 사유

- 2004.4.1. 제재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자율규제 기능 제고를 위하여 도입
  -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에게 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내용을 통보하고 자체 내규에 따라 제재대상자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여 조치토록 의뢰

### □ 근 거

- 은행법 제54조, 증권거래법 제53조, 보험업법 제134조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9조

### □ 적용대상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 □ 향후 확대계획

- 종합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상호저축은행(총자산 3천억원 이상\*)에 대해서도 조치의뢰제도를 확대 적용할 예정

\*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4, 시행령 제7조의2)

## 21. 준법감시인관련

### - 준법감시인 역할(금감원보고 등 의무포함) 및 처벌조항(근거)

#### 1. 준법감시인의 역할(금감원보고 등 의무 포함)

☐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금융회사 감사위원회에 보고\*함

\* 준법감시인이 직접 금감원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음

- 은행법 제23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내부통제기준), 제17조의3(준법감시인)
- 증권거래법 제54조의4(내부통제기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4(내부통제기준), 제37조의5(준법감시인)
-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내부통제기준), 제23조(준법감시인의 준수사항 등)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내부통제기준),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내부통제기준), 제12조의2(준법감시인)
- 신용협동조합법 제76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9조의3(내부통제기준), 제19조의4(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내부통제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9조의4(내부통제기준), 제19조의5(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 2. 처벌조항(근거)

☐ 개별 금융업법에서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김 양 수 의 원



1. 최근 3년간 금감원에 신고된 보험 신상품 건수중  
부적격으로 판정된 상품, 부적격 판정 사유

보험상품 접수 및 조치현황

(단위 : 건, %)

구 분		제 출			신 고			합 계		
		접수	조치	조치비율	접수	조치	조치비율	접수	조치	조치비율
'05년	생보	1,810	17	0.9	180	17	9.4	1,990	34	1.7
	손보	2,085	35	1.7	263	1	0.4	2,348	36	1.5
	소계	3,895	52	1.3	443	18	4.1	4,338	70	1.6
'04년	생보	1,370	53	3.9	14	11	78.6	1,384	64	4.6
	손보	985	50	5.1	13	1	7.7	998	51	5.1
	소계	2,355	103	4.4	27	12	44.4	2,382	115	4.8
'03년	생보	1,266	296	23.4	19	15	78.9	1,285	311	24.2
	손보	711	26	3.7	45	-	-	756	26	3.4
	소계	1,977	322	16.3	64	15	23.4	2,041	337	16.5

주1) 자동차보험, 세제적격 개인연금, 퇴직보험 등 제외, 신고접수후 철회된 상품 제외

주2) 조치는 변경권고 건수

### 생명보험 상품의 조치유형별 현황

(단위 : 종, %)

조 치 유 형	'03년	'04년	'05년
사업비책정 부적정	138	7	5
보험약관내용 부적정	92	15	9
보험급부설계 부적정	29	16	9
상품설계 관련법규 위반	5	-	-
소멸·무효조항, 납입면제 부적정	15	-	-
사업방법서 부적정	27	22	8
보험료산출 부적정	3	4	2
기            타	2	-	1
합            계	311	64	34
조 치 비 율	24.2	4.6	1.7

### 손해보험 상품의 조치유형별 현황

(단위 : 종, %)

조 치 유 형	'03년	'04년	'05년
사업비책정 부적정	-	16	1
보험약관내용 부적정	6	13	3
보험급부설계 부적정	5	-	-
상품설계 관련법규 위반	-	-	-
소멸·무효조항, 납입면제 부적정	-	-	-
사업방법서 부적정	-	4	4
보험료산출 부적정	14	18	28
기            타	1	-	-
합            계	26	51	36
조 치 비 율	3.4	5.1	1.5